

기사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언론의 책임

2015 - 312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2.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발행인 조 상 현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4.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8월 28일자 「3세 의붓딸 수영장에 수차례 내 던져 익사시킨 ‘인면수심’ 계부」 제목의 기사와 사진, 블로그(저널로그) 「수영장에 의붓딸 집어던져 살해한 새아빠 ... ‘CCTV에 덜미」」 제목의 게시물과 동영상, 한국미디어네트워크(hankooki.com) 8월 28일자 「무정한 계부, 3세 유아 익사할 때까지 수영장 물에 수차례 던져」 제목의 기사와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27일자 「호텔 수영장 풀에 3살짜리 유아 던져 죽인 계부 ‘충격」」 제목의 기사와 사진 및 동영상, 조선닷컴(chosun.com) 8월 27일자 「딸을 수영장에 던져 익사시키는 양아버지」 제목의 기사와 사진 및 동영상, 파이낸셜뉴스(finnews.com) 8월 28일자 「‘던지고 또 던지고’.. 수영장에 딸 수차례 집어던져 살해한 새아빠」 제목의 기사와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동아닷컴, 한국미디어네트워크(데일리한국), 서울신문,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닷컴 1) = 「3세 의붓딸을 수영장 물 속에 수차례 집어던져 익사시킨 인면수심(人面獸心) 계부가 체포됐다.

기사입력 2015.08.27 14:42:32

2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미러는 멕시코 미초아칸 주(州) 모렐리아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3세 의붓딸을 물 속에 반복적으로 집어던져 익사시킨 계부 A 씨

가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 프로세스소(Proceso)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12일 호텔 수영장에서 의붓딸을 물속에 수차례 집어 던졌다. 그는 물속에서 버둥거리는 어린 딸을 지켜보다 꺼내준 뒤 다시 집어던지는 행동을 반복했고, 아이는 결국 이날 숨을 거뒀다. 사건 발생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호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현지 언론 콰드라틴 뉴스(Quadratin News)는 이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호텔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건장한 체격의 A 씨가 의붓딸을 들어올려 가차 없이 수영장 물속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는 허우적거리는 딸을 꺼내 다시 물속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반복한다.

수영장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마치 놀이를 하는 듯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이 물속에 뛰어들 뒤 안 보이는 곳에서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는다. 심지어 그는 아이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기까지 한다.』

〈<http://global.donga.com/View?no=28921>〉

(동아닷컴 2(저널로그))= 『수영장에 의붓딸 집어던져 살해한 새아빠 ...
'CCTV에 덜미'

by B on 8.28,2015 in 해외이슈

새 아빠가 올해 3살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을 수영장에 반복적으로 집어던져 살해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멕시코 모렐리아(Morelia) 시(市)에 위치한 한 CCTV에 한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격적인 동영상은 12일 오후 호텔 수영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는 새 아빠가 3살 의붓딸을 수영장에 반복해서 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새 아빠는 아내가 잠이 든 사이 놀아준다며 의붓딸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갔다.

그리고 새아빠는 의붓딸에게 “재미있게 해 줄게”라고 말한 뒤 수영장의 깊은 물 속으로 집어 던졌다. 새 아빠의 생동은 의붓딸이 지쳐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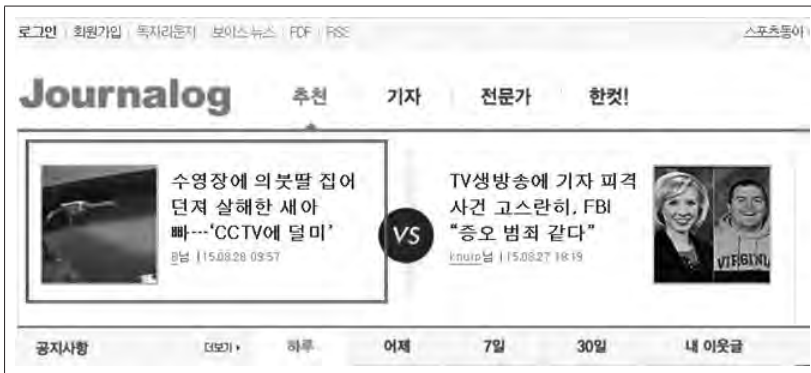
새아빠는 잠시 뒤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의도적이 살인이 맞으며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고 추후 조사과정에서 고백했다.

현재 경찰은 새아빠를 1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http://blog.donga.com/realistb/archives/1004>〉

※동아닷컴 저널로그 초기화면



(데일리한국)=『3세 의붓딸을 수차례 수영장에 던져 익사시킨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황○○기자 h***ang@hankooki.com

입력 2015.08.28 07:53:08 수정 2015.09.01 10:37:50

수영장에 아이를 던져 익사시킨 한 계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메트로는 26일(현지 시간) 멕시코의 한 호텔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Cambodia express news 화면 캡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와 의붓딸과 함께 멕시코 서남부의 미초아칸 주 주도 모렐리아의 호텔에 묵었다. 그는 아내가 호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세 살 난 의붓딸을 수영장 물속으로 수차례 집어 던졌다.

당시 CCTV 영상에서는 물에서 발버둥 치며 숨을 헐떡거리는 아이를 남성이 물속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이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더니 CCTV 화면 밖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와서는 구조 튜브를 물속으로 던졌다. 하지만 아이는 튜브를 붙잡지 못했고 끝내 익사했다.

이 사실을 안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을 불렀고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508/dh20150828075308138420.htm>〉

(서울신문)=『호텔 수영장 풀에 3살짜리 유아 던져 죽인 계부 ‘충격’



한 호텔 수영장에 유아를 던져 죽이게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멕시코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12일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 모렐리아 시(市)의 한 호텔 수영장 풀에서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는 남성의 CCTV 영상을 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3ExddP1fI&feature=player_embedded〉 (동영상 URL)

이 충격적인 영상에는 12일 오후 호텔 수영장에서 3살짜리 의붓딸을 반복해 풀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새아빠는 깊은 물 속으로 의붓딸을 집어 던졌으며 그녀가 지쳐 사망할 때까지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건 당일 3살짜리 딸이 죽어가는 동안 엄마는 호텔 방에

서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아빠는 의붓딸에게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엽기적인 행각으로 의붓딸을 살해한 새아빠는 아이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영상= CEN/NewsUP youtube 영상팀 seoultv@seoul.co.kr 2015.08.27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7500261>〉

(조선닷컴)= 『딸을 수영장에 던져 익사시키는 양아버지』

입력 2015.08.27 13:32 수정 2015.08.27 13:36



〈https://www.youtube.com/watch?v=JSzWyAa8eJE&feature=player_embedded〉 (동영상 URL)

계부가 딸을 반복적으로 호텔 수영장에 던집니다. 지난 8월12일 멕시코 남서부의 미초아칸 주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수영장 내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아이를 물 속에 던져 즐겁게 하려는 놀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양아버지가 세살된 딸 모렐리아를 이 호텔 수영장에 던져 익사시키는 동영상입니다. 호텔 CCTV에는 아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나중에는 함께 물에 뛰어든 양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속 물 속에 잠기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살해 당시 아이의 친엄마는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명 부표를 던지지만, 아이는 그걸 잡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7/2015082701631.html〉

(파이낸셜뉴스)= 『‘던지고 또 던지고’.. 수영장에 딸 수차례 집어던져 살해한 새아빠

입력 2015.08.27 15:11 수정 2015.08.27 15:11



최근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세 살짜리 의붓딸을 수영장에 반복적으로 집어 던져 살해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멕시코 중부 모렐리아 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수영장 속으로 반복해서 던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이 남성은 엄마가 방에서 잠든 사이 같이 놀아주겠다며 의붓딸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갔다. 그리고는 의붓딸에게 “재미있게 해준다”며 높이 들어 올린 뒤 수영장 물 속으로 집어 던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마치 물건이라도 집어 던지듯 아이를 내던져 버리고, 아이는 물속으로 깊게 빠져들었다가 다시 올라온다.

이어 이 남성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는 듯 했지만 결국 그의 행동은 의붓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까지 계속됐다.』

(<http://www.fnnews.com/news/20150827111623946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 한국미디어네트워크(데일리한국), 서울신문,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세 살짜리 의붓딸을 수영장에 반복적으로 집어 던져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이 남성이 아이를 물속에 던지는 장면과 물에 빠진 아이가 허우적거리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또 동아닷컴(저널로그)과 서울신문,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는 문제의 동영상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매체의 이 사건 보도는 그 자체로도 끔찍하고 잔인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건장한 체격의 A 씨가 의붓딸을 들어 올려 가차 없이 수영장 물속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는 허우적거리는 딸을 꺼내 다시 물속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반복한다. 수영장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마치 놀이를 하는 듯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이 물속에 뛰어든 뒤 안 보이는 곳에서 아이를 물속에 집어

넣는다. 심지어 그는 아이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기까지 한다.”(동아닷컴)

“당시 CCTV 영상에서는 물에서 발버둥 치며 숨을 헐떡거리는 아이를 남성이 물속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이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더니 CCTV 화면 밖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와서는 구조 튜브를 물속으로 던졌다. 하지만 아이는 튜브를 붙잡지 못했고 끝내 익사했다.”(데일리한국)

“의붓딸에게 ‘재미있게 해준다’며 높이 들어 올린 뒤 수영장 물 속으로 집어 던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마치 물건이라도 집어 던지듯 아이를 내던져 버리고, 아이는 물속으로 깊게 빠져들었다가 다시 올라온다. 이어 이 남성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는 듯 했지만 결국 그의 행동은 의붓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까지 계속됐다.”(파이낸셜뉴스)

이렇듯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며 유튜브로 공개된 아이 살해 장면을 ‘생생하게’ 중계한 것이나 다름없는 위 보도는 생명을 중시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고 아껴야 할 언론의 기본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참고로 이들 5개 매체를 제외하면 다른 국내 매체는 위 내용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38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주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5년 9월 16일자 「마피아 두목과 인권 운동가의 감옥 안 충격적 성관계 영상」 제목의 동영상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피아 두목과 인권 운동가의 감옥 안 충격적 성관계 영상』

Posted 2015.09.16 17:10 Updated 2015.09.17 18:11

러시아 중심부 스베르들롭스크 주에 있는 감옥에 수감된 러시아 마피아 두목과 그의 감옥 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던 인권 운동가의 감옥 안 성관계 영상이 공개돼 러시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가 이 소식을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마피아가 수감된 교도소의 감독관들은 그동안 마피아와 인권 운동가의 긴 면회시간을 의심해왔다. 그들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들이 면회 시간을 이용하여 감옥 안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동영상이 지역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노출되기 전까지 이 인권 운동가 여성은 감옥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한편, 이 동영상을 본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마피아가 감옥 안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항의했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186976.html〉

※참고 1: 해당 동영상 끝난 뒤 나타난 화면





※참고 2: 코리아타임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최지우 주연 tvN '두번째 스무살' 시청률 6% 돌파 배우 최지우 주연의 tvN 금토드라마 '두번째 스무살'이 시청률 6%를 돌파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19일 밤...	표범과 흑멧돼지의 물어뜯는 싸움 그 결과는?
	유연석, SBS '미세스 캅' 특별출연...국과수 부검의 역 배우 유연석(31)이 SBS TV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에 특별 출연한다고 SBS가 20일 밝혔다. 유연석...	마피아 두목과 인권 운동가의 감옥 안 충격적 성관계 영상
	전정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선언..."내년1월 완료" 무소속 전정배 의원은 20일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12월까지 ...	

〈캡처시각 09.18. 14:0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러시아 중심부 스베르들롭스크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러시아 마피아 두목과 그의 감옥 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던 인권 운동가의 교도소 안 성관계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교화 장소인 교도소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동영상이 끝난 뒤 다양한 성관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더욱 문제다. 영화나 일반인이 올린 성애장면은 물론 성기가 드러난 섹스돌의 모습까지 나온다. 이는 유튜브와 아웃링크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영상이 끝난 뒤 자동적으로 종료되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을 게재할 때에는 기술적인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해 섹스 동영상이 노출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동영상 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영만

주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5년 11월 27일자 「논란의 ‘소라넷 ...’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코리아헤럴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논란의 ‘소라넷 … ’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Published 2015.11.26 14:05 Updated 2015.11.26 16:31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라넷,’ 국내 최대의 음란 성인사이트로 올여름 화두였던 “워터파크 몰카” 유출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그간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계속해서 주소를 바꾸면서 범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강신명 경찰총장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면적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다시 화제가 됐다.

1. 소라넷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이트 주소를 확인

이들은 지속적으로 서버를 옮겨 트위터에 이를 공지한다. 트위터 페이지에 접속해 url 주소를 클릭해 사이트로 이동한다.



〈소라넷 트위터 캡처〉

2. 소라넷 홈페이지

눈을 찌푸리게 하는 자극적인 글과 광고, 음란 사진들로 가득한 첫 화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몰래 회원가입을 해봤다.



(소라넷 홈페이지 캡처)

3. 회원가입

미성년자의 사이트 가입 방지를 위해 가입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하다.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클릭해봤다. 가입이 승인됐다.



〈소라넷 회원가입 화면, 미성년자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4. 게시물

더욱 놀라운 것은 페이지 내 게시물들의 실태였다. 자신의 아내나 여동생이 사위하는 모습부터 각종 공중화장실, 지하철 몰래 카메라, 심지어 여성의 술에 약을 타 숙박업소로 데리고 왔다는 글까지.

반면 소라넷 측은 “21세기 성인들의 볼 권리를 막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며 주장하고 나서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

〈http://khnews.koreaherald.com/view.php?ud=20151126000772&kr=1&md=20151127003049_BL&kr=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에 기자가 직접 가입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서버를 옮기니 트위터 페이지에 접속해 url 주소를 클릭하라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클릭해봤다. 가입이 승인됐다 △미성년자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등 사실상 가입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게다가,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곤 하나 단계별로 화면을 캡처해 보여 주는 등 일반적인 가입 안내문과 똑같은 방식을 취했다.

나아가 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샤워 중인 모습을 게시판에 올렸다고 밝히고 그 사진을 싣는 등 오히려 호기심을 부추겼다.

코리아헤럴드가 이 기사를 다룬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기사를 처리한 방식을 보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클릭 수를 늘리려고 소라넷 가입을 안내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소라넷의 폐해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발기사라 하더라도 이 같은 보도는 불량 사이트의 접속방법과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책임있는 언론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행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 307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3.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주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5년 5월 20일자 「백재현, 20대男 주요부위를 ... 경찰 내부문건 유출 ‘경악’」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0일자 「백재현 성추행 혐의, 경찰 내부 문건 유출 ... 사건개요-신상공개 ‘논란’」 제목의 기사, 每日新聞(imaeil.com) 5월 20일자 「백재현, 성추행 관련 경찰 문서 유출! 전과2범 ...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아시아경제 스포츠조선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경제)= 『백재현, 20대男 주요부위를 ... 경찰 내부문건 유출 ‘경악’

최종수정 2015.05.20 16:22 기사입력 2015.05.20 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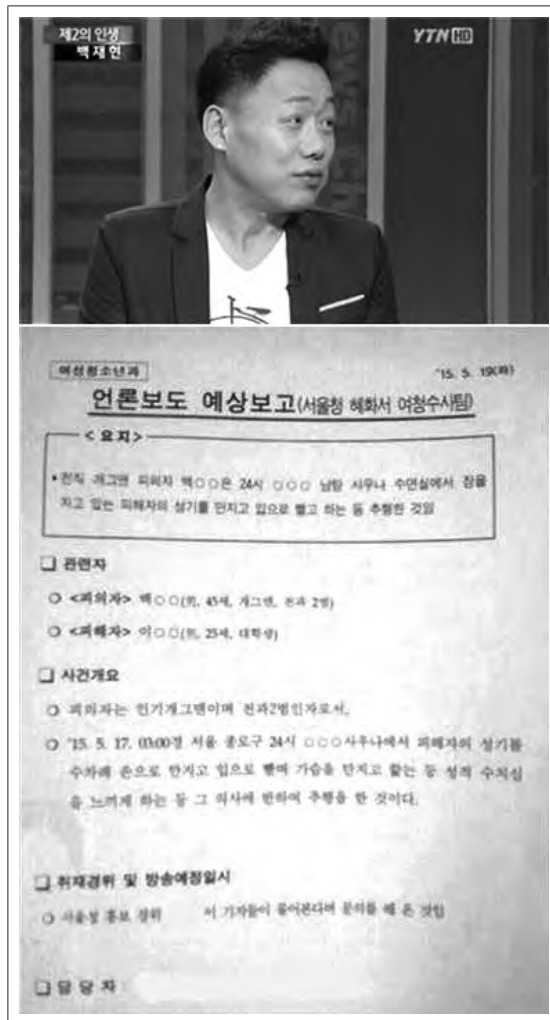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백재현(45)이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경찰 내부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 매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재현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언론보도 예상보고(서울청 해화서 여청수사팀)’라는 경찰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백재현과 피해자 이모(25) 씨의 신상은 물론 당시 사건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문서에 따르면 백재현은 전과 2범으로 지난 17일 새벽 3시께 서울 종로구 한 사우나에서 이모 씨의 성기를 수차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가슴을 만지

고 찰는 등 추행을 했다.



백재현.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이에 앞서 서울 해화경찰서는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백재현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백재현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52015525197840>)

(스포츠조선)=『백재현 성추행 혐의, 경찰 내부 문건 유출 ... 사건개요-신상공개 ‘논란’

기사입력 2015.05.20 12:09:49 최종수정 2015.05.20 14:32:49

백재현 성추행 혐의

개그맨 백재현이 남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관련된 경찰의 보고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됐다.



20일 한 매체는 “온라인 사이트 및 SNS에 백재현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언론보도 예상보고(서울청 해화서 여청수사팀)’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피의자 백재현과 피해자 이모 씨의 신상이 나와있다. 또 ‘피의자는 인기 개그맨이며 전과 2범인 자로서 2015년 5월 17일 3시경 서울 종로구 24시 000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며 사건 개요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경찰의 내부문건이 유출되면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등 정보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백재현은 성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동성연애자가 아니며, 단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505210100227000015909&ServiceDate=20150520>〉

(毎日新聞)=『백재현, 성추행 관련 경찰 문서 유출! 전과2범 ... 충격

2015.05.20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백재현, 성추행 관련 경찰 문서 유출!

개그맨 출신 연출가 백재현이 17일 3시께 서울 명륜동 모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성추행)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경찰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

한 매체는 “온라인 사이트 및 SNS에는 백재현 성추행 혐의와 관련 ‘언론보도 예상보고’라는 문건이 공개됐다”며 해당 문건에 대해 말했다.

이 문서에는 피의자 백재현과 피해자 이모 씨의 신상과 더불어 성추행 사건의 개요 등이 적혀있다. 문서에는 ‘피의자는 인기 개그맨이며 전과2범인자로서, 2015년 5월 17일 3시 경 서울 종로구 24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 차례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가슴을 만지고 핏을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백재현의 신상에 ‘전과 2범’이라고 적혀 있다. 백재현의 성추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일 한 매체는 “백재현은 지난 2000년 고경패널로 활동 중이던 SBS ‘진실게임’에 출연한 K씨(당시 19세)에게 접근해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K씨는 연예인이 꿈이었고 백재현은 사인을 해주며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이후 백재현은 연락을 해 K씨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으며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K씨는 “백재현이 집으로 불러 “아빠와 아들처럼 지내자”며 스킨십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최근 대학로에서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8318&yy=2015#axzz3ajQua3eK>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그맨 백재현이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 수사 중인 해당 경찰서 내부 문건(언론보도 예상보고)이 온라인에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요약보고서를 인용해 범행 상황을 기술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가슴을 만지고 핏는” 등 동성 간의 성행위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스포츠조선은 기사 본문에 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해당 문건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문제의 표현(성기를 빨고 가슴을 만지고 핏는)을 한 셈이 됐다.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보여주기 위해 사실대로 묘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칫 선정적인 보도가 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층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한편 이들 언론사는 경찰의 해당 문건을 함께 게재하였는데, 공식 수사문건은 아니더라도 유출된 경찰 내부 문서를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언론사 및 수사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공식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공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해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수사와 관련된 경찰의 문건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해당 문건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지워 문서를 유출한 경찰관이 특정되지 않도록 한 노력은 보이나 해화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경찰관의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혐의가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기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83 신문윤리강령 위반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주문

새전북신문(sjbnews.com) 2015년 5월 17일자 「커뮤니티」의 「알림게시판」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새전북신문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5.05.17. 23:45〉

〈캡처시각 15.05.17. 23:4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은 자사 사이트 「커뮤니티」 코너의 하위 디렉토리에 「알림게시판」이라는 난을 두고 있다. 5월 17일자 「알림게시판」에는 카지노사이트가 대거 소개되고 있는데, 별도의 클릭이 없어도 「텍사스카지노」에 연결되도록 처리되어 있다.

또한 이 날짜 「알림게시판」 코너의 3페이지를 열어보면 2015년 1월 14일에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올린 「신년이벤트」라는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카지노사이트 광고물이다. 만에 하나 이 게시물을 사이트 관리자가 올린 것이라면 이는 신문사가 사설게임을 소개한 셈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설혹 사설게임업자가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6월 1일 현재 게시판은 상당히 정돈되어 있으나 일부 게시물은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온라인신문의 게시판은 남녀노소가 모두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를 운영하는 언론의 책임은 막중하다.

따라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89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청타임즈 발행인 박재규

주문

충청타임즈(cctimes.kr) 2015년 2월 12일자 「무죄 판결 ... 또 한고비 넘겼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충청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5.05.20. 14:27 캡처>

『“무죄 판결 ... 또 한고비 넘겼다”김병우 충북교육감, 6개월여 불안했던 심경 토로

입력 2015.02.12 수정 2015.02.11 20:27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사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불안했던 심경을 최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인 카카오톡에 토로.



김 교육감은 “온갖 진기록을 세우며 진행되어 온 저의 선거법 관련 두번째 재판 제1심이, 오늘 드디어 6개월여만에 무죄 판결로 또 한 고비를 넘겼다”고 밝힌 뒤 “실체적 진실을 가려보고 사법정의를 세우신 재판부에 더할 나위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그동안 무거웠던 심정을 표현.

그는 “그동안 마음 졸이시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 분께도 좋은 소식 드릴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다”며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 충북교육이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히 이끌겠다”고 피력.

변함없이 따뜻이 지켜봐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남은 재판에 임하는 심경도 언급.

김○○기자』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9985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김 교육감이 재판 결과 뒤 “실체적 진실을 가려보고 사법정의를 세우신 재판부에 더할 나위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 충북교육이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히 이끌겠다”고 피력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보도일자가 2015년 2월 12일인데도 5월 20일 현재 충청타임즈 초기화면 〈SNS의 세상, 그곳에는〉 코너에 그대로 실고 있어 2심과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김병우 도교육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코너는 2014년 8월 개설한 이래 그 달에 집중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뒤 이후 한 달에 한번 꼴로 게재해 오다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기사를 눈에 띄는 곳에 장기간 게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5년 6월 3일자 「대선 출마 선언 의원 '변태 성관계' 글 논란」이라는 제목 등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5.06.03. 17:57〉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 20150603000000000000002221&ServiceDate= 20150603](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50603000000000000002221&ServiceDate=20150603)〉

1. 「대선 출마 선언 의원 ‘변태 성관계’ 글 논란」

『‘음주운전 무마해주겠다’ … 女운전자 성추행 경찰 구속

기사입력 2015.06.03 07:44:43

술을 마시고 불법유턴을 한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경찰관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여성 운전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48)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께 강남구청담동의 한 대형호텔 앞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 불법 유턴한 여성 운전자 A(33) 씨를 적발해 경찰서로 데려온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부는 수법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중징계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h***gch@yna.co.kr <연합뉴스>』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5060300000000000002629&ServiceDate=20150603>>

2. 「동거녀 두딸에게 8년간 몸쓸 짓...성폭행」

『식샤를 합시다2 종영, 서현진 황승언 알몸 탈의에 경악 “같은 여자라도 싫어”

기사입력 2015.06.03 10:58:54

배우 황승언이 서현진 앞에서 파격 알몸 탈의를 시전했다.

2일 방송된 ‘식샤를 합시다2’ 마지막회에서는 구대영(윤두준)이 세종빌라를 떠난 뒤 백수지(서현진)와 황혜림(황승언)과의 동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백수지는 점심 밥상을 차리며 황혜림의 게으름에 혀를 찼다. 이어 목록

가운을 두르고 나타난 황혜림은 밥상을 보며 “이게 다예요? 언니?”라면서 “국물이 없다. 할머니는 국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국이랑 찌개랑 매 끼니마다 차려 주셨다”고 말해 백수지를 분노하게 했다. 눈치를 살펴본 황혜림은 “그런데 이게 건강에 더 좋다. 국이랑 찌개는 나트륨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며 금세 꼬리를 내렸다.

이후 황혜림은 “머리만 말리고 밥 먹을게요”라면서 목욕가운을 벗어던져 백수지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백수지는 “어우야, 옷 좀 입고 다녀”라며 “같은 여자라도 싫다”고 경악했다. 이어 “황혜림이 서울 올라간다 했을 때 그냥 보내 버릴걸. 월세 좀 나눠 내겠다고 이게 뭐야”라고 탄식해 웃음을 자아냈다. <스포츠조선닷컴>』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506040100038400002404&ServiceDate=20150603>

3. 「지원이, 초밀착 레깅스 ‘마운드 장악」

『英축구 레스터시티 선수 집단 성관계 동영상 파문』

기사입력 2015.06.03 07:48:1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가 소속 선수들이 등장하는 섹스 비디오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신문 선데이미러는 지난달 31일 자에 “레스터시티 소속 선수 세 명이 태국 여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입수했다”며 “이 중 한 명은 태국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했다”고 보도했다.

레스터시티 구단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영상에 나오는 선수는 톰 호퍼, 제임스 피어슨, 애덤 스미스 등 세 명으로 확인됐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가운데 피어슨은 이 구단 감독인 나이젤 피어슨의 아들이다.

레스터시티는 태국 사람인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가 구단주로 2014-2015 시즌을 마친 뒤 현재 태국을 방문해 친선 경기 등을 치르고 있다.

2013-2014시즌 2부리그인 리그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레스터시티는 2014-2015시즌 14위에 올라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했다.

레스터시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해당 선수와 면담을 마쳤으며 이들을 곧 영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lid@yna.co.kr <연합뉴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 6월 3일자 홈페이지 원편에는 눈길을 끄는 기사의 제목이 나열돼 있다. 「대선 출마 선언 의원 ‘변태 성관계’ 글 논란」, 「동거녀 두딸에게 8년간 몸쓸 짓...성폭행」, 「지원이, 초밀착 레깅스 ‘마운드 장악」 등의 제목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선 출마 선언 의원 ‘변태 성관계’ 글 논란」을 누르면 음주운전 무마를 대가로 여성 운전자를 성추행한 경찰에 대한 기사가 뜬다.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스포츠조선 원편 상단의 고정 메뉴로 자리잡은 「동거녀 두딸에게 8년간 몸쓸 짓...성폭행」도 마찬가지다. 이 기사를 누르면 「식사를 합시다2 종영」 기사가 뜬다. 「지원이, 초밀착 레깅스 ‘마운드 장악」이란 메뉴를 누르면 영국 프로축구 선수들이 태국에서 집단 성관계 동영상에 파문을 불러왔다는 기사가 나온다. 보기에 따라 메뉴와 다른 기사가 뜨는 것은 기술상의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선정적인 기사의 제목을 원편의 메뉴로 고정하다시피 해두고, 그 제목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열리게 하는 것은, 본의든 아니든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25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5년 8월 7일자 와글와글 코너의 「은근슬쩔
모음.gif」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 홈 페이지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8.18. 12:40〉

(http://wagle.isplus.joins.com/app/index.php?mid= wg_tv&category= &document_srl= 7366903)

2. 위 게시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게시물은 일간스포츠 홈페이지 ‘와글와글’ 커뮤니티에 오른 것으로, TV에 방영된 장면 중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여성의 가슴이 접촉된 순간을 포착한 캡처 사진을 gif 애니메이션(움직이는 사진)로 제작한 것이다.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선정성의 정도가 다소 높아 보이지만, 대체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로 신문윤리강령 위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출장 마사지, 출장 만남, 애인 대행, 조건 만남 등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가 실려 있다. 성인 영화, 성인 만화 등의 광고도 자주 실려있다. 이런 성매매 광고성 댓글이 있는 것은 이 게시물 뿐만이 아니다.

‘와글와글’ 커뮤니티에 오른 거의 모든 게시물의 댓글은 이런 성매매 광고들로 채워져 있다. 한 두 개 정도가 이런 성매매 광고성 댓글로 채워져 있으면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를 삭제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댓글이 이런 성매매 광고로 채워져 있음에도 오래도록 방치돼 있는 것은 신문의 고의적인 방조를 의심케 한다. 이런 성매매 광고가 불법임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해로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48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9월 14일자 「여성 탈도는 유명한 사이트에서 알아보세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14, 2015 by dvjames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작성자 : dvjames

여성딜도는 유명한 사이트에서 알아보세요

여성딜도를 향한 나의 마음은 항상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딜도라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으로~ 클릭



고민, 생각은 이제 그만. 다른 분들도 조금씩 이런 제품이 대해 알아보시고
실제 구입을 하셔서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처음만 어렵지 다음에는



쉽고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짜릿한 그 느낌은 이 것으로 경험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구입하신다면 그 느낌 그대로~ 재구입율이
어떤 제품보다 월등한 그 느낌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www.love-factory.co.kr



이곳으로입장~고고고고~

9월 이벤트를 통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해보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onga.com/dvjames/archives/1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동아닷컴의 메타블로그인 ‘저널로그’에 오른 것으로, 9월 15일자(캡처시각) 추천 해당 목차를 클릭하면 성인용품(딜도)의 효과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www.love-factory.co.kr) 나오는데 이 주소에 접속하면 곧 바로 각종 성인용품 사진과 함께 광고 문구가 뜬다.

블로거 dvjames가 작성한 이 게시물은 블로그 때문에 “「성인쇼핑몰 러브팩토리」 성인용품사이트 러브팩토리입니다”라고 명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했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저널로그’의 검색창에 ‘딜도’ 혹은 ‘성인용품’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비슷한 게시물이 20여개 나타나며 모두 성인용품 광고사이트로 연결되고 있다. 동아닷컴은 블로거로 가장한 성인용품업자가 ‘저널로그’를 악용, 자신의 업소를 광고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49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9월 21일자 「이별 통보에 화난 남성, 여친 영

덩이에 히로뽕 주사」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이별 통보에 화난 남성, 여친 엉덩이에 히로뽕 주사

9월 21일, 2015 by jasonlim87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4대 약 척결이 공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뉴스스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39)를 구속했다. 이 씨는 13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여자친구 A 씨(42)의 집에 침입한 뒤 잠든 A씨의 엉덩이에 필로폰 주사를 투약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일명 히로뽕으로 불리는 필로폰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법행 당시 그는 환각상태였으며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기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http://blog.donga.com/jasonlim87/archives/146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이 모 씨가 구속됐다는 기사를 한 네티즌이 동아닷컴의 메타블로그인 ‘저널로그’ 난에 올린 것으로,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여성의 외설스런 사진이 기사보다 더 크게 실려 있다. 필로폰의 해악을 알리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사진을 실은 것은 독자의 관음증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언론사는 블로거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 상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게재물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6년 1월 31일자 「노회찬, 노원병 대신 창원 성산 출마 확정 ... 다음달 1일 공식 선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노회찬, 노원병 대신 창원 성산 출마 확정 ... 다음달 1일 공식 선언

강○○기자 입력 2016.01.30 18:21

①정의당 노회찬<사진> 전 의원이 오는 4월 20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한다.

②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 전 의원이 창원에서 당의 전략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①정의당 노회찬(사진)전 의원이 오는 4월 20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한다.

②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 전 의원이 창원에서 당의 전략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 밝혔다.

③앞서 정의당은 이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출마를 요청했고, 노 전 의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지역에서 노 전 의원에게 영남의 진보벨트 복원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다음 달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초 노 전 의원은 자신의 옛 지역구이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현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과 창원 성산을 놓고 고민해 왔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17·18대 국회에서 당선됐던 창원 성산은 제조업체가 밀집해 노조 조직률이 높은 곳으로 현재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지역구이다.

19대 총선에서 노원병에 당선됐던 노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14일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후 치러진 재보선에서 안 의원이 당선됐다.

노 전 의원이 창원 성산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노원병에선 현역인 안 의원,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혁신위원 등이 맞붙을 전망이다.

②밝혔다.

③앞서 정의당은 이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출마를 요청했고, 노 전 의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지역에서 노 전 의원에게 영남의 진보벨트 복원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다음 달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초 노 전 의원은 자신의 옛 지역구이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현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과 창원 성산을 놓고 고민해 왔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17·18대 국회에서 당선됐던 창원 성산은 제조업체가 밀집해 노조 조직률이 높은 곳으로 현재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지역구이다.

19대 총선에서 노원병에 당선됐던 노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14일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후 치러진 재보선에서 안 의원이 당선됐다.

노 전 의원이 창원 성산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노원병에선 현역인 안 의원,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혁신위원 등이 맞붙을 전망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30/2016013001481.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가지 내용(①+②+③)을 반복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독자가 읽기에 매우 불편하다.

물론 제작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됐으리라 짐작되나 2월 4일 18시 20분 현재 입력한 지 닷새가 지나도록 이 같은 상태로 방치한 것은 언론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와 평론

2015-303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3월 17일자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 어떻게 났길래? 수리비만 1억4000만원」 제목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 서울신문(seoul.co.kr) 3월 17일자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수리비 1억 4000만원 청구 “차 가격은?”」 제목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동아닷컴과 서울신문의 위 적시 재전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 어떻게 났길래? 수리비만 1억4000만 원!

기사입력 2015.03.17 14:51:00 기사수정 2015.03.17 14:51:29

‘수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람보르기니 추돌사고에 누리꾼들이 주목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20대 근로자 A씨가 시가 4억원대 람보르기니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3년 치 급여와 맞먹는 액수를 수리비로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거제시 고현동 서문로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7 승용차 본넷이 파손되고 람보르기니 뒷범퍼가 일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람보르기니 수리비로만 약 1억 4000만 원을 물게 됐다.

일반적인 차량 대물 보험은 1억 원이 한도인데 SM7 차주는 나머지 비용을 추가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수리기간 중 동급 차량 대여에 따른 하루 렌트비 200만 원 상당도 SM7 운전자인 A씨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날 사고가 일반적인 국내 승용차끼리 였다면 아무리 고가라도 수백만 원을 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한 매체를 통해 평가했다.

A씨는 지역 조선소 협력사에서 용접 일을 하는 근로자로 일주일 내내 야근, 주말 특근을 빠뜨리지 않아야 400만 원 안팎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난 차량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대로 신차 비용은 4억원대이고, 수리비만 1억원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가의 슈퍼카이다.

연예인중에는 진재영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재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도끼 또한 자신의 SNS 등에 람보르기니를 비롯해 고급 외제차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다 속상하다” “국내 승용차 였다면 이정도까지는 아니였을듯” “그저 안타깝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http://economy.donga.com/3/all/20150317/70171344/2>〉

(서울신문)=『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수리비 1억 4000만원 청구 “차 가격은?”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람보르기니 수리비

경남 거제시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20대 근로자가 시가 4억 원대의 슈퍼카 람보르기니와 접촉사고를 내 3년 치 급여를 수리비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6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서문로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Lamborghini Gallardo)’ 차량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7의 후드와 앞 범퍼가 찌그러졌고 람보르기니의 뒤 범퍼가 일부 파손됐다.

그러나 람보르기니의 수리비가 무려 1억 4000만원 남짓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신차 가격이 4억 400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슈퍼카다.

게다가 람보르기니 수리기간 중 동급 차량 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렌트비 약 200만원도 SM7 운전자가 비용을 대야할 가능성이 높다.

SM7 운전자는 지역 조선소 협력사에서 용접 일을 하는 20대 근로자로 일주일 내내 야근, 주말 특근을 빠뜨리지 않아야 400만 원 안팎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람보르기니 수리비 및 동급 차량 렌트비 등을 모두 수습하려면 꼬박 3년 치 연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1850006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과 서울신문은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슈퍼카 람보르기니 추돌사고와 관련, 비슷한 기사를 집중 송고하였다.

동아닷컴은 3월 16일 13시 38분 첫 소식을 내보낸 뒤 근 24시간 동안 무려 65회나 제목과 기사 일부만 약간 고친 뒤 지속적으로 기사를 양산하였다. 서울신문도 이날 50회에 걸쳐 제목과 내용이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신문은 이 사고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뒤에도 15차례나 재전송했다.

두 신문의 재전송은 여타 매체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많으며, 보완취재로 한두 줄의 사실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어뷰징을 노린 불공정한 행위이다.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한 재전송 행위는 건전한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자

세를 저버린 태도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86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장 용 성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5월 23일자 「요리사, 머리 자른 코브라에 물려 손 질하다 사망 ... 몇 시간까지 살아있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비교표

요리사, 머리 자른 코브라에 물려 손질하다 사망 ... 몇 시간까지 살아있나?	中 요리사, 목 잘린 코브라에 물려 즉사
기사입력 2015.05.23 15:31:14 최종수정 2015.05.23 16:03:24	기사입력 2014.08.25 16:20:05 최종수정 2014.08.25 17:09:37
머리가 잘려나간 코브라의 생명은 얼마나 지속 될까? 중국에서 코브라를 조리하던 요리사가 잘려나간 코브라 머리에 손을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 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에 서 코브라 특별 요리를 조리하던 요리사 평판은 머리가 잘린지 20분이 지난 코브라에게 손을 물 렸다. 곧 코브라 독은 온몸으로 퍼졌고, 평판은 해독제 를 맞기도 전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코브라를 손질하던 중국 요리사가 잘린 코브라 머리에 손을 물려 사망하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 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와 데일리메일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에서 인도차이나 스피팅코브라 특별 요리를 조 리하던 요리사 평판(Peng Fan)은 머리를 잘라낸 지 20분이나 지난 코브라에게 손을 물려 즉사했 다. 독이 온몸으로 퍼진 요리사는 해독제를 맞기 전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뱀의 머리가 몸통에서 잘려나간 이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꿈틀거리며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 요리사는 뱀의 머리를 잘라낸다. 그러나 잘린 뱀의 머리와 몸통은 계속 꿈틀거리며 몸부림친다. 심지어는 입 앞 쪽으로 갇다 뱀 풀을 물어 보이기도 한다. 40년간 코브라 연구를 해 온 뱀 전문가 양홍창은 “모든 파충류가 몸이 잘려나간 이후에도 최대 한 시간 동안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안은 이번 사고에 대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요리사가 운이 없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데일리메일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뱀의 머리가 몸통에서 잘려나간 이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꿈틀거리며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 요리사는 뱀의 머리를 잘라낸다. 그러나 잘린 뱀의 머리와 몸통은 계속 꿈틀거리며 몸부림친다. 심지어는 입 앞 쪽으로 갇다 뱀 풀을 물기도 한다. 40년간 코브라 연구를 해 온 뱀 전문가 양홍창은 “모든 파충류가 몸이 잘려나간 이후에도 최대 한 시간 동안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요리사를 사망케 한 인도차이나의 스피팅코브라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출몰하며, 2~ 3m 거리에서 상대의 눈에 정확히 독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캡처시각 15.05.27. 23:30 http://news.mk.co.kr/sforward.php?domain=news&sc=30000051&year=2015&no=495363	캡처시각 15.05.27. 23:30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1132033&year=201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5월 23일자에 「요리사, 머리 자른 코브라에 물려 손질하다 사망 ... 몇 시간까지 살아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지난해 8월 보도한 매경닷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제목과 본문 앞뒷부분 일부를 고친 뒤 다시 실은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지난해 일어난 사건을 올해 일어난 것처럼 옮기는 것은 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75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6년 1월 30일자 「女모델, 속옷 탈의장면 적나라하게 공개 '경악」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女모델, 속옷 탈의장면 적나라하게 공개 '경악』

[일간스포츠] 입력 2016.01.30 13:15



〈캡처시각 01.31 23:14〉

모델 제네비브 모튼의 아찔한 란제리 광고가 눈길을 끈다.

최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모델 제네비브 모튼의 수위높은 광고가 공개되 화제가 되었다.

공개된 영상 속 모튼은 멋진 남성과 데이트 도중 입고있던 속옷에 마음에 들지 않아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던 간편한 속옷으로 갈아입는다. 이 장면에서 모튼의 둔부와 풍만한 가슴라인이 여과없이 드러나 보는 이를 아찔케 했다.

해당 광고는 'Cheeki' 라는 속옷 브랜드의 광고로, 편한 휴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컨셉의 광고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유튜브 캡처

〈http://isplus.live.joi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950141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모델 제네비브 모튼의 수위 높은 광고를 다루고 있다. 유튜브의 영상을 소개한 기사는 모튼이 멋진 남성과 데이트 도중 입고 있던 속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던 간편한 속옷으로 갈아입는 장면에서 둔부와 풍만한 가슴 라인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전한다.

그러나 위 내용은 일간스포츠가 2015년 11월 4일자로 보도한 것이다. 새로 게재된 기사의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기사 내용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선정적인 사진과 기사를 재탕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83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주문

중앙일보(joins.com) 2016년 1월 30일자 「스텔라, 19금 경악 무대...아찔한」

「스텔라가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 제목의 기사 2건 등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1.30. 11:42〉



『걸그룹 스텔라가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USIC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서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쇼 챔피언’에는 신혜성, 여자친구, 김원준, 스텔라, 크로스진, 전설, 한영, 라붐, 헤일로, 임팩트, 안다, 뽀케이, 코코소리, 인앤추, 베이비부 등이 출연했다.

박○○기자 park.***an@joins.com』

〈<http://news.joins.com/article/1948899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스텔라, 19금 경악 무대...아찔한」 「스텔라가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 2건, 사진 한 장을 맞물려 소개했다. 그런데 각각 클릭되는 이 세 건은 똑같은 기사 하나로 연결된다.

이는 같은 기사를 제목만 바꿔 거듭 올리는 ‘어뷰징’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언론인의 품위

주문

국민일보(kmib.co.kr) 2015년 11월 10일자 「‘내로남불’ 오재원 빠던에 사이다 외친 야구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프리미어12] ‘내로남불’ 오재원 빠던에 사이다 외친 야구팬

입력 2015.11.20 07:00

오재원은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프리미어 12 준결승 9회 두 번째 타석에서 큼지막한 타구를 날린 뒤 배트플립을 선보였다.

“같은 팀이 볼 땐 즐거운 게 오재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빠던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 내야수 오재원(두산 베어스)의 ‘빠던(타격 후 배트를 던지는 행위)’은 팬들에게 마치 한 모금 사이다와 같은 짜릿한 청량감을 선사했다. 그동안 KBO 리그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오재원은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상대팀 팬들에게 밈보이기 일쑤였다. 하지만 ‘대표팀’ 오재원의 빠던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오재원은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일본과의 준결승 경기 9회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다. 오재원에게 찾아온 두 번째 타석이었다. 공을 때린 뒤 오재원은 홈런을 직감한 듯 배트를 던져버렸다. 타구는 담장을 넘지 못했지만 야구팬들은 오재원의 통쾌한 빠던에 열광했다.

이대호의 역전 적시타만큼이나 오재원의 빠던은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한국

팬들은 경기 일정 변경, 자국심판 배정 등의 문제로 일본에 불만을 가져왔다. 빙빙 돌면서 날아간 그의 배트는 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9회 첫 타석 대타로 등장한 오재원은 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손아섭, 정근우가 연속 안타를 때려냈다. 오재원은 한국 대표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날 오재원은 대표팀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한 주인공이었다.

다음 시즌이 시작되면 오재원은 또 밋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의 리액션은 두산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상대팀 팬들에겐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결승전 이후 오재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났다. ‘급호감’ ‘국민 빠던’ ‘근성 갑’ ‘승부욕’ 등의 수식어도 뒤따랐다.

오재원이 부정적인 시각에 가려졌던 야구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아직 남은 결승전에서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그가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기자 c***ain@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83698&code=61161211&sid1=spo&cp=nv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제목에 ‘내로남불’이니 ‘빠던’이니 ‘사이다 외친’이니 따위로 은어를 잔뜩 사용하였다. 기사에는 이 같은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했기에 독자가 그 뜻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은 없다.

그러나 이 제목만을 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은어의 남발이 우리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6년 1월 23일자 「호갱님, 180만원 명품백 수입 원가 알고 가실게요」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1.23. 00:35〉

『[‘가격 거품’ 부르는 유통구조]

85만원에 수입한 핸드백, 매장서는 179만원에 판매

입력 2016.01.21 18:33:13 수정 2016.01.22 02:42:33

해외 명품의 ‘배짱 영업’

한국 시장서 고가정책 고수

환율 떨어져도 제품가 반영 안해

해외 명품업체들이 유독 한국 시장에서 고가정책을 고수하며 ‘배짱 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독점 수입업체가 아니라 제3의 업자가 저렴하게 들여오게 하는 병행수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품 신뢰도나 사후서비스 등을 한층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명품 핸드백과 지갑은 수입 원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100만원을 넘는 고가 제품을 기준으로 수입 핸드백은 평균 85만7000원에 들여와 매장에서 179만3214원에 판매하며, 지갑은 평균 26만 8000원에 수입해 62만5972원에 팔았다. 격차가 각각 2.09배, 2.34배에 이른다.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유명 수입 핸드백과 지갑 49종의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41개 제품이 해외보다 적게는 3.9%, 많게는 56.3% 비쌌다. 코치 ‘키트캐리올토트’는 국내 평균가가 72만3600원지만 해외에선 평균 46만3019원으로 격차가 56.3%에 달했다. 해외에서 평균 137만7070원인 루이비통 ‘키폴45’는 국내에선 204만5000원으로 48.5% 높았고, 구찌 ‘디스코백’은 34.2%, 페라가모 ‘사피아노더블간치니윌렛’은 27.8% 비쌌다.

한 명품업체 관계자는 “제조원가와 환율, 관세, 운영비 외에도 시장 규모나 특성 등을 반영해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가격 차이가 이처럼 크게 벌어지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에서 제품을 산 뒤 자국에서 되파는 ‘명품 재테크’는 물론 전문 구매대행업자까지 성업 중이다.

환율 변동, 원자재값 상승 등 인상 요인은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반대의 경우에는 웬만해선 값을 내리지 않는 ‘이중잣대’도 자주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비 진작을 위해 고가 가방, 시계 등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고 세금 인하분을 고스란히 챙겼다.

당시 정부가 가격 인하 현황을 조사했지만 샤넬, 디올, 구찌 등은 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두 달 뒤 과세 기준을 ‘원위치’시켰다. 연례행사 같은 가격 인상 탓에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찾아보기 힘들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품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패션 트렌드’에선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보다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핵심 시장으로 대우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임○○ 기자 t***is@hankyung.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수입 명품이 유독 한국에서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원문 제목도 그에 걸맞게 「85만원에 수입한 핸드백, 매장서는 179만원에 판매」 「해외 명품의 ‘배짱 영업」 등으로 붙였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호갱님, 180만원 명품백 수입원가 알고 가실게요」로 둔갑했다.

‘가실게요’는 우리말을 잘못 쓰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는 표현 ‘하실게요’ 투의 한 형태이다. ‘가실게요’는 어간 ‘가’에 어미 ‘시+ㄴ게+요’의 구성이다. ‘시’는 높이는 의미, ‘ㄴ게’는 말하는 이의 약속 또는 의지를 밝히는 기능을 한다. 상대를 높이는 어미와 내 의지를 밝히는 어미를 같이 쓰는 건 우리말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제목은 「호갱님, 180만원 명품백 수입원가 알고 가세요」가 옳다.

특히 ‘~하고 가실게요’란 유행어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KBS2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는 한 한글 단체로부터 대본수정 요청을 받고 방송 도중 이 같은 표현을 잘못된 것이라고 자막에 고지한 바 있다.

편집자는 ‘가실게요’를 풍자의 의미로 썼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하실게요’ 투가, 그 잘못은 알려지지 않은 채 널리 쓰이는 현실에서 바르고 고운 국어 사용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건 지적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2015-1125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동아 2015년 4월 6일자 15면 「안면경련증, ‘미세혈관감압술’로 효과적 치료», 4월 13일자 15면 「안면경련증, ‘미세혈관감압술’로 부작용 없이 치료», 4월 20일자 15면 「안면경련증, ‘미세혈관감압술’로 흉터 없이 치료», 4월 27일자 15면 「안면경련증, 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 필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스포츠동아의 위 칼럼들은 특정 병원 원장의 기고문으로, 필자가 소속된 병원에서 시술하는 ‘미세혈관감압술’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스포츠동아는 4월 한 달간 제목과 내용이 유사한 칼럼을 모두 4회에 걸쳐 게재했다.

이처럼 특정 병원 관계자가 쓴 같은 주제와 내용의 칼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스포츠동아는 또 위 칼럼들을 통해 필자가 소속된 병원의 진료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병원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스포츠경향 2015년 8월 27일자 17면 「김희수의 무속세상 원한을 풀어주는 천도재」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TV연속극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귀신이 씌지 않고서는 저렇게 변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한다. 우리 집을 찾아 오는 손님들의 상담유형을 볼 때 이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올 신학기 초에 찾아온 50대 아주머니는 신당에 왔더니 상담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참동안 방 내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다.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가 집을 나가서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성격도 명랑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들의 사주를 물어보고 신령점으로 살펴보니 젊은 남자의 죽은 원귀가 따라다니고 있었다. 혹시 집안에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젊은 남자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네, 맞아요. 남편보다 네 살 위인 형이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몽달귀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처음 신당에 왔을 때 뭔가 꺼림칙한 표정으로 경계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었다. 내 앞에 바짝 다가오더니 살풀이를 하고 원한이 있는 조상을 천도하기로 날을 잡자고 서둘렀다. 천도재를 지내기로 약속한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제 딸이 새벽에 옷보따리를 싸들고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면 어떨까 해서요.”

“그것 참 잘됐네요. 데리고 오세요.”

그날 밤, 조상 천도재 굿을 하고 살풀이를 하게 됐다. 귀신을 그려 벽에 붙여 놓고 활을 쏘는 일이었다. 나이대로 활을 쏘는데 일곱 개째 화살을 쏘 때였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집 딸이 별안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다.

“엄마, 저기 귀신이 계속 나만 쏘아보고 있어요.”

나는 놀란 아이를 달래고 계속 활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활을 다 쏘고 나서 마지막 화살을 그 아이의 등 부위 옷에 꽂았다.

그 순간 아이는 아픈 소리를 냈지만, 일이 끝난 뒤에는 생글생글 웃었다.

“엄마, 허리도 안 아프고, 이상해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딸아이는 다시 학업에 매진하는 모범생이 됐다.(02-577-0541/010-4841-9008)』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은 무속인 김희수의 ‘무속세상’이라는 고정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위 칼럼은 김희수씨가 모범생이던 여고생의 가출 원인이 장가도 못하고 죽은 원귀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천도재를 통해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내용이다.

칼럼에 따르면 무속인 김 씨는 50대 여성 의뢰자로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명랑한 여고생 딸이 가출한 사연을 듣고 그 가출 원인을 신령점과 사주로 밝혀낸다. 칼럼은 『가족들의 사주를 물어보고 신령점으로 살펴보니 젊은 남자의 죽은 원귀가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이어 『혹시 집안에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젊은 남자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무속인 김 씨는 천도재 굿과 살풀이를 통해 귀신을 쫓는 장면도 상세히 칼럼

에서 묘사했다. 귀신을 그려 벽에 붙여 놓고 활을 쏘자 여고생은 “엄마, 저기 귀신이 계속 나만 쏘아보고 있어요.”라며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이다. 또 여고생의 나이대로 활을 다 쏘고 나서 마지막 화살을 그 아이의 등 부위 옷에 꽂는 순간에 아픈 소리를 내던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엄마, 허리도 안 아프고, 이상해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 장면을 두고 칼럼에서 『이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위 칼럼은 김 씨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미신적인 것이다. 비록 무속이 우리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무속인의 기이한 체험담을 공공매체인 신문 칼럼에 사실인양 게재하는 것은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평론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칼럼은 이처럼 무속인 김 씨의 신통력을 소개한 뒤 말미에 그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영리를 위한 홍보성 칼럼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칼럼은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 「평론의 원칙」 전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73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5년 9월 14일자 B5면 「‘프리미엄 식품 强者’ 현대백화점, 한우 선물세트의 격을 높인다」, 9월 15일자 B5면 「‘마음의 온도’까지 높여주는 아웃도어/네과, 우리 사회 답혀주는 ‘따뜻한 패딩’ 찾는다」, 9월 22일자 B5면 「세계

최고 5060만 화소 DSLR가 빛어낸 마법/캐논 極<극>·사·실·주·의」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東亞日報 9월 14일자 B5면



東亞日報 9월 15일자 B5면



東亞日報 9월 22일자 B5면

東亞日報은 「프리미엄 뷰」라는 면 제목 아래 전면을 할애해 현대백화점, 네파, 캐논의 기업 활동과 제품 등을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9월 중 3차례에 걸쳐 각각 게재했다. 큰 제목은 광고 카피를 연상케 하는 내용에 해당 기업의 이름까지 표기돼 있으며, 게재된 사진들은 해당 기업들이 광고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의심될 정도이다. 네파, 캐논을 홍보하는 지면에는 관련 기업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까지 있다.

기사 끝부분에 ‘동아일보 사진부’라는 바이라인이 표기돼 있는 것으로 보아 「프리미엄 뷰」 지면은 東亞日報 사진부에서 해당 기업의 홍보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헤럴드경제 2015년 6월 15일자 17면 「올가니카, 제품개발 총괄 셰프 크리스틴 조 전격 영입/“생식은 心身에너지 … 대중적 클렌즈 선보일 것”」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생식을 하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프리미엄 내추럴푸드 전문기업 올가니카(대표 최정휘·정형호)가 뉴욕과 캘리포니아 슈퍼리치들의 프라이빗(private) 셰프로 활약해 온 생식·채식 전문가 크리스틴 조(Christine Cho·40) 씨를 제품 개발 총괄 셰프로 전격 영입했다. 올가니카는 크리스틴 조의 영입을 통해 비건(vegan·채식) 푸드와 로푸드(Raw Food·생식)의 정수를 야심차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서울 후암동 헤럴드스퀘어에서 조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슈퍼리치들이 원하는 건 ‘건강’이었어요= 크리스틴 조가 로푸드 전문가로 이름을 쌓기 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처음 향했던 곳은 미술이었다. 뉴욕 파슨스(Parsons)를 진학하기 원했던 그는 ‘진지한 공부’를 하기 위한 어머니의 뜻을 따라 NYU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그는 “한바퀴 돌아 나의 예술이 음식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창의적인 일에 대한 열망으로 조 씨는 뉴욕의 정통 프랑스 요리학교(FCI)에서 새롭게 인생의 커리어를 만들었다. FCI에서 공부하는 첫 날, 그는 “나는 요리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느꼈다고 했다.

프라이빗 셰프는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의 손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대중의 입 맛에 맞는 요리가 아닌, 본인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맛과 영양을 담은 ‘맞춤형 요리’가 탄생한다. 우연한 기회로 FCI 재학 당시 포춘 500기업의 하나인 Glocap.net 창립자의 프라이빗 셰프로 일했다. 이후 조씨는 세계적인 스타들과 금융계 거부들의 식단을 책임져왔다. 그들과 맺은 비밀서약에 따라 일일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다수의 월가 빌리어네어들이 모두 그녀의 고객이었다. 그들을 따라 16년간 뉴욕과 할리우드, 파리, 두바이 등을 오갔다.

베일 속에 가려져있는 ‘슈퍼리치’들의 생활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요리했던 경험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객 운이 매우 좋은 편이었고 제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성공적이고 영향력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서 요리하는 것은 영광이었어요”라고 했다.

“저는 뉴욕시의 소위 말하는 상위 0.5%를 위한 요리를 해봤어요. 그들이 수입과 무관하게 집에서는 얼마나 간단하게 먹는지를 알면 놀랄 거예요.”

역만장자, 유명인사들을 위해 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원하는 공통분모는 늘 ‘건강’이었다는 점이다. 조씨는 “고객이 다이어트를 위해 고군분투하든, 식품 트렌드를 따르고자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었다”고 했다.

▶“생식과 채식의 장점은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 몸에 좋은 식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곧 건강식에 대한 조씨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2012년, 조씨는 생식의 대가로 알려진 메튜 케이의 로푸드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다.

“생식이 모든 식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생식이 단순히 과일이나 채소 등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먹는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오히려 생식 레시피로도 파인 레스토랑 메뉴 못잖은 접시가 나오기도 한다.

그는 “메튜 케이의 교육 중 좋았던 부분은 로푸드의 비주얼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법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라며 “마카다미아로 치즈를 만들고 코코넛버터로 트리플을 만들었는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비주얼과 같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생식에 대해 물었다. “생식은 생 채소, 과일, 곡물을 통해 최대 영양과 효소를 제공해요. 조리나 가공이 없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체내 면역

력도 증진되고 지속적인 해독을 통해 심신의 에너지를 주죠.”

조 씨가 생각하는 생식의 가장 좋은 점은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생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는 건강이다. 다행히 그 목표에 맞게 생식은 사람을 힐링시켜주고 기분과 외모의 기능을 높여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생식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식품’을 먹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식을 하는 사람도 함께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생식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열을 쓰지 않으면서도 영양과 맛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씨는 뉴욕을 중심으로 시작해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주스(Juice) 트렌드’가 반갑다고 했다. 주스는 생식을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올라니카에 합류하면서 그는 현재 올라니카의 ‘저스트주스 클렌즈’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저스트주스 클렌즈가 갖고 있는 정통 클렌즈의 성격을 중심으로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해 볼 생각이예요. 미리부터 너무 강력한 필요도, 하드코어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단 맛을 조금 가미하는 등 대중화된 맛을 소개한 후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좀 더 높은 단계의 클렌즈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더불어 그는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비건푸드(vegan food·채식)의 제품도 다수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친환경·건강식·자연식을 지향하는 올라니카의 내추럴스낵의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가정간편식 시장에도 무첨가, 비건, 글루텐프리, GMO프리 등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며 “맛과 영양과 가치를 담은 식품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지속가능한 영농과 환경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올라니카의 철학을 구현해내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올라니카와 함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된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묻어났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식재료와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내추럴푸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흥정옥 올라니카 회장의 비전에 공감해 합류를 결정했다는 그. 그의 말은 묵직한 무

계감으로 다가온다.

“(프라이빗 셰프로서)모험을 즐기는 삶이 매우 즐거웠지만, 지금 저는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됐고, 올라니카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내추럴푸드 시장의 개척자인 올라니카가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친환경, 자연식, 건강식 식품 트렌드를 선도하고, 나아가 내추럴푸드의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더하겠습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61500056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1개 지면 가운데 5분의 4 정도를 할애해 식품기업인 ‘올가니카’가 영입한 제품개발 총괄 셰프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 기업은 홍정욱 헤럴드경제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헤럴드경제 자회사다.

기사는 올라니카가 뉴욕과 할리우드 슈퍼리치들의 프라이빗(private) 셰프로 활약해 온 생식·채식 전문가를 제품 개발 총괄 셰프로 전격 영입해 비건(vegan·채식) 푸드와 로푸드((Raw Food·생식)의 정수를 야심차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의 경력과 제품 개발 구상 등을 상세히 다뤄 사실상 올라니카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총괄 셰프와 홍 회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사진을 크게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같은 날자 2면에 「올가니카, 비건·로푸드 전문 셰프 크리스틴 조 영입」이라는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싣고 위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처럼 언론이 특정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자 영입에 대해 스트레이트 기사와 인터뷰 기사로 대서특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언론사가 자회사와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지면을 제작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0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매일경제 2015년 6월 8일자 「THE CAR」 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25일자 「자동차」 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26일자 「CAR」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자동차를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 東亞日報는 해당 지면에 일부 관련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기업 등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일부 해당 광고까지 실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42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방 상 훈

주문

朝鮮日報 「일산 이마트타운」 별지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의 위 별지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1면



H2~H3면



H4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은 2015년 8월 8일자 신문과 함께 위 별지 섹션을 배달했다. 섹션은 4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3면에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대형 복합마트인 일산 이마트타운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가 각각 전면에 걸쳐 게재돼 있고, 4면에는 이마트타운 전면 광고가 게재돼 있다. 또한 1면에는 이마트타운 약도와 개요가 그래픽으로 처리돼 있다.

섹션에 게재된 기사는 7건이며(용어설명 제외), 모두 이마트타운을 장점 위주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섹션 1면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마트타운 전경 사진이, 2~3면에는 5컷의 이마트타운 내부 사진이 각각 게재돼 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의 바이라인에 ‘조선비즈 기자’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이 섹션은 朝鮮日報의 자회사인 조선비즈에서 제작해 朝鮮日報과 함께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섹션에는 일반적인 신문 지면이나 다른 광고성 섹션과 달리 발행일자가 표기돼 있지 않다. 朝鮮日報 홈페이지의 ‘지면보기’에서도 이 섹션은 검색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발행일자가 표기되는 위치인 지면 맨 윗부분에도 발행일자 대신 ‘조선비즈 특집’ 표현만 적혀 있다. 신문지면에 발행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다.

섹션의 편집도 다른 광고성 섹션과는 차이가 난다. 1~3면 기사, 4면 광고라는 지면 배치는 통상적인 광고성 섹션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3면을 광고 없이 통단 기사로 채운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1면의 섹션 제목을 세로로 배치한 것은 朝鮮日報의 다른 섹션의 1면 섹션 제목이 가로로 배치된 것과 완전히 다르다. 또한 朝鮮日報의 다른 광고성 섹션에 ‘조선일보 특집’ 표현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 섹션에는 ‘조선비즈 특집’ 표현이 1~3면에 표기돼 있다.

「일산 이마트타운」 섹션은 발행일자 표기도 없고, 편집에서도 다른 광고성 섹션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제작한 신문 지면이라기보다는 광고

물로 의심받을 소지가 크지만 이 섹션에는 어느 곳에도 광고물임을 알리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朝鮮日報는 일산 이마트타운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지면을 제작해 朝鮮日報와 함께 배포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행일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작 및 보도 행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 「언론의 독립」,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77 신문윤리강령 위반

제주일보 발행인 오 영 수

주문

제주일보 2015년 8월 26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①먹는샘물의 역사/’블루오션’ 먹는샘물 시장 무한경쟁 돌입」, 9월 2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②삼다수의 태통/도민 공동의 자산보호 위해 공수화 개념 도입」, 9월 9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③삼다수의 발전/출시 첫해부터 17년간 먹는샘물 ‘부동의 1위’ 유지」, 9월 16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④도전에 직면한 삼다수 (1)/점점 치열해지는 국내시장, 까다로운 ‘소비자 입맛’따라 물시장도 고급화·다원화」, 9월 23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④도전에 직면한 삼다수 (2)/수출 경험 부족·막대한 물류비 … 해외시장 뚫기 ‘바늘 구멍」 제목의 시리즈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제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8월 26일자〉=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활용한 삼다수가 16년째 국내 시장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국민 생수’의 자리를 굳히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 하락과 프리미엄 생수 시판 실패, 지지부진한 수출 시장 개척 사업 추진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국민 생수인 삼다수가 글로벌 명품 삼다수로 비상할 수 있는 방안에 마련하기 위해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국내·외 먹는샘물 시장의 역사와 발전 현황, 삼다수 유통의 현 실태와 개선 방안, 그리고 미래 비전 등을 8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먹는샘물이란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

또 먹는샘물은 이러한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물리적인 처리를 거친 물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광천수와 용천수, 정제수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광천수는 지하 대수층의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구멍에서 퍼올리거나 자연적으로 솟아난 미생물이 없는 물을 말한다.

용천수는 지하에서 물이 흐르는 층을 따라 이동하던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으로 솟아나오는 것을 일컫는다.

정제수는 강이나 호수, 지하수 등을 정수처리한 물을 말하며 수돗물이 대표적인 정제수다.

▲우리나라 먹는샘물의 역사

국내 먹는샘물 산업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인이 충청도 초정리 약수터를 개발해 ‘구리스다루’라는 이름으로 천연사이다와 천연탄산수를 생산한 게 시초다.

이후 1974년 미8군 주둔 병사들과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미국인에 의해 서초구 서초동 롯데사이다 공장 내의 지하수에서 물을 채수해 병에 담아 팔기 시작했다.

이어 1976년 다이아몬드 정수가 최초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맞아 공식적으로 첫 판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먹는샘물 시판이 자칫 수도물 정책의 포기로 비칠 것을 우려해 서울올림픽 직후 생수판매를 금지했다.

그런데 1994년 대법원이 먹는샘물 유통 금지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1995년 국회가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인 산업화의 길이 열렸다.

이후 삼다수를 비롯한 다양한 먹는샘물들이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발전

세계 먹는샘물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웰빙(Well-Being) 및 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소비의 생활 패턴인 로하스(Lohas) 시대에 발맞춰 세계 물산업 분야에서 먹는샘물 사업 분야가 공공 분야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블루오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략〉

▲해외 먹는샘물 시장의 발전

해외에서 먹는샘물은 1960년대까지 유럽에서 대부분 약국과 약방을 통해 유통됐으며 환자를 위한 기능성 음료 정도로 간주됐다.

그런데 먹는샘물 시장은 19세기 이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급속한 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인한 수요의 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의 문제로 수자원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하략〉

〈9월 2일자〉= 『▲삼다수 사업 시작의 계기

정부는 생수를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했지만 1994년 3월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듬해인 1995년 5월부터 먹는샘물(생수·광천수)의 판매가 완전히 허용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지하수 고갈과 해수 침투에 의한 오염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특별법에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략〉

▲삼다수의 우수성과 경쟁력

삼다수는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뜻에서 유래한 ‘삼다도’의 ‘삼다’와 물이란 의미의 ‘수’를 결합해 독특한 지역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특성, 화산섬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삼다수는 지하 420m의 깊은 곳을 흐르는 화산암반수를 사용한다. 제주지역의 화산암반수는 화산암층에 부존하는 지하수를 통상적으로 말하며 △약알칼리성(pH 7.7~7.8) △경도가 낮은 부드러움(17~19ppm) △바나듐과 실리카와 같은 건강에 좋은 미량성분 함유 △계절적 수질변화가 없는 안정성 △방사성 물질 미함유 등의 특성이 있다.

〈하략〉

▲삼다수 생산 과정은

제주도개발공사는 현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취수원 2곳(6개공)에서 1일 7600t의 지하수를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97년에 완공된 제1취수원에는 해발 440m 지점에서 지하 420m까지 착정한 취수정 3개공과 같은 지점에서 지하 400m까지 착정한 감시정 6개공이 있으며 이곳에서 1일 최대 3700t의 지하수를 뽑아낼 수 있다.

〈하략〉

〈9월 9일자〉= 『제주삼다수는 1998년 3월 출시된 이후 연평균 12.7%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확대를 꿈꾸고 있다.

▲급증하는 판매량= 삼다수는 출시 3개월 만에 국내 먹는샘물 페트병 시장 1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삼다수 판매량 추이를 보면 판매 첫해인 1998년 6만9689t을 판매한 데 이어 10년 뒤인 2007년에는 31만3561t으로 늘어났다.

〈하락〉

〈9월 16일자〉= 『먹는샘물을 판매하기 위한 국내시장도 점점 치열해 지고 있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구분=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물의 종류는 자연 상태의 물과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먹는샘물은 음용수를 병에 넣어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먹는샘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샘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실제로는 원수의 여과와 살균 과정을 거쳐 생산한 상품화된 물을 말한다.

즉, 샘물은 암반대수층 내부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일컫으며 먹는샘물은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일정의 처리과정을 거쳐 제조한 제품인 것이다.

〈하락〉

〈9월 23일자〉= 『제주삼다수의 국내 먹는샘물시장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면서 ‘국민 생수’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0년까지 제주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장 점유율 하락= 제주삼다수의 국내 먹는샘물시장 점유율은 2011년 48.6%에서 2012년 38.7%, 2013년 36.5%, 지난해 36%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잇따라 PB(자체 상표)상품을

개발하고 농심과 하이트진로가 각각 ‘백산수’와 ‘석수’를 출시하는 등 대기업들이 먹는샘물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제주일보의 위 기사는 8회에 걸쳐 게재한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라는 제목의 시리즈다. 매번 1개면 전면에 게재한 대형 기획물로 8월 26일 시작해 9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보도했다.

제주일보의 시리즈 글 쓰는 순서는 「①먹는샘물의 역사」 「②삼다수의 태동」 「③삼다수의 발전」 「④도전에 직면한 삼다수 (1) 점점 치열해지는 국내 시장」 「④도전에 직면한 삼다수 (2)한계에 부딪힌 수출 시장」 「⑤삼다수의 미래비전 (1)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전략」 「⑤삼다수의 미래비전 (2)수출시장 80개국 확대 전략」 「⑥제주개발공사 사장 인터뷰」이다.

제주 삼다수가 국내 먹는샘물 판매량 1위이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영리가 목적인 사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개하고 사장인 인터뷰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장점 위주로 보도한 것은 홍보성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독자들에게 균형감 없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 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33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방 상 훈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朝鮮日報 2015년 11월 12일자 「OMEGA」 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13일자 「오메가」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朝鮮日報, 매일경제는 시계 브랜드 ‘오메가’를 주제로 각각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했다. 007 영화에 등장한 시계들을 사진을 곁들여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 광고도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의 영리와 특정 기업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브랜드만을 위한 섹션을 제작해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실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4.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문

東亞日報 2015년 12월 1일자 「한양사이버대학교」 별지 섹션, 중앙일보 12월

1일자 「한양사이버대학교」, 12월 22일자 「세종대학교」 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일자 「한양사이버대학교」, 12월 9일자 「성균관대학교」, 12월 22일자 「건국대학교」 별지 섹션, 경향신문 12월 23일자 「경희대학교」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특정 대학교를 주제로 각각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했다. 신입생 모집 요강과 특징점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 광고도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대학의 영리를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대학만을 위한 섹션을 제작해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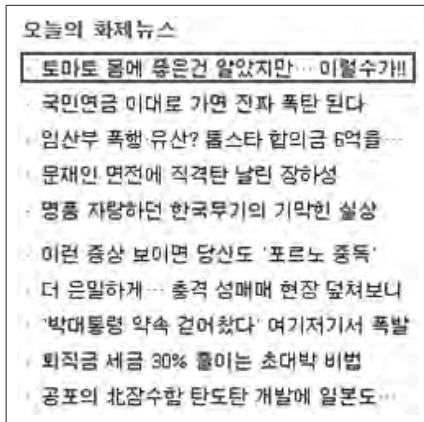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주문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2015년 5월 13일자(캡처시각) 「토마토 몸에 좋은건 알았지만 ... 이럴수가!!」 제목의 기사와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5.05.13. 00:30〉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5/e20150512110101117920.htm>〉

『구운 토마토 먹고 한달에 부부사랑 ... 법원의 판단은?』

한국아이닷컴 김○○기자 d***7@hankooki.com

입력시간 2015.01.21 15:31:46 수정시간 2015.01.21 15:31:47



구운 토마토환을 개발한 엔존B&F가 광고 위반으로 품목판매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엔존B&F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엔존B&F는 '구운 토마토를 먹고 한달에 15번 부부사랑을 하였다....'라고 쓰인 문구를 통해 그동안 광고를 해왔으나 식약청이 체험기, 체험사례 등을 표현하는 광고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품목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엔존B&F는 이 광고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토마토의 효능 및 효

과를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에 사용했을 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실제로 엔존B&F는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리코펜(Lycopene)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심장질환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연구 결과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게 비해 전립선암이 발생할 확률이 45% 낮아져, 토마토가 남성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광고를 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구운 토마토환 광고의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식품이 가진 효능의 표시,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광고에 쓰인 ‘구운 토마토를 먹고 한달에 15번 부부사랑을 하였다. 같은 연령대 남자보다 무려 세배 이상 부부사랑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식품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부수적 효과로서 이 사건 식품을 광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엔존B&F 관계자는 “법원의 승소는 다시 말해 토마토의 효능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해준 것과 같다”면서 “토마토는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정력식품이다. 그래서 우리 토마토환을 평소 휴대하며 먹으면 정력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심이었던 엔존B&F의 구운 토마토환은 사건 해결 기념으로 이유있는 쇼핑몰 이유샵(www.becauseshop.com)과 함께 한정수량 47% 할인 판매한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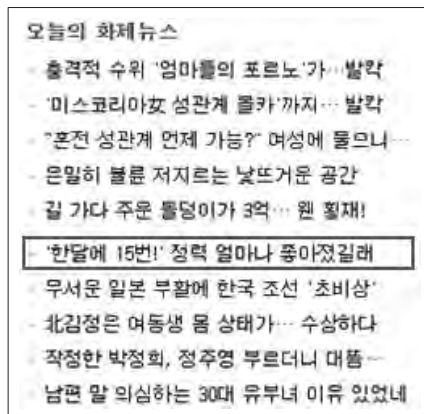
서울경제는 지난 1월 21일 「구운 토마토 먹고 한달에 부부사랑 ... 법원의 판단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후 「오늘의 화제뉴스」 코너에 수개월에 걸쳐 똑같은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구운 토마토환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엔존B&F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

원이 엔존B&F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산지원이 언제 판결을 내렸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지난 1월 이후 수개월에 걸쳐 제목만 약간 바꾼 뒤 「오늘의 화제뉴스」 난에 계속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기사 말미에 “사건 해결 기념으로 이유있는 쇼핑몰 이유샵(www.becauseshop.com)과 함께 한정수량 47% 할인 판매한다”고 업체를 홍보하는 문구를 삽입한 점으로 미뤄 과거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과장해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경제 4월 27일자에는 건강식품 백수오 논란에 편승해 다시 내용이 거의 비슷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비록 기사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같은 코너에 몇 달씩이나 게재하고 비슷한 내용을 다시 내보내는 것은 특정 업체의 영리에 부합하려는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 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캡처시각 15.02.07 01:20〉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9월 6일자 「‘돈부르는 풍수’ 복권 당첨되려면 침실에다가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9.07. 0:15〉

『돈부르는 풍수’ 복권 당첨되려면 침실에다가 ...

기사입력 2015.09.06 11:35:29 최종수정 2015.09.06 14:07:19

복권 등 돈을 부르는 실내장식이 따로 있는 것일까.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믿고 있는 풍수 인테리어를 살펴보자

복권수탁업자 나눔로또가 공개한 풍수 인테리어에 따르면 먼저 집안의 서쪽 벽을 노란색으로 장식하면 금전운이 강해진다는 속설이 있다고 전했다. 또 북쪽에 진한 색상의 가구를 두고 예금통장이나 인감, 자주 이용하지 않는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면 재물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침실에서는 침대를 놓을 때 머리 방향을 남쪽을 두고 벽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침대를 벽에 붙여 놓으면 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전운을 위해서는 침실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거나 방문을 대각선으로 바라보게 배치하고 침대 주변에 꽃이나 관엽식물을 놓으면 직감력을 높여줘 판단력과 재물운을 높여준다고 덧붙였다.

거실 테이블은 목재가 좋은데 유리 테이블이나 원형 테이블은 노력해서 힘차게 살아가려는 의욕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실 창가나 소파 옆에 본인의 키보다 큰 스탠드를 놓아두면 사회활동이나 승진, 건강 등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소개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풍수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복권에 당첨되려면 “집안의 서쪽 벽을 노란색으로 장식”하고 “북쪽에는 진한 색상의 가구를 두어야” 재물운이 따른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금전운을 위해서는 침실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거나 방문을 대각선으로 바라보게”하며 테이블도 “유리나 원형보다는 목재가 좋다”고 밝히고 있다. 속설이라는 미명 하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이는 사회적 공기로써 온라인 신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사실에 입각해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언론이 비과학적인 내용을 뉴스스탠드에 톱으로 가감 없이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이 기사는 지난 2월 21일 매경닷컴에 게재됐던 내용으로, 독자의 불만제기로 제885차 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제2015-1-19호)를 받은 바 있다. 이미 한차례 주의를 받았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다시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기사와 함께 다른 복권 기사를 묶어 뉴스스탠드 톱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아 복권수탁업자인 나눔로또를 홍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회적 책임

2015-3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주문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2015년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 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위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8시간 게재하고, 이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사과)문을 네이버 등 포털에서 2개월간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 원칙은?』

입력 2015.06.11. 00:20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 원칙은?

메르스 35번째 환자이자 의사의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2일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 “메르스 감염자가 사망하면 보호장구를 착용한 직원들이 병실에 들어가 시신을 더플백에 이중으로 담은 뒤 영안실까지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체액 등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신 처리는 화장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발표한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처리 과정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대책본부의 발표는 6월 2일 이뤄졌으나, 메르스에 감염된 삼성병원 의사의 위중 사실이 알려진 직후 6월 11일 다시 한번 기사화 한 것이다.

그런데 제목은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이다. 시신처리 지침 내용을 다루면서 위중한 상태인 메르스 의사의 상태를 거론함으로써, 마치 그가 죽음을 앞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및 당사자의 가족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

다. ‘환자 상태 불안’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 보도 당시 한 매체의 오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이 제목이 주는 충격의 강도는 매우 컸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서울경제는 6월 11일 0시 20분 첫 보도 이후 8시간 여가 지난 뒤인 오전 8시 29분 제목을 「메르스 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으로 바꾸었으나, 본문 리드는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후 1시간 여가 지난 뒤인 오전 9시 33분에는 리드 문장을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로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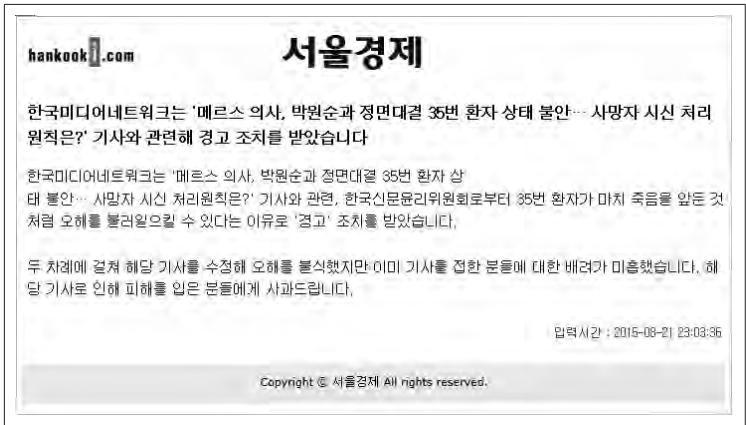
위 기사는 보도 후 두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지만, 이미 잘못된 정보를 접한 다수의 독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였으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마감 시간에 쫓겨 사실확인에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오보에 확산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보도시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거나, 잘못된 점을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고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명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실제 당시 이 기사를 본 네티즌은 “마치 죽기라도 한것같은 클릭수 유도하는 악랄한 타이틀”이라고 힐난하는 등 비난이 잇따랐다.

이는 재난보도준칙 제2장 「취재와 보도」 1.일반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제17조(정정과 반론보도), 2. 피해자 인권보호 제18조(피해자 보호)를 위반한 것은 물론 신문윤리강령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재난보도준칙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재난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해 지난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134 기사



※서울경제 수정기사

(서울경제 수정기사 1)=『메르스 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입력시간 2015.06.11 00:19:42 수정시간 2015.06.11 08:29:25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2일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 “메르스 감염자가 사망하면 보호장구를 착용한 직원들이 병실에 들어가 시신을 더플백에 이중으로 담은 뒤 영안실까지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체액 등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신 처리는 화장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서울경제 수정기사 2)=『메르스 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서울경제 |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입력 2015.06.11 00:20 수정 2015.06.11 09:33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2일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 “메르스 감염자가 사망하면 보호장구를 착용한 직원들이 병실에 들어가 시신을 더플백에 이중으로 담은 뒤 영안실까지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체액 등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신 처리는 화장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2015 - 3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아주경제 발행인 곽영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3. 쿠키뉴스 발행인 변재운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아주경제(ajunews.com) 2015년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사실상 뇌사상태..장례절차 준비 중..11번째 메르스 바이러스 사망자?」 제목의 기사, 6월 12일자 「메르스 확진자 1명 사망 총 10명..」삼성서울병원 30대 의사 뇌사..장례절차 준비」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뇌사상태, 장례준비 ... 12일까지 버티기 힘들 것」 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6월 11일자 「[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파문 커질 듯」 제목의 기사, 6월 11일자 「[메르스 확산] “‘메르스 의사’ 뇌사, 가족들 장례 절차 준비 중” ...」 제목의 기사, 6월 11일자 「[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30대 젊은 나이에 왜? ... ‘사이토카인 폭풍 의혹」 제목의 기사, 6월 11일자 「메르스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쿠키뉴스,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주경제 1)= 『메르스 의사, 사실상 뇌사상태..장례절차 준비 중..11번째 메르스 바이러스 사망자?』

등록 2015.06.11 19:42 수정 2015.06.11 23:31

아주경제 이광호 기자=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세)가 사실상 퇴사 상태에 빠져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A씨의 뇌 활동은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고 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메르스 의사 A씨는 이달 4일 메르스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메르스 의사 A씨가 사망하면 11번째 사망자가 된다.

이○○ 기자 le***yo@ajunews.com』

(아주경제2)=『메르스 확진자 1명 사망 총 10명..』삼성서울병원 30대 의사 뇌사..장례절차 준비”

등록 2015.06.12 00:02 수정 2015.06.12 00:02

아주경제 홍○○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1명이 숨져 사망자가 총 10명으로는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던 30대 의사도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16번(40) 메르스 환자로부터 감염된 83번(65) 환자가 사망했다.

83번(65) 환자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건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10일 오후 2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사망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한편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30대 의사 A씨가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A씨의 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매체는 전했다.

A씨는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35)에게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4일 폭로한 1565명이 참석한 서울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장본인이다.

이후 A씨는 5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31일로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다”며 “메르스를 전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5일 뒤인 10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A씨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메르스 확진자 1명 사망 총 10명..”삼성서울병원 30대 의사 뇌사..장례절차 준비”

홍○○ 기자 j***ng@ajunews.com」

(헤럴드경제)=『메르스 의사 뇌사상태, 장례준비 … 12일까지 버티기 힘들것

이○○ 기자 i***ft3@reviewstar.net

입력시간 2015.06.11 19:22:20 수정시간 2015.06.11 19:35:04

11일 서울시 관계자는 “35번 확진자의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일까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 의사는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의사’관련 긴급 브리핑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한 메르스 의사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31일 오전이며,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상태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또한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사과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2~30대의 젊고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한 정부 발

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메르스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메르스 의사, 뇌사라니” “메르스 의사 너무 안타까워” “메르스 의사, 젊은 사람인데 사망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헤럴드 리뷰스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 1)= 『[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파문 커질 듯

입력 2015.06.11 20:34 수정 2015.06.11 20:57

[쿠키뉴스= 김○○ 기자]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 A씨(38)가 11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 사망자는 총 11명이 됐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특별한 기존 증상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사망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논란과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o@kmib.co.kr

바로 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메르스 의사’ 살아있다 ... 서울대병원 “뇌사, 사망 소식 전부 오보”』

(쿠키뉴스 2)= 『[메르스 확산] “메르스 의사’ 뇌사, 가족들 장례 절차 준비 중” ... ‘38세’ 젊은이가 대체 왜?

입력:2015.06.11 19:14 수정:2015.06.11 20:56

[쿠키뉴스= 김○○ 기자] 삼성서울병원 의사이기도 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5번 환자 A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11일 나왔다. A씨는 전날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들에 포함됐으며, ‘산소마스크’

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날 “A씨는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일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가 38세의 젊은 나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별한 기존 중증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가 젊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걸리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A씨가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현재까지 메르스 사망자 10명의 평균 나이는 71.1세로 모두 고령이고 천식, 폐렴, 심장질환 등 원래 앓던 질환이 있는 경우였다. 사망자 중 의료진은 한 명도 없다.

일부에서는 젊은 층에게 발생하는 면역력 부작용 현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이면서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이 메르스로 사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지만, 젊고 지병이 없는 사람도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밤 기자회견’에서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1565명이 참여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혀 강하게 반박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격분한 A씨는 “대선을 노리는 박 시장이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박 시장은 8일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사과했다.

한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가족들은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이 약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o@kmib.co.kr

바로 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쿠키뉴스 3)=『[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파문 커질 듯

입력 2015.06.11 20:34 수정 2015.06.11 20:57

[쿠키뉴스= 김○○ 기자]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 A씨(38)가 11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 사망자는 총 11명이 됐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특별한 기존 중증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사망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논란과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o@kmib.co.kr

바로 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메르스 의사’ 살아있다 … 서울대병원 “뇌사, 사망 소식 전부 오보”』

(스포츠조선 1)=『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30대 젊은 나이에 왜? … ‘사이토카인 폭풍 의혹’

기사입력 2015.06.11 16:45:27 최종수정 2015.06.11 20:56:04

메르스 의사 사이토카인 폭풍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30대 젊은 나이에 왜? … ‘사이토카인 폭풍 의혹’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메르스 의사’ A(38)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원인으로 ‘사이토카인 폭풍’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 매체는 서울시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A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메르스 의사 A씨는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이다. 12일 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르스 의사 A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35)의 옆 환자를 진료하던 중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의사로 알려진 35번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대중에게 공개했다.

문제는 메르스 의사 A씨가 이렇다할 기저질환 없이 폐렴으로 인한 호흡 곤란에 빠졌다는 것. 메르스 의사 A씨에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지만, 당뇨병이나 만성 폐질환 등은 없었다.

이 매체는 그 원인으로 젊은 층에게 발생하는 면역력 부작용 현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이토카인은 병원체에 대해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면역물질이다. 하지만 감염초기 병원체가 특정 위치에서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 면역 세포들이 지나친 공격을 가하다 자해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메르스 의사 A씨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폐에서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사이토카인 폭풍은 일반적인 노약자보다 면역력이 왕성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3년 사스, 1998년 뇌파뇌염 당시에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다수의 환자들이 사망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메르스 의사 사이토카인 폭풍 메르스 의사 사이토카인 폭풍 메르스 의사 사이토카인 폭풍

(스포츠조선 2)=『메르스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 환자 122명 중 39세 임신부까지

기사입력 2015.06.11 20:31:35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사이토카인 폭풍

메르스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 환자 122명 중 39세 임신부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가 10명으로 늘면서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덮고 있다.

이날 확진된 14명 중 8명은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명은 27-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감염됐다. 나머지 5명은 역학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자중 7번 여성 환자(28)와 37번 남성 환자(45), 13번 남성 환자(49) 등 3명이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자는 총 7명이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사이토카인 폭풍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사이토카인 폭풍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사이토카인 폭풍

위 기사들은 한국일보의 단독보도를 인용,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뇌사 상태에 빠져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143

일 현재까지도 오보에 대한 수정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아주경제는 기사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두차례 보도했으며, 이 가운데 한 기사에서는 본문 맨 끝에 ‘메르스 의사 메르스 바이러스’ 라는 실시간 검색어를 10차례 반복하였다. 쿠키뉴스는 세차례 비슷한 내용을 보낸 뒤 “바로 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고 한 줄만 붙였다. 심지어 6월 11일 오후 8시 34분 「[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파문 커질 듯」이라고 까지 보도했음에도, 이 내용은 삭제되지 않은 채 여전히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라는 글만 붙어 있다. 스포츠조선은 두차례 비슷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역시 실시간 검색어를 반복 사용하였다. 마감시간에 쫓겨 사실확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오보에 확산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보도시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거나, 잘못된 점을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고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명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국일보의 보도를 인용, 메르스 의사가 뇌사에 빠졌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는 많으나, 기사를 삭제하거나 제목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하였다.

통상 부고기사에서 고인에 대한 인권보호차원에서 사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의 상태를 경마중계하듯이 시시콜콜히 알리고, 가족이 장례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밝힌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지대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는 재난보도준칙 제2장 「취재와 보도」 1.일반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제17조(정정과 반론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재난보도준칙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재난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

다는 취지에서 제정해 지난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2조 「취재준칙」 ②(재난 등 취재),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한국일보 보도 내용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 “뇌 손상” 위중

채○○기자, 남○○기자

수정 2015.06.12 00:24 등록 2015.06.11 18:33

확정 판정 받은지 일주일 만에... 면역력 부작용 현상 가능성

통제 벗어난 환자 속속 발생... 정부 “3차 대유행 불가피” 시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5번 환자 박모(38) 씨가 뇌가 손상됐을 만큼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11일 박 씨 가족이 “박 씨가 뇌가 손상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 통보 이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측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박 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호흡 곤란이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님을 주치의의 통해 확인했다”며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씨를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의료진은 “기도삽관과 강제 혈액순환을 돕는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장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크모는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인공막을 통해 부족한 산소를 다시 환자 몸 안에 공급하는 장치로, 심장이나 폐 기능이 거의 마비된 환자에게 쓰는 인공 심폐기다.

이달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씨는 지난 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35) 옆 병상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4일 밤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9일 메르

스 증상이 나타난 의사가 30일 1,565명이 참여한 서울 양재동의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히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씨는 당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31일 오전이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했는데 메르스를 전파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8일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사과했다.

박 씨는 지난 5일에도 본보 등 언론과 장시간 전화 인터뷰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의 위중한 상황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10일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하지만 박 씨는 30대로 젊은 데다 지병도 없었다. 가벼운 알레르기성 비염 정도만 앓던 건강한 사람이 위독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보건당국도 예측하지 못했다. 박 씨 가족들은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이 약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메르스 사망자 10명의 평균 나이는 71.1세로 모두 고령인데다 천식 폐렴 심장질환 등 원래 앓던 질환이 있었다. 사망자 중 의료진은 한 명도 없다.

일부에서는 젊은 층에게 발생하는 면역력 부작용 현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이면서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이 메르스로 사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지만, 젊고 지병이 없는 사람도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보건당국의 통제를 비켜난 메르스 환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3차 대유행’이 불가피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시인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일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에 참석해 “3차 유행을 촉발시킬 ‘슈퍼 전파자’로 3명을 염두에 두고 관련 병원의 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새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환자 3명은 90번(62·사망) 98번(58) 115번(77·여)으로 삼성서울병원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14번(35) 환자와 지난 달 27일 접촉했다. 이들은 확진 이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각 지역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0번은 14번 환자는 당시 7시간 동안 응급실에 머물러 자가격리 대상이나, 열흘 가량 충북 옥천 의료기관 3곳과 대전 을지대

병원 응급실 등 4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98번 역시 서울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 5일 간 격리 없이 입원해 치료 받았다. 115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진 때까지 10일 넘게 경남 창원SK병원 등 지역 병원 4곳을 돌아다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메디힐 병원을 전격 폐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 병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공기 감염은 없다”고 재확인하고, 메르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면서 병원 간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 기자 c**@hankookilbo.com

남○○ 기자 r***ra@hankookilbo.com」

※본지는 앞서 박 씨의 상황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뇌사 상태’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의료팀이 뇌사를 공식 확인하지 않은 만큼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뇌사’라는 표현으로 가족과 독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5-1114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중앙신문 발행인 강 현 민

주문

전북중앙신문 2015년 4월 21일자 15면 「남자의 자살과 돈」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전북중앙신문은 위 적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나는 어느덧 세상을 믿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이익 없이는 아무도 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이익 없이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부모형제도

계산 따라 움직이고, 마누라도 친구도 계산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게 싫었지만 내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너 없이는 하루가 움직이지 않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썩거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돈, 시인 박용하)

“사람과 돈은 어긋나기 마련이라는 말도, 사람 나고 돈 났다거나 돈이 거짓말 한다는 말도 다 옛말이다. 사람은 돈을 따라 가고, 돈이 사람을 내고 돈을 쥐 손이 거짓말을 한다. 오늘날 돈 잃은 세상이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시인 정끝별)

‘나에게 30원이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대견하다. 나도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대견하다. 무수한 돈을 만졌지만 결국은 헛 만진 것. 쓸 필요도 없이 한 3, 4일을 나하고 침식을 같이한 돈-어린놈을 아귀라고 하지. 그 아귀란 놈이 들어 오고 나갈 때마다 집어 갈 돈. 풀방구리를 드나드는 쥐의 돈. 그러나 내 돈이 아닌 돈. 하여간 바쁨과 한가와 실의와 초조를 나하고 같이한 돈. 바쁜 돈-아무도 정시하지 못한 돈-돈의 비밀이 여기 있다.’ (돈, 시인 김수영)

“내 돈이란 결국 돈 도둑인 ‘쥐의 돈’에 불과하고 ‘돈 없는 나는 남의 집 마당에 와서 비로소 마음을 쉬는’(휴식)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생한다. 도무지 ‘정시(正視)’할 수 없는 돈의 정체이자 돈의 비밀이다.” (시인 정끝별)

‘그만 일로 죄면할 게 뭐꼬. 누구나 눈 감으면 간데이. 돈 돈 하지만 돈 가지고 옛 정 살 줄 아나. 또 그만 일로 송사할 건 뭐꼬. 쭈국 끓이고 햇죽순 안주 삼아 한 잔 얼근하게 하기만 하면 세상에 안 풀릴 게 뭐 있노. 사람 살면 백년 살 건가, 천년을 살 건가. 그러지 말레이 후끈후끈 아랫목같이 살아도 다 못사는 사람 평생 니 와 모르노.’ (대좌상면오백생 對座相面五百生, 시인 박목월)

“‘대좌상면’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앉는다는 뜻이고 ‘오백생’이 오백생 혹은 한없는 생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는 뜻이니, 제목 ‘대좌상면오백생’이란 ‘서로 마주하고 앉은 오백생의 인연’ 혹은 ‘오백생의 인연으로 서로 마주하고 앉아’쯤으로 해석될 것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옷깃만 스쳐도 삼백생, 대좌상면이 오백생의 인연이라고 한다. 친구나 지인, 가족은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는가. 이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돈 때문에 죄면(감정에 서로 걸리는 것이 있어, 보고도 외면해 버리는 것) 송사(訟事)할 수 있느냐며 어르고 달랜다.” (시인 정끝별)

“남자들은 압박감, 갈등, 문제 앞에서 종종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자살의 경우는 이런 공격성이 자신에게 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살연구자 린트너는 지적한다. 절망의 순간에, 헤어지고 상처 입은 순간에, 직업적으로 실패한 순간에 남자에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한 사람이 부족하다. 여자는 친한 친구에게 가서 마음을 털어놓거나 심리치료를 찾아가는 반면, 남자는 혼자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남자는 어릴 적부터 감정 문제를 혼자 짊어진다. 남자아이들도 분노, 슬픔, 실망을 표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 없고, 도움을 구할 전망이 없어 보이면서 절망감의 악순환에 사로잡힌 성인 남성에게 자살은 때로 자존감을 구하고 구질구질해지지 않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가온다. 이런 마음에 자살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들은, 특히 급진적인 방법을 취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을 매달거나, 권총자살을 하거나, 선로에 뛰어들거나, 투신자살을 한다.” (독일 정신의학자 볼퍼스도르프 외)

“남자는 타인과 고민을 나누는 것을 주저한다. 어떤 고통이든 홀로 감내하는 것이 남자답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폐쇄적 행위가 우울증, 자살로 이어진다. 자살 기도는 여자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4배 많다.” (미국 컬럼비아의대 교수 마리안 J 레가토)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죽을 권리라도 있어야 한다. 자살하는 이를 비웃지 말라. 그의 좌절을 비웃지 말라. 참아라 참아라 하지 말라. 이 땅에 태어난 행복,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지 말라.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이 불고 싶기 때문. 우리를 위하여 부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는 것은 비가 오고 싶기 때문. 우리를 위하여 오는 것은 아니다. 천둥, 벼락이 치는 것은 치고 싶기 때문. 우리를 괴롭히려고 치는 것은 아니다.

바다 속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은 헤엄치고 싶기 때문. 우리에게 잡아먹히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헤엄치는 것은 아니다. 자살자를 비웃지 말라. 그의 용기 없음을 비웃지 말라. 그는 가장 솔직한 자. 그는 가장 자비로운 자.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 맡은 자. 가장 비겁하지 않은 자. 가장 양심이 살아 있는 자.’ (자살자를 위하여, 시인 마광수)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신문은 4월 21일자 오피니언란에 「남자의 자살과 돈」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은 자신의 주장을 배제한 채 돈과 자살 등에 관해 언급한 국내 외 명사의 글 일부를 인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 자살의 양태와 과정이 어떠한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 마광수의 ‘자살자를 위하여’를 인용함으로써 ‘자살 예찬론’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땅에 태어난 행복,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지 말라.”든가 “자살자를 비웃지 말라. … 그는 가장 솔직한 자, … 가장 양심이 살아있는 자.”라는 마지막 대목은 이 글의 결론과도 같아서 마치 자살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크다.

특히 청소년도 읽을 수 있는 일간신문에 이러한 칼럼을 게재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칼럼 내용은 자살 보도를 신중히 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또, 위 칼럼은 뉴시스의 신동립 편집부국장의 「[신동립 잡기노트]남자의 자살과 돈」을 그대로 전재한 것인데, 전북중앙신문은 이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채 필자를 ‘신동립/언론인’으로 기재하는 데 그쳤다.

원래 이 칼럼을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뉴시스는 해당 칼럼 아래에 서울시 자살예방시민옴부즈만 측이 “자살관련 기사는 베르테르 효과, 즉 모방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파파게노 효과(일명 언론이 부추긴 자살) 등 또 다른 피해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기 바라며 신중한 기사 게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해왔으며 전문을 그대로 실었다.

따라서 위 칼럼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7조 「범죄 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 3188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11월 8일자 「성기전신인형기구 명기헤라1 뒤 태의 아름다움」 제목 등 다수의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기의증명 바른생활 사나이

11월 10, 2015 by jilcom1124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제 방문해서 명기의증명 10 구입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전화주문할려다가 아래 주소보니까 회사 지나가는 근처쪽이라서 잠깐 방문했었죠 * 사용품도 많이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염으로 주셔서 집에오는길에 너무 부듯했네요 * 명기의증명 10 사장님 말대로 앞부분 부드럽게 감싸주는게 입사하는 기분 절로 나더군여 제가 ... 글 더보기→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댓글 남기기

성인 전신인형기구 루시아3 둥만한

11월 8, 2015 by jilcom1124



전에 중신인형써했는데 실감도 안나고해서 실리큰인형 찾다가 여기에서 헤라1하고 고민하다가 기왕이면 더 큰것이 좋을것 같아 루시아3로 결정 막상 루시아받고 사용해보니 절보다는 똥고쪽이 더 느낌이 좋아서 많이사용하고 입쪽은 아직 미사용중이에요 가슴도 탱탱한게 좋아하고 요새는 정자세 말고 침대애다가 약간 뒤로 눕히고 동영상 보면서 ... 글 더보기→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댓글 남기기

여성진동기 발키리 막강 슈퍼파워

11월 6, 2015 by jilcom1124



마사지젤 보러왔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여자제품 있길래 살펴보다가 발키리 보니까 괜찮아보여 주문하는데 ... 광고에서 강하고 소음이적다고 해서 택배 받아마자 돌려봤는데 멀쩡이 파워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역시 성인물건은 일본 애들이 적이게 만드네요. 와이프 처음에 보여주니까 엄청 웃더군요, 참엔 약하게 시작해서 와이프 얼굴표정 보면서 천천히 사용거니깐 ... 글 더보기→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댓글 남기기

〈캡처시각 2015.11.11. 06:20〉

『성인전신인형기구 명기헤라1 뒤탈의 아름다움』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작성자 : jijicom1436

11월 8, 2015 by jijicom1436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부천에서 전화주문한 사람입니다

헤라원하고 사은품도 무자게 많이도 왔네요

바로 사용해보니 뒤로하는 자세도 각이 잘나오는편이고

똥꼬하고 버.진.으로할때는

젤 충분ㅇ히 바르고 양뺑으로 번가라가면서 하면

쪼여주는 강도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 랜덤느낌 줍니다.

입으로 할때는 뽕알이 헤라원 어깨에 닿는 기분도 오묘합니다..ㅋ

3년째 혼자 사는지라 방에 인테리어겸 외롭지도않고..ㅋ

속옷을 한번 입혀볼까 생각중인데 제가 너무 변태아닌가요..ㅋ

같이하는 노총각들 많은데 여기 소개 많이해줄게요

수고하십쇼

성인전신인형기구 명기헤라1 제품보러가기 <<클릭』

『성인 전신인형기구 루시아3 풍만한』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작성자 : jijicom1124

11월 8, 201 by jijicom1124



전에 풍선인형써봤는데 실감도 안나고해서
 실리콘인형 찾다가 여기에서 헤라1하고
 고민하다가 기왕이면
 더 큰것이 좋을것 같아 루시아3로 결정
 막상 루시아받고 사용해보니
 질보다는 똥꼬쪽이 더 느낌이 좋아서 많이사용하고
 입쪽은 아직 미사용중이에요
 가슴도 탱탱한게 쓸만하고
 요새는 정자세 말고 침대에다가 약간 뒤로 눕히고
 동영상 보면서 똥꼬쪽으로 하면 실감납니다.
 술먹고 아가씨집 한번 참고
 루시아3구입한거 잘한 선택인것같네요
 아직 나이는 40을 바라보는데
 미혼이라서 외로운건 어쩔수없나봐요
 사은품도 사장님이 많이주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있어요
 오버하지않고 오래 쓸려구요
 모처럼 재미거리 하나생겨
 마음속에 섹.파. 하나 생긴것같아 든든해요
 빅사이즈 루시아3 제품 보러가기 <<<클릭>>>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동아닷컴의 메가블로그인 '저널로그'에 'jjicom 1436'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올린 것으로 모두 성인용품 광고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명기의 증명 바른 생활 사나이」 제목의 게시물을 클릭하면 사용 후기 형식의 투고 내용과 함께 '제품 바로가기' 안내가 나온다. '제품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성인용품 광고가 뜬다. 「성인 전신인형기구 루시아3 품만한」 제목의 게시물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광고 영상에는 이밖에도 더 많은 성인용품이 사진과 함께 구입하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이 게시물을 올린 'jjicom1124'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 적시 게시물 외에 16건의 게시물을 동아닷컴 저널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모두가 저속한 내용의 소위 '사용후기'를 소개한 후 성인용품 광고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아닷컴 저널로그에는 또 여성 성상품인 '딜도'를 광고하는 게시물도 다수 올라와 있다. 동아닷컴은 이처럼 오랫동안 성인용품 판매업자들이 자사의 메가블로그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3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장 용 성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7월 16일자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경닷컴(MBN)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

기사입력 2015.07.16 10:40:17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

조희준, 그는 누구인가에 관심 집중

조희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준 사진= MBN

조희준 전 회장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졌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주식 25만 주를 교회 돈으로 매입하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목사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징역 3년, 벌금 50억원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신 조희준 전 회장은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법정구속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7월 15일 서울가정법원이 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씨가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한 다음날인 7월 16일에 매경닷컴의 계열사인 MBN이 보도한 내용이다.

인지청구 소송의 피고인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기사라는 점에서 위 적시기사는 인지청구 소송 기사의 관련 기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형식과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사를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신문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기사이다. 그 이유는,

첫째, 기사 앞부분에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조희준, 그는 누구인가에 관심 집중/조희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제목이라고 보기도 이상하고, 기사라고 보기도 이상한 문구를 나열했다는 점이다. 독자를 유인코자 한 목적일 수도 있겠으며, 그게 아니라면 기자가 기사 작성 이전에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메모 형태로 기록해둔 것을 편집자가 미리 내보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든 바람직한 보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창에 MBN의 위 기사와 유사한 기사가 10여건 이상 게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뷰징 혐의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조용기 목사의 아들임은 이미 여러차례 보도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위 기사는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의 아들로 알려졌다”고 썼다. 일반인들도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알려졌다’라고 써야할 이유가 없다. ‘조 전 회장도 조 목사의 친생자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쓴 것이 아니라면, 위 기사는 매우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위 기사에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두 사람이 과거 재판에서 형을 받은 내용만 적시한 것 또한 이 기사가 오직 ‘기사를 위한 기사’, 결과적으로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적시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7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1월 18일자 「임신한 여친 복부에 주먹질 ... 분노 부른 실험 영상」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월 31일자 「임신女 폭행 막장 몰카에 해외 네티즌 분노」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임신한 여친 복부에 주먹질 ... 분노 부른 실험 영상』

입력 2016.01.18 10:41 수정 2016.01.18 10:41



▲유튜브 영상 캡처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 ‘트롤스테이션’(Trollstation)이 이를 주제로 한 실험 영상을 제작했다가 누리꾼들의 못매를 맞고 있다. 논란이 된 영상은 트롤스테이션이 지난해 4월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으로 최근 페이스북에 올라오며 구설에 올랐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다. 임신한 여자친구와 유아용품 매장을 찾은 흑인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차마 듣기 힘든 욕설을 끊임없이 늘어놓는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매장 직원들은 다른 고객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며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한다.

매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오게 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라스에서 식사 중인 남성들에게 길을 묻는다. 바로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친구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다며 여자친구를 추궁하더니 임신한 여자친구의 복부에 주먹질을 일삼는다.

깜짝 놀란 시민들은 여성을 남자친구에게서 떼어놓고 그제야 남자친구는 실험카메라였음을 알린다. 이에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눈물을 쏟아낸다.

실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역겹다”, “평소 실험카메라를 좋아하지만 이것은 도를 넘어선 것 같다”, “그래서 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유튜브에는 며칠 새 이를 비난하는 2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트롤스테이션은 최근 런던 지하철에서 상의를 내린 채 모유 수유를 하

는 여성과 이를 지켜보던 남성이 승강이를 벌이는 실험 영상을 제작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진·영상= Trollstation/유튜브

영상팀 seoultv@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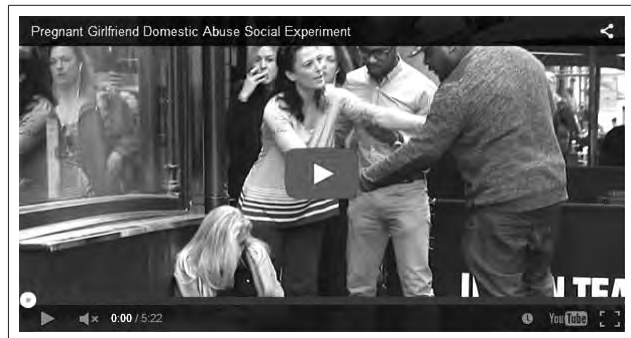
〈캡처시각 16.01.30 23:15〉

(중앙일보)=『[영상] 임신女 폭행 막장 몰카에 해외 네티즌 분노

기사입력 2016.01.31 11:19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몰래카메라에 해외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영상엔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폭언과 욕설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 의류매장 안에서 말싸움을 하던 커플은 매장 직원의 요청에 의해 매장 밖으로 나가게 되자 거리에서 싸움을 계속 이어간다.



먼저 거리로 나온 여자는 거리에서 식사 중인 남성들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다.

이를 본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운다고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이어가다가 여자친구의 복부에 주먹질을 한다. 커플의 이런 모습에 거리를 지나선 시민들이 깜짝 놀라며 이들의 싸움을 말리고 나섰다. 이 순간 이들은 자신들을 말리던 시민에게 몰래카메라임을 밝히며 시민들을 진정시킨다.

시민들은 커플의 싸움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시민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몰래카메라를 왜 찍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막장 몰카, 끔찍하다”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영상 Trollstation 유튜브 계정]

〈캡처시각 2016.02.02 09:19:2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15년 4월 7일 유튜브 채널 ‘트롤스테이션’(Trollstation)에 오른 임신한 여자친구 가정폭력 실험영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5분짜리 관련 동영상도 함께 게재되었다. 동영상을 열면 맨 처음 실험영상임을 밝히고 끝부분에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까지 행사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놀란 주위 사람들에게 출연진이 사과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보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배려한 흔적은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심 길거리에서 남산만하게 배가 부른 임신부를 때리고 밀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가상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생명경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산률이 극히 저조한 요즘 시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도 2,000건이 넘는 댓글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다.

이 영상을 제작한 트롤스테이션은 기괴하고 이상한 장난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회사로 자사 유튜브 채널에 500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러한 영상을 게재할 때에는 사회적 과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

회적 책임),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6년 2월 14일자 「[B급통신] 성매매 종사자 女, 궁금증 해결사로 변신 ‘곤란한 질문도 OK’」 제목의 기사 및 [B급통신]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기사 및 편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B급통신] 성매매 종사자 女, 궁금증 해결사로 변신 ‘곤란한 질문도 OK’

입력 2015.09.04 11:09 수정 2015.09.04 11:09

[스포츠서울] 미국의 한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에 대한 대중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언론 ‘미러’는 그린모어라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UCC 사이트 레딧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성매매산업과 직업여성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린모어는 오랫동안 성매매 직업 여성으로 지난 7월 2주 동안 1만 달러(약 118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관계를 가지냐”는 질문에는 “0회일 때도 있다”며 “평균 하루 7회 정도 손님과 관계를 맺는다”며 가감없이 자신의 생활을 밝혔다.

그는 또 “여성 손님과 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성을 사고 파는 것에 익숙치 않은 편”이라며 “관계자체의 목적보다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나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린모어는 자신의 이런 공개적인 활동에 대해 “성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싶다”는 이유를 밝혔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 UCC 영상 캡처

※참고1: 전체 메뉴 하단



〈캡처시각 02.14. 12:55〉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286597>〉

※참고2: 기사 하단



〈캡처시각 02.26. 11:3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미국의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직접 네티즌의 궁금증 해소 역할을 자처해 2주만에 1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용도 퇴폐적이거니와 2015년 9월 4일자로 작성된 최소한 5달 이상 묵은 기사이다.

기사의 제목 앞에는 [B급통신]이란 문패가 달려있는데, 위 캡처에서 보듯 전체 메뉴 바로 아래 또는 기사 하단에 [B급통신] 관련기사가 달려 있다.

「길거리서 옷을 훌렁훌렁, 중국녀들의 피치못할 사정」, 「수상한 女무리, 공원서 상의 탈의후 독서, 역대급 포퍼먼스」, 「일본 女아나 불륜사진 유출 ... 성관계 장면까지」 제목 등 5건의 [B급통신] 관련기사도 예외 없이 5달여 전인 9월 7일과 8일에 최종 수정된 것이다. 제목은 물론 기사 내용도 하나같이 선정적이다.

언론사 홈페이지 주목도 높은 곳에 5달이나 묵은 선정적인 기사를 몇 달째 배치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별과 편견의 금지

2015-1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문

국민일보 2015년 3월 3일자 29면 「봉은사, 대표적 친일 사찰이었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 명칭으로 결정된 봉은사가 과거 ‘일본군 전물장병 충령탑’을 설치하고 중일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법회를 여는 등 일제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대표적 친일 공간(표 참조)이었던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봉은사를 역명으로 확정·고시하면서 ‘역사성 있는 봉은사가 적절하다’고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역사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일제 식민통치를 정당화시킨 대표적 공간을 역명으로 확정= 불교는 개신교나 천도교와 달리 일찍부터 식민지배 체제에 편입됐다. 조선총독부는 불교계를 포섭·통제하기 위해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하고 31개 본산을 중심으로 1500개 사찰, 7000여명의 승려를 통제했다. 봉은사 범어사 통도사 등 본산의 주지는 조선총독부 총독의 승인을 얻어야만 취임할 수 있었으며, 본산이 지역 말사를 모두 관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시 불교는 자연스럽게 식민권력의 통제 아래 놓였다.

봉은사는 서울과 경기도 광주·시흥·고양·여주·이천에 있는 82개 사찰과 암자를 말사로 관리해 31개 본산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찰로 손꼽혔다. 1912년부터 45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승려는 나청호 김상숙 강성인 홍태욱으로 이들 4명의 이름은 불교계에서 출간한 ‘친일승려 108인’(임혜봉)에 나올 정도로 대표적 친일인사였다. 특히 강성인과 홍태욱은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에 등재될 만큼 친일에 앞장섰던 승려다. 이들은 창씨개명도 했다.

◇30년대부터 친일행사 본격적으로 개최, 일제의 민족 정신개조·전쟁승리 기원= 봉은사에서 친일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일제가 무력통치를 강화한 30년대부터다. 34~40년 봉은사 주지였던 강성인 승려는 우가키 조선총독부 총독이 주장한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을 전 조선 불교도가 적극 협력하도록 35년 7월 심전개발사업촉진발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운동은 ‘조선 민중을 일제 통치에 협력하도록 순화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봉은사에선 중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위선양 무운장구 기원제’를 2차례 개최했다. 봉은사는 그해 8월 임시 본·말사 평의원회를 열고 일본군을 후원하는 방안을 토의했고, 봉은사 명의로 9월 국방헌금과 출정 장병 위문금을, 12월 북지황군(北支皇軍) 위문금을 200원씩 냈다. 38년에도 국방헌금과 위문금으로 총 1016원을 냈다. 당시 노동자 1년치 연봉은 130원가량 된다. 38년 7월에는 승려와 신도 100명을 모아 ‘지나사변 1주년 전몰장병 추도법요’를 열었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지나사변’으로 부른다. 39년에는 일왕 생일인 천장절(天長節)도 지켰다.

40~45년 봉은사 주지였던 홍태욱 승려는 일제 강점기에 주지를 맡았던 4명의 승려 중 친일에 가장 앞장섰다. 그는 41년 봉은사에 소속된 신도 3만명과 ‘일본군 전몰장병 충혼위령제 및 수륙제’를 거행했고, ‘중일전쟁 4주년 기념법회’ 등도 개최했다. 본·말사를 동원해 일장기가 그려진 부채 2000개를 위문품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했고 일제 침략전쟁용 무기를 만들기 위해 철제류 수집·헌납도 결의했다. 봉은사는 43년 ‘일본군 전몰장병 충령탑’ 공사에 들어갔으며, 광복 2개월 전인 6월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곳에선 전몰장병의 명복을 비는 천도제 등이 열렸다.

◇서울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며 ‘역사성’ 답변 못해= 나청호 김상숙 승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친일에 적극 가담했다. 나청호 승려는 1914년 일본 왕비인 쇼켄의 추모식을 개최했다. 1917년 일본 시찰 때 일왕을 요배했으며,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직접 찾아가 선물을 주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 테라우치는 제3대 조선통감으로 한일병합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김상숙 승려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인정받아 주지가 된 인사로 테라우치 등 일제 핵심인사의 통역을 맡았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봉은사역 역명제정관련 해명자료’를 내놓고 “서울시지명위원회가 역사성 있는 봉은사역이 적정하다고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지명위에는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인사 2명과 역사학자 향토사학자 교통학자 국문학자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한다. 국민일보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역사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울시지명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알려 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인환 서울시 강남교구협의회장은 “박원순 시장은 과거 대표적인 친일 종교 시설이었던 사찰의 미래위원장을 맡았고 그곳 이름을 강남과 서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명으로 확정·고시했다. 박 시장의 역사관은 도대체 뭐냐”면서 “이건 종교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벌이기 전에 역명부터 당장 바꾸라”고 촉구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서울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 명칭이 봉은사역으로 결정된 것은 ‘종교편향’이라며 역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위 기사도 그 중 하나다.

기사는 929정거장 명칭으로 결정된 봉은사가 일제 식민지 시절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대표적 친일 공간이었던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고 종교 섹션(「미션라이프」) 톱기사로 보도하고, 큰 제목을 「봉은사, 대표적 친일 사찰이었다」로 달았다.

기사는 『1912년부터 45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승려는 나철호 김상숙 강성인 홍태욱으로 이들 4명의 이름은 불교계에서 출간한 ‘친일승려 108인’(임혜봉)에 나올 정도로 대표적 친일인사였다』고 전하고 『특히 강성인과 홍태욱은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에 등재될 만큼 친일에 앞장섰던 승려다. 이들은 창씨개명도 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어 봉은사 주지였던 강성인 승려는 우가키 조선총독부 총독이 주창한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을 전 조선 불교도가 적극 협력하도록 35년 7월 심전개발사업촉진발기대회를 개최했으며, 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봉은사에선 중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위선양 무운장구 기원제’를 2차례 개최하는 등 많은 친일활동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에 소개된 일제 강점기 봉은사 주지들의 친일활동 등을 담은 ‘봉은사

에서 열린 친일행사 및 주지의 친일활동' 제목의 도표를 함께 게재했다. 도표 아래쪽에는 '〈자료 : '친일인명사전' '친일승려 108인'〉'이라고 표기해 도표의 내용들을 '친일인명사전'과 '친일승려 108인'에서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집이며, '친일승려 108인'은 2005년 임혜봉이 펴낸 단행본이다. 두 책자가 발간된 것은 6~10년 전이다. 국민일보는 이미 공개된 지 오래인 이들 책자의 내용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마치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두 책자에 수록된 일부 인사의 친일행위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던 점으로 미뤄 두 책자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게다가 이들 승려들의 친일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한 행위인지 봉은사가 사찰 차원에서 한 행위인지에 대한 규명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사는 봉은사가 '대표적 친일 사찰'이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친일'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함'을 뜻한다. 한국 사회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친일'로 지칭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볼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이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된 봉은사측으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국민일보는 이를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 기사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기사 본문을 과장·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15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문

국민일보 2015년 4월 2일자 26면 「“봉은사역명 이래서 부당하다”/동영상 인터넷서 큰 반향/박원순 시장 불교편향 행정 공개」 기사와 제목과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불자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를 불교에 바치시렵니까?’(youtu.be/I9eyzEV6C0g)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사진)은 지난 25일 게시된 지 8일 만에 조회수가 2만 3000건을 넘어섰다. 아이디 ‘Elena Fisher’가 제작한 6분 55초짜리 영상에는 박시장의 불교편향적인 예산·행정 지원, 봉은사역명 선정과정의 오류, 봉은사와 불교의 친일 행적, 기독교를 견제하는 불교의 실체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영상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다수의 불교단체 자문위원, 봉은사 미래위원장

등을 역임해 ‘한국 불교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14인’에 선정됐던 박 시장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어 봉은사가 봉은사역명 제정 과정에서 신자들을 동원해 강남구청 인터넷 조사를 왜곡하고 박 시장을 찾아가 역명을 요구했던 사실도 소개된다.

특히 영상에는 역명제정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서울시의 행정이 낱낱이 드러난다. 서울시는 종교시설명에 불과한 봉은사를 929정거장 역명으로 확정했지만, 926정거장의 유력한 후보명이었던 차병원사거리에 대해선 ‘특정 시설명을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가 입장을 내린다.

친일 사찰의 최선봉에 섰던 봉은사의 역사성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봉은사가 역명으로 적합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다. 봉은사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지정된 30개 대표사찰 중 하나로 항일운동을 저지하는 친일 공간이었다.

불교가 상대종교를 대하는 민낯도 그대로 드러난다. 불교는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국가에서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지만 독립운동에 앞장선 린튼 선교사의 지리산 유적지 보호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영상은 박 시장의 사과와 봉은사역명 교체를 촉구하면서 마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친일청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렸는데’ ‘지도자가 편파적이면 지도자는 아닙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박원순 시장’을 검색하면 볼 수 있으며, 국민일보 홈페이지(missionlife.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영상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불자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를 불교에 바치시렵니까?’라는 자극적 표현이 들어있는 유튜브 영상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의 대부분을 할애해 동영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6분 55초짜리 영상에는 박 시장의 불교편향적인 예산·행정 지원,

봉은사역명 선정과정의 오류, 봉은사와 불교의 친일 행적, 기독교를 견제하는 불교의 실체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고 기술하며 박 시장과 봉은사를 비판하고 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불교편향적인 예산·행정 지원』을 했으며, 서울시의 행정이 『역명제정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작은 제목에도 ‘불교편향 행정’ 표현을 넣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지원이 왜 불교편향적이며, 서울시의 행정이 왜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봉은사에 대해서는 『친일 사찰의 최선봉에 섰던 봉은사』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정된 30개 대표사찰 중 하나로 항일운동을 저지하는 친일 공간이었다』고 기술했으나, 봉은사가 왜 ‘친일 사찰’ ‘친일 공간’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다.

‘친일’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함’을 뜻한다. 한국 사회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친일’로 지칭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볼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이다.

비록 위 기사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 시장과 서울시, 봉은사를 시종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당사자들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일보를 이를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 기사는 박 시장과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과장·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中都日報 2015년 5월 7일자 1면 「충청출신〈충남·세종·대전〉 장관 언제쯤 나올까/2008년 이후 한명도 없어/충북에선 3명 나와 대조적/차관급도 7명 그쳐 최하위」·3면 「‘충심 DNA’ 키워야 지역도 크다/충청장관 가뭄 … 배경 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 『박근혜 정부 들어 대전·세종·충남 출신 장관급 인사가 단 1명도 배출되지 않아 중앙 관가를 중심으로 충청 홀대론이 다시 일고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낙마로 국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국무위원도 단 1명도 없어 충청 민심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충청대망론’ 속에서도 충청 홀대론이 존재하고 있음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게 충청정가의 먹먹함이다.

충청 정치권은 이 전 총리의 낙마와 ‘성원종 리스트’ 파문으로 충청 민심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입었고, 이를 치료해주기 위해선 조만간 있을 총리 지명과 내각 개편 때 대전·세종·충남 몫을 배려해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조사 자료(지난 2월 기준)에 따르면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충북 장관은 한민구 국방, 김종덕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무려 3명이나 되는 반면 ‘대·세·충’출신 장관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집권 3년차 들어서 개각을 수차례 했음에도 대전 충남 몫은 줄곧 배정 되지 않아 지역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전 충남

은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전체의 5.3%인 7명에 그쳤다.

서울 24.2%, 부산 경남 18.9%, 대구경북 18.2%, 광주 전남 10.6%, 충북 6.8%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출신 안배보다는 능력을 고려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언급을 수차례 해온 점을 볼 때 지역 출신 장관 탄생은 요원해 보인다.

지역 출신 마지막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2008~2011년 청양 출신)이후 맥이 끊긴 상태다. 4년간 장관 없는 지역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다.

충청 정가에선 신임 총리 역시 충청을 배려해 ‘충청맨’으로 다시 해줄 것과 내각 개편을 단행하게 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대·세·충’을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선희 목원대 교수는 “영호남의 틈에서 충남쪽 인사들의 설 땅이 없다는 점이 반증된 것”이라며 “정권권이 합심해서 지역의 인재가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인사권자에게 천거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역대 정권이 충청의 표 향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 것을 집권 후에는 잊어버리는 것은 충청의 민심이 선거 때마다 양당 구조가 아닌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다”며 “지역 정치와 행정권을 아우를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구심점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3면〉= 『‘충청 홀대론’은 각 분야에서 쓰이는 어찌보면 우리 고장의 슬픈 자화상이다. 고위직 인사에서 충청은 뒷전이었고, 영호남의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생존’을 하는 딱한 처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전직 장관 출신인 한 출향 인사는 “장관 취임후 지역 출신 사무관급 이상을 불러 식사를 같이 하려 했으나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않은 공무원들만 참석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유는 자신이 충청 출신이라는 점을 노출시키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이처럼 ‘충청은 잘 뭉치지 못하고 선후배를 챙기는 일도 서툰 동네’라고 인식

되고 있다.

오장섭 충청향우회 총재는 영호남 출신 고위직 인사와 정치권이 고향을 챙기는 일을 두고, 뭐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충청도 이런 ‘충심 DNA’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완구 전 총리의 낙마와 성완중 리스트 파문에서 충청은 자존심을 크게 구겼다. 화난 민심과 여론은 충청 리더 부재로 질타하는 목소리로 들끓고 있으나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리더십은 찾기 힘든 형국이다.

신임 총리 지명에 있어서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이너서클’에 충청 멤버의 숨결을 듣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한발대 유병로 교수는 리더 부재가 결국은 충청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정부 부처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유 교수는 “충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영호남의 패권주의 정치 환경구도에서 힘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을 패거리 문화라고 몰아붙이기만 하지, 그들의 강점과 애乡심을 배우려 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출신인 B씨는 한마디로 ‘의리’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미약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국회의원 등 정무직들이 중앙과 지방(고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충청은 매우 취약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렵게 요직에 올라선 고위직 인사들의 반응도 냉랭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승진하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남(고향 사람)을 도울지 모른다는 것이다.

충청 기관장이 와서 역차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 정권 들어서도 여의도와 청와대 안팎에 충청 인사들이 적지 않게 배치 돼 있으나 이들에게는 ‘국가 전체’만을 바라보려 하는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전화를 해도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지역민원을 청탁이라고 여기고 이를 아예 배제하려 들고 있다는 게 중앙 관가의 시선이다.

그럼 충청인들은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가. 대다수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시험을 봐서 국무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인물이 특정인을 추천하느냐에 따라 장관 등 고위직의 발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은 지역 사랑의 끈끈한 정을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정치적 힘 배양, 그리고 지역 발전을 전인하는 '충심 DNA' 배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진군의 함성 소리를 높일 때다. 2011년 이후 4년간 '대·세·충'에서 장관이 배출되지 못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출신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낙마 이후 국무위원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출신은 전혀 없으며, 장관 부재 상황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2008~2011년 충남 청양 출신) 이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범 충청권으로는 현 내각에도 한민구 국방, 김종덕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충북 출신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에 따라 『중앙 관가를 중심으로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지역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전했다.

대전·세종·충남 출신 장관 부재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지난 1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전 총리가 사퇴한 날짜가 4월 27일로, 위 기사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장관 부재에 따른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지역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는 위 기사의 내용은 과연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사는 『충청 정가』나 『지역의 한 국회의원』, 지역 대학 교수 의견을 두루 전하고는 있지만, ‘충청 홀대론’에 대한 이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킬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3면 해설기사의 요지는 충청 출신끼리 잘 뭉치고 고향을 잘 챙기는 ‘충심 DNA’를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와 관련해 여의도와 청와대 안팎에 있는 충청 인사들이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지역민원을 청탁이라고 여기고 이를 아예 배제하려』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 전체’ 만을 바라보려 하는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국정정보다는 출신 지역을 잘 챙겨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기사는 특히 『지역 사랑의 끈끈한 정을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로 지금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진군의 함성을 높일 때다』라는 자극적인 글귀로 결론을 맺었다.

위 기사들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기자 개인이나 해당 신문사, 또는 소수집단의 의견을 객관적 사실에 가까운 것인 양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6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주문

경남매일 2015년 9월 8일자 1면 「부산시, 남강댐 ‘물 침탈’ 노골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도민이 핫바지란 말인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내년 중 진주시에 사무실 개설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경남도민들은 “남의 땅에 말목을 박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경남도민의 56%가 부산시와 똑같은 낙동강을 원수로 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부산시는 자신들만 진주 남강댐 ‘맑은 물’을 공급 받으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취수되는 1천292만t 중 낙동강(강변여과 86t 포함)을 원수로 한 취수량이 707t으로 도내 물 공급량의 54.7%이며 이를 전체 도민의 56%인 177만여 명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도 경남도민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이 부산시는 청정수인 남강댐 물 공급을 요구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면 남강댐 물 공급을 주장, 경남도민을 빨나게 만들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낙동강 수질이 해마다 나빠지고 있어 남강댐 물을 끌어와 부산 등에 공급하려는 계획이라면 경남도와 협의, 부산 경남 공동의 물 공급 계획을 추진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건너편 사무소 개설은 경남도민을 핫바지 취급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남강댐의 수위를 높이지 않아도 평소 유량만으로 하루 65만t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거나 갈수기를 제외하고 유량이 남을 때만 물을 가져와 경남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사무소를 개설기로 했다지만 이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며 “부산시의 꿈수정책으로 경남도민의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문제만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들은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을 반대하는 경남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경남에 사무실을 내기로 했다지만 부산과 같은 낙동강을 원수로 한 물 공급이 경남도민 식수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현실을 감

안할 경우, 도민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란 지적이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천모(51) 씨는 “남는 물이 있으며 공급이 논의돼야 하겠지만 창원, 김해 등 중부경남도민이 부산과 같은 낙동강 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도 부산시가 남강댐 물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남도민이 뿔뿔 뿜쳐 억지주장을 꺾어야만 한다”고 흥분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해 9월, 정부가 홀수조절용으로 지리산댐을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 “비겁하다, 식수전용의 댐을 만들어 깨끗한 1급수를 창원·김해 등 중부 경남 도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중부 경남에는 전체 340만 도민의 55%가 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물 공급 후 남는 물이 있으면 인근 부산 시민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상수도본부는 7일 남강댐 물 공급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듣기 위해 내년 중 진주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상수도본부는 현지 사무실을 통해 갈수기를 제외하고 유량이 남을 때만 물을 가져와 경남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년 진주시 사무실 개설 추진방침을 계기로 쓴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 남강댐 ‘물 침탈’ 노골화』란 제목이나 기사 첫 머리의 『“경남도민이 핫바지란 말인가”』라고 한 표현은 진주시민들에게 부산시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는 듯 하다.

그 밖에도 위 기사는 『분노하고 있다』 『뿔나게 만들고 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도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는 등 정제되지 않은 선동적 표현들을 동원하고 있다. 창원시 주민의 말을 인용해 『“경남도민이 뿔뿔 뿜쳐 억지주장을 꺾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보도행태는 건전한 여론을 조성해야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으며 특히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 이는 보도의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64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7일자 9면 「학교밖 청소년 28만명 ‘미스터리 폭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신이 다니던 예전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이모군(15)처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길도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학업 경쟁에서 밀려나고, 왕따와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해 6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아이들이 누적치로 28만명(2013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초 통계를 보면 연간 총 6만 568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부적응, 미인정유학(부모미동반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등으로 학교를 그만뒀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론 인적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킨

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업중단으로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 올초 터키의 시리아 접경 소도시에서 실종된 김모(18) 군도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김군은 한국을 떠나기 전 자신의 SNS에 나라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적었다.

김군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교내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퇴 후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접하는 주창구는 컴퓨터였다. 안 그래도 사회인식이 뼈딴해진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들려오는 나라 안팎의 부정적인 소식이 나라 자체를 비판케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생각이 더해질수록 신세계에 대한 열망은 커졌고, 결국 무장단체(IS) 가담이란 끔찍한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작년 김포에선 가출 여중생들이 같은 ‘팸(패밀리)’에 있던 언니가 자신들이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묻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은 우려스런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 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에 불과한 학교밖 청소년이 전체 범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 범죄자도 매년 6만여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4세~18세의 학생범죄자 수는 5만4433명이다. 같은 연령대의 학생범죄자 숫자는 지난 2011년 5만9988명에서 2012년 6만1172명, 2013년 5만9022명으로 4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포기하고, 독학을 통해 대학진학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5518명으로 2007년(4020명)보다 37% 증가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무한경쟁의 입시 속

점수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매겨지는 성적지상주의 ▷교사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빚어진 교권의 추락과 존경·의지할만한 존재의 부재 ▷일상화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성폭력의 확산 ▷관계적 놀이문화 실종에 따른 게임·스마트폰 중독 ▷부모들의 과잉보호에 따른 예절교육 부재 등을 꼽는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왜 나왔는지를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만 접근할게 아니라 가정문제, 경제적문제 등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각종 센터만 만들지 말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학교가 사회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건 자성해보고 어떻게 가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28만명에 이르고 이들에 의해 전체 청소년 범죄 40%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최근 빈 교실에 부탄가스통을 폭파시킨 10대 등 3건의 사례를 들며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전체의 4%에 불과한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범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학업 경쟁에서 밀려나고, 왕따와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전체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표현한 것은 과장이고, 선부른 예단이다.

편집자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사 큰 제목을 「학교밖 청소년 28만명 ‘미스터리 폭탄’」이라고 자극적이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미스터리 폭탄’은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고, 과장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10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문

국민일보 2015년 12월 18일자 34면 「“복음화율 전국 최고(34%)인 익산에 웬 이슬람 위한 시설이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여기에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선다고 해서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좋아했던 주민도 ‘갑자기 웬 무슬림을 위한 식품 단지냐’며 걱정이 태산이에요.”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조성 중인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주민 강모(56·여) 씨는 17일 기자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지 혹시 아느냐”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포함 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단지는 긴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2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익산 왕궁교회 이병목 목사는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조성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우리”라며 “2,

3개월 전부터 인접해 있는 대여섯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들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익산(34%)이 이슬람화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걱정은 지난달 13일 프랑스 테러 이후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인근에 마련된 홍보관의 한 직원은 “프랑스 테러 이후 할랄 식품 테마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며 “각각 다른 단체들이 3일에 한 번꼴로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17억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식품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1조2920억 달러로 세계 식품 시장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할랄 식품을 제조해 수출하면 국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할랄 식품 테마 단지를 짓고 기업들이 식품을 만들어 할랄 식품 인증을 받아 수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할랄 식품 테마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교계는 정부가 할랄 식품 테마 단지 조성에 대한 실익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고 무슬림에 대해 전혀 몰라 오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우리가 만드는 할랄 식품은 경쟁력이 없다. 유럽이 이미 할랄 식품 산업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나학수 광주겨자씨교회 목사는 “정부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하지만 호주의 할랄 식품인 호주산 쇠고기가 1kg당 1만 8000원인데 반해 한우는 1kg당 3만5000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기독언론인연합회 임채영 사무총장은 “우리 기업이 할랄 식품을 수출하려면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인증을 받는 데만 1~2년이 걸리고 유효기간이 1~2년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할랄 식품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들어서면 인근의 다른 산업은 도태된다. 할랄 식품 제조 공장의 반경 5km 내에는 하람(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것)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할랄 식품 공장의 근로자는 돼지고기, 술 등 비할랄식품은 먹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할랄 식품 인증이 취소된다. 그러다 보면 할

랄 식품만 먹는 무슬림들을 고용하게 되고 이 지역에 점차 무슬림이 증가한다.

무슬림이 많아지면 테러의 위협도 증가한다는 것이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영국이 그 예다. 영국에선 파키스탄 5000여명이 입국해 할랄 도축인(할랄 식품으로 가공하기 위해 소를 잡는 사람)으로 일한다. 이들은 집단 거주를 하며 자기들만의 지역(게토)을 형성한다. 이 지역은 불법 체류자의 은신처 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모의 장소가 됐다.

익산기독교연합회 이슬람대책특별위 공동위원장 이윤익 목사는 “무슬림은 아내를 4명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 1명이 한국으로 이주하면 가족 20여명을 데려온다”며 “무슬림 5000여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금세 익산시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할랄 식품 테마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무슬림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목사는 “우리가 테러범으로 부르는 무슬림들은 스스로 신앙에 따라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슬림의 증가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할랄 식품단지 익산시 왕궁면을 가다」라는 문패제목의 르포기사다. 기사는 지난달 13일 프랑스 테러이후 할랄 식품 테마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걱정이 태산”이라는 왕궁면 지역주민의 입장과 할랄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전북기독교연합회의 주장을 보도했다.

위 기사는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들어서면 인근의 다른 산업은 도태된다.』, 『할랄 식품만 먹는 무슬림들을 고용하게 되고 이 지역에 점차 무슬림이 증가한다.』고 보도했다. 또 『무슬림이 많아지면 테러의 위협도 증가한다는 것이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면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영국에선 파키스탄 5000여명이 입국해 할랄 도축인(할랄 식품으로 가공하기 위해 소를 잡는 사람)으로 일한다. 이들은 집단 거주를 하며 자기들만의 지역(게토)

을 형성한다. 이 지역은 불법 체류자의 은신처 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모의 장소가 됐다.』고 기술했다.

그런가하면 이 지역의 한 목사는 “우리가 테러범으로 부르는 무슬림들은 스스로 신앙에 따라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슬림의 증가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처럼 기사는 할랄 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도태되며 무슬림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테러 위협도 증가한다면서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위 기사는 편견을 갖고 무슬림 전체를 부정적으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과장 혹은 왜곡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90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10월 30일자 「노조 탄생의 비극? ... 한화종합화학 직장폐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노조 탄생의 비극? … 한화종합화학 직장폐쇄』

삼성서 매각된 뒤 1년도 안돼 … 勞, 업계 최고대우 불구 임금협상안 거부

윤○○기자

입력 2015.10.30 16:10:07 수정 2015.10.30 20:12:56

노조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속앓이를 해온 한화종합화학이 결국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해 한화로 인수되기 전까지 무노조였던 기업(삼성종합화학)이 노조가 생긴 지 1년도 안 돼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한화종합화학은 30일 “노조가 협상을 전면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상 안전문제까지 제기돼 이날 오후 2시부터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삼성에서 한화로 소속이 바뀐 한화종합화학은 올해 1월 한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생겼다. 이어 이 회사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시작했는데 사측과 노조 의견 차를 줄이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사측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경영환경에도 전면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상여금 600% 2년 내 통상임금 적용, 일시금 150만원, 휴가 5일 신설 등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기본급 기준 6.5% 인상효과)을 노조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화중화 노조는 상여금 600% 1년 내 통상임금 적용, 일시금 3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58세 이상 적용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전면 거부해 왔다.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화종합화학은 어쩔 수 없이 최근 국내외 거래처에 원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화학사들 중 고순도테레프탈산(PTA)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모두 수백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종 업체들은 인력감축, 임금동결, 각종 처우 일시적 유예 등 생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29일 지분 양도를 완결한 후 출혈을 감수하며 직원들에게 평균 5500만원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사업 자체로는 적자 상황이 수년째 지속됐지만 합병에 따른 근로자들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급한 것이다. 한화종합화학 급여 및 복지 등 근로조건은 동종 업계 최고 수준으로 노조원 평균소득이 9000만원에 이른다.

직원 가운데 44%가량이 1억원 이상이다.

사측은 직장폐쇄와 관련해 지난 15일 동안 파업 과정에서 노조에 공장 가동 정지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홀드(HOLD)’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상의 위험마저 커지자 직장폐쇄를 이날 결정한 것이다. ‘홀드’는 제조공정에서 용기나 배관 내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밀봉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안전 및 재산상 손실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윤○○기자]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화종합화학이 10월 30일 오후 2시부로 직장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목에서는 ‘노조 탄생의 비극?’이라고 언급했고, 본문에서도 ‘노조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속앓이를 해온’ ‘노조가 협상을 전면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 등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회사측 입장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상대방인 노조 쪽 주장은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았다.

노조 결성은 헌법 제33조 ①항(근로자는 근로조건에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또 노조가 파업을 비롯한 교섭 수단을 갖는 것처럼 직장폐쇄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대응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직장폐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결과인 듯이 오도하면서 그 책임을 ‘노조 탄생’에 떠넘긴 것은 물론 이에 관한 노조 쪽 입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인 데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며, “개인·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할 때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하는 보도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준칙

주문

한국일보 2015년 6월 12일자 1면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 뇌 손상”」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5번 환자 박모(38) 씨가 뇌가 손상됐을 만큼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11일 병원 측이 “박 씨가 뇌가 다 손상되었다”고 가족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박 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 통보 이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박 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5번 환자는 현재 호흡 곤란이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님을 주치의를 통해 확인했다”며 박 씨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의료진은 “뇌사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4·5·6·7·14·29면

이달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씨는 지난 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35) 옆 병상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4일 밤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의사가 30일 1,565명이 참여한 서울 양재동의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히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씨는 당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31일 오전이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했는데 메르스를 전파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8일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사과했다.

박 씨는 지난 5일에도 본보 등 언론과 장시간 전화 인터뷰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의 위중한 상황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10일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하지만 박 씨는 30대로 젊은 데다 지병도 없었다. 가벼운 알레르기성 비염 정도만 앓던 건강한 사람이 위독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보건당국도 예측하지 못했다. 박 씨 가족들은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이 약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메르스 사망자 10명의 평균 나이는 71.1세로 모두 고령인데다 천식 폐렴 심장질환 등 원래 앓던 질환이 있었다. 사망자 중 의료진은 한명도 없다.

일부에서는 젊은층에게 발생하는 면역력 부작용 현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이면서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이 메르스로 사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지만, 젊고 지병이 없는 사람도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보건당국의 통제를 비켜난 메르스 환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3차 대유행’이 불가피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시인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일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에 참석해 “3차 유행을 촉발시킬 ‘슈퍼 전파자’로 3명을 염두에 두고 관련 병원의 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새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환자 3명은 90번(62·사망) 98번(58) 115번(77·여)으로 삼성서울병원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14번(35) 환자와 지난달 27일 접촉했다. 이들은 확진 이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각 지역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0번은 14번 환자는 당시 7시간 동안 응급실에 머물러 자가격리 대상이나, 열흘 가량 충북 옥천 의료기관 3곳과 대전 을지대 병원 응급실 등 4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98번 역시 서울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 5일간 격리 없이 입원해 치료 받았다. 115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진 때까지 10일 넘게 경남 창원SK병원 등 지역 병원 4곳을 돌아다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 박모(38) 씨가 뇌가 심하게 손상됐을 만큼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와 관련된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병원 측이 “박 씨가 뇌가 다 손상되었다”고 가족에게 말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 통보 이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 뇌 손상”이라고 붙였다. 기사 내용과 제목만 놓고 보면 박 씨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만큼 위독한 상태이며, 이 같은 내용을 병원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가족들은 희망을 버린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

위 기사에서 기술한 대로 박 씨의 뇌가 다 손상됐을 정도라면 박 씨가 메르스에서 회복된다 해도 감염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사의 본문 내용만 보면 박 씨의 뇌가 다 손상됐고 위독한 상태인지 객관적 사실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박 씨가 입원 치료중인 병원 의료진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는 기사에도 반영됐다. 기사에 인용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는 것이다. 박 씨가 입원 치료중인 병원 의료진도 ‘뇌사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족들도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씨의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준 것이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박 씨의 뇌가 다 손상되었으며,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당사자인 박 씨는 물론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기사는 핵심 내용인 ‘뇌 손상’을 언급한 취재원에 대해 ‘서울시와 관련된 한 관계자’라고 모호하게 표기했다. 서울시 소속이라고 보기 어려운 표현이

며, 박 씨를 치료 중인 병원과 관련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관계자가 서울시나 병원 측으로부터 박 씨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들어서 알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기사는 이 관계자가 병원 측이 가족에게 말한 내용을 취재기자에게 전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만 봐서는 이 관계자가 ‘뇌 손상’을 병원 측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지, 제3자를 통해 전해 들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취재기자가 서울시나 병원 소속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취재원이 전해주는 말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방역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박 씨를 치료 중인 의료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과 ‘장례 절차 준비’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위 기사는 사실 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일보는 위 기사 보도 다음날인 6월 13일자 2면 「삼성병원 의사 폐기능 저하, 수면마취 상태에서 산소공급 치료」 기사에서 『박 씨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중략) “수면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야 뇌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기사의 『뇌가 다 손상되었다』는 보도를 바로잡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는 같은 지면에 게재된 「사과드립니다」에서 ‘일부 지역에 배달된 12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박모 씨가 뇌사 상태에 있다는 보도를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은 이를 부인했다’고 밝히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뇌사 상태’ 보도를 한 일부 지역 배달판 기사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의 ‘뇌 손상’이나 ‘장례 절차 준비’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일보의 6월 13일자 「삼성병원 의사 폐기능 저하, 수면마취 상태에서 산소공급 치료」 기사와 「사과드립니다」는 위 기사 내용을 온전히 바로잡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기사는 메르스 감염이 확산돼 가는 상황에서,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

도하지 않고, 소속 등이 분명하지 않은 취재원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인 표현을 담아 보도했다는 점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위 기사는 ‘재난 보도준칙’에 명시된 정확한 보도(제3조), 취재원에 대한 검증(제12조), 선정적 보도 지양(제15조), 정정과 반론 보도(제17조), 피해자 보호(제18조)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견지침」 ①(표제의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 319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종 승

주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5년 10월 26일자 「〈이산상봉〉 “코트 가져가” … 北아들에게 다 벗어준 아흔여덟의 父情」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kr) 10월 26일자 「“코트 가져가” … 北아들에게 다 벗어준 아흔여덟의 父情」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연합뉴스와 한국일보의 위 적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이산상봉〉 “코트 가져가” … 北아들에게 다 벗어준 아흔여덟의 父情

송고시간 2015.10.26 12:03

이석주 할아버지, 북측 아들 동욱(70) 씨에게 코트·목도리 벗어줘

(금강산= 연합뉴스) 공동취재단·임○○ 기자= “코트 주고 싶어.”

아흔여덟의 아버지는 감기에 걸렸는지 기침하는 아들에게 코트도, 목도리도 다 내줬다.

다행히도 아버지와 키가 비슷한 아들에게 검은색 코트는 꼭 맞았다.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에서 이석주(98) 할아버지는 60여 년 만에 만난 아들 리동욱(70) 씨에게 따뜻한 옷을 주면서도 더 줄 것이 없는지 찾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아버지 130세까지 살아야지. 나는 100살까지 살게. 자식들이 봉양 잘하면 130세까지 충분히 살아”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할아버지는 “말은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아들과 다시 함께하고픈 마음에 “오래오래 살아야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욱 씨는 자신의 지금 모습을 아버지에게 남겨 드리고 싶어 남측의 여동생 경숙(57) 씨와 함께 아버지가 주신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최형진(95) 할아버지는 북측의 딸에게 주려고 메모지에 짧은 글을 쓰다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함경남도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최 할아버지는 1·4 후퇴 때 피난 내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딸과 헤어졌다.

당시 겨울이라 날씨가 너무 추워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을 차마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최 할아버지는 옛날 생각에 ‘어머니한테 내가 왔다가 가구(가고), 또 미안하다고 꼭’이라고 쓰려다 ‘꼭’이라고 마무리하지 못하고 ‘꼬’라고만 쓴채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남측의 아들 동규(61) 씨는 아버지와 함께 우는 북측의 누나 동선(66) 씨와 조카 전봉준(43) 씨에게 메모지를 잘 간직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지난 24일부터 2박3일 간 북측의 가족과 60여 년 만에 재회한 남측의 이산가족 90가족 254명은 이날 작별상봉을 끝으로 남측으로 내려오는 버스에 올라탔다.

e***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0.26 12:03 송고

(한국일보)= 『“코트 가져가” … 北아들에게 다 벗어준 아흔여덟의 父情

수정 2015.10.26 15:13 등록 2015.10.26 15:13

이석주 할아버지, 북측 아들 동욱(70) 씨에게 코트·목도리 벗어줘
“코트 주고 싶어.”

아흔여덟의 아버지는 감기에 걸렸는지 기침하는 아들에게 코트도, 목도리도 다 내줬다.

다행히도 아버지와 키가 비슷한 아들에게 검은색 코트는 꼭 맞았다.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에서 이석주(98) 할아버지는 60여 년 만에 만난 아들 리동욱(70) 씨에게 따뜻한 옷을 주면서도 더 줄 것이 없는지 찾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아버지 130세까지 살아야지. 나는 100살까지 살게. 자식들이 봉양 잘하면 130세까지 충분히 살아”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할아버지는 “말은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아들과 다시 함께하고픈 마음에 “오래오래 살아야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욱 씨는 자신의 지금 모습을 아버지에게 남겨 드리고 싶어 남측의 여동생 경숙(57) 씨와 함께 아버지가 주신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최형진(95) 할아버지는 북측의 딸에게 주려고 메모지에 짧은 글을 쓰다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함경남도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최 할아버지는 1·4 후퇴 때 피난 내려오면

서 어쩔 수 없이 딸과 헤어졌다.

당시 겨울이라 날씨가 너무 추워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을 차마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최 할아버지는 옛날 생각에 ‘어머니한테 내가 왔다가 가구(가고), 또 미안하다고 꼭’이라고 쓰려다 ‘꼭’이라고 마무리하지 못하고 ‘꼬’라고만 쓴채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남측의 아들 동규(61) 씨는 아버지와 함께 우는 북녘의 누나 동선(66) 씨와 조카 전봉준(43) 씨에게 메모지를 잘 간직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지난 24일부터 2박3일 간 북측의 가족과 60여 년 만에 재회한 남측의 이산가족 90가족 254명은 이날 작별상봉을 끝으로 남측으로 내려오는 버스에 올라탔다.

연합뉴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0월 26일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다루고 있다. 백수(白壽)의 남측 아버지가 이별이 아쉬워 기침하던 북측 아들(70)에게 코트·목도리를 모두 벗어줬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에 이어, 최형진 할아버지(95)의 사연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최 할아버지의 고향을 함경남도 양강도 해산이라 적고 있다.

북한은 1949년 행정구역을 개편해 평안북도에서 강계군·후창군·자성군·위원군·희천군·초산군을 분리하여 자강도를, 1954년에는 함경남도 해산시·운흥군·보천군·삼수군·신파군·갑산군·풍산군·풍서군·부전군과 함경북도 삼사군 및 자강도 후창군 등을 합쳐 량강도를 각각 신설하였다.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당시 골격을 그대로 유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산은 량강도의 도청소재지이다.

그럼에도 연합뉴스는 ‘해산’을 ‘해산’으로, ‘량강도’(양강도)를 ‘함경남도 양강도’로 표기해 독자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기자는 아마도 최 할아버지의 고

향이 함경남도 혜산이었던 만큼,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것처럼 “함경남도(양강도) 혜산”, 또는 “함경남도(현재 양강도) 혜산”이라고 쓸 의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괄호도 빠지고 지명도 틀리는 등 오류가 두 가지나 겹쳐 독자에게 혼동을 준 것이다. 한국일보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전국 13도 편제는 이미 사라진 지 50년이 넘었다. 북한 지명은 분단 이후 변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열려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4년 3월 28일부터 다음 사이트(www.daum.net)을 통해 북한지도를 무료로 공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산가족 상봉을 보도할 때에는 북한 지명에 오류가 없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18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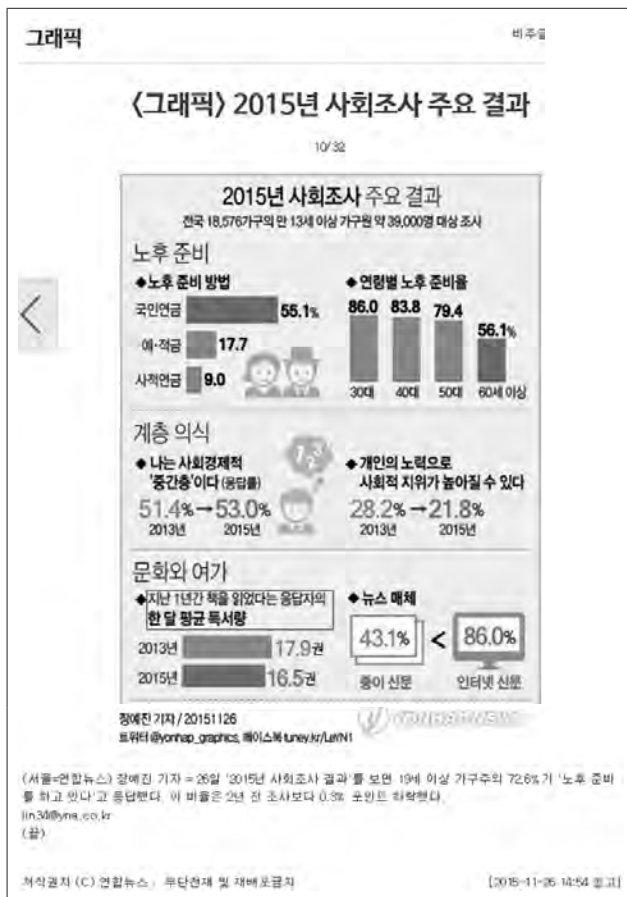
연합뉴스 발행인 박노황

주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5년 11월 27일자 「〈그래픽〉2015년 사회조사 주요 결과」 제목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그래픽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그래프는 통계청이 2015년 11월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이다. 이 통계에는 지난 1년간 책을 읽었다는 응답자는 56.2%로 2년 전보다 6.2%포인트 감소했으며, 그 응답자의 1인당 평균 독서량은 16.5권으로 2년 전보다 1.4권 감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참고1>

그런데 그래프에는 연간 평균 독서량을 ‘한 달 평균 독서량’으로 잘못 표기했다. 이는 제작 과정상의 실수로 보이지만, 연합뉴스가 거대 통신사로서 각

언론매체에 뉴스를 공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일부 신문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그래픽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첨부한다. <참고2>

그러므로 위 그래픽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통계청 보도자료 일부

III. 문화와 여가

26. 신문 및 독서 인구

인터넷 신문을 더 많이 보고 책은 한 달에 두 권을 채 못 읽어

□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72.5%로 일반신문(43.1%)보다 인터넷신문(86.0%)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부터 인터넷 신문을 보는 인구가 더 많아짐

< 신문 보는 인구 비율 (%) >

	일반신문		인터넷 신문
· 2009년	74.3	>	73.1
· 2011년	67.8	<	77.9

□ 지난 1년 동안 독서 인구 비율은 56.2%로 2년 전 보다 6.2%p 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 16.5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 인구와 독서량은 감소하고, 모든 연령대가 교양서적을 가장 많이 봄

【 신문 인구(복수응답) 】

(단위 : %)

	신문 ¹⁾ 보는 인구	일반 신문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인터넷 신문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2013년	72.6	56.4	100.0	38.9	20.2	25.2	15.7	81.5	100.0	53.7	22.2	17.1	7.0
2015년	72.5	43.1	100.0	38.2	18.3	25.9	17.6	86.0	100.0	56.6	22.6	15.3	5.5
도 시(동 부)	75.3	42.9	100.0	39.4	18.5	25.5	16.6	86.7	100.0	57.0	22.5	15.1	5.3
농어촌(읍면부)	59.1	44.4	100.0	30.8	16.3	28.8	23.4	82.0	100.0	53.8	23.1	16.4	6.7
남 자	78.9	48.5	100.0	43.2	17.7	24.4	14.7	84.9	100.0	60.9	21.6	13.0	4.6
여 자	66.3	36.8	100.0	30.5	19.1	28.4	22.0	87.4	100.0	51.8	23.8	17.8	6.6

주 : 1) 신문 구독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 사람

【 독서 인구(복수응답) 】

(단위 : %, 권)

	독서 인구	잡지류	독서 권수	교양 서적	독서 권수	직업 서적	독서 권수	생활·취 미·정보서 적	독서 권수	기타	독서 권수	독서 ¹⁾ 권수
2013년	82.4	42.9	6.6	68.9	9.3	33.9	7.3	25.5	5.4	19.6	24.6	17.9
2015년	56.2	36.5	6.5	66.2	8.5	36.1	6.6	28.6	5.2	19.9	23.0	16.5
13~19세	74.2	25.1	6.2	74.6	10.3	19.1	5.5	18.2	5.7	43.9	20.2	20.2
20~29세	73.8	39.4	6.4	67.7	7.9	48.0	6.7	27.5	4.3	28.4	23.5	18.9
30~39세	68.5	36.9	6.1	59.4	8.4	44.9	7.1	40.8	6.6	22.7	26.5	19.1
40~49세	63.2	38.3	6.4	64.4	8.7	40.9	6.5	29.6	4.9	13.1	23.0	15.2
50~59세	47.1	40.3	7.5	66.4	7.5	31.1	6.6	26.2	4.3	6.1	22.3	12.6
60세이상	27.1	34.8	6.8	70.9	8.3	13.8	6.0	19.7	4.4	3.1	13.2	10.4

주 : 1)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

연합뉴스 보도내용

『한국인을 실과 이직 공포에 시달린다...남자가 불안감 더 커』

송고시간 | 2015/11/26 12:00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취업자 61% '불안감' 퍼해
65.6% '건강보험료 부담'...종이신문 구독자 인터넷의 절반

'개인 노력만으로 지워 할상 어렵다' 생각하는 국민 늘어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취업 상대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또 실업률이 과파해지면서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줄고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 여력이 부족해 60대에서는 절반 정도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전국 1만8천676가구에 상주하는 한 19세 이상 가구원 약 3만9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다.(중간생략)

◇ 손에서 책 놓는 사람 늘고 독서량 감소...여가 활동은 주로 'TV 시청

신문을 보는 비율은 72.6%로 나타났다. 일반 종이신문(43.1%)을 보는 비율은 인터넷(86.0%)으로 본다는 응답자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책을 읽었다는 응답자는 56.2%로 2년 전보다 6.2%포인트 감소했다. 책을 읽었다는 응답자의 1인당 평균 독서량은 16.5권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1.4권 감소했다.

※참고 2: 매일신문 보도내용



2016 - 3046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6년 1월 21일자(캡처시각) 「이승엽 “21번째 시즌, 지금 가장 행..”, 「[MK인터뷰]김동명, 포수 포기하니 거..」라는 제목 및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1.21. 12:05〉

(매경닷컴 1)=『[MK인터뷰] 이승엽 “21번째 시즌, 지금 가장 행복하다” ①

기사입력 2015.01.20 06:28:06 최종수정 2015.01.20 09:16:10

[매경닷컴 MK스포츠(美 曄) 김○○ 기자] 국민타자. 라이언킹. 아시아 홈런왕, 8회의 사나이. 이쯤이면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선수가 있다. 바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39)이다. 이승엽은 올해로 21번째 시즌을 맞는다.

‘불혹’의 그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야구는 동등한 조건에서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이다.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고 뜨겁게 꿈틀거리고 있는 야구 열정이다. 삼성의 1차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曄 현지에서 만난 이승엽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살아남아서 강해진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꾸준히 채찍질 했기에 늘 최고의 선수로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야구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행복한 남자’ 이승엽을曄에서 만났다.(중간 생략)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맞다. 21번째 캠프인데 지금이 내 야구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다

(웃음).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o**@maekyung.com]

(매경닷컴 2)=『[MK인터뷰]김동명, 포수 포기하니 거포 본능 꿈틀

기사입력 2015.01.19 06:57:15 최종수정 2015.01.19 10:59:40

[매경닷컴 MK스포츠 강○○ 기자] 김동명(27)은 ‘막내 구단’ KT 위즈의 기대주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79경기에 주로 4번타자로 나서 타율 3할5푼6리(북부리그 4위) 17홈런(4위) 57타점(5위) 장타율 6할2푼8리(3위) 출루율 4할9푼8리(1위)로 고르게 상위에 랭크됐다. 특히 거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

2007년 삼성 라이온즈에 1차로 지명돼 1군서 통산 6경기에 나섰던 김동명은 누구보다 KT가 1군에 진입하는 올 시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슈퍼스타’다. 지난 14일 수원KT위즈파크서 훈련을 마친 김동명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믿기지 않았던 KT행, 그리고 포지션 전향

김동명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삼성의 포수 유망주였다. 그리고 조범현 감독은 지난 2012년 11월 삼성 마무리캠프에 포수 인스트럭터로 초빙된 이후 KT 감독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김동명을 비롯한 삼성의 여러 포수들을 가르쳤다. 그 때 조 감독과 연을 맺은 김동명은 2013년 11월 말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조범현 감독이 있는 KT로 팀을 옮기게 됐다.

김동명은 팀을 옮겼을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얼떨떨했던 감정이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다. “2013년 삼성 마무리캠프로 일본에 가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차 드래프트 발표 날이 됐는데, 나는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해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훈련 도중 갑자기 매니저가 KT에 가게 됐다고 짐을 싸라고 하는 것이다. 삼성에서 워낙 오래 있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인 줄만 알았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비행기를 타서도, 한국에 와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KT 전지훈련지였던) 애

리조나에 가서야 ‘내가 진짜 KT에 왔구나’ 생각했다.”

팀을 옮기자마자 고민이 시작됐다. 김동명은 이미 삼성 캠프서부터 포지션을 전향하며 타격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던 상황. 하지만 조 감독은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포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을 알아보고 선택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김동명은 “감독님이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전향한다는 말을 하기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KT로 오면서 ‘다시 포수를 해야 되나?’ 싶었다. 매일 아침 아픈 어깨와 싸우는 일을 더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다. KT에 합류해서 포수 장비까지 지급 받고 투수들 공을 받고 그렇게 3일 정도 했던 것 같다. 그 때 마음이 잡히지 않았던 게 드러났던지 코치님이 정말 하기 싫은 애처럼 보였다고 하셨다. 결국에는 감독님께 먼저 포수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감독님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며칠 후에 다른 포지션으로 수비 연습을 시작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향이 이루어졌다. 안 잡히던 마음이 그제야 단단하게 정립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전향을 마친 김동명은 1루수와 외야수로 번갈아 출장하면서 2014시즌을 퓨처스리그서 보냈다. 처음 포수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포수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렸다. 그렇지만 김동명은 2년을 고민한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 타격에 집중하면서 실력이 업그레이드됐다. 김동명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 자신감이 올라간 게 지난 시즌 가장 큰 성과였다”고 말한다.

▲2015시즌,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김동명은 새 시즌에 앞서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시즌 주로 1루수로 출장했던 그는 장성호, 김상현 등의 1루 기용 고려와 맞물려 현재 외야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창단팀 주전으로 뛰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김동명이기에 내야든 외야든 1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팀 내 경쟁을 펼쳐야만 한다.

(중간 생략)

“야구바보”라는 말이 참 예쁜 것 같다. 삼성 시절에도 매일 2군이나 재활군에 있고 하는데도 나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2군 생활에 젖어들지 않았다. 내 나름대로의 신념은 늘 있었고 그걸 놓지 않았기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밝게 야구를 했고 2군이고 재활군에 있더라도 투덜거리지 않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와 딱 맞는 별명이라고 생각한다.”

‘야구바보’는 지금 ‘KT의 첫 프랜차이즈 스타’로 거듭나는 꿈을 꾸고있다.

[c***qk@maekyung.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이 2016년 1월 21일 현재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린 기사 두 건은 모두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것이다. ‘이승엽 인터뷰’는 지난해 1월 20일, ‘김동명 인터뷰’는 1월 19일 올렸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21번째 시즌,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이승엽의 언급은 지난해 것이고, KT가 1군에 진입하는 올 시즌 개막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린다는 김동명의 말도 지난해 상황이다.

매경닷컴이 1년이나 묵은 인터뷰 기사를, 그것도 새 시즌이 시작된 이 시점까지 계속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기사는 독자들에게 2016년 시즌의 새 각오로 오인케 할 소지가 충분하다. ‘뉴스(새로운 소식)’를 전한다는 언론의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이러한 편집은 지양해야 할 터이다.

따라서 위 제목 및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제10조 「편집지침」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61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6년 1월 26일자 「케이트 모스, 파격적인 올 누드 화보 공개」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트 모스, 파격적인 올 누드 화보 공개』

[일간스포츠] 입력 2016.01.26 19:09



톱모델 케이트 모스가 파격적인 화보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 속 케이트 모스는 40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관능적인 모습을 하고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편 케이트 모스는 지난 27년 동안 수 백만장의 컷을 남긴 케이트 모스는

런던에서 열릴 새 사진전을 앞두고 총 11점의 사진을 골랐다. 이는 대부분 마리오 테스티노와 애니 레보비츠의 작품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Osborne Samuel and Beetles + Huxley's exhibition』

※참고 1: 2015년 11월 23일자 일간스포츠

『케이트 모스, 새 사진전에 쓰일 누드 사진 11점 직접 골라...

[일간스포츠] 입력 2015.11.23 10:08



톱모델 케이트 모스가 다가올 사진전에 쓰일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직접 골라 화제다.

지난 27년동안 수 백만장의 컷을 남긴 케이트 모스는 런던에서 열릴 새 사진전을 앞두고 총 11점의 사진을 골랐다. 이는 대부분 마리오 테스티노와 애니 레보비츠의 작품이다.

한편 이번 사진전은 오스본 사무엘과 비틀즈&헉슬리의 콜라보 전시회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Osborne Samuel and Beetles + Huxley's exhibition』

※참고 2: 추가된 사진(아주경제 2014년 2월 4일자 기 보도)

『케이트 모스, 과거 누드 화보 공개 ‘이렇게 아찔했는데 지금은?’

국○○기자 등록 2014.02.04 20:12 수정 2014.02.04 20:12



아주경제 국○○기자=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톱모델 케이트 모스의 달라진 외모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지난해 공개됐던 누드 화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케이트 모스는 지난해 영국의 한 화장품 브랜드 광고모델로 발탁돼 수영장 화보를 촬영했다.

사진 속 속 케이트 모스는 전라로 옆드려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긴 다리와 군살 없는 완벽한 몸매를 뽐내고 있다.

케이트 모스는 현재 모델로 은퇴한 뒤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국○○기자 p***skook@ajunews.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톱 모델 케이트 모스가 새 사진전을 앞두고 11점의 사진작품을 골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일간스포츠 2015년 11월 23일자에는

이미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다. 사진의 출처도 ‘Osborne Samuel and Beetles + Huxley’s exhibition’로 똑같다.

특히 이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어린이 보호」 위반으로 신문윤리위원회 제893차 회의(2015. 12. 09)에서 주의(결정 제2015-1-64호)를 받았다. 위 내용은 기존 기사에서 일부 문구가 바뀌고, 사진 하나가 추가됐으나 이 사진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윤리위원회의 ‘주의’ 조치까지 받은 기사를 자기 표절해 재탕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63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주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6년 1월 1일자 「지동원과 결혼설 강지영 언니, 연예인 해도 되겠네」 제목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동원과 결혼설 강지영 언니, 연예인 해도 되겠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1 09:54 수정 2016.01.01 09:54



▲지동원과 결혼설 강지영 언니

지동원과 결혼설 강지영 언니 지동원과 결혼설 강지영 언니 지동원과 결혼설 강지영 언니

지동원과 결혼설이 언급된 강지영 언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한 매체는 “지동원이 강지영의 친언니인 두 살 연상 강지은씨와 결혼을 한다”고 보도했다. 평범한 회사원 출신의 강지영 언니는 과거 국내 방송에도 몇차례 출연한 적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 강지영 언니는 연예인급 미모를 과시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지동원과 절친한 한 지인은 “두 사람이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다. 결혼 날짜나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축구선수 지동원이 연예인인 강지영의 친언니와 결혼한다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반복보도하였다.

특히 1월 1일 오전 8시 50분 현재 자사 선정 <많이 본 뉴스>의 4~10위를 차지하고 있다. 6가지 기사의 제목은 구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 그런데도 별도 기사로 처리돼 <많이 본 뉴스>의 순위에 각각 올랐다는 사실은 매체 스스로 같은 기사를 반복해서 올렸음을 밝힌 것과 다름없다.

※참고 1: 지동원 결혼 재전송 기사 목록



※참고 2: 〈많이 본 뉴스〉 순위

많이 본 뉴스	
1	한 뱃속 세 쌍둥이 아빠가 모두 달라 '깜짝'.. '...
2	IS '성폭행 안내서' 15개 조항 추가.. 내용보니...
3	샤오미, 70인치 UHD TV 파격가에 출시.. 179만원
4	지동원과 결혼 강지영 친언니, 가족 사진 속...
5	지동원 강지영 친언니와 결혼 '우월한 가족사'...
6	지동원 강지영 친언니와 결혼, 강지영 가족 사...
7	강지영 언니 지동원과 결혼, 강지영 가족사진...
8	지동원 강지영 친언니와 결혼, 강지영 가족사...
9	지동원 강지영 친언니와 결혼, 강지영, 우월...
10	강지영 언니, 국가대표 지동원과 결혼설...연...

〈캡처시각 01.01. 08:53〉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2015-107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朝鮮日報 발행인 방 상 훈

주문

東亞日報 2015년 3월 6일자 1면 「從北, 한미동맹을 테러하다」 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3월 6일자 1면 「중북주의자의 사상초유 美대사 백주 테러」 기사와 제목, 朝鮮日報 3월 6일자 1면 「韓美동맹 찢른 從北테러」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 매일경제,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한미동맹’이 테러를 당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중북 성향 인사가 5일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대사 피습 소식을 접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한미관계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5일 오전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 행사 도중 ‘우리마당’ 대표 김기중 씨(55)의 공격을 받았다. 김 씨가 휘두른 길이 약 25cm의 흉기에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에 길이 11cm, 깊이 3cm의 자상과 왼쪽 팔꿈치와 손목 중간 부분에 2cm의 관통상을 입었다. 새끼손가락에는 김 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다. 리퍼트 대사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며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테러에 앞서 준비한 유인물에서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전쟁훈련을 중단하라.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우리나라에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다. 미일관계 강화에 불만을 담은 메시지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 씨의 발언을 보면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중북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테러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서 미국대사가 처음으로 테러를 당했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논쟁이 실망스럽다”는 발언으로 한미관계가 꼬인 미묘한 시점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이 불필요하게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돼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외교사절에 대한 이런 가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현재 실시 중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리퍼트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채유를 기원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정부는 리퍼트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퍼트 대사의 피습에 대해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웅당한 징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한국)에서 위협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 놓고 조선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미국을 대표해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 미국대사가 중북 성향의 문화단체 대표에게서 기습 공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향후 한·미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5일 외교부와 경찰에 따르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강의를 준비하던 중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인 김기종 씨(55)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부상당했다. 이로 인해 오른쪽 얼굴 광대뼈에서 턱밑까지 길이 11cm, 깊이 3cm의 상처를 입었다. 리퍼트 대사는 이를 봉합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80바늘을 꿰매는 등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A4·5·6·8면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잘 있고 매우 좋은 상태(Doing well & in great spirits)”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겠다”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리퍼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부터 보좌해 온 최측근 중 한 명이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과거에도 주한 일본대사를 폭행하려 했던 인물로 2006~2007년 8차례에 걸쳐 방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체포 후 그는 “강연에 초청을 받고 지난 10일간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음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대공 및 대테러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지휘를 받아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동 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7시 20분) 리퍼트 대사와 통화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특히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한 입장에서 리퍼트 대사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정부는 신속한 수사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엄정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따뜻한 말씀을 듣게 되어 영광”이라고 우리말로 인사하며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항상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미국 대사 피습에 따른 향후 대책과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 회의를 열어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주한 외교사절 시설과 요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사건 직후 논평을 통해 “이러한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 관계를 잘 다져가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사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이날 피습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朝鮮日報)= 『서울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연합 훈련을 반대하는 친북 성향 인물에게 습격당했다. 5일 오전 7시 38분 마크 리퍼트 미국 대

사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시민단체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김기중(55) 씨가 휘두른 길이 25cm 흉기에 의해 오른쪽 얼굴에 깊이 3cm, 길이 11cm의 자상(刺傷)을 입고, 왼쪽 손목 힘줄 2개가 파열됐다. 국내에서 주한 미 대사가 공격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리퍼트 대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2시간 30분간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범인 김 씨에 대해 6일 중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김 씨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리퍼트 대사가 앉은 테이블로 뛰어들면서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미국이 남의 나라에 와서 …”라고 소리쳤다. 김 씨는 한·미 연합 훈련을 반대하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는 유인물도 현장에 가져왔다.

김 씨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민주평통 지역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 허가를 받아 8차례 방북했고, 2011년 12월 서울 덕수궁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세우려다 물의를 빚었다. 리퍼트 대사는 수술 뒤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다. 같이 갑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씨의 테러에 대해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웅당한 징벌”이라고 논평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 매일경제, 朝鮮日報의 위 기사들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소식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다.

기사들은 범행을 저지른 김기중 씨가 북한과 관련돼 있거나 북한을 추종했을 가능성을 보도하며 큰 제목에 ‘중북’ 또는 ‘중북주의자’ 표현을 넣어 「從北, 한미동맹을 테러하다」(東亞日報), 「중북주의자의 사상초유 美대사 백주 테러」(매일경제), 「韓美동맹 찢는 從北테러」(朝鮮日報)로 각각 달았다. 기사의 맥락으로 미뤄 ‘중북’ 또는 ‘중북주의자’는 김 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북’은 일반적으로 ‘북한 또는 북한 정권의 주장 등을 추종하는 경향’을 의

미하는 용어다. 최근 언론에서는 ‘중북’ ‘중북주의’ ‘중북주의자’와 같은 용어의 사용이 늘고 있는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 북한과 가깝거나 북한을 추종한다며 비판할 때 주로 언급된다.

東亞日報 기사는 김기종씨에 대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중북 성향 인사』로 기술하고, 『김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 씨의 발언을 보면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중북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 김 씨를 ‘중북 성향 인사’로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을 법한 내용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인물이라는 점, 『김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다』는 기술, 그리고 유동열 원장의 발언이다.

김 씨가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6일 김 씨가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다고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뉴시스는 김 씨가 10일 변호인을 통해 이를 부인했고, 경찰은 13일 브리핑에서 ‘김 씨가 분향소 설치 시도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로 번복했다고 보도했으며, 일부 언론도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 씨가 주도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게 아니라 행사의 단순 참가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김 씨가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다』고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이다.

또 유 원장은 김 씨에 대해 『중북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한 근거로 그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김 씨의 발언 내용이 소개된 것이 없다. 다만 김 씨가 준비한 유인물을 통해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전쟁훈련을 중단하라.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우리나라에 환수하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만 있다.

그러나 ‘전쟁훈련 중단’이나 ‘전시작전권 환수’와 같은 주장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던 것들이고,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중북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유인물의 내용을 김 씨의 발언으로 인정한다 해도 이 같은 주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김 씨를 ‘중북’으로 단정

하는 것은 무리다.

김 씨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인물이어서 ‘중북’이라는 기술 역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술이라고 하기 어렵다.

매일경제 기사는 김 씨를 『중북 성향의 문화단체 대표』로 표현했다. 그러나 기사는 김 씨가 왜 중북인지를 설명해 줄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에는 『2006~2007년 8차례에 걸쳐 방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술 외에는 김 씨가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없다. 게다가 북한을 8차례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김 씨를 ‘중북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기사는 김 씨를 ‘중북 성향’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편집자는 김 씨를 ‘중북주의자’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朝鮮日報 기사는 김 씨에 대해 『친북 성향 인물』로 표현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 허가를 받아 8차례 방북했고, 2011년 12월 서울 덕수궁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세우려다 물의를 빚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맥락으로 미뤄 ‘8차례 방북’과 ‘김정일 분향소를 세우려다 물의를 빚었다’를 근거로 김 씨에 대해 ‘친북 성향’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일 분향소를 세우려다 물의를 빚었다’라는 기술은 사실과 다르다. 김 씨가 주도적으로 설치하려 한 게 아니라 행사의 단순 참가자라는 것이 경찰 브리핑과 언론 보도를 통해 추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기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양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김 씨가 8차례 방북했다는 사실을 들어 김 씨를 친북 성향 인물로 단정하는 것도 무리다.

게다가 편집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사 본문에도 없는 ‘從北(중북)’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위 신문들의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매일경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

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42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5년 5월 26일자 「TOUR WORLD」 별지 섹션 B11면 「참좋은 여행사? … 참 ‘좋지 않은’ 여행사!」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뭐? 참좋은 여행사의 소비자 만족도가 중하위권이라고?”

최근 라디오를 통해 ‘만족도가 80%를 넘는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참좋은 여행을 통해 여름 휴가를 계획했던 회사원 A씨는 깜짝 놀랐다. 한 지인이 “과장광고에 속지마라. 올해 조사는 중하위권이다”는 귀뜸을 한 것. A씨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올해 패키지여행 만족도를 확인해 보고 바로 다른 여행사를 선택했다. 참좋은 여행의 패키지 여행상품 만족도는 조사 대상 14개 업체 중 7위에 그쳤다.

참좋은 여행이 참 ‘나쁜’ 여행사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게 만족도에 대한 대목이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만족도가 80% 넘는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위권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초 14개 종합여행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명확해진다. 만족도 순위가 낮다면, 상대적으로 여행을 할 때 고객 응대, 예약, 현장 가이드 친절도 등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는 방증인 셈이

다. 소비자원의 조사는 여행상품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정보 제공 △계약과정 △계약이행 △진행 및 안내원 △가격까지 총 5개 항목의 만족도를 꼼꼼히 측정한 결과다.

만족도 1위는 종합점수 18.01점을 받은 모두투어, 정보 제공에서 3.72점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2위는 17.98점을 얻은 롯데관광. 5개 항목에서 고른 평점을 얻었고 특히 진행 및 안내원 점수가 3.58로 모두투어의 3.56보다 0.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볼룸으로 업계 1위인 하나투어가 올랐고, 4위에는 여행박사가 자리했다.

참좋은 여행은 총 평점 17.62로 7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증시에서 상장폐지되며, 어려움을 겪었던 자유투어가 최하위권임을 감안하면 중하위권 성적이다. 소비자들은 특히 참좋은 여행의 가격에 불만을 표시했다. 가격 평점은 3.24점에 그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진행 및 안내원의 응대 점수도 3.47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보다는 불만이 높은 편에 속했다.

최근에는 홈쇼핑을 통해 주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급급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씨제이월드스 등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대형사들이 1000만원대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공정위 측은 홈쇼핑을 통해 패키지 상품을 홍보하면서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 △선택관광의 경비와 대체일정 등 중요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참좋은 여행은 ‘유류할증료 필수’로도 철폐를 맞은 적이 있다. 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과다하게 표시했고,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가 기존보다 낮아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도 환불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족도가 80%를 넘는다는 라디오 광고의 문구는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 내용이다. 광고를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 여행 섹션 「TOUR WORLD」에 실린 위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해 12월 14개 종합여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좋은여행’ 한 곳만을 지목해 부정적으로 기술했다.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초 14개 종합여행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고 기술한 조사는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해 12월 29일 공개한 조사 결과로 당시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보도한 사안이다. 이 기사가 5개월 전 보도된 사안을 다시 꺼내면서 조사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은 조사가 최근에 있었던 것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좋은여행’은 5개 항목 가운데 △정보제공 △계약과정 △계약이행 △진행 및 안내원 등 △가격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항목별 점수를 단순 합산한 결과는 17.02(만점 25)로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는 점수다. 14개 여행사 가운데 7위로 중위권에 속한 성적이다. 결코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다.

그런데도 기사는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며, 어려움을 겪었던 자유투어가 최하위권임을 감안하면 중하위권 성적이다.』고 기술했다. 자의적이며, ‘참좋은여행’을 억지로 중위권 밖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기사는 『만족도 1위는 종합점수 18.01점을 받은 모두투어, 정보 제공에서 3.72점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참좋은여행’도 이 부분에서 모두투어와 같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사는 이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는 이어 『참좋은 여행이 참 ‘나쁜’ 여행사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적었는데 이 정도 평가를 놓고 이와 같이 기술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기사는 또 조사 결과 8~14위 업체에 관해서는 언급은커녕 표에서조차 A사~G사로 익명 처리하고 하필 중위권에 든 ‘참좋은여행’만을 지목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기사는 『최근에는 홈쇼핑을 통해 주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급급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씨제이월드스 등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대형사들이 1000만원대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노랑풍선 등 10개 업체가 ‘참좋은여행’보다 많은 4700만원~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실은 외면했고, 과태료 부과가 반드시 업체 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굳이 ‘참좋은여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과태료를 받은 것처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기사는 이밖에 『참좋은여행은 ‘유류할증료 꿈수’로도 철퇴를 맞은 적이 있다.』고 기술했는데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철퇴’를 맞았는지 설명하지 않았고, 유류할증료 문제는 ‘참좋은여행’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행사들이 제재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 점도 밝히지 않은 채 ‘참좋은여행’ 만 언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편집자도 큰 제목을 「참좋은 여행사? … 참 ‘좋지않은’ 여행사!」로 단정적으로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 「홈쇼핑 통해 ‘꿈수 판매’ 과태료 … 패키지 여행 만족도도 중하위권 추락」으로 달았다. 이러한 제목들은 많은 여행사들 중에서 ‘참좋은여행’ 만이 ‘홈쇼핑을 통한 꿈수 판매로 과태료를 받았고 패키지 여행 만족도도 중하위권으로 추락한 좋지 않은 여행사’라는 인상을 갖게 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기사 내용과 제목들은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하는 보도기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게다가 기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참좋은여행’의 의견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사는 특정 여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대로 예단·편견에 따라 작성, 편집되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독자로 하여금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경북일보 2015년 3월 25일자 1면 「안하무인 코레일, 설설 기는 포항시/KTX 포항노선 시승식 노선개설 주도 포항보다 대구서 먼저 행사 진행/포항시, 상황 파악도 못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는 31일 KTX포항노선(동해선) 개통식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코레일의 일방통행적인 태도와 포항시의 무관심으로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코레일은 오는 31일 개통식과 함께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상업운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종확인을 위해 24일부터 승차점검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코레일측은 본격적인 상업운행에 앞선 최종승차점검인 만큼 노선 홍보를 위해 KTX포항노선 개설에 공을 들였던 정치인과 해당지자체 및 언론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승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4일 대구시 및 경북도와 시·도의회 의원, 대구지역 언론관계자 등 60여명을 상대로 동대구역을 출발해 포항까지 왕복하는 시승행사를 가졌다.

이어 26일에는 포항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장, 지역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 언론관계자 등 200여명이 포항역을 출발해 동대구를 왕복하는 시승행사를 갖기로 했다.

문제는 그동안 이병석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이 포항노선 개선을 위해 ‘형님예산’이라는 질타를 받아가며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단 한번의 의논조차도 하지 않은 채 대구지역 시승행사를 먼저 갖게 됐다는 점이다.

코레일측은 이와 관련 포항시는 물론 KTX포항직결노선 개설을 위해 건의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에게 행사계획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병석의원실은 23일 밤 본지에서 취재차 확인에 들어간 뒤에야 뒤늦게 포항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상황 파악에 나섰다.

결국 포항노선 개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국회의원과 종착지이자 출발지인 포항시가 코레일의 일방통행적 업무태도로 인해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같이 된 데는 코레일측이 시승행사를 준비하면서 전체 시승계획에 대한 설명없이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시와 별도로 협의한 데서 비롯됐다.

즉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레일 대구본부, 포항시는 포항역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상황파악조차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24일 대구·경북지역 정치인 및 언론관계자를 태운 KTX열차가 동대구역을 출발해 오후 2시48분 포항역에 도착했지만 이들을 맞이해 준 사람은 없었다.

결국 주인없는 포항역에 도착한 이들은 아직 준비도 다 마치지 않은 포항역만 돌아보고 다시 동대구로 향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코레일 대구본부측은 “급하게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포항 시민에 대한 배려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향후 포항시와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포항시는 “코레일측이 이번 시승행사를 진행하다보니 포항시 시승행사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코레일의 스케줄대로 따르겠다는 저자세적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다 KTX 개통식이 일주일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53만 시민의 잔치마당이 될 31일 개통식에 초청장을 받지 못한 시민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해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결국 KTX개통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누차 밝혀온 포항시의 행보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어 이강덕 시장이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야 한다는 지적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는 위 기사에서 KTX 포항노선의 개통식(3월 31일)을 앞두고 코레일이 대구와 포항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시승행사를 실시하면서 포항 쪽 일정을 대구 쪽보다 이틀 늦게 잡은 데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포항 쪽이 포항 노선 개설을 주도했으니 포항 쪽 행사를 먼저 치렀어야 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3월 24일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의원, 대구 지역 언론 관계자 60여명을 상대로 동대구역을 출발해 포항역을 다녀오는 시승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이틀 후인 26일에는 포항 지역 각계 인사, 언론 관계자 등 200여명이 포항역에서 동대구역을 왕복하는 시승행사를 갖도록 했다.

기사는 대구 쪽 시승행사가 먼저 치러진 것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그 것이 왜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예컨대 코레일이 포항 쪽을 무시했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정도의 부연 설명조차도 없다.

기사는 특히 포항 출신 국회의원인 이병석 전 국회의부의장에게 『단 한 번의 의논조차 하지 않은 채』 시승행사 일정을 잡은 것을 큰 문제라든가 되는 양 비판했지만 시승행사 일정까지 이 의원과 상의했어야 마땅했는지부터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사는 일정이 이처럼 잡힌 이유에 대해 코레일이 대구시와 포항시를 상대로 시승행사 문제를 협의하면서 다른 쪽 시승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전하면서 코레일에 대해 『일방통행적인 태도』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포항시 측이 코레일의 시승행사 스케줄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저자세적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무엇 때문에 ‘저자세’라고 기술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안하무인 코레일, 설설 기는 포항시」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적인 태도’에서 ‘안하무인’으로, 포항시에 대해서는 ‘저자세’에서 ‘설설 기는’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 보도의 범주를 벗어나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왜곡됐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05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문

한국경제 2015년 4월 2일자 A1면「끝까지 버티는 노조/기업 팔만 비트는 정부」·A4면「노동계에 끌려간 정부 … 기업들 “양보만 강요, 무슨 개혁 하겠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A1면, 끝까지 버티는 …〉=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만 요구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러다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노동유연성 확보는 물 건너간 채 기업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31일까지였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시한을 하루 넘긴 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네 명이 모이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협의를 계속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핵심 의제 두 개를 노동계의 주장대로 빼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의제를 반드시 합의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자 박 회장이 “노동계의 요구는 다 들어주면서 왜 경영계만 압박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파견 업종 확대나 임금피크제 의무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A4면, 노동계에 끌려간 정부 …〉= 『2013년 4월30일 국회에서 정년연장법이 전격 통과됐다.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당시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정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는 밀어붙였다. 노동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후 현장에선 두고두고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임금피크제 같은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정년 연장을 달성한 노조와 노동계는 의무사항도 아닌 임금피크제를 쉽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정부 문제를 기업에 떠넘겨”

박근혜 정부 들어 불거진 노사 갈등은 정년 연장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의 정책 오류가 낳은 부담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은 대표적인 사례다. 기본급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 지침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과 노조는 상여금과 수당 등을 늘리며 총액 임금을 올렸다. 주당 68시간 근무도 주말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오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에서 정부의 행정해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급해진 정부는 부랴부랴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하고 나섰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패키지 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2일 노사정위는 14개 논의 과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시한은 지난달 말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 대부분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어서 노사정위가 기업에 양보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영합적 행보 지양해야”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재개된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결국 기업이 부담을 짊어지는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영계의 관측이다. 1일 새벽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두 가지 핵심 의제를 노동계 요구대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두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분류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의제인 파견 업종 확대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빠진 합의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동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업의 기여를 요구하는 등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버티는 노동계에 제시하는 일종의 타협 카드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3조원가량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기업은 노동 유연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게 되는 만큼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을 압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업에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급여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인기영합적인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A1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A4면 해설기사로 보도했다. A1기사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만 요구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그 사례로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핵심 의제 두 개를 노동계의 주장대로 빼겠다고 제안하고, 대신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의제를 반드시 합의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위 제안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관한 것으로 여전히 노동계에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이를 두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정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계는 이 장관 제안에 대해 ‘쉬운 해고’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 장관의 제안에 대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계의 요구는 다 들어주면서 왜 경영계만 압박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고 기술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큰 제목을 「끝까지 버티는 노조/기업 팔만 비트는 정부」로 단정적으로 뽑았다.

A4면 기사는 『정부는 노동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라고 보도해 이 장관 제안을 노동 유연성 포기로 왜곡했다.

또 기사는 재계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노동계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편집자 역시 「노동계에 끌려간 정부 ... 기업들 “양보만 강요, 무슨 개혁 하겠나”」로 큰 제목을 달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끌려 다니면서 기업들에게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들은 편견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1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5년 4월 2일자 24면 「[비자금의 뒷]/결국 .../사퇴하나?/(↓) 검찰 칼날 앞에 선 포스코 권오준 회장, 4월 23일자 20면 「㉠한진/왜 ... [정권]에 밍보였나?/▶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비협조적(↓)/‘투자 금액 줄이려는 한진그룹 때문에 협상 늦어진다’ 불만(↓)/(⇒)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회의’서 강력 성토」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비자금의 뒷] ...〉= 『⇒ ‘포스코 비자금’ 사건이 건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준양 전 회장은 물론이고, 현 회장인 권오준 회장에게까지 불뚝이 튀고 있다. ‘박

근해 정부'의 사정(司正) 칼날이 제일 먼저 들이닥친 포스코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과 함께 정준양 전 회장 등 전 최고 경영진의 줄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전 경영진의 구속까지 갈 사안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비자금 사건에 한 발 비껴서 있던 권오준 회장이다. 권 회장은 청와대나 사정당국으로부터 지난해 7월 확인된 비자금 건을 그동안 '은폐'해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재계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권 회장이 사퇴까지 염두에 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준양 전 회장, '포스코 비자금' 사건의 몸통?

1 지난 3월 13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인천 송도의 포스코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바로 전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자금 의혹 등 과거정권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직후다. 정·재계가 술렁거린 것은 당연. “올 것이 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은 지난 2월 처음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문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경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부임한 직후 국내외 건설현장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법인장을 지냈던 임원 A씨와 B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현장 직원들과 공모해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 가운데 100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소문이 포스코 안팎으로 유포되기 시작한 것. 이 정보를 입수한 검찰이 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 이미 검찰은 작년에 상당 수준의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혹 수준을 뛰어넘는 단서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다.

이 뿐만이 아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에서도 100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포스코 전 최고 경영진에 전달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3월 27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당시 최고위층인 정준양 전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

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정 전 회장의 오른팔 격으로 지난해 3월 포스코에서 물러난 정 전 회장과 퇴임시기도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의원이 정 전 회장이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될 때 포스코건설 부사장으로 있던 정 전 부회장이 정치권과의 가교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의 관계다.

본격 수사 착수하면서 ‘운신의 폭’ 거의 없어

2 이처럼 검찰이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권 회장은 사실상 ‘식물 회장’이 된 상태다. 가뜰이나 지난해부터 회장직 연임 뜻이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사정까지 받아 권오준 회장은 운신의 폭이 거의 없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 부실계열사로 정리할 것으로 유력시되던 포스코플랜텍에 오히려 2900억원이나 지원하는 결정적인 악수(惡手)를 뒀다. 포스코플랜텍은 지난 2008년 이후 2010년 179억원의 순이익을 냈을 뿐,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무려 279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기업을 정리하기는커녕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한 것. 게다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합병(M&A)한 뒤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플랜텍은 이번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고가 매입 등 M&A 과정에서 미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때문에 권 회장이 정 전 회장의 의혹거리를 감추기 위해 내부 실사(實査)가 필요한 매각보다는 회생 쪽에 무게를 뒀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 수사로 권 회장과 전 최고 경영진간의 직·간접적인 연결이 추가적으로 밝혀질 경우 권 회장의 리더십은 더욱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한 중견간부는 “오너가 없는 포스코의 특성상 정치 바람을 타는 데다, 정부의 사정이 워낙 거세 권오준 회장의 리더십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 있는 중견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권오준 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선임될 때부터 글로벌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CEO를 맡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랬는데, 정부의

사정 바람까지 불어대니 (권 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식물 회장’인 상태라는 얘기다.

CEO로서 도덕성에 치명적 손상 … 물러날까?

3 현재 권오준 회장은 CEO로서의 도덕성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다. 지난해 7월 비자금 건이 처음 확인됐을 때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포스코건설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권오준 회장과 황태현 사장에게 보고했으나 관련 임원 A·B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징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현지 리베이트로만 쓰였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2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런 이유로 권 회장은 비자금 사건을 봉합·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증권정보업체의 한 대표는 “권오준 회장이 비자금 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권 회장이 전임자인 정준양 전 회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의 중견기업 고위 임원도 “권오준 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은 서울사대부고·서울대 선후배여서 보통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해이든 아니든 이 같은 권 회장의 행보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관련 깊은 대우인터내셔널과 포스코플랜텍의 매각에 미온적인데다 비자금 사건을 은폐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권오준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정·재계 일각에서는 권오준 회장 사퇴론이 술술 제기되고 있다. 10대그룹 대관(對官) 담당 임원은 “만에 하나 정준양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의 사정 바람을) 권오준 회장도 비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권 회장도) 비자금 은폐 모양새가 돼 CEO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 사퇴 수순을 밟아야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앞서의 방위산업체 중견간부도 “소나기가 내릴 때는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비자금 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오준 회장이 사퇴해야 포스코 사태가 모두 해결될 것 같다는 분석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모든 것이)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 수준”이라며 “포스코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그동안의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㉞한진/왜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한진그룹이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영문 명칭 ‘Korea’와 태극 도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국책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주력 계열사로 갖고 있다. 그런데도 한진그룹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 관련해 어떤 이유인지 청와대와 파열음을 내고 있어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정·재계 일각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건으로 한진그룹이 정권에 밋보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1 ▶이병기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증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은 ‘창조경제’로 요약된다.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도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 창조경제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처방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한 것.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바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구현할 디딤돌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이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현재 대구(삼성), 광주(현대차), 대전(SK), 충북(LG) 등 총 9개 센터가 출범했고, 이어 인천·서울·강원·충남·전남·울산·제주·세종 등에도 오는 6월까지 오픈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킨 대기업 중에서는 SK와 LG가 콘셉트를 잘 잡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두 곳 칭찬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말 주관 대기업으로 한진그룹을 지정했고, 올해 2월쯤 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래부와 인천시는 물류·관광산업, 글로벌 벤처창업 허브 등을 센터 테마로 해 한진그룹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투자금액을 비롯해 인원 규모, 운영방침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센터 오픈이 지연돼 왔다. 최근에는 한진그룹은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오는 6월에 출범시키는 것을 확정지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월초쯤 ‘실수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 한진그룹의 미온적인 행보에 대해 성토했다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각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비서실장이 이를 지적한 것은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놓고 미래부·인천시와의 협상에서 한진그룹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이병기 실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 인천시와 미래부는 투자금액 등을 줄이려는 한진그룹 때문에 협상이 지연돼 센터 출범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관계자는 “청와대 움직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센터 설립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센터 개소식과 관련해 테마를 무엇으로 할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2 ▶ 굳이 정부와 대립각 세울 필요 없는데 왜?

이러한 한진그룹의 행보에 대해 정·재계의 해석은 분분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실형(징역형)으로 태업(怠業)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한진그룹과 관련된 정부 인·허가 사업권이 없다보니 정부 정책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추측도 있다. 대기업의 한 대관(對官) 담당 임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어 한진그룹은 어느 정도 나랏일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까지 많은 기여를 정부가 바라니까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풀이했다. 이 임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실형이 한진그룹에게 무력감(無力感)을 줘 태업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한진그룹이 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를 못 느끼는 듯 하다”면서도 “내년에 집권 4년차에 들어가면 정권의 힘도 빠지고 (앞으로 한진그룹에 특별한 정부 인·허가) 사업권이 결린 것도 없고 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다보니, 늑장부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도 “한진그룹의 주력사인 대한항공이 독점적·전문적 기업이어서인지 국회 내에서도 뻗뻗하다고 소문 나 있다”며 “정부와도 노선 승인할 때 외에는 평소에도 (정부 시책과 관련된 것에) 그다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의 대관 담당 간부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규모도 많지 않을 텐데, 그 정도 이유로 한진그룹이 미적거리는 거 같지는 않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선 때문에 태업을 한 것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조양호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까지 맡고 있고, 한진그룹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굳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다”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미스터리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1심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 ▶ “정권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정권의 칼날 조심해야”

이병기 실장이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을 모아놓고 한진그룹을 성토했던 의도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앞서의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지역처럼) 2월에 완료돼 내년 초쯤에는 성과가 있어야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에 창조경제 치적을 홍보할 수 있는데, 뒤늦게 6월에 그것도 마지못해 출범하는 모양새여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 든다”며 “이병기 실장이 많이 답답해서 실수비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을 집권 4년차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아젠다인 창

조경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당에서도 당정협의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공을 기울여왔다”면서 “집권 4년차에는 창조경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그것을 갖고 정권 차원에서 홍보할 텐데, 대표적인 재벌인 한진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병기 실장이) 화가 났을 것 같다”고 풀이했다.

청와대의 눈 밖에 난 한진그룹에 대해 정·재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의 대기업 임원은 “어떤 이유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집권 3년차에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정권의 칼날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모든 기업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의 새누리당 관계자도 “기업 문화가 보수적이고 상당히 신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태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며 “(센터 출범 지연이) 만약 오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조완제의 재계 인사이트’라는 컷 아래 각각 전면에 걸쳐 쓴 위 두 건의 기사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한진그룹 및 조양호 회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술했다. 두 기사의 바이라인에 ‘경제에디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기사를 작성한 조완제는 스포츠조선의 경제 분야 취재 책임자로 보인다.

「[비자금의 덫]/결국 .../사퇴하나?」 기사는 포스코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 포스코 전·현직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비자금의 덫]/결국 .../사퇴하나?」로 달고 바로 아래 작은 제목 「(↓)검찰 칼날 앞에 선 포스코 권오준 회장」을 배치했다. 그 아래 권오준 회장 사진을 게재하고 사진 아래 작은 제목에는 ‘리더십 잃고 식물회장 상태’ ‘기업 관계자 “권 회장 사퇴해야 포스코 사태 해결”」 표현을 넣었

다. 제목의 전체적인 맥락은 권오준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며, 권 회장은 이미 식물회장 상태가 되었고, 포스코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는 서두에서 밑줄까지 쳐서 『권 회장은 청와대나 사정당국으로부터 지난해 7월 확인된 비자금 건을 그동안 ‘은폐’해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재계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권 회장이 사퇴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권오준 회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기사는 마지막 단락에서도 『정·재계 일각에서는 권오준 회장 사퇴론이 술술 제기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정·재계 일각’의 의견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10대그룹 대관 담당 임원’과 ‘방위산업체의 한 중견간부’ 등 익명 처리한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이 전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언은 ‘만에 하나 정준양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비자금 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등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권오준 회장의 ‘사퇴’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 수사가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 진행 중이지만, 현직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고 수사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들어 권 회장의 사퇴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술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인용된 두 사람의 직함과 발언 내용으로 미뤄 이들을 ‘정·재계 일각’으로 객관화시키고 정·재계의 대표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특히 ‘방위산업체의 한 중견간부’의 발언을 통해 기술한 ‘정치권의 분석’을 ‘정계의 의견’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기사는 또 검찰의 수사 착수로 『권 회장은 사실상 ‘식물 회장’이 된 상태』이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사정까지 받아 권오준 회장은 운신의 폭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며 권 회장에 대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기술을 하고 있다. 권 회장이나 포스코측으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기사에 반영된 반론은 ‘포스코 관계자’의 『(모든 것이)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 수

준』『포스코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그동안의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게 할 것』 발언 뿐이다. 이는 기사의 핵심 내용인 ‘권오준 회장 사퇴 여부’에 대한 반론이라 보기 어렵다.

「㉓ 한진/왜 … [정권]에 밍보였나」 기사는 한진그룹이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서두의 밑줄 친 부분에서 『한진그룹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 관련해 어떤 이유인지 청와대와 과열음을 내고 있어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정·재계 일각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건으로 한진그룹이 정권에 밍보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의 근거로 지난 4월초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한진그룹의 미온적인 행보에 대해 성토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기사는 또 『그동안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놓고 미래부·인천시와의 협상에서 한진그룹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이병기 실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인천시와 미래부의 입장은 『투자금액 등을 줄이려는 한진그룹 때문에 협상이 지연돼 센터 출범이 늦어졌다』는 것으로 바로 뒷 문장에 기술돼 있다. 따라서 센터 출범 지연은 ‘투자금액에 관한 이견’에서 비롯됐을 뿐 한진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이병기 비서실장의 발언이 한진그룹을 ‘성토’하는 것이었다 해도 이는 제목에서 언급한대로 한진을 미워해서라고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러한 한진그룹의 행보에 대해 정·재계의 해석은 분분하다』며 기업과 정치권 인물의 한진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인용한 뒤 『청와대의 눈 밖에 난 한진그룹에 대해 정·재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진그룹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를 ‘성토’했으며, 이 때문에 한진그룹은 ‘청와대의 눈 밖에’ 났다고 단정한 것이다.

편집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큰 제목을 「㉔ 한진/왜 … [정권]에 밍보였나?」라고 붙였다. 한진이 현 정권에 밍보였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제목 아래쪽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진 옆에 ‘◀ 조양호 회장 [미스터리!]/:청와대와 파열음, 왜?/①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으로 태업하나?/②관련 사업권 없어 정부 정책에 소극적?/③외부에 노출 안 된 ‘비밀’ 속사정 있나?’표현을 넣었다. 조 회장이 파열음이 날 정도로 청와대와 사이가 틀어졌고, 그 원인을 대략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기사는 이 세 가지 원인의 근거로 ‘대기업의 한 대관(對官) 담당 임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정치권의 한 관계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 인용된 발언 내용은 건전한 상식인의 잣대로 볼 때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스포츠조선의 경제에디터가 작성한 위 기사와 제목은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기업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적 인식, 예단·편견에 따라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경향신문 2015년 5월 20일자 14면 「한전부지 ‘개발 대가’ 떼쓰는 강남구」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잇따른 무리수로 비난을 사고 있다.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이익으로 내기로 한 공공기여금의 사용처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차그룹에 대형 공연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강남구는 최근 한전부지 개발 협상단에 참여한 현대차그룹 간부들에게 “K팝(K-POP) 전용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 서울시와의 협상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관계자가 양재동 사옥을 찾아오거나 공문 등을 보내 직간접적으로 공연장 건립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영동대로 지하개발 추진 등 교통개선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강남구의 이런 요구는 근거가 없는데다 이미 인근 코엑스에 K팝 전용 복합문화공간이 지난 1월에 문을 연 상태로 이기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달 6일엔 직원과 관내 주민 등 40여명과 함께 서울시청사 로비 등을 1시간여 동안 ‘점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활용지역

을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 등 송파구 잠실동까지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마련한 데 따른 항의였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신 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에 쓰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해왔다. 강남구는 이 주장을 관찰시키기 위해 구청 공무원과 관내 어린이집 교사 등을 동원해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서울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잇따른 무리수로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현대차그룹이 개발이익으로 내기로 한 공공기여금의 규모와 사용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남구가 현대차그룹에 대해 대형 공연장 건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있다. 강남구가 요구한 것은 K팝(POP) 전용 대형 공연장이며, 기사는 이와 관련해 인근 코엑스에 K팝 전용 복합문화공간이 지난 1월에 문을 연 상태임을 들어 『이기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또 협상단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강남구가 영동대로 지하개발 추진 등 교통개선 지원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맥락상 강남구의 ‘잇따른 무리수’는 공연장 건립과 교통개선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사에는 강남구의 요구가 왜 무리수인지를 뒷받침하는 추가 설명은 없다. 또한 강남구의 무리수를 누가 어떻게 비난하는지, 강남구의 요청이 이기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지적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 제시나 추가 설명이 없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이 제공할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인근 잠실운동장과의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강남구는 이에 반대하는 등 서로 다른 정책적 판단과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간의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도 기사는 강남구의 요구를 ‘무리수’라고 표현하고, 편집자는 마치 강남구가 부당한 일을 해 줄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처럼 큰 제목을 「한전부지 ‘개발 대가’ 떠쓰는 강남구」로 달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49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5년 5월 29일자 1면 「역사 수레바퀴 거꾸로 돌린 현재」·21면 「“해고자 노조가입 제한은 시대착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역사 수레바퀴 ...〉=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목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있다.

현재는 28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21면

현재는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직교원이나 구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결정은 교원 지위를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그 무엇으로 정하고, 기

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법관은 “재직 중인 교원만으로 노조를 만드는 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노조원을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면 사용자인 교육부가 임의로 노조 조합원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게 돼 노조의 자주성 침해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의한 해직교사의 양산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돼 온 게 그간의 역사다.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이 조항은) 행정적 수단과 결합해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989년 전교조 출범후 교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다가, 1996년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이 점이 문제가 돼 논의가 시작됐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며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후인 2013년, 15년간이나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 온 6만여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단지 9명의 해직조합원을 두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김 재판관은 “행정관청은 단지 그 조직에 소수의 해직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재판관은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 관계에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바, 헌법의 어떤 근거로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세계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도 실업자, 해고자를 포함한 조합원 범위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해고자 노조가입 …”〉=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현재는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문제점을 시사했다. 결국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법원의 판결로 넘겨졌다.

◆“사립교원 노동3권 제한은 위헌”=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은 한 것은 교원의 특수성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결과다.

재판부는 “교원은 보수, 연수, 신분보장 등 모든 면에서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가 지게 되므로 일반근로자와 다른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해야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법관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정한) 헌법 33조는 법률유보가 없어 헌법 조항 자체가 노동3권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갖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그런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3항은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도 소수의견에서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은 제한할 수 없고, (세계적으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 제87호, 제98호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 받아들여야”=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은 오래된 문제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설립이후 1996년 우리나라가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문제가 됐다. 당시 OECD 회원국

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 노동기준을 동떨어진 후진국이라며 OECD 가입에 반대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명의로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보는 것(모니터링)을 조건으로 OECD 가입이 허용됐다.

이후 우리나라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1999년 1월 교원노조법을 만들어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또 문제가 됐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도 초기 업단위 노조에는 부여하는 것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고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다. 그후 2013년에도 재차 입법을 시도했으나 역시 국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법원도 국제기준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 2004년 대법원은 2001년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여성노조와 관련된 판결에서 근로자의 개념에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결했다.

법제화는 되지 않았으나, 이후 초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에 해고자나 실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시 됐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빌미로 이 조항이 악용되기 시작했다. 김이수 재판관의 지적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에 의해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통보를 당했다.

◆ 행정부 노동기본권 침해에 면죄부= 현재가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지 다투는 소송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이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심리는 중단됐다.

서울고법 행정 7부(재판장 황병하)는 중단 됐던 재판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한다는 방침이라 심리는 곧 재개될 것이다.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해직교사가 9명뿐인 만큼, 노조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지, 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정부의 손을 들어준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게 됐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관계자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해직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헌재가 공언한 셈이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법률적인 정당성이 뒷받침된 것이고, 이에 따라 사실상 행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1면과 21면에 게재했다.

1면 기사는 헌재 결정에 관한 해설성 스트레이트 기사다. 기사는 헌재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 전직 대법관’의 발언과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1989년 출범해 1999년 합법노조가 되고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인용부호도 없이 「역사 수레바퀴 거꾸로 돌린 헌재」로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헌재의 결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잘못된 것이며, 이 때문에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퇴보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사에는 헌재의 결정이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거나 거꾸로 돌린 것이라는 내용이 없다. ‘역사’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한 해직교사의 양산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돼 온 게 그간의 역사다』라는 기술이 있긴 하지만, 헌재의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에 인용된 ‘한 전직 대법관’의 발언과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헌재 판결이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현재 결정이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전교조가 28일 내놓은 기자회견문에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고 비판하는 표현이 있고, 29일자 조간신문 등에 그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21면 해설 기사는 현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교원의 특수성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전교조 설립과 합법화 과정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추진 과정을 기술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를 다투는 2심 재판을 전망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해고자 노조가입 제한은 시대착오”」라고 인용부호를 붙여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현재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의 발언이 기사에 인용돼 있고, 여기서 제목을 뽑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없다.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 『현재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은 한 것은 교원의 특수성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결과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재판부의 판결 요지,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법관’의 발언,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인용부호를 붙여 전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제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은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문화일보 2015년 5월 26일자 5면 「헛갈리는 박원순 … 서울시장이냐 대선주자인가」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내 통합 기구로 대선주자 연합체인 ‘희망 스크럼’ 추진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참여 인사로 거론되고 있지만 참여 인사 기준은 물론 기구의 권한·역할 등이 모호해 일부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을 2년이나 앞두고 당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표는 26일 오전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참석 후 기자와 만나 희망 스크럼에 대해 “당내에서는 대선 주자로 불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별도의 새로운 룰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그 시작을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함께 모여서 조절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안 전 대표도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전날인 25일 “지금 혁신위도 최고위도 있으니 ‘희망 스크럼’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그런 게 먼저 정해진 다음 그걸 기초로 해서 요청하라는 뜻”이라며 문 대표의 희망 스크럼 제안에 대해 일단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두 분이 회

동했을 때 희망 스크럼 이야기도 없었고 안 지사나 김 전 의원 등도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며 참여를 바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만 동의의 얻고 구체적인 것은 나한테 맡겨 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의원 측 역시 “앞서 원탁회의나 혁신위원회 구성 때처럼 내용은 없고 제안만 있다”면서 “문 대표가 직접 제안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만 문 대표와 자신을 ‘순망치한’의 관계로까지 표현하며 “서울시장으로서 여러 한계가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열심히 돕겠다”고 밝히면서 긍정의 ‘시그널’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은 당 중심으로 하고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들은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희망 스크럼 추진은) 문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어떤 위기감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조기 대선 행보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내 통합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선주자 연합체인 ‘희망 스크럼’의 성격과 역할, 이에 대한 당 안팎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참여 인사로 거론되고 있지만 참여 인사 기준은 물론 기구의 권한·역할 등이 모호해 일부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박 시장만 문 대표와 자신을 ‘순망치한’의 관계로까지 표현하며 “서울시장으로서 여러 한계가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열심히 돕겠다”고 밝히면서 긍정의 ‘시그널’을 보낸 상태』라고 기술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 「헛갈리는 박원순 … 서울시장인가 대선주자인가」로 달았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인지 대선주자인지 헛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 제목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박시장이 대선주자인지 서울시장인지 헷갈리게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기사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을 2년이나 앞두고 당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기술이 있으나 구체적인 발언 주체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러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볼 이유도 제시하지 않아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56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주문

中都日報 2015년 5월 8일자 1면 「뻔히 보이는 심사위원 … 로비설 분분/홍성 하수도용역 입찰 논란/친분으로 사전 접촉 가능성 커/업계도 대학교수 5명 손 꼽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속보〉= 최근 홍성군 하수도 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이 논란인 가운데, 평가위원회 구성에도 심각한 허점이 보이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업체와 관가에서는 심사위원이 누가 될 지 뻔히 손에 꼽히는 실정으로, 로비 등 사전 접촉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군은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입찰 공고(2015-511)와 함께 지역내(대전·세종·충남) 20개 대학에만 심사위원 참여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각 대학 당 2명씩 최대 40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격기준과 참여의지 등을 감안할 때 홍성군에서 밝힌 교수 위원 정원 5명의 3배수인 15명의 예비명부 확보 여부도 미지수다.

더욱이 지역내 일부 교수들은 각종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위원 참여를 두고 경계하는 눈치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2명의 교수만 참여할 뜻이 있음을 본지가 당사자와 전화통화에서 확인했다.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겠다고 이미 홍성군이 밝혔다. 업계에서는 참여가 유력한 교수 5명 정도를 손에 꼽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수들의 명단도 알음알음 전해지고 있다.

이는 평소 업계 및 공무원과 교수간 친분관계 유지는 물론 인맥관리나 로비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때문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입찰에서 뻔히 누가될 지 알 수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까지 완료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및 업체 선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군이 업계의 반발과 행정기관 등 관가의 수정 권고와 지적에도 이례적인 공동도급 불허 방침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란까지 일자 이번 입찰과정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역내 관련학과 교수는 “공동도급을 불허한 것은 단독입찰이 불가능한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 맞다”며 “왜 군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했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평가위원회 구성에 지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대로 구성 및 평가가 진행되는 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측은 “타 지자체처럼 공동도급만 허용해도 소규모를 포함한 경쟁업체 확보로 각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군에서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이게 바로 의혹의 중심”이라며 “이 참에 수사기관이

나서 (의혹을)속속들이 밝혀 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 충남 홍성군 하수도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문제점을 다룬 속보 기사다.

中都日報는 이보다 하루 전인 5월 7일자 2면에 게재한 첫 기사에서는 홍성군이 입찰에서 ‘공동 도급’ 방식을 배제함에 따라 지역내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차단하고, 특정 A업체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 속보 기사는 입찰 참여업체 평가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홍성군은 평가위원회를 공무원 2명과 교수 5명 등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을 위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20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대학별로 2명까지 지원을 받아 교수 심사위원 정원의 3배인 15명을 예비 명부로 확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일부 교수들은 각종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위원 참여를 두고 경계하는 눈치』라고 전한 뒤 『업계에서는 참여가 유력한 교수 5명 정도를 손에 꼽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수들의 명단도 알음알음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이는 평소 업계 및 공무원과 교수간 친분관계 유지는 물론 인맥관리나 로비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업계에 나도는 소문이고 추정, 추측일 뿐, 기사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위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도 교수들의 지원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따라서 누가 예비명부에 들어가고 이들 가운데 누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지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는 단계였다.

설사 예상과 비슷한 면면으로 평가위원들이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미 로비를 받았거나 로비의 대상이 될 것처럼 위 기사에 기술한 것은 도를 넘는 위험한 억측이라고 봐야 한다. 이권을 둘러싼 로비는 곧바로 법적 처벌로 이

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뻔히 보이는 심사위원 … 로비설 부분」이라고 달았다. 기사만 놓고 보면 심사위원은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고, 이들을 상대로 로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추측이나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놓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객관적 사실에 가까운 것인 양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1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주문

세계일보 2015년 8월 18일자 13면 「대세론 꺾인 자리 ‘극우·극좌 후보’ 돌풍」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초반 흐름이 역동적이다. 17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 22명(민주당 5명, 공화당 17명)이 만들어내는 활력을 상징할 키워드도 여럿이다.

먼저 ‘흔들리는 대세론’이다. 최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켄 부시 전 플로리다주지사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클린턴 전 장관은 ‘버

락 오바마 1기' 이후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후보로 입지를 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내 후보 지명전은 몸 풀 듯 쉽게 치를 것으로 내다본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국무장관 재직 시절 비밀로 분류된 내용을 개인 이메일에 보관했다는 '이메일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변했다. 그 여파로 신뢰도와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

부시 전 주지사의 하락세는 더 심하다.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공화당 후보들 간의 여론조사에서도 곧잘 5강에도 들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선이 클린턴 가문과 부시 가문의 재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 이들이 민망해할 정도다.

대세론이 꺾인 자리를 '극우와 극좌 후보의 쌍끌이 행보'가 대신하고 있다. 공화당 경선주자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당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정작 본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많지만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하는' 후보로 각인되고 있다.

트럼프의 반대쪽에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있다. '북유럽형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원은 최근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7%포인트 차로 누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극좌와 극우 후보에 대한 환호 이면에는 '워싱턴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CNN방송은 정치 불신 탓에 트럼프의 막말이 통하고 샌더스 의원의 급진정책이 유권자를 사로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 신인이 기성 정치인들보다 주목받는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칼리 피오리나 전 홀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 의사 출신 벤 카슨 등이 부시 전 주지사보다 높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정치분석가는 많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잠재적 후보군'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활약에다가 상원의원, 주지사, 의사, 최고경영자로 역량을 보인 후보들의 경쟁으로 공화당이 주목받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앨 고어 전 부통령에게 출마를 종용하는 인사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출마 여부를 전망하는 기사도 부쩍 늘었다.

그래도 대선 초반전은 ‘트럼프와 힐러리’가 뚜렷하게 대비된 과정으로 평가된다. 확실한 대선주자인 클린턴에 맞서기 위해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여론 주목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초반 흐름을 전하고 있다. 유력 주자로 꼽혔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켈리 안드레아스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하락세가 뚜렷하며, 대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무소속으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는 이런 흐름에 대해 『대세론이 꺾인 자리를 ‘극우와 극좌 후보의 쌍끌이 행보’가 대신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극우 후보’이며, 버니 샌더스는 ‘극좌 후보’라는 것이다.

‘극우’는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극좌는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두 사람이 그러한 성향을 가졌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성향에 대해 기술한 내용은 『부동산 재벌』이며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하는’ 후보로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다.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북유럽형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으며, 『급진정책이 유권자를 사로잡고 있다고 진단했다』는 CNN방송의 ‘진단’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 재벌이 왜 극우이며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하면 왜 극우로 분류되는지, 북유럽형 사회주의자가 왜 극좌이며 샌더스의 급진정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추가 설명은 없다.

위 기사는 미 대선의 유력 후보들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극우와 극좌라는 이념을 앞세워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

퇴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2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주문

스포츠경향 2015년 8월 7·8일자 1면 「“미쳤나봐요, 미국이”/‘골프여제’ 박인비, 그랜드슬램 논란에 시원한 돌직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선수들이었다면 그랜드슬램을 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았을까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국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4일 귀국한 ‘골프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랜드슬램’ 논란에 입을 열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메이저대회 4개를 휩쓴 박인비의 위업을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고 선언한 반면, AP통신 등 일부 외신들은 나머지 1개 대회 마저 우승해야 진짜 그랜드슬램이라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인비는 7일부터 제주 오라CC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반기 첫 대회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출전을 하루 앞두고 대회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질문을 받긴 뒤 “조건은 모든 선수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 메이저대회는 4개였고, 그걸 모두 우승했다. 이게 그랜드슬램이 아니고, 5개 모두 우승해야 한다면 전에 4개 메이저 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들은 무엇인가, 그럼 그 선수들도 다시 나와 예비양

챔피언십에서 우승해야 하는건가라는 생각도 했다.”

박인비는 이어 “만약 폴라 크리머, 미셸 위, 스테이시 루이스 등이 이렇게 했다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섭섭한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미국 선수들의 ‘질투심’도 이야기했다. 박인비의 우승, 고진영(20·넵스)의 선전을 통해 한국여자골프가 보여준 강한 면모를 전하면서 미국 언론들은 “한국 선수들은 하루 10시간씩 연습한다. 그들은 마치 스윙머신과도 같다”고 한 크리스티 커(미국)의 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박인비는 “스윙머신이란 비유는 좋은 표현이 아니다. 질투심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경쟁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해서 이겨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남은 메이저대회 예비양 챔피언십 우승 의욕을 묻는 질문에 박인비는 “에비앙 트로피는 내 목표가 아니다. 사실 이걸 제 입으로 처음 말씀드리는데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과 LPGA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픈게 목표다. 내가 죽고나서도 내이름이 골프 치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 그게 골프를 시작한 이유였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커리어 그랜드슬램(4개 메이저대회 우승)을 달성하고 국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귀국한 ‘골프여제’ 박인비의 기자회견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박인비는 회견에서 1개 대회를 더 우승해야 진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이라는 일부 외신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러한 주장을 퍼는 외신들이) 미국선수들이었다면 그랜드슬램을 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했다. 박인비는 또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 메이저대회는 4개였고, 그걸 모두 우승했다.”면서 “이게 그랜드슬램이 아니고, 5개 모두 우승해야 한다면 전에 4개 메이저 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들은 무엇인

가.”라고 반문했다.

그런데는 편집자는 큰 제목을 「“미쳤나봐요, 미국이”/‘골프여제’ 박인비, 그랜드슬램 논란에 시원한 돌직구」라고 달았다. “미쳤나봐요, 미국이”라는 표현은 본문에도 없는 내용인데 마치 박인비가 발언한 것처럼 묘사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기사 본문을 과장·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24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5년 8월 20일자 A3면 「“고급화한다고 수익들여 명품배 만들었는데 … 이런 뒤통수가”/농업선진화 역행하는 김영란법」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년 전, 1억5000만원을 투자해 곳감 건조 시설을 도입했어유. 대형마트에 치이고 불경기로 생존 위기에 놓이자 어렵게 결정했는데 … 김영란법까지 시행된다니 앞날이 끔직하네유.”

19일 충북 영동에서 만난 원점희 영동감협동조합 대표(66)는 연방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로 42년째 꽃감을 팔고 있는 원 대표는 2년 전 내린 결정이 후회스럽기까지 하다. 꽃감을 만드는 데 자연건조를 하면 40~50일이 소요된다. 시설 건조기를 이용하면 3~4일로 단축할 수 있다기에 조합원들과 함께 쓸 건조기를 들여왔다. 하지만 설과 추석에 연간 수요의 80~90%가 몰리는 꽃감은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은 내리막길이다. 이런 상황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까지 시행된다니 벼랑 끝 밀어내기도 이런 밀어내기가 있을까 싶다고 한다. 꽃감 농사가 어려워지며 지난 2~3년 새 충북 영동, 경북 상주 일대 농부 몇 명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성준 영동군꽃감생산자협회 회장(50)은 “농식품산업을 6차 산업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실정을 모르는 ‘코끼리 뒷다리 잡기’식 정책”이라며 “농식품업이 3차 산업에도 못 갔는데 무슨 6차 산업이냐”고 되물었다. 박 회장은 “정부 지원 정책이 근본적 대책이 못 되고 가려운 곳만 긁어주더니 김영란법으로 농식품산업 자체가 붕괴될 판”이라고 말했다.

꽃감은 빙산의 일각이다. 한우, 사과, 배, 굴비 산업 등이 줄줄이 기로에 섰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안성 지역 최고 명품 배 농가로 꼽히는 오세남 씨(60) 과수원에는 다음달 수확을 앞둔 어린 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오씨 표정은 망연자실했다. 오씨 과수원은 1990년대 초 안성 지역 배 농가 1000여 곳 가운데서도 친환경·저농약 재배 농가 1호 정부 인증을 받을 만큼 일찍 품질 개발에 눈을 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 70%가 최고 등급인 특등급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품종개량과 시설 투자에 땀을 쏟았다.

톱밥에 영양제를 섞은 완전 숙성 퇴비를 쓰고 양질의 배가 열리는 2~4년 된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일이 가지치기를 해 명품 배만 생산할 수 있도록 품을 들였다.

이렇게 생산한 배는 지난해에는 15kg 기준 7만원(도매가)으로 공급했는데 올해는 소비가 급감하면서 훨씬 낮은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

2005년에는 1억7000만원을 들여 당도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고가 장비(당도비과괴선별기)까지 들여왔지만 배값 하락 등으로 아픈 경험도 겪었다.

오씨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반평생 일군 과수원을 정리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잇단 농산물 개방에 살아남을 길은 고품질 배밖에 없다고 해서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품질 배는 판로가 통째로 막혀버린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 38년간 구슬땀을 흘려 일궈놓은 품질 개선 노력이 허무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한우 농가는 위기감이 더 심하다. 웬만한 선물세트 가격이 10만원을 훌쩍 넘어 농축산물 중에서도 김영란법 제재 대상 ‘최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충북 옥천에서 37년 동안 한우를 길러온 김남용 씨(59)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그냥 폭탄이었다면 김영란법은 핵폭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갈비나 등심·안심 등 가격이 비싼 주요 부위들로 모양새가 나게 선물세트를 만들면 가격이 20만~30만원은 되는데 이는 죄다 김영란법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우업계가 1990년대 중반 ‘등급제’ 정착 이후 수익성을 위해 고급 제품 위주로 소를 기르고 있다는 점도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한우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과 고기 양(육용량)이다.

예를 들어 1등급 소라면 가격이 1kg당 2만원 선이지만 ‘1++등급’은 5만원이다. 한우업계에서는 5단계(1++·1+·1·2·3등급) 육질 등급 가운데 1등급 이상을 생산해야 수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등급을 높이려면 DNA가 좋은 송아지를 사야 하고 고기 양을 늘리려면 좋은 사료를 먹여야 한다. 등급이 좋은 ‘귀족 송아지’는 두당 400만원으로 일반 송아지(약 300만원)나 질 나쁜 송아지(약 180만원)에 비해 훨씬 비싸게 거래된다. 고급화를 위해 투자한다면 마리당 100만~220만원씩을 더 써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질에 따른 가격 편차는 크지 않지만 소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사료 가격도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좋은 고기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만큼 가격이 높아져 김영란법에 걸리기 쉽게 되고, 판매가 곤란해지는 딜레마에 봉착하는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며 법 시행에 불만과 우려를 표명한 농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그동안 농가에서 시설투자로 품질을 고급화했는데 가격이 높아져 김영란법에 걸리기 쉽게 되고 판매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농민 또는 농업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김영란법으로 농식품 산업 자체가 붕괴될 판』 『자유무역협정(FTA)이 그냥 폭탄이었다면 김영란법은 핵폭탄』이라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또 『꽃감은 빙산의 일각이다. 한우, 사과, 배, 굴비 산업 등이 줄줄이 기로에 섰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고급화한다고 수익들여 명품배 만들었는데 … 이런 뒤통수가”」로, 작은 제목은 「농업선진화 역행하는 김영란법」으로 각각 달았다. 김영란법의 내용이 정부의 농업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명품배를 만들기 위해 수익을 투자한 농민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김영란법이 명품 배를 만든 농가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는 내용이 없다. 문맥 상 명품 배를 개발한 농민의 발언을 인용해 큰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농민의 발언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품질 배는 판로가 통째로 막혀버린다”고 하소연하고 “지난 38년간 구슬땀을 흘려 일귀농은 품질 개선 노력이 허무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는 것이 전부다. 판로가 통째로 막혀버린다는 하소연이나 품질 개선 노력이 허무하다는 토로는 뒤통수를 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도 편집자가 본 뜻을 왜곡해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사는 김영란법이 농업선진화에 왜 역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의 어떤 조항이 농업선진화에 역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물론, 농업선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김영란법과 어떤 조항에서 어떻게 충돌해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

다. 콧감 농사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사례 중 『박근혜정부가 농식품산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도 믿었다』는 기술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김영란법이 농업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26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문

머니투데이 2015년 8월 25일자 18면 「연인 구하려 ... 거짓자백하고 죽어가 는 한 트랜스젠더」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 ‘여성’이 법정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랑 때문에 시작한 일에 목숨까지 걸 게 될 줄은 몰랐다. 사정기관의 방치 속에 그는 구치소에서 에이즈와 홀로 싸워야 한다. 시간마저 오래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 같다.

2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인 A씨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 출석한 A씨는 재판부에 “몸에 수포가 올라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치소로부터 약조차 제때 받지 못했다고 탄원했다. 수포가 허까지 번지면 음식을 씹을 수조차 없게 된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휘감고 있다.

A씨는 2007년 ‘사람면역부전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체포 직전인 지난 3월 25일 병원에서 “HIV 농도가 매우 높은 반면 약물 순응도는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년째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3월 28일 구치소에 수감된 후로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A씨를 수용 중인 성동구치소가 약을 제대로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 18일과 19일에는 약이 A씨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성동구치소는 “18일은 담당의가 휴진이었고, 19일은 재판일이라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일부터 약을 처방해 A씨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증 환자를 관리해야 할 교정시설의 해명치고는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게다가 A씨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뿐 최근 이틀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약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법정에서 선 것은 전 연인 B씨 때문이다. 2013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연인 관계가 됐다. A씨는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2012년 태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HIV 보균자라는 사실까지 털어냈다. B씨는 처음에는 욕설을 퍼붓고 주먹까지 휘둘렀지만 끝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에게 유일한 기댈 곳이었다.

B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이들의 사랑에 균열이 발생했다. 수감 중 B씨는 ‘A씨도 작년 5월 3회에 걸쳐 나와 함께 필로폰을 맞았다’고 검찰에 제보했다. 두 사람은 대질신문에 마주앉게 됐고, A씨는 “나도 1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자백 3개월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함께 마약을 하자”는 B씨의 권유를 수차례 거절했다는 것. 투약을 거부하자 B씨로부터 가혹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까스로 도망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론요지서에서 “내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해야 내 형이 줄어든다”는 애인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약물 검사를 마친 상태이지만 검찰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A씨가 수감된 뒤 B씨는 실제로 형이 감경돼 출소했다. 그러나 최근 3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A씨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입증할 핵심 증인이지만, 수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음 공판에 출석할지도 미지수다. A씨의 지인은 “증인도 없이 재판만 길어지고, 구치소에서 약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A씨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 동안 A씨는 생명의 위협은 물론 스스로 선택한 ‘여성성(性)’조차 지켜내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성전환 수술을 통해 외모는 완벽한 여성이지만 지속적으로 여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월 1회 호르몬 주사를 맞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치소 내에선 불가능하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그가 인생을 걸고 선택한 성 정체성마저 벼랑 끝에 내몰렸다. 트랜스젠더, 에이즈 환자, 마약 전력까지. 사회의 ‘따뜻한 시선’ 따위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삶에 대한 ‘끈’을 부여잡고 있다. 내달 초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의 판단, 연인 B씨의 출석 여부에 소수자의 ‘결정판’ A씨의 일생이 달려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 트랜스젠더 A씨의 사연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리드에서 『한 ‘여성’이 법정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랑 때문에 시작한 일에 목숨까지 걸게 될 줄은 몰랐다. 사정기관의 방치 속에 그는 구치소에서 에이즈와 홀로 싸워야 한다.』고 기술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 애인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애인은 “함께 필로폰을 맞았다”는 그의 진술로 형이 감경돼 출소했다. 그러나 그의 거짓자백을 입증해줄 애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기사는 이밖에 에이즈로 최악에 이른 그의 건강 상태, ‘사정기관의 방치’, ‘남성동에 수감’ 등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다. 그의 주장이 진실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그의 일방적 주장만을 싣고 있다.

게다가 『사랑 때문에 시작한 일』라고 기술, 그의 주장에 인간적인 진정성까지 보탰다.

더 나아가 편집자는 큰 제목을 「연인 구하러 … 거짓자백하고 죽어가는 한 트랜스젠더」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연인을 구하기 위해 거짓자백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옮겨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57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24일자 10면 「“다 없애버리겠다 일렬로 서”/권총 겨눈 박경위 눈에 살기가 …」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런 ××놈들 나 빼고 맛있는 거 먹냐. 다 없애야겠다. 일렬로 서.”

서울 구과발 검문소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의경들을 향해 박 경위(54)가 흥분해 소리를 질렀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경위는 자신의 권총집에서 권총을 빼들고 방아쇠에 걸지 손가락을 넣었다.

처음엔 놀라서 멀뚱히 쳐다보던 박 상경(21)등 의경 3명은, 박 경위가 총구

를 좌우로 겨누고 다가오자 공포감에 휩싸였다.

“살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박 상경과 동료 의경들은 소리치며 생활관 내에서 각기 몸을 피했다.

동료 의경 둘은 관물대 쪽으로, 박 상경은 침대 쪽으로 몸을 피했다.

의경들은 ‘설마 진짜 쏘지는 않겠지’라고 믿고 싶었다. 박 경위가 이전에도 의경들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몇번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박 경위는 흥분해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 경위는 침대 쪽으로 가 몸을 제대로 숨기지 못한 박 상경 쪽으로 다가가 권총 방아쇠의 안전 장치를 제거했다.

이를 본 박 상경은 “진짜 뺏다”라며 소리쳤다.

몸을 숨기느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던 나머지 두 의경은 ‘안전 장치를 제거했다’는 동료의 외침을 듣고서도 공포감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박 상경에게 손이 닿을 정도로 다가간 박 경위는 38구경 권총을 잡은 오른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왼손으로 받치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발사된 총알은 박 상경의 왼쪽 가슴을 관통했고,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 스물한살 청년은 아무 죄 없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월 25일 오후 발생한 이 충격적 사건 이후, 경찰은 ‘장난’치다 일어난 ‘오발 사고’라고 발표했다. 가해자인 박 경위의 진술이 그 토대였다.

“설마 진짜 쏠 줄은 몰랐다”는 의경들의 진술은, 마치 당시 상황이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포장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경찰은 박 경위를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인 뒤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박 경위를 기소했다.

여러 정황상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 경위는 따돌림을 당하면서 의경들에 대한 의도적 공격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 경위가 자신만 빼고 따로 모여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했고, 의경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박 경위는 우울증과 중증불안증을 앓고 있었다.

8년 동안 약을 복용해 왔지만 박 상경을 비롯한 의경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검찰은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한 뒤 “장난이 아니었다”고 결론 냈고, 이제는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서울 구과발 검문소 생활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에 대해 검찰이 경찰수사와 달리 이 사건 피의자 박모 경위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자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 「“다 없애버리겠다 일렬로 서”/권총 겨누 박경위 눈에 살기가 …」로 뽑았다. 이처럼 제목은 ‘살인 의도’를 가진 눈빛으로 묘사를 했지만 기사본문엔 『이날 박 경위는 흥분해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편집자는 또 작은 제목을 「의경들에게 총구 겨누고 다가와/몸 숨기지 못한 박상경에 ‘탕탕」으로 달았다. 마치 박 경위가 총을 잇따라 ‘탕탕’ 연발한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박 경위는 경찰에서 “탄창의 첫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다.

편집자는 검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한 점에 주목해 이 같은 제목을 단정적으로 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박 경위의 행동이 과실로 볼 소지도 있다고 보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상태다.

따라서 위 제목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31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주문

서울경제 2015년 11월 27일자 A8면 「김기식의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몽니」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올해 말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기식(사진) 새정연 의원이 몽니를 부리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기촉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은 완전히 중단되고 정부가 내년으로 예고한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 구조조정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1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기촉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27일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을 뿐 법안심사는 해보지도 못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27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일정상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처

리가 힘들어진다.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지만 현재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사실상 기촉법은 올해 말로 일몰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을 연장하기 위해 여당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기촉법 개정안을 통해 한시법 형태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기촉법과 같은 사례가 외국에 없는데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남기업 사태처럼 당국이 개입해 채권은행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가 미비해서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며 “통합도산법은 법원에서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통합도산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은행뿐만 아니라 비채권기관까지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해 법안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이날 국회를 찾았으나 법안소위가 성과 없이 끝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기촉법이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면서 내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으려 했던 정부의 입장도 대폭 수정돼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 등도 우려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이 거래소 상장차익에 대해 사회환원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본점 설치 지역을 부산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여당 의원들조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정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반대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한계기업 구조 조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김 의원에게 대해 『몽니를 부리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몽니’의 국어사전 뜻풀이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김 의원이 기촉법 개정안에 반대해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에 따르면 여당의 개정안은 한시법 형태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내용으로 볼 때 김 의원은 분명한 반대 논리를 개진하고 있으며,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반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기촉법 개정안을 논의하기에는 국회 일정이 촉박하고, 김 의원이 주장하는 통합도산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연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들어 김 의원이 ‘몽니’를 부린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경향신문 2015년 11월 4일자 3면 「황교안 “고교 99.9% 편향 교과서” … 거짓말만 늘어놓은 총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부의 총대는 황교안 총리가 뒀다. 황 총리는 200자 원고지 26쪽 분량의 원고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해 국정화를 시대적 사명이라고 매김했지만, 아전인수식 사실 호도와 왜곡, 군색한 논리로 가뜩이나 험해진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집필진과 반대 시민들에게 붉은 덩치를 하고, 내내 “일부가 …”로 편가르기하면서 ‘공안검사’가 외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공허했다. 불량 딱지를 붙인 현행 교과서를 현장에 배포한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 정작 역사학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총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었다. 황 총리는 얼마 전 “건국 시기에 대한 이견을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밝힌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에 화답하듯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건국절’에 무게를 실어 스스로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섰다.

■ 무리한 아전인수 해석과 호도

황 총리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읽어나갔다. ‘오른쪽 화면 응시’ 등의 지문에 맞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꼼꼼하게 준비한 회견이었다. 그러나 사전 리허설까지 했던 외양과는 달리 국정화 논리는 허술했다.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 총동원한 근거·사례들은 이미 사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이 많았다.

황 총리는 맨 처음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북공동책임이라는 기술이 실려 있다는 예시를 들었지만, 8종 교과서는 모두 6·25가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도발을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가 많다는 지적도 현행 교과서의 기준이 된 2009 집필기준엔 천안함을 쓰라는 부분이 없어 무리한 트집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총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1948년 제헌국회 개회사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임시정부로 보고, 1948년은 이를 계승한 정부수립 시점으로 본 것이다. 황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국가수립,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임시정부 법통은 민족의 정통성이 어디 있는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잣대”라며 “이제까지는 임정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지만,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임정 법통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세운 나라로 남북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1789년이 아니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1776년 7월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학계에선 뉴라이트 진영의 집요한 건국절 주장 뒤엔 1919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 역사를 축소하고 건국에 참여한 친일파들의 친일 행위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이 들어 있다고 본다.

■ 교학사 기준으로 교과서 공격

황 총리는 담화문 서론에서 현재 김정교과서가 편향된 교과서라고 전제하고 줄곧 ‘색깔론’을 덧씌웠다. 우선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 긴급브리핑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현행 교과서 집필진이 33건의 수정명령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집필진의 의사와는 별개로 현행 교과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 사항을 모두 고쳐 학교현장에 배포했다.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모두 비판적으로 다루는 교과서를 문제 삼지 못하자, 일부 문제집과 교사용 지도서들이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가르치고 있다고 꼬투리 잡았다.

황 총리는 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학맥에 속해 있고 이들이 매년 집필에 참여하고 있어 검정제하에서는 편향성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엔 집필자인 조왕호 교사(서울 대일고)는 “출판사 입장에선 경험 많은 필자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나”고 말했다.

극단적인 예시는 전국의 고교 2300여곳 중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3곳밖에 되지 않는다면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대목이다. 황 총리는 2년 전 특정집단의 인신공격과 협박 등으로 당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개 학교들이 채택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왜곡과 무더기 오류 논란에 학부모들이 반발해 철회된 과정을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재직한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도 “현재의 교과서는 검정 이후 청와대에서도 열흘간 검토했다. 좌편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교과서를 희생양 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이자 자기모순인 셈이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총리가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지만 논리가 너무 허술하고 군색하다”며 “고작 몇 개의, 그것도 잘못된 좌편향 근거를 가지고 교과서 발행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의 큰 제목은 「황교안 “고교 99.9% 편향 교과서” … 거짓말만 늘어놓은 총리」이다. 전국 고교의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황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는 황 총리의 원고가 『아전인수식 사실 호도와 왜곡』이며, 국정화 필요성과 관련해 적시한 근거·사례들도 『이미 사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이 많았다』고 기술했다. 황 총리의 담화문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기사 중 ‘거짓말’의 사례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은 중간 제목 「■무리한 아전인수 해석과 호도」 아래 기술돼 있다.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북 공동책임이라는 기술이 실려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는 것과, 천안함 폭침도발을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가 많다고 지적했다는 부분이다. 기사는 두 사안에 대해 『8종 교과서는 모두 6·25가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의 기준이 된 2009 집필기준엔 천안함을 쓰라는 부분이 없어』라고 전하고 있다.

6·25 전쟁의 책임과 관련한 황 총리의 담화문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북공동책임이라는 기술이 실려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한 기사 본문과 다른내용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의 서술 없이, 이미 공개된 황 총리의 발언과 위 기사의 보도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황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사는 황 총리의 천안함 관련 발언에 관해서는 『무리한 트집잡기』로 표현했다. 집필기준에 없어서 빠진 것일 뿐, 사실 관계를 다툼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관련 발언도 ‘거짓말’로는 보기 어렵다.

기사는 또 『황 총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현재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기사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 만큼 건국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부분은 관점의 문제이며 ‘사실’인지 ‘거짓’인지의 잣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에는 중간 제목에서 기술한 대로 황 총리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했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큰 제목에서 표현한 대로 ‘거짓말만 늘어놓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23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6년 1월 20일자 1면 「‘국회갑질’ 국민저항 서명운동 〈‘민생구하기’ 1000만 입법 촉구〉 확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제단체들이 시작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참여와 시민단체 등의 동참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들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이른바 ‘국회 갑질’에 대해 이번 서명운동이 경제계가 저항할 수 있는 ‘자구 수단’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삼성그룹이 서울 서초사옥에 서명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현대자동차, LG그룹 등 다른 기업들도 각기 서명 부스를 마련해 동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경제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민생 구

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온라인 서명에 5만 명, 오프라인 서명(서면 서명)에 1만 명 등 총 6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 경제단체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경제계와 시민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입법을 포기한 국회의 입법 갑질에 저항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시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야당이 제기하는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걸려 멈춰선 상황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 역시 국가 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 주체"라며 "편협한 '반기업 정서'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의 대화는 꽉 막혀 있고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거센 상황"이라면서 "여야 간 타협의 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서명 운동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경제단체들이 시작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삼성그룹의 동참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서명운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으로 '국회 갑질'을 지목했다. 기사는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들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이른바 '국회 갑질'』 『사실상 입법을 포기한 국회의 입법 갑질』 등으로 기술하면서 국회를 비판했다.

'갑질'은 권력관계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일방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약자인 상대방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뜻의 신조어로, 최근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물론 언론 보도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기사대로라면 국회는 경제 회복 관련 법안 처리를 사실상 포기했는데 이는

경제계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 곧 ‘갑질’을 하는 것이다. 경제계의 서명 운동은 이러한 국회의 ‘갑질’에 대한 ‘저항’이자 ‘자구수단’이라는 것이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게 원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법안 내용에 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야당은 관련 법안들이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거나 대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위 기사도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야당이 제기하는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걸려 멈춰선 상황』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단체들의 서명운동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를 국회 전체에 대한 저항으로 기술한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또한 계류 중인 법안에 경제계가 찬성한다고 해서 국회가 경제계에 대해 갑질을 한다고 보는 것도 경제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객관적인 사실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야당이 아닌 전체 국회를 들어 ‘국회 갑질’ 표현을 기사 본문은 물론 큰 제목에도 사용했는데, 이는 자칫 정치권 전반에 대한 독자들의 근거 없는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주관적 의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이같은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53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주문

朝鮮日報 2016년 2월 20일자 1면 「‘국민 목숨’ 놓고 政爭하는 국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19일 테러방지법 제정안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5년째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병기 비서실장을 국회에 보내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실장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과 함께 더민주 대표실을 찾았다. 이 실장은 김종인 대표에게 “상황이 엄중해 박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설명드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어떻게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줄 경우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테러 정보 수집 시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때문에 야당이 걱정하는 불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테러방지법을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맨 위로 올렸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예고 없이 김종인 대표를 찾아갔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정찰총국 제5국 내에 테러와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공작과를 신설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6월 이곳을 방문해 “정찰 일꾼은 자폭 정신, 자결 정신을 인생관화(人生觀化)해야 한다. 죽음도 하나의 투쟁 무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군(軍) 당국은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국가급 대(對)테러 부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지역 부대가 운용 중인 대테러 부대를 확대 편성해 국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과 북한의 동향 및 군 당국의 대응을 묶어서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병기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찾아 법안 취지를 설명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김종인 대표를 찾아갔으나 김종인 대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정찰총국 제5국 내에 테러와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공작과를 신설했다』고 보도하고, 김정은이 지난해 6월 이곳을 방문했을 때 했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다. 위 기사도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걸림돌”이라는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국민 목숨’ 놓고 政爭하는 국회」로 달았다. 작은 제목에는 ‘北위협에도 테러방지法 대립’ 표현이 들어있다.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국회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의미다.

기사 본문 중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권한이 강화돼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라 볼 수 있는 국정원에 대한 취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에는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국민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가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불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대상이 ‘국정원에 대한 민간인 정보수집권 부여’라기보다는, ‘국민 목숨’을 좌우하는 다급한 사안이라는 식으로 뽑은 위 기사 제목은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5년 8월 21일자 「남북 포격전에 평양에 머문 韓 유소년 축구팀 신변 우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북 포격전에 평양에 머문 韓 유소년 축구팀 신변 우려』

최○○ 기자 입력 2015.08.21 10:09

20일 남북이 경기 연천 지역에서 포격전을 벌인 가운데,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팀이 국제대회 참가차 평양에 머물고 있어 신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 유소년 축구팀은 남북 간 친목 도모를 위해 남북 체육교류협회(이사장 김경성)와 평양국제축구학교(교장 현철운)가 공동 주최한 ‘2015 제2회 국제유소년 15세 이하 축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평양에 머물고 있다. 이 대회는 21일부터 나흘간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20일 남북 간 포격전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평양에 머물고 유소년팀 팀원들과 대회 관계자들은 남북 간 포격전이 벌어진 20일까지 남북 대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우리측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2013년 완공된 미림승마장을 견학과 승마 체험을 했고, 오후에는 평양 한 호텔 연회장에서 환영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평양국제축구학교 현철운 교장은 “제2차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들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3회 대회가 남측에서 열리는 것은 물론 매년 대회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남북 간 대치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 대치상황에도 우리측 관계자들 신상에 위협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관계자들은 16일 중국 심양을 거쳐 평양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북한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 외국 출전팀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치 상황이 악화한다면 대회에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강원도 유소년팀을 비롯해 북한 4.25 체육단과 평양국제축구학교, 중국 윈난성 쿤밍팀, 우즈베키스탄 분요드코르, 크로아티아와 브라질 등 8개 팀이 출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천에서 열린 1회 대회에는 우리나라 3개 팀과 북한 4.25체육단 등이 참가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북이 경기 연천 지역에서 포격전을 벌인 가운데 제2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평양에 머물고 있는 국내 유소년팀의 신변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제목을 「남북 포격전에 평양에 머문 韓 유소년 축구팀 신변 우려」로 달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어 전적으로 기자의 견해에 따라 기사가 작성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8월 21일 게재된 위 기사는 본문 리드에 “... (한국 유소년대표팀)신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 줄 언급한 뒤 20일 평양에서 열린 환영만찬 등 행사가 무난하게 치러졌다고 소개하며, 이날 화기애애한 행사 분위기는 남북간 대치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회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 외국팀도 출전하기 때문에 남북 대치상황에도 신상에 위협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대치 상황이 악화한다면 대회의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선수단의 신변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닌 기자의 추정 뿐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슷한 시각 김정은 제1비서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위기감이 증대됐음에도 상당수의 언론사는 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북한이 여러 차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지만 대부분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을 빌미 삼아 내부 결속을 다잡는 데 이용했다. 이번 선포 역시 과거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는 경기도, 강원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 차원의 유소년 축구대회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면서, 평양에 체류 중인 선수들의 부모, 학교 관계자의 차분한 대응을 소개하는 등 침착한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합당한 근거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객관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기자의 일방적인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이처럼 기사 본문에서 객관적 사실과 기자의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또 이를 제목에 반영해 과장·왜곡한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2015-3035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장 용 성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4년 9월 16일자 「연예인 C군, 가족 여행이라더니 알고 보니 내연녀와 ...」, 6월 12일자 「톱스타 C군, 신종 마약 복용설 '충격」, 2월 13일자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 VVIP 펜션에 女 데리고 와 집단혼숙」, 「여배우 A, 스타인맥 쌓으려 교회로 출퇴근」, 1월 13일자 「톱스타 H양, 후배에게 동거 조건으로 3억 투척」, 2013년 8월 20일자 「톱스타 E군, 어설픈 잠자리 스킬에 여친에 뺨 차여 ...」, 8월 8일자 「숫처녀만 찾던 재력가 A, 여성 편력 병적 수준」, 5월 31일자 「'스폰서' 없인 못사는 유부녀 톱 여배우 A양-B양, 나쁜 기집애들!!」, 2월 25일자 「배우 F양의 잔인한 배신, 그의 애인이라며 찾아온 조폭 ...」, 1월 26일자 「유명여배우 C양, 결혼 전 화려한 전적」 제목의 기사 등 〈오프더레코드〉 편집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이 게재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2015.03.20. 23:30〉

① 『[오프더레코드] 톱스타 E군, 1%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서움?

기사입력 2014.09.16 09:30:52 최종수정 2014.09.16 10:50:04

◆ 연예인 C군, 가족 여행이라더니 알고 보니 내연녀와 ...

유쾌한 입담과 소탈한 이미지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C군. 알고 보니 결혼 이후 내내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연녀와의 데이트는 무척 당당하다고 하네요. 애인과 여름휴가를 외국으로 다녀온 사실이 승무원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목격이 됐네요. 지인들에겐 당당하게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며 자랑했다는군요. 평소 거침없는 성격답게 거짓말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C군, 불륜을 이렇게 당당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http://star.mk.co.kr/v2/view.php?sc= 42200037&cm= 오프더레코드&year= 2014&no= 1201205&relatedcode= 000100095&mc](http://star.mk.co.kr/v2/view.php?sc=42200037&cm=오프더레코드&year=2014&no=1201205&relatedcode=000100095&mc)>

② 『[오프더레코드] 가요계 선후배 A와 B, 녹화 중 격한 '쌈박질'

기사입력 2014.06.12 09:41:07 최종수정 2014.06.12 12:58:23

◆ 톱스타 C군, 신종 마약 복용설 '충격'

톱스타 C군이 신종 마약 수사 레이더망에 걸렸다는 정보입니다.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에 대한 검찰 수사망 좁혀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지만, 관계자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을 비롯해 소속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판매책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아마 모든 사실을 볼 것이라고 전해져 C군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사가 이번에 완벽하게 케어해줄까요』

<[http://star.mk.co.kr/v2/view.php?sc= 42200037&cm= 오프더레코드&year= 2014&no= 881052&relatedcode= 000100095&mc](http://star.mk.co.kr/v2/view.php?sc=42200037&cm=오프더레코드&year=2014&no=881052&relatedcode=000100095&mc)>

③ 『[오프더레코드] 인기 아이돌그룹 VVIP급 펜션서 혼숙, 도대체 무슨 일이?

기사입력 2014.02.13 10:43:26 최종수정 2014.02.13 13:54:22

◆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 VVIP 펜션에 女 데리고 와 집단혼숙

007 연애를 즐기는 스타들이 애용하는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 강원도 산골의 한 초특급 비밀 펜션이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은 물론 초호화 시설, 그림 같은 풍광 때문에 톱스타들에게 은근 입소문이 난 곳인데요. 요즘에 이곳에 한창 활동 중인 아이돌 스타들이 불시에 들른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 와서 이른 새벽에 나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 여친하고만 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 여자 한 명에 남자 둘 혹은 그 이상이 찾아와 방 안에서 집단으로 혼숙을 한다는 데요. 그 안에서 자극적인 놀이들이 행해진다는 목격담이 들려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극적인 놀이’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보다보다 못한 해당 펜션 관계자는 한 마디 남겼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쓰리썸인가봐?”

◆ 여배우 A, 스타인맥 쌓으려 교회로 출퇴근

여배우 A가 인맥 쌓기의 일환으로 신앙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늦은 연예계 데뷔로 하루 빨리 출세길에 올라야 하는 그녀, 머리를 굴리다 결국 ‘묻어가기’ 전략을 택한 거죠. 스타들이 잘 간다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인맥 쌓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스타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 콧대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세상 문턱은 높았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전해졌는지 성과는 그닥 신통치 않다고 하네요. 그녀를 만난 본 사람들의 대부분 첫 반응은 “참 열심히 한다. 예의 바르다. 잘 됐으면 좋겠다”였죠. 그런데 여러 번 만나보면 “어딘가 믿음이 안 간다” “가식적인 것 같다” “속을 알 수 없다”로 바뀐다고 하네요. 겉으로 품격있는 척 해봐도 속까진 포장하기 어려웠나봅니다.』

④ 『[오프더레코드] 톱스타 H양, 연하남에게 “동거하면 3억 줄게”』

기사입력 2014.01.23 10:43:29 최종수정 2014.01.23 10:48:40

◆ 톱스타 H양, 후배에게 동거 조건으로 3억 투척

거물급 여배우 H양. 연령 불문 연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가깝게 지내던 후배에겐 3개월 동거 조건으로 약 3억원의 자동차를 사주고 ‘엔조이’로 지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외모 보단 인품이 매력적인 남자로 소문난 동료 배우와 가벼운 만남을 갖더니, 최근에는 유명 셰프와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셰프는 여타의 남자들과 달리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을 지녔다고 하네요. 그녀의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요리 실력까지 갖춰 H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모까지 훌륭하다고 하니, 당분간 H양의 남성편력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요?』

⑤ 『[오프더레코드] 톱스타 E군, 어설픈 잠자리 스킬에 여친에 뺨 차여 ...』

기사입력 2013.08.20 08:55:46 최종수정 2013.08.20 09:13:41

◆ 톱스타 E군, 어설픈 잠자리 스킬에 여친에 뺨 차여 ...

요즘 대세로 통하는 E군, 하는 일 마다 승승장구 하더니 연상 연하의 여성은 물론 같은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라는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빈약한 잠자리 능력인데요, 과거 그와 교제했던 B급 연예인 F양은 그와의 실망스러운 잠자리 때문에 결국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또래 커플로 알콩달콩 비밀연애를 즐기고 있던 두 사람,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커플이지만 당시 두 사람 모두 지명도가 크게 높지 않아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E군의 인기가 치솟아 자연스럽게 F양에 관심이 쏠렸으나 두 사람은 이미 헤어진 상태. “아깝지 않냐”는 질문에 오히려 F양은 “남자로 보이지도 않았다. 직접 사귀어보면 알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겼습니다. 알고 보니 잠자리 매너가 워낙 미약하고 스킬이 부족해 매번 F양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하네요. E군, 여친 사로잡는 테크닉 좀

익히도록 하세요~』

⑥ 『[오프더레코드] 슷치녀만 찾던 재력가 A, 다음 여성 취향은?

기사입력 2013.08.08 09:40:37 최종수정 2013.08.08 16:22:51

◆ 슷치녀만 찾던 재력가 A, 여성 편력 병적 수준

스캔들로 세상을 놀라게 한 재력가 A씨의 여성 편력이 장난 아니라고 하는군요.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여자를 만나는데 여성 취향이 매번 바뀐다고 합니다. 어떨 땐 성 경험도 없어보이는 순진무구한 여성만 찾을 때도 있고, 유부녀에 ‘꽃혀’ 정신을 못차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몇몇 연예인들과도 썸씽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술집 웨이트리스에 반해 연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다음에 꽃히는 이성 취향은 미성년자가 되지 않을까요?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A씨의 상상초월 여성 편력에 측근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네요. 그쯤되면 편력이 아니라 불치병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각지에 뿌려놓은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⑦ 『[오프더레코드] 스폰서에 중독된 미시 톱여배우들 ‘나쁜 기집애’

기사입력 2013.05.31 09:19:06 최종수정 2013.05.31 14:06:48

◆ ‘스폰서’ 없인 못사는 유부녀 톱여배우 A양-B양, 나쁜 기집애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유부녀가 되도 한 번 중독된 스폰서의 맛은 잊을 수 없는가봅니다. 처녀시절부터 스폰서의 덕을 톡톡히 보기로 유명했던 두 사람,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보다 더 과감하게 즐기고 있다는데요. (쫄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미가 철철 넘치는 여배우 A양은 남편의 잘난 명예에는 만족하는 눈치지만 턱없이 부족한 월급 때문에 다시금 스폰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품위 유지비를 보장받은 덕분인지 나날이 미모가 발전하고

있네요. 다수의 히트작에도 불구하고, 無 존재감을 자랑하는 독특한 능력자 B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양의 경우, 갑부 남편을 만나 부러움을 샀는데 이번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작품 출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뚜렷한 매력이 없다보니 좋은 작품의 주연을 꿰차기가 너~무 힘든거죠. 이유가 뭐든지간에 여전히 스폰을 즐기고 있는 그녀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긴~꼬리가 잡히기 전에 가정으로 얼른 돌아가세요!』

⑧ 『[오프더레코드] 배우 F양의 잔인한 배신, 그의 애인이라며 찾아온 어깨남 ...

기사입력 2013.02.25 11:15:07 최종수정 2013.02.25 13:20:25

● 배우 F양의 잔인한 배신, 그의 애인이라며 찾아온 조폭 ...

중고 신인 F양의 행보가 꽤 씁니다. 최근 출연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주목받기 시작, 자신의 무명시절 7년을 함께 한 소속사를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심지어 죽을 결심을 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소속사에는 이렇다할 스타 배우가 없는 데다 F양을 키우는 데 전념해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F양은 이에 아랑곳 없이 소속사를 떠나기 위해서라면 모든 다 할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최근 동료배우 E군과 헤어진 뒤 그는 힘깨나 쓰는 남성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 그를 소속사 사무실로 보내 난장판을 만들었다는군요. 소속사가 쉽사리 놔주지 않으니 무력행사를 한 것이죠. 모 연예인이 소속사 파위에 대해 언급했던 것 등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해 못 할 것도 없지만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네요.』

⑨ 『[오프더레코드] C양, 결혼 전 화려한 스폰전적 남편이 알까?

기사입력 2013.01.26 10:19:58 최종수정 2013.01.26 11:17:16

● 유명여배우 C양, 결혼 전 화려한 전적

유명 여배우 C양이 결혼 전 수많은 스폰서를 거닐고 다녔다고 하네요. C양은 하룻밤의 대가로 스폰서에게 받은 2000만원을 브로커에게는 1000만원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브로커는 스폰서랑 이미 얘기를 한 상태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이에 브로커는 C양의 집까지 찾아가 사단을 내려고 했다고 하네요. 부모님의 만류로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C양의 전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Cyang이 출연해 얼굴을 알린 드라마에서 C양은 D양으로 이미 예정돼있던 배역을 차지하기 위해 술수를 썼다고 하네요. D양의 매니저에 의도적으로 대본리딩 시간을 잘 못 알려줬다고 하는군요. 이 덕분에 본인은 원래 시간에 맞춰 대본리딩을 하고 D양은 늦어 드라마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다수의 연예관계자들은 Cyang이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결혼 전에는 정말 굉장했다고 전언합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방송·연예 섹션인 스타투데이 첫 페이지에 「오프더레코드」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0회에 걸쳐 연예계 뒷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을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대부분 크레디트도 없고 등장 인물의 실명조차 거론되지 않는 형태로 내용의 진위를 판가름하기 힘들다. 연예인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진 공인인 만큼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취재되어야 마땅하지만 진위가 불분명한 풍문을 이니셜로 처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증권의 ‘찌라시’와 다를 없어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정치면에서도 이미 20여년 전에 가십 형태의 기사는 사라졌다. 연예인들에게도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은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신뢰받는 온라인 매체로서 취할 태도이다.

또한 「오프더레코드」 코너의 기사 중에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내용 역시 적지 않다. “C양은 하룻밤의 대가로 스폰서에게 받은 2000만원을 브로커에게는 1000만원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소속사가 쉽사리 놔주지 않으니 무력행사를 한 것”, “처녀시절부터 스폰서의 덕을 톡톡히 보기로 유명했던 두 사람,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각지에 뿌려놓은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닐 것”, “톱스타 H양, 연하남에게 ‘동거하면 3억 줄게’”, “술에 취해 여자 한 명에 남자 둘 혹은 그 이상이 찾아와 방안에서 집단으로 혼숙을 한다”는 등의 내용은 청소년 층의 건전한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1년여 전 보도한 기사라 하더라도 이처럼 보도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사실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을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장기간 집중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②(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074 신문윤리강령 위반

연합뉴스 발행인 박노황

주문

연합뉴스 2015년 3월 5일 20:57 송고 「‘리퍼트 미국 대사 공격’ 김기중 행적 일지」, 3월 6일 10:16 송고 「김기중 살인미수 혐의 영장 … 국가보안법 위반도 수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연합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리퍼트 미국 대사 공격' ...〉= 『

(전략)

▲1993년_ 서울 서대문구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처분.

▲2000년 2월_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중략)

▲2006년 11월_ 2007년 4월까지 개성에 나무를 심고자 8차례에 걸쳐 방북.

▲2010년 2월_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07년 10월 19일_ 1988년 8월 피한 습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분신 시도.

▲2010년 7월 7일_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연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짐. 이 사건으로 이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 선고 받음.

▲2011년 12월 26일_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하려다 보수단체 추정 회원들에게 폭행당함.

'리퍼트 미국 대사 공격' 김기종 주요 행적

1980년	성균관대 법대 입학
1982년	성균관대 법대 재학 중 6개 소도입이 7천만이 우리 되어 반도를 미당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우리마당' 설립
1983년 10월	우리마당 공식 활동 시작
1984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청천동에 우리마당 사무실 마련
1988년 8월	우리마당 사무실에 과한 4명이 들어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 발생
1993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처분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2005년 5월	2년 임기의 통일교육위원 위촉, 이후 2007년 5월 다시 위촉돼 2009년 4월까지 활동
2006년	일본 시마네현이 단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동료 6명과 본적을 경복궁 동쪽의 38번지로 옮김 5월 우리마당 단체 내에 '독도지킴이' 설립
2006년 11월	2007년 4월까지 개성에 나무를 심고자 8차례에 걸쳐 방북
2010년 2월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07년 10월 19일	1989년 8월 피한 습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분신 시도
2010년 7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연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짐. 이 사건으로 이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 선고 받음
2011년 12월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하려다 보수단체 주장 회원들에게 폭행당함
2014년 2월	서울 서대문구 청천교회에서 열린 신촌번영회 정기총회 결박원순 서울시장 강연회에서 현 황석재를 폭행. 이후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선고 받음
2014년 5월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신발과 개관을 투척
2014년 8월	2010년 7월 일본 대사 공격 사건을 다룬 책 '독도와 우리, 그리고 2010년' 출간
2015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그룹 엑소 팬클럽과 시비가 붙어 행사 정관차 나온 구청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막아섬
2015년 3월 5일	오전 7시40분에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걷거



김기종 기자 / 20150305
제이소북 turey@naver.com, 트위터 @yongap_graphics

▲2014년 2월_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열린 신촌 번영회 정기총회 겸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회에서 한 참석자를 폭행. 이후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선고 받음.

▲2014년 5월_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신발과 계란을 투척.

▲2014년 8월_ 2010년 7월 일본 대사 공격 사건을 다룬 책 ‘독도와 우리, 그리고 2010년’ 출간.

▲2015년 1월 30일_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그룹 엑소 팬클럽과 시비가 붙어 행사 점검차 나온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막아섬.

▲2015년 3월 5일_ 오전 7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현장에서 검거.』

〈김기종 살인미수 …〉=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 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분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 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확인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5cm짜리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중략)

경찰은 특히 김 씨가 지난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며 김 씨의 행적, 범죄 연관성, 배후세력 및 공범 여부 등을 심층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중략)

김 씨는 경찰에서 단독범행이며,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의 위 기사들은 각각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범행을 저지른 김기종 씨의 주요 행적과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전하고 있다.

3월 5일자 「‘리퍼트 미국 대사 공격’ 김기종 행적 일지」 기사는 김기종의 과거 행적을 그래픽과 일지로 정리한 것이다. 그래픽과 일지에는 『▲2011년 12월 26일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하려다 보수단체 추정 회원들에게 폭행당함』이라고 기술돼 있다.

하루 뒤인 3월 6일자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영장 … 국가보안법 위반도 수사」 기사는 경찰이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하며, 『경찰은 김 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확인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분향소 설치 시도’와 관련, 10일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부인했고, 경찰은 3월 13일 브리핑에서 ‘김 씨가 분향소 설치 시도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로 수정 발표했다. 김 씨가 주도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게 아니라 행사의 단순 참가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뉴스 기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하려다 보수단체 추정 회원들에게 폭행당함』 『경찰은 김 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확인했다면서』 등으로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비록 경찰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탓이라고 해도 사실 확인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40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5년 5월 20일자 1면 「반기문 내일 방북 ... ‘대망론’ 불지피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반 총장은 19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일념으로 방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동선과 방북 시 만날 북한 측 상대 등 세부사항은 선발대가 20일 방북해 조율할 예정이다.

반 총장은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도 지난해 이수용 북한 외무상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거론하며 “유엔은 북한의 유엔이기도 하고, 저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유익한 시점에 방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북 결정이 퇴임 이후 대권 도전과 연결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점으로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의 방북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성공단 방북을 통해 국제적 지도자라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라는 메시지를 던질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권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있다. 개성공단 방문 문제도 북한 당국과 직접 협의한 뒤 정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대권 행보 아니냐”며 “현실 정치와 얽히지 않으면서 외교 분야나 대북 문제에 집중하는 ‘아웃복싱’을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반 총장은 고 성완중 경남기업 회장과는 관계에 대해 “충청포럼 회원으로 국내에서 여러 번 만나 잘 알고 지냈고 불행히 삶을 마감해 안타깝다”면서도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성 회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영어로 답하던 반 총장은 이날 방북과 성완중 리스트 등 국내 정치 및 북한 문제 관련 질문에는 한국말로 답했다.

반 총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 또 홍용표 통일부 장관, 정종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비공개 면담을 갖고 대북 메시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을 방문 계획을 다루고 있다. 또 방북과 관련한 반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의 핵심은 반 총장의 방북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기사는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의 방북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성공단 방북을 통해 국제적 지도자라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라는 메시지를 던질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권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분석에 대해 구체적인 출처나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실상 대권 행보 아니냐”』며 『“현실 정치와 얽히지 않으면서 외교 분야나 대북 문제에 집중하는 ‘아

웃복싱'을 하는 셈"』이라고 기술했을 뿐이다.

상당수 언론 매체에서 반 총장의 차기 대선 주자 가능성을 점치며, 여론조사에 대상으로 넣어 그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그의 출마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의견'이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섰는지 여부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위 기사는 반 총장의 방북을 '대권 프로젝트'의 시동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또, 편집자는 더 나아가 1면 큰 제목을 「반기문 내일 방북 ... '대망론' 불지피다」라고 뽑았다. 사실상 방북을 통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대 편집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 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52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문

경향신문 2015년 5월 14일자 12면 「법조 명문가 '잘나가던 검사'/'돌연 사직'에 루머 급속 확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명문 법조인 집안 출신으로 승승장구해온 공안검사가 돌연 사직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해당 검사의 여검사 성추행 설부터 부장검사와의 불화설까지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검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지고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렇다 할 소문 차단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문은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 선두권으로 분류돼온 ㄱ검사(38)가 인사철도 아닌데 최근 옷을 벗으면서 시작됐다. 처음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했다는 말이 전해졌지만 이를 끝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법조인들은 거의 없었다. ㄱ검사의 화려한 이력 때문이다.

ㄱ검사의 초임 근무지는 엘리트 검사들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중간에 모범검사 표창을 받고, 미국 하버드대 연수까지 다녀왔다. 지난해까지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했다. ㄱ검사의 아버지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 안에서는 부장검사·평검사·여검사 등 그룹별로 여검사 성추행설과 부장검사와의 불화설 등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성추행설이라고 한다. 단순 성추행설부터 그보다 심한 성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소문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평검사 회식 중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와의 불화설은 공식 창구를 통해 언론에도 전해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ㄱ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지난주부터 그 얘기가 돌아 확인해 보니 감찰은 모른다고 했다. 알아보니 위에 있는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ㄱ검사가 근무했던 남부지검 측은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찬석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루머 양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대검이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문이 공익법무관들에게까지 퍼졌다”면서 “루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명문 법조인 집안 출신으로 승승장구해온 서울남부지검公安검사가 돌연 사직한 배경을 놓고 여검사 성추행설과 부장검사와의 불화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고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기사는 소문의 내용에 대해 『검찰 안에서는 부장검사·평검사·여검사 등 그룹별로 여검사 성추행설과 부장검사와의 불화설 등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성추행설이라고 한다.』고 기술한 뒤 『단순 성추행설부터 그보다 심한 성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소문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소문의 당사자인 ‘ㄱ검사(38)’에 대해 초임 근무지가 서울중앙지검이며, 중간에 모범검사 표창을 받고, 미국 하버드대 연수까지 다녀왔으며, 지난해까지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했다며 ‘화려한 이력’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라며 집안 내력까지 일부 소개했다.

위 기사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사 본문에서 기술한 대로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사실관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기사는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수군거림이 커지고 있지만』 『소문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등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검찰 관계자들의 발언도 성추행설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기사는 당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나 기사에 공개된 나이와 경력으로 미뤄 주변에서는 ‘ㄱ검사’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 따라서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을 고려해 보도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

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58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5년 9월 21일자 1면 「자위대 북한 진입」 사실상 용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우리 동의없이 자위대를 북한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토의에서 이같은 일본의 입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일본은 한국의 실제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전협의를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처럼 한국의 실제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인 남한에 대해서만 우리 주권을 인정, 북한 영역에서의 자위대 활동과 관련해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4월 한미일 3국은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

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제법은 유엔에 가입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도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북한은 국제법상 유엔 가입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안보토의 합의를 근거로 한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5월 3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요구에 대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 활동을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겠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자위대의 북한 영역 진입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본격적인 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 입장 관찰의 전망은 밝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한국과 일본, 미국은 안보토의를 내달 열어 일본의 안보법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국장급이 만나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위 기사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우리 동의없이 자위대를 북한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토의에서 이같은 일본의 입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합의’의 내용과 관련, 『올해 4월 한미일 3국은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은 유엔에 가입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합의’의 내용에는 정부가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명시적인 기술이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합의했고, 국제법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합의의 실제적인 내용을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고 추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며, 기사에도 반영돼 있다. 기사는 국방부가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전협의를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기술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참고로 한 장관은 22일 국회 답변에서도 내일신문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10월 중 열릴 3자 안보토의(DTT)에서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며, 한국의 요청 없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불가 입장을 강조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위 기사는 자위대의 북한 진입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②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95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6년 2월 19일자 「[연예가레이더]스태프 일년에 14번 갈아치운 신인여배우 外」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2.19. 17:10〉

『연예가레이더』 스태프 일년에 14번 갈아치운 신인여배우 외

입력 2016.02.19 07:48 수정 2016.02.19 07:46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신인급 여배우 A는 경력에 맞지 않게 전 소속사와 큰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원인이 모두 A에게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인데요. 메이크업부터 의상까지 스태프만 1년 안에 14번 바꾸는 등 만행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네요. 견디다 못해 전 소속사가 A를 사실상 방출하다시피 했는데요, A는 누군가 그 사건을 물었을 때 자신이 잘못된 게 없다며 혼자 울부짖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네요.

◇배우 B가 현재 방송중인 작품의 작가 C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라고 하네요. B는 자신만의 분위기로 배역을 해석해 연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C는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가 아니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B가 마치 웅변이라도 하듯 자신의 뜻대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드라마가 산으로 가고 있으니 둘 중 한 명은 뜻을 굽혀야할 것 같습니다.

◇“아내 때문에 되는 게 없는 배우” 연예인 D가 아내의 과잉행동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D의 아내인 E씨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인데요. 간혹 자연스럽게 가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방송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E씨의 과한 셀럽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E는 ‘D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행사장에 나타나거나, “D와 함께 어느 행사장에 가고 싶 다”고 대놓고 말을 하거나, 연예인 차량을 타고 외출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 고 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D가 언젠가는 아내 때문에 큰 화 를 당할 것 같다. E씨의 연예인 병이 빨리 없어지길 바란다”며 혀를 끝끝 찻습 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방출한 연습생이 나중에 잘되면 방출한 소속사는 배가 아 파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소속사 출신의 연습생들이 나오는데 그 중 인기를 얻는 출연진을 본 전 소속사들이 TV를 보면 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고 하네요.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있을 때와는 다 른 분위기다. 얼굴도 더 이뻐지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호응이 좋을지 몰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연예계 선남선녀 커플 F와 G가 헤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담배는 피 지만 술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미남 스타 F와는 달리 G는 술, 담배는 물론 클 럽에 놀러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F가 G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G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한다고 합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G가 F 몰 래 일하면서 째름이 술과 담배를 즐기고 놀러다닌다”면서 “G는 F의 사랑을 넘 어서서 집착으로까지 보이는 애정에 너무 답답해한다”고 말하더군요.』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예인에 관한 가십 5건을 모아 처리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 이 하나같이 A~G로 이니셜인 데다 그들에 관한 설명조차 ‘신인급 여배우’ ‘선 남선녀 커플’ 등으로 되어 있어 특정인물을 연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사의 서

술 또한 ‘~카더라’ 일색의 전언이어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추측인지, 아니면 창작인지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풍문에 지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독자들이 연예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스포츠서울은 위 기사를 「미녀스타 G, 술과 담배 즐기는 탓에...」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홈페이지에 톱으로 올려 ‘과대표현 금지’ 규정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표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스포츠서울 홈페이지



선정보도의 금지

2015-3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5년 3월 15일자 「도서관 ‘나체 포르노쇼’ 경악!」 제목의 기사와 사진,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3월 16일자 「두 여성, 국립도서관서 나체쇼 … 선정적 행위 ‘눈살’」 제목의 기사와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7일자 「도서관에서 나체쇼·성관계 … 음란방송 생중계 덜미」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간스포츠

『국립 도서관 나체쇼 촬영 … ‘이래도 돼?’ 충격

[일간스포츠] 입력 2015.03.15 21:33

서양의 한 도서관에서 나체쇼를 벌이고 영상을 통해 전송한 여성 2명이 화제다.

올해초 복수의 외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럽 루마니아 인접국가 ‘몰도바(Moldova)’의 한 국립 도서관에서 여성 2명이 알몸으로 선정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국립 도서관 나체쇼 촬영...‘이래도 돼?’ 충격

[일간스포츠] 입력 2015.03.15 21:33

글자크기 +



특히 이들은 도서관 내 서재를 배경으로 일명 ‘스트립쇼’를 보여주고 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노골적인 포즈를 취하는 등 자신들의 행위를 웹캠을 통해 유통하여 유료 고객들을 선동하였다고 밝혀졌다. 또한 해당 영상을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는 “이런 뻔뻔한 행동을 벌이는 여성들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공공장소 내 이런 포르노 쇼는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단호히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 미국의 오리건 주립대학의 도서관에서는 한 여대생이 찍은 노출 영상이 포르노 사이트에 게재되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동영상 속 여학생은 도서관에서 상의 노출 뿐만 아니라 하의까지 벗으며 은밀한 부위까지 노출하는 대담함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현지 경찰은 ‘공연음란(public indecency)’ 혐의로 여학생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해당 영상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 해당 영상 캡처』

(2) 스포츠동아

『두 여성, 국립도서관서 나체쇼 ... 선정적 행위 '눈살'』

입력 2015.03.16 09:25:00



한 도서관에서 여성 2명이 나체쇼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럽 루마니아 인접국가 ‘몰도바(Moldova)’의 한 국립 도서관에서 여성 2명이 알몸으로 선정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을 촬영했다.

이들은 도서관 내 서재를 배경으로 일명 ‘스트립쇼’를 보여주고 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노골적인 포즈를 취하는 등 자신들의 행위를 웹캠을 통해 유통하여 유료 고객들을 선동했다.

해당 영상을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는 “이런 뻔뻔한 행동을 벌이는 여성들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공공장소 내 이런 포르노 쇼는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미국의 오리건 주립대학의 도서관에서는 한 여대생이 찍은 노출 영상이 포르노 사이트에 게재되어 큰 논란을 가져왔다.

동영상 속 여학생은 도서관에서 상의 노출뿐만 아니라 하의까지 벗으며 은밀한 부위까지 노출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3) 스포츠조선

『도서관에서 나체쇼·성관계 … 음란방송 생중계 탈미』

기사입력 2015.01.07 17:06:14



여성 두 명이 국립 도서관에서 음란 방송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 동부 몰도바 공화국 수도 키시나우시 도서관에서 여성 두 명이 컴퓨터에 달린 웹캠을 이용해 성인 방송을 진행했다.

여성들은 나체로 도서관 곳곳을 누비며 손짓을 하거나 둘이 애무를 하는 장면, 심지어 성관계까지 갖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 여성들의 주변과 배경에는 시민들이 책을 찾기 위해 서성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들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여성들의 음란 행동은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네티즌은 “국립 도서관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다”며 “다른 시민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웹캠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생중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의 신상과 행방을 조사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

란다”고 말했다.

장○○ 기자 b***ho@sportschosun.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모두 유튜브의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신고 설명기사를 덧붙인 형식으로 돼 있다. 유럽 동부 폴도바의 국립 도서관에서 여성 2명이 음란 방송을 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사진에는 여성들이 나체로 도서관 곳곳을 누비며 손짓을 하거나 둘이 애무를 하는 장면,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담고 있다. 특정 부위에는 모자이크가 돼 있으나 두 여성이 껴안고 있거나 나체로 돌아다니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선정적이다. 이 기사는 스포츠조선에 지난 1월 7일 게재됐으나 일간스포츠와 스포츠동아는 두 달이 더 지난 뒤 뒤늦게 이를 보도했다.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해 편견 없이 보도하는 것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선정보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여성끼리의 성애장면을 노출시켜 동성애를 조장하는 듯한 보도 행태는 청소년층에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54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5년 3월 30일 「나를 담아 가세요」, 「축구도 섹시하게」 제목의 사진 등 〈헤럴드PHOTO〉 다수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2015.03.30 23:45〉



〈캡처시각 2015.03.30 23:45〉



〈캡처시각 2015.03.30 23:45〉





〈캡처시각 2015.03.30 23:4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 PHOTO〉 코너에는 전라의 여성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다수 게재돼 있다.

「나를 담아 가세요」 제목의 사진들은 2012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비너스 에로틱 페어의 행사장면인데, 실오라기조차 걸치지 않은 여성이 다리를 들고 가랑이를 벌린 사진을 비롯해 시선을 두기 어려울 정도의 민망한 장면이다.

「축구도 섹시하게」는 201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2 섹시축구 독일-브라질전에 출전한 여성선수들을 담은 사진들인데 비록 보디페인팅을 했지만 유두가 선명히 드러나 선정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여성의 날 내 몸을 던져서라도~」 제목의 사진들도 유두가 드러난 맨가슴의 여성들로, 신문에 그대로 게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위 사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 3055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김택수

주문

전북도민일보(domin.co.kr) 연재소설 「평설 금병매」 437회(2015년 3월 24일자) 「두 여자는 자기들끼리 이미」, 427회(3월 10일자) 「“에게, 이게 뭐야?”」, 390회(1월 13일자) 「그래, 그렇게 조여 봐」, 346회(2014년 11월 11일자) 「이년아, 네가 슛쳐녀라구?」, 248회(6월 24일자) 「아, 지금이야. 넣어 줘.」, 194회(4월 7일자) 「“형님 혼자 그걸로 했어요?”」, 163회(2월 21일자) 「해줄게. 내가 실컷 해줄테니까」 제목의 소설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전북도민일보의 위 적시 소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설 금병매 <437> 두 여자는 자기들끼리 이미

6. 맞바람이 불다 <21>

승인 2015.03.24

자기 속옷을 벗어버린 여자가 남장 여자의 속옷을 벗겼다. 역시 비단 옷 속에서 잘 익은 살구빛의 속살이 드러났다. 호느적이며 춤을 추던 키 큰 여자가 춤을 추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더니, 이내 머리를 키 작은 여자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 밀고는 은밀한 부분을 핏기 시작했다.

키 작은 여자의 공후 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손에서 공후를 놓지는 않았으나 소리가 제멋대로 뽁뽁거리고 있었다. 공후가 뽁뽁거릴 때마다 키 작은 여자의 전신이 호느적이고 있었다. 키 큰 여자는 입으로 키 작은 여자의 은밀한 곳을 애무하면서도 손으로는 춤을 추었으며 그러다가 가끔 키 작은 여자의 가슴을 훑어내리기도 했다. 얼마를 그랬을까? 키작은 여자가 공후를 내던지고 키 큰 여자의 겹옷을 들추고 가슴을 덥씩 물었다.

“아아아 아으아으 아아아.”

이제 공후 대신 두 여자가 입으로 공후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두 여자는 그런 것이 처음은 아니었던 듯 서로가 서로에게 능숙했다. 서로가 빨아주고 빨아주고 소리를 질러대다가 이윽고 여자 역할의 키 큰 여자가 다리를 활짝 벌리고 누웠다.

그러자 남장 역할의 키 작은 여자가 보따리 속에서 남자의 물건처럼 생긴 것을 꺼내어 자신의 옥문에 넣고는 반대편을 키 큰 여자의 옥문에 넣었다. 이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라는 구별도 없었다. 키 큰 여자가 밑에 깔려 있는가 하면 어느 사이 키 작은 여자가 밑에 깔려 아으아으 공후를 불어대고 있었다.(하략)

<캡처시각 2015.04.02. 01:10>

② 평설 금병매 <427> “에게, 이게 뭐야?”

6. 맞바람이 불다 <11>

승인 2015.03.10

(상략)

손설아가 기가 팍 죽어있는 미양생의 물건을 살포시 잡으며 귀에 속삭였다. 그때였다.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이교아가 들어왔다. 미양생의 고개가 문 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단 잠옷 차림으로 들어서는 이교아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잠깐만요, 부인. 누군가 들어옵니다.”

미양생이 손설아를 밀어내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교아형님과 전 무엇이든 나눠갖는 사이랍니다. 비록 하급의 물건을 가진 처사님이지만, 호남아짱아요. 혼자 가질 순 없지요. 그대로 하던 것을 계속해요.”

손설아가 자신의 유두를 미양생의 입에 물려 주었다. 그걸 핥고 있는데 이교아가 무릎을 꿇더니 미양생의 발가락을 입속에 넣고 오물거리기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을 아끼면서 씹듯이 잘근잘근 씹다가, 혀끝으로 감작거리다가, 잇몸으로 가만가만 물기도 했다. 처음에는 간지러웠으나, 간지러움을 견디자 온 몸으로 알 수 없는 전율같은 것이 흘러가면서 머리 속에 안개가 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찔거렸다.

미양생이 아, 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손설아의 등을 팍 부등켜 안자 손설아가 가만히 몸을 돌려 옥문이 입으로 오게하여 말타는 자세를 취하였다. 손설아의 검은 숲에서도 알수 없는 향기가 풍겨 나왔다. 그동안 여자의 옥문에 코를 대본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입을 댔던 적은 없었던 미양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숲의 언덕에 가져갔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거예요.”

손설아가 좀더 가까이 몸을 밀착시켰다. 그러자 미양생의 코가 저절로 옥문을 막아버렸다. 고개를 흔들어 숨을 쉬고 혀끝으로 웅달샘 아래를 쿡쿡 건드리

자, 손절아가 아, 하고 신음을 내뿜었고, 이교아는 미양생의 물건을 덩싹 물고 고개짓을 했다.

순간 미양생이 발끝을 짚 뻗으며 방사를 해버렸다. 두어달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미양생이 입속에 들자마자 방사를 해버린 것이었다. 천하진미도 배가 부른 다음에는 한 날 똥 한조각만도 못한 법이었다. 미양생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 버렸다. 사내의 그런 상태를 모를 여자들이 아니었다.

“에게, 이게 뭐야?”

〈캡처시각 2015.04.02. 23:20〉

③ 평설 금병매 〈390〉 그래, 그렇게 조여 봐

5. 매화(梅花)와 매화(賣花) 〈59〉

승인 2015.01.13

(상략)

“그렇군. 당신이 날 기다렸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군. 벌써 젖어있어.”

“맞아요. 어서 넣어주세요.”

그런 말들이 오고가더니 이내 본격적인 살풀이에 들어갔다. 이병아의 신음과 철벽거리는 소리가 반금련의 숨이 막히게 만들었다.

‘저 처죽일 년 놈들이, 저것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놀아나고 있네.’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던 반금련이 안으로 달려 들어가려는 몸을 겨우 멈추고 문틀을 붙잡고 숨을 헐떡였다.

“당신은 어찌 그리 여자를 잘 다루죠? 부인들한테는 더 잘 해주시겠지요? 저도 당신의 첩이 되는 길은 없을까요? 아, 거기예요. 당신이 거기를 자극해줄 때가 쥔 좋아요. 몇 번만 더 힘을 주어서 팍팍 해보세요. 아, 나 죽어요.”

이병아가 자지라지는 소리를 냈다. 반금련은 당장이라도 쫓아 들어가 이병아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아냈다.

“좋은가? 정말 좋은가? 그대가 좋다니까 나도 좋아 미치겠군. 그래, 그렇게 조여 봐. 그대가 내걸 조일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대는 청루의 어떤 기생보

다 감촉이 좋다니까.”

“정말이죠? 당신의 부인들하고 나하고 누가 더 좋아요?”

“그걸 누가 좋다고 한 마디로 말할 순 없지. 여자마다 다 느낌이 다르니까. 조이는 맛은 금련이가 낫고, 은근한 재미는 설아가 낫지. 다들 괜찮은 셈이야.”

〈캡처시각 2015.04.02 23:20〉

④ 평설 금병매 〈346〉 이년아, 네가 슷쳐녀라구?

5. 매화(梅花)와 매화(賣花) 〈15〉

승인 2014.11.11

(상략)

‘이년아, 네가 슷쳐녀라구? 청루는 꿈도 꾸지 말거라.’

서문경이 그런 궁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물건을 짝 물고 있던 계저의 옥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살살 활는 듯이 부드럽다가 어느 순간 물건 주위로 수천마리의 지렁이라도 기어가는 듯이 간질거리다가 계저가 꿈꾸는 소리를 내자 물건이 뿔뿔한 강렬한 기운이 아랫도리에서 느껴졌다.

‘아니, 이것은 명기가 아닌가? 사내의 물건을 가만히 물고만 있어도 저절로 방사를 하게 만든다는 명기가 아닌가?’

이궁리 저궁리를 하느라 서문경은 가만히 있는데도 계집이 혼자서 물건을 쥐락펴락 했다가 살살 활다가 안으로 쑥쑥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 어? 할 사이도 없이 방사를 하고 말았다.

“계저야, 너 정말 사내하고 교접을 하지 않았더냐? 내가 정녕 너한테 첫 사내였더냐?”

힘 한번 못 쓰고 계저의 몸에서 내려오면서 서문경이 꿈 신음을 내뿜었다.

〈캡처시각 2015.04.02 23:20〉

⑤ 평설 금병매 <248> 아, 지금이야. 넣어 줘.

4. 옥향의 반란 <4>

승인 2014.6.24

“아니, 안 싫어. 사실은 태국이가 내 젖을 먹을 때 아랫도리가 닳아오르면서 온 몸이 녹작지근해지는 것이 구름을 탄 기분이야.”

경이 년이 끄끙 앓는 소리를 냈다.

“네 말을 믿을 수가 있어. 내가 네 젖을 먹으며 여길 만지면 더운 물이 나오거든.”

“아아아, 너무 좋아. 좋아서 미치겠어.”

“소리를 죽여. 아씨가 잠이라도 깨면 어떡해.”

“저절로 소리가 나오는 걸 어떡해? 그전에 아씨가 서방님과 방사를 할 때 천장이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했었거든. 난 저리 고통스러운 짓을 절대로 안 해야겠다고 혼자 다짐도 했었고.”

“후후, 그런데 지금은 하루라도 날 안 만나면 아랫녘이 허전하지?”

“정말 그래. 혼자 누워있으면 태국이가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생각만 해. 그러면 아랫배가 딱 차면서 온 몸이 뜨거워져. 아, 지금이야. 넣어 줘.”

“알았어. 이 녀석도 더는 못 참겠대. 네 안에서 죽고 싶어 환장하겠대.”

태국이 녀석이 중얼거리며 경이 년의 몸 위에 몸을 싣는 모양이었다. 아, 너무 좋아, 하는 경이 년의 탄식에 이어 철벽철벽 띄치는 소리가 들렸다. 옥향은 입안의 침이 바짝 마르며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어느새 촉촉이 젖은 아래녘이 모닥불을 피운 듯 후끈 거렸다.

제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아랫녘을 문지르다 말고 옥향이 스르르 주저 앉았다. 현기증이 일면서 눈 앞에서 은빛 나비떼가 날아다녔다.

“천천히, 너무 팍팍 하지 말고 천천히 해. 태국이가 일찍 싸버리면 난 싫어.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싸면 안 돼. 아으, 아으. 너무 좋아. 미치겠어.”

경이 년이 숨넘어가는 소리를 내뿜었다.

“좋다, 너무 좋다. 네가 움죽거릴 때가 젤 좋아. 그래,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줘봐.”

태국이 놔도 황소처럼 씹씹거렸다. 팔 하나로 땅을 짚고 나머지 손으로 아랫
턱을 쓰다듬으며 옥향이 음음 새어나오는 신음을 안으로 삼켰다.

“아, 경아, 내가 지금 쌀 것 같아. 네가 내 것을 사정없이 빨아들이니까 쌀 것
같아. 참아 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

“안 돼. 저절로 움직이는 거란 말야.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그런단 말야. 아, 짹짹해 봐. 나도 될 것 같아. 우리 함께 싸. 아아아, 나 미
쳐. 나 죽어.”

〈캡처시각 2015.04.02 01:10〉

⑥ 평설 금병매 〈194〉 “형님 혼자 그걸로 했어요?”

3. 무송, 돌아오다 〈18〉

승인 2014.4.7

그때마다 이교아가 어흥어흥 울음소리를 냈다. 또 얼마가 지났을까. 갑자기
몸을 일으킨 이교아가 침상 밑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그게 뭐예요? 형님.”

눈을 뜨고 씹씹거리며 올려다 보던 손설아가 물었다.

“모르겠어? 이것이 무엇인지?”

이교아가 빙긋 웃었다.

“남자의 물건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맞아, 나무로 깎아 모양을 만들고 부드러운 가죽을 씌운 남자 물건이라구?
어때? 나리 것보다 훨씬 크지?”

이교아가 남근모형을 손설아의 눈앞에 들이대고 호호호 웃었다. 그것은 양쪽
이 모두 남근이었다. 양쪽 다 귀두가 있었다.

“어디서 났어요?”

손설아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샀지. 자그마치 은자 한냥을 주고 샀다구. 나리 집으로 오면서 버릴까, 아님

남을 줄까. 하다가 그냥 가져왔더니, 요즘 얼마나 요긴하게 쓰인다구.”

“형님 혼자 그걸로 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 오히려 문전에서 깔작거리다가 마는 사내들보다 더 나아.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정말이요? 그것이 만족을 시켜줘요?”

“두고보면 알지. 기대하라구. 내가 동생을 극락에 보내줄테니까.”

호호호 웃던 이교아가 침상 밑에서 다시 작은 단지를 꺼내더니, 단지 속의 숨 뭉치로 남근모형을 정성스레 닦았다. 그러자 그것이 이내 번들거렸다. 아마 부드러운 가죽을 더 부드럽게하려고 참기름이라도 바른 모양이었다.

“어때, 감쪽같지?”

남근 모형을 손설아의 눈앞에서 두어 번 흔들던 이교아가 그걸 제 옥문에 꽂았다. 그 모습에 손설아가 까르르 웃었다.

“형님이 그걸 박고 있으니까, 영락없는 남자네요. 어서 올라오세요, 서방님.”

“알겠소, 부인. 준비는 되었겠지요?”

이교아가 남근을 서너차례 흔들다가 손설아의 사타구니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남근을 그녀의 옥문에 박았다.

“아, 언니. 나 죽겠어요.”

몇 번 깔작거리지도 않았는데 손설아가 입을 짹 벌렸다. 그녀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교아가 혼자 열심히 엉덩이짓을 했다. 그때마다 손설아가 죽겠다고 비명을 내질렀다. 그것은 분명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즐거움을 못견뎌하는 감창이었다.

“아흑 아흑, 어쩡소 부인?”

이교아가 물었다.

〈캡처시각 2015.04.02 01:10〉

⑦ 평설 금병매 <163> 해줄게. 내가 실컷 해줄테니까

2. 가문의 법칙을 넘어 <76>

승인 2014.2.21

도라지꽃이 사내를 원망스런 눈빛으로 올려다 보다가 식탁에 팔을 잡고 었드렸다. 사내가 도라지꽃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다가 아랫도리를 뺨 끌어내렸다. 젖가슴처럼 우윳빛 살결이 촛불에 번들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싱긋 웃던 사내가 가죽 채찍을 집어 들고 서너차례 후려 갈겼다. 그때마다 여자가 아얏 아얏 소리를 질렀다.

“했지? 그 쥐새끼 놈과 했지?” 사내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도라지꽃 여자가 울면서 대꾸했다.

“아니, 넌 했어. 했다고 대답해. 했지? 했지?” 사내가 다시 채찍을 휘둘렀다.

“했어요. 미안해요. 질 용서해주세요.”

“나하고 할 때보다 재미있었냐? 쥐새끼의 물건이 나보다 크더냐?”

사내가 채찍을 휘두르며 물었다.

“아니요. 당신하고 할 때보다 재미 없었어요. 물건도 당신 것보다 작았어요. 형편없이 작았어요. 해주세요, 당신이 해주세요.”

여자가 애걸하며 흘끔 고개를 돌려 사내를 올려다 보았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했다. 그런데 어쩐지 미양생의 눈에는 도라지꽃 여자가 사내의 학대를 즐긴다는 느낌이 들었다. 채찍으로 맞을 때도 흠칫흠칫 떨기는 했으나, 아얏, 아얏, 하고 지르는 비명이 고통이 아니라 희열을 못 이겨 내는 소리같았다.

“해줄게. 내가 실컷 해줄테니까, 다른 사내하고는 하지 마. 알았지? 흐흐흐. 넌 내꺼야. 내꺼라구. 흐흐흐.”

사내가 킬킬거리며 홍두깨를 서너차례 흔들다가 여자의 가랑이를 짹 벌리고 한 가운데로 집어 넣었다.

“아, 아얏.” 무엇에 놀란 숫말처럼 여자가 엉덩이를 풀썩 들어올렸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사내의 홍두깨는 제자리에 박힌 채 있었고, 여자가 꿈꾸는 소리를 냈다.

“그래, 잘 한다. 뛰어 봐. 엉덩이를 폴짝폴짝 뛰어 보라니까.” 사내가 손바닥으로 여자의 엉덩이를 철석철석 후려 갈겼다. 그때마다 여자의 엉덩이가 폴짝폴짝 뛰어 올랐다.

“흐흐흐, 이젠 아주 제법이구나. 잘 뛰다, 잘 뛰어.”

여자는 계속 엉덩이를 갑죽거리고 있었고, 여자의 힘이 빠진 듯 멈추면 사내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후려 갈겼다. 얼마를 그랬을까.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사내를 돌아 본 여자가 애원했다.

〈캡처시각 2015.04.02 01:10〉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가 연재 중인 「평설 금병매」는 잘 알려졌다시피 중국 명대의 성애 장편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등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성풍속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게재된 소설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전북도민일보(인쇄매체)에 연재했던 「평설 금병매」로, 2013년 7월 1일부터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다. 오프라인 연재 당시에도 「평설 금병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비공개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결정번호 제2004-1057호, 제2005-1040호, 제2005-1071호, 제2005-1089호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37회(2015년 3월 24일자) 「두 여자는 자기들끼리 이미」와 194회(2014년 4월 7일자) 「“형님 혼자 그걸로 했어요?”」는 동성끼리의 성교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427회(2015년 3월 10일자) 「“에게, 이게 뭐야?”」는 한 남자와 두 여자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다루고 있어 왜곡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 163회(2014년 2월 21일자) 「해줄게. 내가 실컷 해줄테니까」 역시 새디즘적인 성애장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390회(2015년 1월 13일자) 「그래, 그렇게 조여 봐」, 346회(2014년 11월 11

일자) 「이년아, 네가 슛쳐녀라구?」, 248회(2014년 6월 24일자) 「아, 지금이야. 넣어 줘.」 등도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창작의 자유와 독창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북도민일보는 이같은 문제점을 직시해 청소년들의 「평설 금병매」 접근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2.(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8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문

매일경제 2015년 6월 5일자 A1면 「메르스 감염 의사 1565명 <30일 개포동 재건축 설명회 참석자> 접촉 파문/박원순 서울시장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 ... 자택격리 통보 받고도 버젓이 공개행사 참석」 기사와 제목, 한국경제 6월 5일자 A27면 「메르스 감염 의사」 격리 통보 받고도 서울시내 활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 『서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판정을 받은 의사 A씨가 지난달 27일 자택격리 통보를 받고도 대형 행사장에 드나들며 1500명 넘는 시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의사 A씨는 14번째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후 지난달 29

일 기침 등 경미한 증상을 보였지만, 30일 1565명이 참석한 지역 재건축 조합 회의와 병원 심포지엄 등 대형 행사장에 수차례 드나들며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증상이 심화돼 31일 모병원에 격리됐고, 1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서울 지역 병원 밖 감염(지역사회 감염)에 비상이 걸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밤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사 A씨는 메르스 의심으로 자택격리 조치 됐음에도 확진판정 직전 무려 1500여명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들 명단을 확보해 4일 중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자발적 자택격리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후략〉

(한국경제)=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증상이 나타난 상태로 서울 도심에서 1565명이 참가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와 의사 심포지엄 등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메르스 방역이 뚫린 것으로, 지역 사회에 전파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 증상 나타난 채로 도심 활보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지난달 30일 1565명이 모인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총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자발적 자택격리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이 의사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35번째 환자로, 14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에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됐고, 다음 날인 30일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그럼에도 이 환자는 같은 날 오전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저녁 때 가족들과 가든파이버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양재동 L타워에서 1565명이 모인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이 의사는 31일부터 기침과 가래 및 고열이 발생했고, 이날 오전 병원 대강당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가 몸이 안 좋아 귀가한 뒤 늦은 밤부터 병원에 격리됐다. 이를 동안 이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만 재건축조합 참석자 1565명에 이른다. 박 시장은 “이 35번 환자는 이를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됐고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이들에게 자발적 자택격리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1565명 위험군 전원에 대해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방역당국이 환자 방치”

서울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이를 동안 도심을 돌아다니는데도 방역당국이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런 사실을 지난 3일 오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후 동선은 물론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며 “복지부 측에서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동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시로 보내왔다”고 말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6월 4일 밤에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대시민 발표’를 기사화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의사가 자택격리 통보를 받고도 다수의 시민들이 모인 행사들에 참석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기사는 『의사 A씨가 지난달 27일 자택격리 통보를 받고도 대형 행사장에 드나들며 1500명 넘는 시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또 박원순 시장이 긴급 브리핑에서 『“의사 A씨는 메르스 의심으로 자택격리 조치 됐음에도 확진판정 직전 무려 1500여명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 ‘자택격리 통보 받고도 버젓이 공개행사 참석’ 표현을 넣어 작은 제목을 달았다.

한국경제 기사는 『서울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이틀 동안 도심을 돌아다니는데도 방역당국이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 「‘메르스 감염 의사’ 격리 통보 받고도 서울시내 활보」로 달았다.

그러나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주요 내용면에서 서울시 발표와 다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의사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6월 1일이며, A씨가 병원 심포지엄과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보다 이틀 전인 5월 30일이다. 또 A씨가 기침·가래·고열이 발생해 모 병원에 격리된 것도 확진 판정 이전인 5월 31일 21시40분이다.

따라서 자택격리 조치에도 1500여명과 직간접 접촉했다는 매일경제 기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도심을 돌아다녔다는 한국경제 기사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며, 자칫 메르스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재난보도준칙’에 명시된 정확한 보도(제3조), 선정적 보도 지양(제15조)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40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주문

경남매일 2015년 8월 13일자 1면 「위안부 문제 日 항의 ‘분노의 분신’」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경남매일은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최모(81) 씨가 분신을 시도, 수요집회 참가자 등이 불을 끄고 있는 모

습』이라고 전했다.

경남매일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분신했다는 점에 의미를 뒤 이 사진을 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독자들이 아침 밥상에서 펼쳐 보기에는 너무 잔혹한 모습이다. 상체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은 당사자의 고통을 독자가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위안부 문제에 항의해 분신을 했다는 사실은 기사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며 또 대다수 신문이 기사로만 처리했다. 위 사진은 잔혹한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300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5년 10월 22일자 A14면 「프로포폴, 마약류로 규제했더니 ... ‘제2 우유주사’〈에토미데이트〉 기승」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수면유도제)을 투약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요즘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일명 에토미)를 맞으며 잠들고 있다. A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잠을 잘 이루질 못했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동료들의 조언으로 이 약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 약을 한 번에 3~5mL 투약하면 1시간가량 잠들고, 약효가 떨어져 잠에서 깨면 같은 용량을 또 투약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동료와 함께 하룻밤 사이에 앰풀 10개를 모두 쓰기도 했다. 1박스(10mL 앰풀 10개)가 70만~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A 씨는 유흥업소에서 번 돈의 상당액을 에토미데이트 구입에 썼다. A 씨는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구하기가 어렵고 단속도 신경 쓰인다”며 “에토미를 투약하면 기분 좋은 생각과 함께 스르르 잠이 들고 깨어나면 개운하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말했다.

A 씨 처럼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비슷한 대체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성형외과 일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형관)는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시중에 고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안모 씨(46) 등 폭력조직원 2명과 유통책 1명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 기소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약품 도매상에서 에토미데이트 5만 mL(앰풀 5000개)를 빼돌려 유흥업소 여성 등에게 팔아 4억여 원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다. 검찰은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안 씨 등에게 마약류관리법 대신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투약자는 처벌하지 못했다.

병원 등에 공급되는 에토미데이트의 가격은 앰풀당 5000원 선이지만 불법 유통을 거치면서 가격이 7만~8만 원 선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른바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들이 서울 강남 일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투약자들을 만나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엔 3mL 안팎으로 투약하지만 의존도가 심해지면 한 번에 5mL 넘게 투약한다. 2010년 8만 앰풀이 수입됐던 에토미데이트는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그해 12만 앰풀에서 2012년 20만 앰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만 앰풀이나 수입됐다. 대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에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토미데이트

정식 명칭은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다. 백색의 전신 마취제로, 수면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등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유사하다.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여할 수 없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마약류로 지정된 ‘우유주사’ 프로포폴의 효능과 용법이 유사한 ‘에토미데이트’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성형외과 일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전문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의 명칭과 효능을 자세히 소개하고, 거래 가격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 ‘제2의 우유주사’임을 알리고 있다.

위 기사는 이처럼 ‘에토미데이트’의 효능과 주사량, 유통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마약처럼 악용되는 사례를 적시함으로써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2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3.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문

朝鮮日報 2016년 1월 18일자 A10면 「아빠는 아들 시신 일부 버렸고, 엄마는 아들 없는 척 속였다」, 1월 21일자 A10면 「그 부모는 치킨을 시켜먹고 아들 시신을 훼손했다」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1월 21일자 8면 「부천 초등생 부모, 폭행 자백/“사망 전 날 2시간 걸쳐 구타」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1월 21일자 10면 「모진 매에 죽어간 아이 ... 치킨 먹고 훼손한 부모」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와 경향신문,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 아빠는 ...)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7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遺棄)·은닉한 혐의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 최경원(34)을 구속했다. 아동의 어머니 한모(34) 씨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일단 최와 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두 사람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거나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중략)』

◇아들 시신 훼손·유기

최는 숨진 최군의 신체를 심하게 훼손해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비닐에 싸서 냉동 보관해왔다. 최와 한씨는 최군이 죽자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는 아내와 최군의 여동생(당시 5세)을 처가에 보내놓고 최군 시체를 3일간 안방에 놔뒀다. 그러다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자 욕실

로 옮겨 신체 부위를 절단하고 장기와 피부 조직을 훼손했다.

최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발견된 최군의 시신에 피부 조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는 손목·발목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고, 장기와 피부 조직은 변기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아내 한씨는 “친정에서 돌아와 보니 아이 시신 일부가 냉동실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와 한씨가 시신 훼손·유기를 함께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추궁하고 있다.

◇오원춘 사건 모방했나?

최군이 장기 결석하기 한 달 전쯤인 2012년 4월 1일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인한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최의 시체 훼손·유기 수법은 피해 여성의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토막 낸 오원춘의 수법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최가 오원춘의 범행 수법을 모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 심리 분석관)인 경찰청 소속 권일용 경감 등을 투입해 최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 경감은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사건에서 심리 분석을 맡았었다.

경찰이 지난 13일 최군의 행방을 찾아 집을 찾았을 때 한씨는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고 발뺌하고는 곧장 최에게 “경찰이 찾아왔다”고 몰래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15일 오후 1시쯤 최군 시신을 인천의 지인 집으로 몰래 옮겨놓았다. 최의 집에선 최군 시신과 함께 옷가지와 세면도구, 현금 300만원이 발견되는 등 도주 정황도 드러났다.(하략)』

(朝鮮日報, 그 부모는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 최경원(34)은 아들을 2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군의 어머니 한모(34) 씨도 최가 아들을 폭행할 때 집에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최군이 숨진 뒤에는 남편과 함께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중략)

최와 한씨가 최군이 죽자 함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는

그동안 “아이가 죽은 뒤 아내와 딸(최군의 여동생)은 처가에 보내놓고 나 혼자 시신을 훼손·유기했다”고 주장해왔다.

한씨는 최군이 숨진 것을 확인한 11월 8일 밤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지만, 다음 날 저녁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남편 최와 함께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한씨는 “남편이 이날 온종일 밥을 굶어 요깃거리를 챙겨주려고 치킨을 시켜 같이 먹었다”고 진술했다. 치킨을 먹고 두 사람은 집 욕실에서 최군의 시신을 훼손했다. 경찰은 “한씨는 시신을 훼손하는 최에게 장갑과 마스크를 가져다주고 훼손된 시신 일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버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집 근처 공공건물 화장실에도 사체 일부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와 한씨는 최군의 머리 등 일부는 내다버리지 않고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에 의한 사망 등 사인(死因)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된 한씨에 대해서도 사체 훼손·유기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하락)』

(경향신문)=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경기 부천의 초등학생은 숨지기 전날 만취한 아버지로부터 2시간가량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아동의 동생은 지난 14일 경찰 등을 최초 접견한 자리에서 실종 무렵 오빠의 행방을 부모에게 물었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아동의 어머니 ㄱ씨(34)에게 “사망 전날 남편이 안방에서 아들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며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눕혀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중략)

ㄱ·ㄴ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목욕을 시키다 아들이 넘어졌으나 치료를 안 해 사망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목욕탕 사건은 살해 전인 같은 해 가을쯤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ㄴ군을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일을 말한 것이었다.

ㄴ씨는 시신을 토막 낸 뒤 3년2개월간 머리 부분만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머

리를 바깥에 버리면 범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은닉을 택한 것이다. ㄱ씨는 11월8일 친정에 갔다가 이튿날 돌아와 봉지에 담긴 신체 일부를 음식물함에 버렸다. ㄱ씨는 사체 냄새가 바깥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국장을 끓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하략)』

(국민일보)= 『2012년 11월 7일 저녁.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있던 7살 남자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2시간 넘게 무자비하게 맞았다. 어머니는 보면서 말리지 않았다. 그 후 때린 아버지와 엄마는 술을 먹고 잠들었다.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다음날인 8일 컴퓨터 의자에 앉은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아들이 숨지자 부부는 이튿날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했다.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잔인했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천 초등생 사망 및 사체 훼손사건’은 3년 전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숨진 A군의 아버지 B씨(34)와 A군의 어머니 C씨(34)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발표 내용을 토대로 지옥 같은 3일을 재구성해봤다.(중략)

9일 친자식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

이튿날인 9일 C씨는 친정에 딸을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8시30분쯤 집에 도착한 C씨는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치킨을 주문해 먹었다.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치킨 배달 시간도 확인됐다. 이어 남편이 도구를 이용해 숨진 아들의 신체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C씨는 필요한 장갑을 갖다 주고 훼손한 시신을 봉지에 담는 등 남편의 범행을 거들었다. 이어 남편이 건넨 아들의 신체 일부를 외부에 버리는 등 사체 훼손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나 외부에 버릴 경우 자신들의 신분과 범행이 쉽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러나 냉장고가 너무 좁아 A군의 사체 중 머리와 신체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부천시민운동장 여자 화장실에 버렸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의 기사는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나눠 냉장고 등에 보관하거나 버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다. 朝鮮日報는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자 욕실로 옮겨 신체 부위를 절단하고 장기와 피부 조직을 훼손” “손목·발목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고, 장기와 피부 조직은 변기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 “머리 등 일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이라고 범행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경향신문은 “시신을 토막 낸 뒤 3년2개월간 머리 부분만 냉장고에 보관” “봉지에 담긴 신체 일부를 음식물함에 버려” “사체 냄새가 바깥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국장을 끓이는 치밀함”이라고 묘사했고, 국민일보는 “냉장고가 너무 좁아 A군의 사체 중 머리와 신체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부천시민운동장 여자 화장실에 버렸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위 신문들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범죄행위를 보도할 때에 잔인한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38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5년 3월 21일자 「실제 정사 영화 봤더니...입이 썩 벌어져」, 「영화속 과격 베드신 ... 민망한데 시선 자꾸 가네!」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제 정사 영화 봤더니...입이 짹 벌어져」





「영화속 파격 베드신 ... 민망한데 시선 자꾸 가네!」



〈이상 캡처시각 03.21 21:0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진에는 설명이나 출처가 없다. 〈포토&화보〉에 돋보이게 편집하고 「실제 정사 영화 봤더니...입이 꺾 벌어져」, 「영화속 파격 베드신 ... 민망한데 시선 자꾸 가네!」란 제목만 붙였다.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장면만 보일 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제목으로 알 수 있는 건 ‘입이 찢 벌어지는 실제 정사 영화’ 뿐이다. 이러한 사진을 왜 신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사진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려는 편집 의도만 읽힐 따름이다. 이러한 편집은 함께 게재한 「국민 여동생, 대체 왜 이러나. 엽기에 가까운 노출」 등의 선정적인 사진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에 전라의 남녀가 여러 가지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청소년 층의 건전한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 3079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5월 20일자 「남아공 관광명소서 포르노촬영? 알몸 男女 성관계 사진에 ‘시끌’」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남아공 관광명소서 포르노 촬영? 알몸 男女 사진에 ‘시끌’』

입력 2015.05.20 15:31:00 수정 2015.05.20 16:18:43



18일(현지시각) 채널24 등 남아공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케이프타운의 명소 사자머리산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르노 영화 스틸이 최근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16일부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기 시작했다. 사진에는 벌거벗은 남녀가 케이프타운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사자머리산 바위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일부 누리꾼은 “케이프타운 명소에서 포르노 영화를 촬영한 게 분명하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배경에서 케이프타운 스타디움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그린스크린(green screen)을 이용해 배경을 합성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낸 누리꾼들도 있었다.

이에 남아공 국립공원 관리청은 이러한 영상 촬영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문제의 사진이 합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있었다하더라도 절대 허가하지 않

왔을 거라고 밝혔다.

사진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공원 측은 이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아프리카 관광명소인 사자머리산에서 벌거벗은 남녀가 성행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SNS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제목부터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한 위 기사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남녀의 성행위 자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선정적이고 음란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더욱이 위 기사는 동영상 표시가 있는 동아닷컴 <ON세상>을 통해 볼 수 있어, 다른 일반 기사보다 더욱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07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장 용 성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6월 21일자 「[스타화보] 쉐퍼, '나뭇잎 한 장으로」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사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5.06.21. 22:1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6월 21일자 「포토엔조이」 코너에 국내외 스타들의 갖가지 선정적인 사진들을 싣고 있다. 「[스타화보] 쉐퍼, ‘나뭇잎 한 장으로」의 경우 벌거벗은 두 여성이 마주보며 키스하는 장면이다.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가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나, 이렇듯 에로티시즘이 강조돼 동성애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사진의 게재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미카엘라 쉐퍼의 자극적인 사진이 많은 매체에 게재되었으나 이처럼 가슴을 전혀 가리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온라인 신문의 성격상 모자이크 처리 등을 거친 후 게재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 312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2.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주문

머니투데이(mt.co.kr) 2015년 7월 8일자 「“낮타임 성매매를 아시나요?” 대기업 다니는 여성까지 …」 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7월 8일자 「“낮타임 성매매를 아시나요?” 대기업 다니는 여성까지 …」 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7월 8일자 「“낮타임 성매매를 아시나요?” 대기업 다니는 여성까지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머니투데이, 동아닷컴,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니투데이)=『“낮타임 성매매를 아시나요?” 대기업 다니는 여성까지 ...

여대생 비율도 30% 넘어...해외여행 경비 쉽게버는 수단으로 여겨
전문가 “동성사회성 원인 ... 남성들의 가치관 바뀌어야 근절 가능”

(서울= 뉴스1)

권○○ 기자, 김○○ 기자 2015.07.08 06:20:00 송고



© News1 최○○ 디자이너

새벽시간 외지고 허름한 여관의 성매매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것도 별건 대낮 성매매가 호황이다.

이제 남성들은 오후 시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5분만에 예약을 마치고, 역 근처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 소속 경찰관 수십 명이 서울 강남역에서 불과 250m 떨어진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이하 오피방)’라는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 오피스텔 총 168세대 중 19개 호실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경찰의 단속이 비껴갔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오피스텔에서는 더 많은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일선 경찰서 단속반 총 70여명으로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강남권 오피스텔을 무대로 대규모 영업을 하거나 변태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업소 중 144개를 단속, 업주 124명과 성매매여성 159명, 성매매남성 64명, 외국인 성매매여성 9명을 포함한 총 366명을 검거했다.

단속 결과 성매매업소는 주로 기업들이 많은 강남역과 선릉역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마포역과 공덕역 주변은 뒤를 이었다.

강남역 주변 A오피스텔의 경우 총 340세대 중 27개호실, B오피스텔은 288세대 중 18개 호실, 마포구 소재 C오피스텔은 662세대 중 13개 호실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됐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밤의 전쟁, 아찔한 밤, 섹밤, 야밤 등)와 명함형 전단지로 광고를 한 후 예약한 남성만을 종업원(영업실장 등)이 안내하는 특정장소에서 사전 접촉해 성매매 대금(10만~15만원)을 지불하면,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호실을 알려주는 등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은밀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일부 업소는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한 업주가 각기 다른 오피스텔에 최소 2~3개, 최대 11개 호실을 월세로 임차한 후 오피스텔별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이고도 대규모로 운영했다. 또 다른 업소는 시간당 30만원의 고액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결과 이들은 새벽시간 뿐만 아니라 낮 시간을 이용해서도 성매매를 해왔다. 과거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영업을 해오던 이들은 ‘주간 타임’과 ‘야간 타임’으로 나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주간 타임에 속해 있는 성매매여성들은 낮 12시쯤 출근해 오후 8시쯤 퇴근하

고, 야간 타임에 속해 있는 여성들은 반대로 오후 8시쯤 출근해 새벽 4시쯤 퇴근한다.

화대는 성매매여성들의 나이에 따라 달라졌다. 20대 여성들이 성매매여성으로 나설 경우 화대는 20만원 수준에 달했으나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 수록 화대는 점차 내려갔다.



© News1 최○○ 디자이너

성매매여성들 역시 달라졌다. 해가 진 시간에 집을 나와 성매매에 하루를 쏟던 과거와 달리 요즘 성매매여성들은 방학을 맞아 등록금이나 해외여행 경비를 단시간에 마련하려는 대학생부터 전문직 여성까지 다양해졌다.

성매매 단속에 나섰던 한 경찰 관계자는 “국내 굴지 대기업에 다니는 한 여성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의 이른바 ‘마담’의 연락을 받고 업소의 술자리에 합석했다”며 “이후 마담에게 접대 요청을 받고 이 여성은 ‘용돈도 벌고, 기분도 풀고’ 라는 생각에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귀띔했다.

성매매여성들 중에 대학생들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한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 중 30% 이상을 여대생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중에는 며칠 바짝 돈을 벌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어와 중국어, 영어에 능통하며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학에 다니는 엘리트 여대생들도 있다”며 “이들 중에는 성매매를 했다는 것에 죄의식이 없는

이들도 있어 조사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성매매 수법이 점차 진화하는 것에 대해 “예전에는 모텔이나 여관 사장 등이 성매매 여성들을 직접 알선했지만 이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성매매를 예약하고 성매매 장소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신종 성매매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가 점차 진화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남성들의 ‘동성 사회성’을 꼽았다.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동성 사회성’이란 미국의 여성 비평가 이브 세지윅(Eve Sedgwick)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같은 성(性)끼리 독특한 가치 문화 체계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 교수에 따르면 남성들은 성매매에 대해 도덕적으로 나쁘게 판단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동성 사회성’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성매매에 대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노 교수는 “성매매 근절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속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평가”라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목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꾸준한 단속이 이뤄져 왔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속’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편의적 방법을 사용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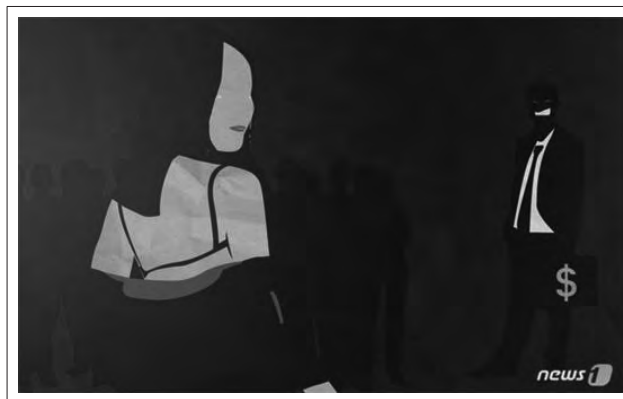
그러면서 “‘동성 사회성’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남성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죄의식 없이 성매매를 하는 남성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에 따른 공급도 끊이지 않아 ‘근절’은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

(동아닷컴)= 『“낮타임 성매매를 아시나요?” 대기업 다니는 여성까지 ...

입력 2015-07-08 07:05:00 수정 2015-07-08 07:05:25



© 뉴스1



© 뉴스1

새벽시간 외지고 허름한 여관의 성매매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것도 별건 대낮 성매매가 호황이다.

이제 남성들은 오후 시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5분만에 예약을 마치고, 역

근처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 소속 경찰관 수십 명이 서울 강남역에서 불과 250m 떨어진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이하 오피방)’라는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서울=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낮타임 성매매를 아시나요?” 대기업 다니는 여성까지 ...

입력 2015.07.08 06:21 수정 2015.07.08 06:21

(서울= 뉴스1) 권〇〇 기자, 김〇〇 기자

새벽시간 외지고 허름한 여관의 성매매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것도 별건 대낮 성매매가 호황이다.

이제 남성들은 오후 시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5분만에 예약을 마치고, 역 근처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

(이하 생략)

(서울= 뉴스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뉴스1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업주 등 360여명의 관련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불법업소의 운영실태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도 함께 언급하였다.

그러나 업소들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문제다.

해당 사이트를 포털에서 검색할 경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 초기화면에 유두가 드러난 여성의 사진이 버젓이 게재되는 등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화면이 나타난다. 물론 업소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므로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인들에게 성매매업소를 알려주는 부작용이 예상되며, 실제 이를 지적한 댓글도 보인다.

그러므로 위 기사는 성매매업소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방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5년 8월 26일자 ‘와글와글’ 코너의 「여친 갖고 싶게 만드는 여자들의 섹스 후기 모음」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 홈 페이지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친 갖고 싶게 만드는 여자들의 세스
- ② 비뇨기와 발기 테스트
- ③ 합성장에서 색소하는 사람들
- ④ 원아저씨 암컷한인 우유루기합니다
- ⑤ 카타리안미 여자 사귀고 싶어 사귀
- ⑥ 10분 특이 만능하는 여자 권다
- ⑦ 우리 근처에도 그놈 적 미칠
- ⑧ 성병예방 하는 주된 도시
- ⑨ 세계 최고의 마인 도시.jpg
- ⑩ 오마이저 지리관 1도전 상황 =

여친 갖고 심게 만드는 여자들의 섹스투기 모음

图 2-2-7

비디오

1000

입으로 했다가... 숨넘어갈뻔

남편이랑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에서 끝마치고 헤어졌다

복합재 설계·제조 공해 평가 방법론 개발

대안: 불완전
대안: 불완전

○ 리플렛, 소책자, 카드뉴스, ... 등 제작

© 2004 by John Wiley & Sons, Inc.

남친이랑 싸움으로 MT가서
화끈해서 같이 사랑하고 놀다가

최근에 접두어는 국어 단어보라살에

아래의 불행에서,
대 오빠야, 오... 오~~~~~이런~~~~

발~꽃더니
다리를 내자면 아꼐더니 ~~~~~ 불꽃불꽃 ~~~~~

무릎꿇고 앉더니 다리를 어깨에 걸쳐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놀랐는데 10분만에 견디-

[illegible]

나폴렌 아오라이 나아 오하어 디어(문사) 부락할게 그만해 나아나미치였다 그문 나아나미치였었다

손으로 칠고 날로 칠어도 잘못도 없고 나중엔 거인 반물먹이면서 보인

하와이를 방문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와이에는 많은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경관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즐기면서 여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나리부들부들 읽다가 나랑은 온몸을 격투부들부들 알았네요

용에 남자친구가 조금만 더하면 뽕 나올것 같아~)이러면서 tttttt
 인호가 공을 세우는데 뽕이 뚝 떨어지는데...~

이후에 임민하면, 출생한바다라고실제? 쪽을면 이변별 만조준다????????????
 이에서 최남을남을 거치고, 11111111

기말고사(3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학생은 100% 장학금 지급

0154 108

매우 선정적이다. 목욕탕에서 남친과 성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남자의 정액을 먹는다는 이야기, 남자의 정액이 눈으로, 가슴으로 튔다는 이야기 등이 여과 없이 게재돼 있다. 이런 선정적인 내용 탓인지 와글와글 코너의 ‘재미 베스트 10’의 1위에 올라있다. 여성들의 정제되지 않은 섹스 후기 모음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신문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까지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40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주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5년 9월 7일자(캡처시각) 「‘저녁 안차려 왔다고 …’ 임신한 아내 얼굴을 발로」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코리아타임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저녁 안차려왔다고..’ 임신한 아내 얼굴을 발로

Posted 2015.09.07 17:49 Updated 2015.09.08 11:20

중국의 한 시골마을에서 한 여성이 나무기둥에 묶인 채 학대를 받는 장면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왔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은 부부로,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저녁밥상을 차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여성은 주위에 인파가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나무기둥에 손이 등뒤로 묶여있는 채 앉아있다.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후 발로 얼굴을 가격한다.

여성은 실신한 듯 힘없이 쓰러져있다. 인파는 이 같은 장면을 목전에 두고 개입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부@』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THE KOREA TIMES

구독하기

이웃자 한마디

09-08 19:26 편집

해피빈

행복한 변화를 만드는 착한 문화 프로젝트

'저녁 안차려놔다고..' 임신한 아내 얼굴을 발로

· '베어스' 유희관 · 골퍼 양수진 '열에 인정'

· 타이완서 한국남 여성 치마속 물카검려 '국채...'

· 윤하, 5년 만에 뒤 앨범... '오리온 혜성' 신화...

· 세븐, 내달 일본 데뷔 10주년 라이브 투어

· 원/달러 환율 5년여 만에 1,200원대 진입 마감

·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북한 방송서 모습...

· 이혼한 아내 계속 살인하려다 미수 50대 징역...

· '진짜사나이' 자막성희롱 내홍..예능 · 율리 간...

포도 차량들 '거미 방자' 화면 장작 예징

사육사 공격한 비단범

표범과 개코원숭이의 잘못된 만남

오늘의 토

[Today's 한 지뢰

한국군 최초 130mm 다연장 로켓포 '구름' 훈련영상

중앙격투기 백운 사람과 일반인 싸움

얼룩말 사자에게 반격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코리아타임스는 중국의 한 시골마을에서 한 여성이 나무기둥에 묶인 채 학대를 받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여성과 남성은 부부 사이로서,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저녁밥상을 차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여성은 주위에 인파가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나무기둥에 손이 등 뒤로 묶여있는 채 앉아있다.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후 발로 얼굴을 가격하고, 여성은 실신한 듯 힘없이 쓰러져 있다. 여성이 주먹으로 맞는 일부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이 같은 사진을 한 장도 아닌 여러 장 게재하는 것은 폭력을 조장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유해하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 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68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창섭

주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5년 9월 11일자 「한 여성, 남편의 강요로 2,742명과 잠자리 가져」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KOREA TIMES

네이버 포스트 미국 여행 정리 끝판왕
여기만 가면 샌디에고 온

구독하기

이용자 한마디

10-23 16:50 편집

한 여성, 남편의 강요로 2,742명과 잠자리 가져



-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 '부부강간'
- 급성장한 헬러원 시장...유통업체도 마케팅에...
- "애들 맛있게 생겼네"...이웃 협박한 미국 업...
- 3분기 경제성장을 1.2%...6분기만에 1%대 회복
- '100억원 탈세혐의' 장근석, 내년 한국활동 본...
- 썰렁한 날씨 · 화창한 날씨 '어쨌건 싱글은 외...
- 하정우 '신과 함께' 저승사자 캐스팅 확정
- 북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 북한돈 100억원...

〈캡처시각 2015.10.23. 20:55〉

『한 여성, 남편의 강요로 2,742명과 잠자리 가져

기사입력 2015.10.23 14:42

Posted : 2015-10-23 14:42

Updated : 2015-10-23 17:33

Man forces wife to have sex with 2,700 men



/Screen capture from Twitter

한 여성, 남편의 강요로 2,742명 잠자리 가져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여성은 남성의 강요로 4년 동안 2,742명과 잠자리를 가졌다.

영국 일간지가 목요일 (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법적인 이유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54세의 남성은 46세인 아내를 이용해 한화 약 866만 원을 벌었다.

남편은 인터넷 사이트 네 곳을 이용하여 고객을 모았다.

프랑스 파리 북쪽의 모 (프랑스 일드프랑스 주 州)에 위치한 그들의 집에서 아내가 고객과 시간을 보낼 때, 남편은 다섯 살인 자식과 함께 차에 앉아 있곤 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여성은 남성의 강요로 4년 동안 2,742명과 잠자리를 가졌다.

영국 일간지가 목요일 (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법적인 이유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54세의 남성은 46세인 아내를 이용해 한화 약 866만 원을 벌었다.

남편은 인터넷 사이트 네 곳을 이용하여 고객을 모았다.

프랑스 파리 북쪽의 모 (프랑스 일드프랑스 주 州)에 위치한 그들의 집에서 아내가 고객과 시간을 보낼 때, 남편은 다섯 살인 자식과 함께 차에 앉아 있곤 했다.

그들은 지난주 화요일 (현지시각) 체포됐고 수요일 재판이 열렸다. 프랑스에서 성매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매춘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남자만 매춘알선업으로 고소됐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아직 형사재판이 남아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 재판 검사 엠마누엘 두픽은 “남성은 폭력을 행사하며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여성은 난폭한 고객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들은 올해 결혼생활 10년을 맞이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프랑스 거주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4년 동안 2,742명과 잠자리를 갖고 한화 약 866만 원을 벌었다는 영국 일간지 보도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아내를 ‘윤락녀’로 전락시켜 돈벌이를 했다는 내용도 비윤리적이지만, 기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남녀의 정사장면 사진을 게재한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마치 당사자의 모습인 것처럼 독자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층의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에 트위터에 올라 있는 화면을 캡처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정적인 편집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5년 12월 2일자 「가출 여고생에 '1일 성매매 4회' 시킨 악마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조선일보

구독하기 | 이용자 한마디 | 12-02 15:43 편집 | 이거안보려고 했...

[단독] 가출 여고생에 '1일 성매매 4회' 시킨 악마들

오늘의 주요기사 -

- "한국 원화, 中 위안화에 이어 IMF 통화 바스켓 편입 '순위'
- 【속보】 경찰, '불법 폭력 시위 혐의' 출납플랜트 노조 압수수색
- 北 지뢰도발로 한국 발목 얹은 김 총사의 '퇴원 점프' ㉸
- 한상진 교수 "새정치연합, 전대미문의 파국상황... 침몰상태"

오세훈 "박원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제 생각은..."
"명문대 출신 아들이 일하기에 <비서관>격 떨어지는 자리"
美, IS 격퇴 위해 150명 최정예 특수기동타격대 투입 예정
불난 고시생들 "신기남 아들의 로스쿨 입학·졸업 자료 내 놔"
中 선원 떴게한 故 이청호 경사, 해경 최대 경비함으로 부
활

표고버섯에 발암물질이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들

〈캡처시각 2015.12.02. 16:40〉

『[단독]성매매 할당량에 폭행까지... 지옥같은 ‘가출팸’ 실상

기사입력 2015.12.02 14:21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달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모아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1)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5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0)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6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 ‘가출팸’은 폭력이 되풀이되면서, 피해자가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지옥’이었다. ‘가출’과 ‘패밀리(family)’를 합성한 가출팸은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집단을 말한다.

◇가출 여고생들 협박해 ‘성매매 조직’에 끌어들여

갓 성인이 된 박 씨는 여고생을 데리고 성매매를 하다가 올해 1월 한 살 어린 김 씨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김 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여·20) 씨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권유했다. 박 씨와 김 씨는 A씨와 여자 청소년 한 명을 더 데리고 성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절반씩 나눴다.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을 더 끌어들여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남으로 위장,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올해 2~3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대구의 한 모텔을 찾아갔다.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며 “비슷한 일을 하는데 너희가 방

해하고 있다. 경찰에 같이 가든지 아니면 2000만원을 배상해라. 돈이 없으면 ‘자갈마당(대구의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청소년들은 돈이 없다고 했고, 이들은 “우리 밑에서 일해라”고 했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대구의 다른 모텔에 사는 여자 청소년을 만나 차에 태운 다음,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식칼을 보여주며 협박해 자신들의 조직으로 끌어들이었다.

박 씨 등은 이렇게 모은 여자 청소년과 A씨를 두 팀으로 나눴다. 팀당 2~4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원룸을 임대해 공동생활을 했다. A씨는 여자 청소년 관리를 맡으면서 성매매도 했다. 박 씨 등은 청소년들에게 성인 여성 신분증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줬다.

박 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 여성 행세를 하면서 조건을 정해 ‘남자 손님’들과 약속을 잡은 다음, 차로 여자 청소년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 줬다.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숙소로 데리고 왔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 13만원 중 6~7만원을 A씨와 청소년에게 차등 지급했다. 1일 목표량인 4회를 채우지 못하면 부족분을 A씨와 청소년이 부담하게 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충남 천안, 대구 남구,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남구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성매매를 했다.

◇되풀이되는 폭력 … 성매매 10대 중에 ‘왕따’도 생겨

박 씨와 김 씨는 평소 여자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가도 잡힐 것이 뻔하니 갈 테면 가라. 잡히면 바로 자갈마당에 팔아 버리고, 페이스북에 너희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 “홍신소에 가면 너희 잡는 것은 금방”이라며 협박했다.

여자 청소년을 관리하는 A씨는 심부름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B양을 엮드리게 한 다음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렸다. B양이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박 씨는 야구방망이로 B양을 때렸다. 또 B양이 2만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B양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물을 가득 채운 찜통을 들도록 벌을 줬다. 박 씨는 B양이 물을 흘리면 불 붙인 담배를 쥐 스스로 지지게 했다. 박 씨는 A씨와 다른 여자 청소년에게 B양을 잘 감시하라고 했다.

폭력은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되풀이됐다. 여자 청소년들은 B양이 흘린

물을 치워야 하는 것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B양을 때렸다. B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B양 무릎에 내리찍기도 했다. 달궜진 라이터로 B양의 얼굴과 손을 지지는 청소년도 있었다. B양 입 안에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꽂초를 삼키게 하기도 했다.

한 여자 청소년은 B양을 감시하느라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며, 성병에 걸려 화가 난다며 B양을 때렸다. 가혹 행위로 갈비뼈가 부러진 B양이 성매매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B양에게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만 줬다.

◇재판부 “성매매 할당량 정하는 등 죄질 매우 무거워”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뻔뻔하게 “자수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박 씨 부모 집을 찾아가자, 박 씨가 부모 연락을 받고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와 긴급 체포됐다”며 “첫 경찰 조사 때 박 씨가 ‘B양의 동의를 받고 성매매를 했으며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을 볼 때 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의 지역도 광범위하며 수익도 상당하다. 여자 청소년에게 1일당 성매매 할당량을 정했고, 생리나 성병 등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성매매를 시켰다”며 “조직을 나가고 싶다는 B양을 감금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출생 후 곧바로 입양되고 학교 폭력을 당하는 등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이 일탈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선 “A씨 폭행이 다른 여자 청소년의 폭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A씨 자신도 성매매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B양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여자 청소년(18)을 “일반 형사 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보호 처분이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9세 미만 비행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가

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 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前科)가 남지 않는다.

송○○기자』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모아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7년 등 중형을 선고한 내용이다. 법원의 선고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히 취해야할 태도라고 볼 수도 있으나 “박 씨와 김 씨는 평소 여자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가도 잡힐 것이 뻔하니 갈 테면 가라. 잡히면 바로 자갈마당에 팔아 버리고, 페이스북에 너희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 흥신소에 가면 너희 잡는 것은 금방’이라며 협박했다.”, “달궜진 라이터로 B양의 얼굴과 손을 지지는 청소년도 있었다. B양 입 안에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꽂초를 삼키게 하기도 했다”는 등의 잔혹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동시에 청소년층의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15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5년 12월 6일자 「[SS영상] ‘숨바꼭질’ 하듯 자연스럽게 포로 살해하는 IS 소년병 영상 ‘충격」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SS영상] ‘숨바꼭질’ 하듯 자연스럽게 포로 살해하는 IS 소년병 영상 ‘충격’

입력 2015.12.06 06:00 수정 2015.12.06 06:00





〈캡처시각 12.06. 21:10〉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어린아이들이 포로를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IS가 ‘소년병’ 모집을 위해 제작한 충격적인 영상을 소개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IS가 지난 8월 점령한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 주의 한 유적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속에는 소년들이 등장해 자신의 적들에 대한 응징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복면을 쓰고 권총을 든 한 소년이 등장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이 소년은 곧 포로를 찾아내 권총으로 살해했다.

영상에서 소년들은 비인간적인 살해 행위를 마치 ‘게임’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했다. 특히 영상 속에는 이들에게 살해된 포로들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돼 재차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IS는 최근 소년병들을 포로를 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영상은 IS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IS의 잔혹한 소년병 모집 홍보 영상 보러가기〉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 및 동영상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년병 사들이 포로를 살해하는 영상을 소개한 것이다. 많아야 10대 초반인 어린이가 권총을 들고 포로를 처형하는 동영상 캡처화면과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 영상을 보도한 매체가 전했듯이 포로의 처형에 어린이를 동원한 것으로, IS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정적인 장면이다.

보도 후 해당 동영상은 삭제되었지만 최소한 하루 이상 노출돼 신속한 수정을 요하는 인터넷 언론의 속성상 그 책임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답변의 기회

2015-108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서울경제 2015년 3월 18일자 17면 「농수산물 외면하는 NS홈쇼핑」, 3월 27일자 A16면 「길 잃은 <밀레> 정체성 없이 갈팡질팡」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 3월 19일자 22~23면 「국산 농수산물 겨우 6% ‘꼼수편성’ NS(농수산)홈쇼핑/이번엔 ‘꼼수상장’?»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NS홈쇼핑〉= 『농수산 전문 TV홈쇼핑인 NS홈쇼핑이 설립 명분인 농수산물 판매를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몰두해 비난받고 있다. 정부의 느슨한 규제를 틈타 다이어트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농수산물로 둔갑시키는 한편 황금시간대에 대주주인 하림의 상품을 집중 배치하는 등 편법 편성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을 앞두고 하림의 주도 아래 부랴부랴 증시 상장을 추진중이어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과 NS몰을 운영하는 NS쇼핑은 지난해 매출 3,904억원, 영업이익 925억원을 올렸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전년보다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13% 늘었다. 전체 취급고도 최대인 1조2,382억원을 거뒀다. 취급고 대비 영업이익률은 7.5%로, 5% 안팎의 경쟁사 평균치를 훌쩍 웃돈

다. NS홈쇼핑은 송출수수료 경쟁을 지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발굴한 점이 실적 개선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홈쇼핑업계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수산물을 팔아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NS홈쇼핑은 관련 법에 따라 전체 방송편성에서 농수축임산물을 60% 이상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농수축임산물의 범위가 모호해 농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에 이어 특산품, 원예상품 등도 포함된다. 다이어트식품이나 중국산 가공식품도 농수산물 범주에 넣어 60%의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열린 제7홈쇼핑 공청회에서도 NS홈쇼핑의 ‘꼼수 편성’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안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NS홈쇼핑이 농수산 편성비율 60%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 국산 농수산물 비중은 6%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60%의 의무 편성비율도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001년 출범 당시 농수산물 의무 편성비율은 80%였다. 하지만 2004년 재승인 때 60%로 완화됐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개국한 홈앤쇼핑이 의무 편성비율을 80%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NS홈쇼핑은 이것도 모자라 농수산물로는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편성비율을 35%까지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NS홈쇼핑이 돈을 더 벌 목적으로 농수산물 의무 편성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하림 몰아주기’도 여전하다. 매출이 가장 높은 프라임타임에 하림의 닭가슴살, 치킨 등과 자회사 주원산오리의 상품만 팔아도 의무 편성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림 홈쇼핑’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시선도 따갑다. NS홈쇼핑이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수익성에만 골몰하는 바람에 제7홈쇼핑 출범의 명분만 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판매량에 따라 매출을 나누는 정률제에 비해 편성시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정액제 비중이 업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도 NS홈쇼핑의 고질적인 ‘갑질 행태’로 꼽힌다. 황근 선문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농수산 전용 홈쇼핑

으로 허가를 내준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농수산물 편성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악의 경우 재승인 취소 등의 철퇴를 내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구설에 오른 NS홈쇼핑이 롯데·현대홈쇼핑과 함께 홈쇼핑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NS홈쇼핑은 지난해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100억대 카드깡’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바 있어 재승인을 앞두고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NS홈쇼핑이 상장하면 하림 김홍국 회장 일가는 최소 4,000억원 가량을 거머쥔 것으로 보인다. NS홈쇼핑은 하림홀딩스(40.7%)가 최대주주이고 김 회장의 아들 김준영 대표가 운영하는 올품 등 하림 계열사도 4.0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길 잃은 밀레 …〉=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가 브랜드 정체성을 잃고 갈팡질팡하며 충성 고객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반짝 인기에 영합하는 모델 정책과 정체성이 모호한 광고 콘셉트, 타깃층의 갑작스러운 변화 등에 따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갈수록 흐려지면서 소비자 혼선을 빚고 있어서다. 심지어 젊은 층을 잡기 위해 부랴부랴 선보인 세컨드 브랜드 엠리밋과 밀레 골프 라인 역시 경쟁사 따라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밀레는 아웃도어 시장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올해 신규 물량을 전년보다 20~30% 축소하는 한편 이월행사, 할인전 등을 통해 지난해 산적한 재고를 떨어내는 소극적 전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아웃도어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6위인 밀레는 5위 네파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물론 7위 아이더에도 달미를 잡히기 직전이다. 최근 수년간 지속됐던 치열한 5위 쟁탈전에서 사실상 밀려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추고 신규 물량도 최대 30% 가까이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계속되는 할인 전략으로 최근 가파스로 2% 신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 밀레 본사의 파격적인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밀레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없는 모델 전략이 꼽힌다. 밀레만큼 모델을 자

주 바꾸는 아웃도어 브랜드도 없다는 게 중론. 1966년 등산양말을 만들던 한고상사에서 시작한 밀레는 자체 등산복 브랜드 ‘에텔바이스’의 이름을 따 2004년부터 사명을 (주)에텔바이스아웃도어로 바꿨다. 그 후 2009년 라이선스로 전개 하던 프랑스 브랜드 밀레의 한국 상표권을 100억원에 사들인 후 2010년 사명도 밀레로 바꾸며 자체 브랜드 에텔바이스 전개를 중단했다.

밀레로 사명을 변경하기 전 에텔바이스아웃도어는 산악인 한왕용과 엄홍길 대장을 메인 모델로 전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아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경쟁사의 스타마케팅에 휩쓸리며 브랜드 정체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엄태웅을 시작으로 밀레는 스타 마케팅에 뛰어든 후 이듬해 엄태웅, 고아라에 이어 2013년 하정우, 문채원, 2014년 빅뱅(탑), 박신혜, 2015년 이종석, 박신혜로 해마다 간판모델을 교체했다. 특히 하정우 등 강인한 이미지의 남성을 주로 모델로 선택했던 밀레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타깃층을 2030대로 낮추고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아이돌 스타 기용에 열을 올렸다. 그 때 그 때 반짝 부상한 스타들을 브랜드에 끼워 맞추면서 밀레의 정체성은 온데 간데 없어졌다.

이는 2011년부터 5년째 조인성을 간판으로 내세워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업계 선두 블랙야크와는 대조적이다. 아웃도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품의 기능보다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을 올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알피니즘’을 앞세운 헤리티지와 평상시 아웃도어웨어를 표방한 ‘캐주얼’을 콘셉트로 한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니 서로 상충되는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어 그나마 있던 충성 고객도 이탈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더욱이 최근 밀레의 60초 광고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광고가 아닌 이상 60초 광고가 생경해 보일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를 강요하는 듯 하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분위기에 편승해 선부른 경쟁사 따라하기 전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K2의 세컨드 브랜드 ‘아이더’가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자 타깃 연령층이 높은 밀레는 젊은 층을 끌어안는다고 ‘엠리밋’을 2013년 선보였다. 하

지만 모 브랜드인 밀레도 최근 캐주얼 아웃도어를 표방하며 갑작스럽게 타깃층을 낮추면서 엠리밋의 타깃층과 콘셉트 충돌로 서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엠리밋은 지난해 목표치를 500억원으로 잡았지만 이에 크게 못미친 400억원에 머물렀다. 엠리밋 역시 광고 모델로 지난해 드라마 ‘미생’으로 반짝 인기를 모은 아이돌그룹 제국의아이들의 임시완을 기용해 밀레의 전철을 밟고 있다.

게다가 밀레는 지난해 봄 선보인 K2의 골프웨어 ‘와이드 앵글’이 성공 조짐을 보이자 올 봄 느닷없이 ‘밀레 골프 라인’을 출시했다. 부담스러운 브랜드 론칭보다는 신규 라인을 통해 시장을 떠보겠다는 식이다. 일단 잘되는 경쟁사의 전략을 베끼고 보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TV 프로그램 협찬의 경우에도 항상 다른 브랜드가 들어가 인기를 얻으면 뒤따라 들어와 뒷북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밀레는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이 전무한 브랜드”라고 일갈했다.』

(스포츠조선)= 『TV홈쇼핑 NS홈쇼핑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공모청약 경쟁률 236.82대1이란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마감됐다. NS홈쇼핑은 공모가 23만5000원으로 오는 2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공모에서의 인기를 감안하면 상장 후에도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NS홈쇼핑에겐 지금 샴페인을 터뜨려도 될 정도로 성공적인 기업공개다. 그런데, 농수산 전문 TV홈쇼핑인 NS홈쇼핑의 이 같은 성공에 대해 국내 농수산 중소기업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TV홈쇼핑이란 ‘갑’의 지위를 누리며 성공한 NS홈쇼핑이, 정작 국내 중소 농수산업체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NS홈쇼핑, 국산 농수산물 판매는 고작 6%

NS홈쇼핑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농수산물 식품 위주의 TV홈쇼핑이란 타이틀을 달고 ‘농수산TV’로 문을 열었다. 이후 농수산홈쇼핑으로 개명했다, 지금의 NS홈쇼핑으로 이름을 바꾸며 TV홈쇼핑 채널로 자리를 잡았다.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국내 농수산물 판매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TV홈쇼핑 사업권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NS홈쇼핑이 본래 취지는 잊은 채 국내 농수산 업체들을

홀대한 것으로 드러나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열린 제7홈쇼핑 공청회에서 NS홈쇼핑은 ‘꼼수 편성’으로 국내 농수산물 업체들을 외면한 채 자사 수익만 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NS홈쇼핑 방송을 자체 조사한 뒤, “NS홈쇼핑이 농수산물 방송 편성비율 60%를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산 농수산물 방송 비중은 6.07%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NS홈쇼핑은 정부의 감시가 소홀하자, 농수산물 편성 시간에 다이어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꼼수’를 부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범위가 생식품과 가공·건강식품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 농수축임산물엔 다이어트·미용상품, 공예·특산품과 천연소재상품, 원예상품 외에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품도 해당된다. 이를 악용해 NS홈쇼핑은 농수산물 대신 다른 상품들을 판매했다. 또한 시청률이 낮은 새벽시간에 농수산물을 편성하고, 프라임 타임에는 패션의류·잡화·화장품·건강식품 등 돈이 되는 상품들을 편성했다.

현재 NS홈쇼핑의 농수산물 60% 의무 편성비율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2001년 출범 당시 농수산물 의무 편성비율은 80%였다. 2004년 TV홈쇼핑 채승인 때 NS홈쇼핑의 강력한 요구로 60%로 완화됐다.

그런데 NS홈쇼핑은 농수산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의무 편성비율 60%가 과도하다며 더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의무 편성비율을 35%로 대폭 낮춰야한다고 정부와 업계에 줄기차게 요청해 농수산물 업체와 관련 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런데 NS홈쇼핑은 TV홈쇼핑 업체들 중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상태다. 결국 국산 농수산물 업체와 농수산물을 판매하겠다는 설립 취지는 잊은 지 오래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NS홈쇼핑은 대주주인 ‘하림 물아주기’로 농수산물 업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NS홈쇼핑은 매출이 높은 프라임 타임에 닭고기 업체인 하림의 주력 상품들을 판매했다. 하림 닭가슴살, 치킨 등과 하림 자회사인 주원산오리 등을 프라임 타임에 편성했다.

하림 관련 상품들만 판매해도 의무 편성비율을 채울 수 있다. 업계에선 NS홈

쇼핑이 아니라 ‘하림 홈쇼핑’이라고 말할 정도다. 하림홀딩스는 NS홈쇼핑 지분 40.7%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 대표가 운영하는 올품 등 하림 계열사도 4.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홈쇼핑 재증인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 잔치

NS홈쇼핑은 기업공개를 통해 27일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6월 3일 방송채널사업자 승인유효기간 만료도 앞두고 있다. 이에 NS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증인 심사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재증인을 받아야만 계속 TV홈쇼핑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TV홈쇼핑에 대한 윤리경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재증인 과락제를 도입해 그동안 자동으로 연장됐던 채널사업권을 쉽게 연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과 농수산물 업체들에 대한 홀대와 ‘갑질’은 NS홈쇼핑의 재증인에 큰 걸림돌이다. 실제로 TV홈쇼핑 업체들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의 대표로 꼽히는 오명을 안고 있다. NS홈쇼핑 역시 여기서 피해갈 수 없다. NS홈쇼핑은 판매량에 따라 매출을 나누는 정률제보다 편성시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정액제 비중이 TV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높다. 방송 편성권을 쥐고 있는 NS홈쇼핑의 전형적인 ‘갑질’인 셈이다. 농수산물 업체로서는 NS홈쇼핑이 정한 일정금액을 지출하는 것보다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NS홈쇼핑은 지난해 100억원대의 ‘카드깡’으로 매출을 부풀려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NS홈쇼핑 직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올리는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내부 단속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스포츠조선은 각각 ‘NS홈쇼핑’ 기사에서 NS홈쇼핑이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나선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또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 기사에서 밀레가 정체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홈쇼핑’과 관련, 서울경제는 『정부의 느슨한 규제를 틈타 다이어트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농수산물로 둔갑시키는 한편 황금시간대에 대주주인 하림의 상품을 집중 배치하는 등 편법 편성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특히 홈쇼핑 사업자 채승인을 앞두고 하림의 주도 아래 부랴부랴 증시 상장을 추진중이어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조선은 『NS홈쇼핑은 대주주인 ‘하림 몰아주기’로 농수산물 업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업계에선 NS홈쇼핑이 아니라 ‘하림 홈쇼핑’이라고 말할 정도다』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과 농수산물 업체들에 대한 홀대와 ‘갑질’은 NS홈쇼핑의 채승인에 큰 걸림돌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두 신문은 NS홈쇼핑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도 NS홈쇼핑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밀레’ 기사에서도 『밀레의 정체성은 온 데 간 데 없어져』, 『느닷 없이 ‘밀레 골프 라인’을 출시』, 『잘되는 경쟁사의 전략을 베끼고 보자는 것』, 『“밀레는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이 전무한 브랜드”』라고 비판하면서도 밀레 측에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55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5년 5월 6일자 9면 「“‘박래군 사단’이 대책회의 좌우/여권 타격 진보정권 수립 목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래군(사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은 박 대표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내부를 장악했고, 정부 및 여당에 부담을 주는 정치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국민대책회의는 민족해방전선(NL)과 민중민주(PD) 계열을 망라해 800여 개 단체가 참여했고, 이른바 ‘박래군 사단’이 모든 의사 결정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책회의 핵심 세력이 외부적으로 ‘성역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여당에 타격을 줌으로써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정권 수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지 25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박 대표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청와대로 가는 길은 매번 ‘근혜 차벽’으로 가로막혔고, 당신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충성스런 경찰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폭력으로 얼룩졌다”며 “당신의 모습에서 차디찬 얼음덩어리 야수의 얼굴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인 당신을 보호하려는 쓰레기 시행령을 폐기하고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는 일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전남 진도와 경기 안산에서 활동하며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논란 당시에도 평화행진단장을 맡았으며, 지난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당시에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박래균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에 관한 ‘정부 당국’의 ‘분석’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박 대표가 국민대책회의 내부를 장악했고, 정부 및 여당에 부담을 주는 정치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정부 당국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대책회의 핵심 세력이 외부적으로 ‘성역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여당에 타격을 줌으로써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정권 수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세월호 대책회의를 마치 정치집단인 양 기술한 위 기사 내용에 대해 대책회의나 박 대표 측에서 반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문화일보는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8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재울

주문

중부일보 2015년 6월 4일자 5면 「이 와중에 ... 직원 끼고 눌러간 시의장/안성시의장 중국 연수 비난 쇄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의장들이 맞나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1천300여명을 넘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 의장이 직원 2명과 관광성 중국연수를 떠나 비난이 쇄도.

특히 안성과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메르스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도읍 지역 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라 비난의 수위가 높은 실정.

한 3일 오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메르스 대응 긴급 점검회의가 열리는 등 메르스로 인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자질 문제까지 거론.

현재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장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간 중국 황산시로 연수를 떠난 상태.

본보가 입수한 연수 일정을 보면 5일간의 일정 중 공식일정은 첫날과 둘째날 황산구 민간박물관방문과 환산관과위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전부이며, 방문 3일째부터 단하봉 황산일출 감상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홍춘’을 견학하는 등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진 상황.

특히 대통령 주재 긴급 점검회의가 열린 3일 오후에는 중국 휘운가무 쇼를 관람해 빈축.

이같은 상황에서 유광철의장은 3일 오전 시민들에게 메르스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안성지역이 345KV송전선로 노선문제와 배나무 화상병, 메르스까지 확산돼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연수를 빙자한 외유는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일침.

한 시의원은 “직원을 둘씩 동반하면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간 것도 그렇고 이런 비상상황에서 연수를 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난.』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는 위 기사에서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회 직원 2명과 함께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황산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유 의장 일행의 연수일정은 첫날과 둘째 날에 잡혀 있는 공식 일정 2건을 빼면 모두 『관광성 일정』으로 짜졌다는 것이다.

기사는 유 의장이 중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6월 3일 시민들에게 『메르스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전하면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편집자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사 큰 제목을 「이 와중에 … 직원 끼고 놀러간 시의장」이라고 자극적이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같은 시기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의장은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안성 평택 등 경기 남부권 6개 시의회 의장단의 일원으로 중국의 관광문화를 벤치마킹 한다는 명분으로 황산으로 갔다. 유 의장은 중국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일찍이 잡혀 있던 경기 남부권 의장단의 일정이라 어쩔 수 없이 오게 됐다”고 해명했으며,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6개 시의회의 팀장과 주무관 등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다른 언론은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그러나 유 의장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위 기사는 물론 그 이후 지면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메르스 파문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메르스 발생·확산 지역인 경기도 남부지역 시의회 의장 6명이 관광성 연수를 간 행위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의장들과 함께 간 사실은 거론하지 않고 안성시장 혼자서 직원 2명을 동행시킨 채 중국으로 놀러간 것처럼 보도한 중부일보의 위 기사와 제목은 특정인을 겨냥한 불공정 보도로서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른 과장·왜곡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

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60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주문

세계일보 2015년 9월 10일자 1면 「조남풍〈향군회장〉에 자리 보전 대가 억대 상납」·3면 「돈 선거·인사파행 … 보훈처 명령도 무시한 ‘막가파 회장님」, 9월 11일자 1면 「조남풍〈향군회장〉 해외출장 ‘부실투성이」·6면 「조회장, 이권회사 대표에 측근들 앉혀 … 제2 BW사건 ‘시한폭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일자 1면, ‘억대 상납」= 『검찰이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을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전횡과 무분별한 업무처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 회장의 범법행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노조 설립과 보훈처 특별감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향군은 또 한차례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9일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이 지난달 4일 조 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지난달 31일 사건담당 검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돼 최근 향군의 조직·예산·인사 부장 등 간부와 조 회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줄줄

이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검찰은 향군 회장 직책에 공직자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조 회장 수사는) 업무방해죄와 배임 및 배임수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다”며 “조 회장이 4월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선거캠프 요원들의 ‘보은인사’를 위해 기존 향군 사업체 대표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으로 쓴 돈이 2억3205만원에 달하는 점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군상조회, 충주호관광선 등 10개 향군 사업체 가운데 유임이 결정된 3개사 대표들이 조 회장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보전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 보훈처는 검찰 기소 이후에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이미 법제처를 통해 조 회장의 직무정지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상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직무정지 결정을 하더라도 조 회장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내면 재판판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며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이 확정되면 가처분신청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직무정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무정지 통보에 맞서 가처분신청이 제기돼 시간을 끌다 보면 오히려 조 회장 임기 4년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여전히 향군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만 지켜보며 감독기관의 명령과 권고를 우습게 여기는 향군 회장을 제때 고발하지 못하는 보훈처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향군 노조는 지난달 3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조 회장 직무정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보름간 일정으로 미국과 멕시코 출장을 떠났다. 보훈처가 국정감사 기간임을 고려해 출장 자제를 요청했으나 조 회장은 이를 묵살했다.』

〈10일자 3면, ‘막가파 회장님’〉= 『제향군인회(향군)는 산하에 중앙고속 등 10

개 사업체를 거느린 자산 규모 1조원대 그룹이다.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회장 선거 때면 금권선거가 판을 쳤다. 또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성 협찬을 받고 당선이 되면 신규사업을 남발해 빌린 돈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잡음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했다. 장성 출신 예비역들로 ‘대물림된’ 주먹구구식 경영은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무분별한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에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향군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516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그런데 빚 갚기에도 바쁜 향군에서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952년 창설 후 처음으로 노조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특별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인사전횡 등 갖가지 추문으로 향군 회장은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모두가 지난 4월 조남풍 회장이 취임한 뒤 빚어진 일이다. 도대체 향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조남풍 향군 회장은 지난 4월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실정(失政)’을 거듭했다. 자신의 선거캠프 요원들을 향군 고위직에 기용하기 위해 기존 인사들을 쫓아내고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명령은 철저히 무시했다. 예산을 남용하고 향군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BW사건 핵심 주모자의 구명 시도까지 했다. 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서는 그 돈으로 대의원들을 매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문제 삼는 노조는 탄압했다. ‘안하무인’의 행태에 영(傭)이 설 리 만무하다. 사실상 지휘권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 명령도 무시한 각종 전횡

조 회장은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뒤인 지난 6월 초 중앙고속 등 산하 사업체 대표와 임원 등 13명을 선거캠프 출신 예비역으로 교체하는 물갈이를 단행했다.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채용한 것이다.

향군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핵심 요직인 경영본부장에 조모 씨를 앉힌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조 씨는 2011년 3월 향군 U-케어사업단장으로, 4개 상장사가 발행한 BW의 지급보증을 해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최부용씨와 가까웠기 때문이다. 조 씨는 최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였다. 조

씨 채용을 위해 조 회장은 지난 5월8일 경영본부장에 임명한 사람을 불과 21일 만에 해임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보훈처가 7월 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한 25명의 대표, 임원 및 계약직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조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겉으로 해임 절차를 밟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이 중 21명을 다시 임용했다. 나이가 58세 이상으로 채용 연령제한에 걸리는 인사는 나이 제한이 없는 고위직에 재임용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 회장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로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 회장은 이를 두고 “향군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동대문체육관에서 ‘안보결의 및 청년단 진진대회’ 개최도 밀어붙였다. 보훈처는 이 행사가 올해 사업계획에 없다는 점을 들어 추후 승인을 받은 다음 개최할 것을 권고했으나 조 회장은 이 역시 무시했다. 국정감사 기간과 겹쳐 자제 권고를 받았던 국외 출장도 그대로 강행했다.

◆부정선거 논란과 BW사건 주모자 구명 시도

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 회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카페 등지에서 대의원들과 만나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800여만원의 돈을 뿌렸다. 조 회장이 선거 당시 대의원 380여명 중 250명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도 향군회장에게는 1000만~2000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조 회장의 자금줄로는 BW사건의 주모자였던 최부용 전 향군 U-케어사업단장 측이 꼽힌다. 조 회장은 최 씨에게서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지만 대략 24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은 끊이질 않고 있다. 향군 한 관계자는 “이전 회장들도 선거 때면 돈을 뿌렸는데 왜 조 회장만 문제 삼느냐”고 항변했다. 향군의 금권선거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조 회장이 최 씨의 구명을 시도한 적도 있다. 조 회장은 최 씨의 측근인 조모 씨를 지난 6월1일 경영본부장에 임명했는데, 당시 최 씨는 횡령죄(32억원)로 1심에서 징

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경영본부장을 맡은 조 씨는 최 씨의 BW사건 관련 소송에서 향군이 채권 회수액을 214억 원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철회하고 채권 회수액을 450억 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려다 보훈처 감사에서 적발됐다. 향군의 피해 규모를 축소해 최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예산도 멋대로 집행

산하 사업체 대표와 임원 등을 무리하게 교체하는 바람에 지출된 급여는 1억 3000만원, 기존 경영진에게 지급된 강제퇴직 위로금은 2억3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4, 5월에는 향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향군발전위원회’를 만들어 2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규정을 어겨가며 선거캠프 요원들을 임용해 1억원가량을 급여 등으로 지급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600여만 원을 초과해 지난 6월과 7월 각각 1000만원씩을 추가 지출했다. 전임 박세환 회장의 월평균 활동비 608만 원에 비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향군 관계자는 “선거캠프 요원에 대한 보상은 후보자의 사비로 지출해야 마땅한데 규정에 벗어난 편법 임용을 통해 향군 예산을 가지고 논공행상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를 ‘불순세력’으로 몰아 탄압

조 회장의 전횡이 계속되자 향군 본부는 부장단을 중심으로 6월29일 노조를 결성해 7월2일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창립 63년 만에 처음 설립된 노조는 신임 회장의 인사전횡과 비리 의혹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 회장은 노조를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에 나섰다. 7월17일에는 노조위원장의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성동구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달 4일 향군 노조와 이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날 주간회의에서 “×새끼들”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같은 달 4일에는 노조위원장을, 19일에는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1일 성동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은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도 노조의 경과보고회 장소 제공을 거부했다.』

〈11일자 1면, '해외출장'〉= 『국가보훈처의 만류에도 지난달 31일부터 보름간 미국과 멕시코로 해외 출장을 떠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의 현지 공식 일정이 대거 취소되고, 상당수는 문화탐방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와 검찰수사를 의식해 일정을 급조하고 출국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9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조 회장의 '미주지역 출장 세부 일정'에 따르면 그는 '글로벌 향군으로 위상 제고'를 위해 미국 워싱턴과 볼티모어, LA, 멕시코 멕시코시티, 하와이 호놀룰루를 도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9월3일 미국을 방문해 미 재향군인회(AL) 총회에서 연설하고, 미 보훈부 장관 예방, 현지 지회 관계자 안보간담회 등을 주재하기로 했다. 4, 5일은 멕시코 국방장관 및 보훈처장관을 예방한 뒤 주멕시코 대사 환영 만찬 등에 참석하기로 했다. 6~8일 미 LA에서는 향군 남서부지회를 순시한 다음 9일 하와이로 이동, 11일 주호놀룰루 총영사 환영 만찬을 갖고 13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일정은 지난달 31일 미 메릴랜드 주지사 주최 만찬과 1일 AL 정기총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됐다. 2일 미 보훈부 장관 예방을 비롯해 3일 주미대사 주최 환영 오찬, 4일 멕시코 국방장관과 보훈처장관 예방 및 주멕시코 대사 만찬, 11일 주호놀룰루 총영사 환영 만찬까지 줄줄이 취소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국 때까지 미 보훈부 장관이나 멕시코 군 고위인사 면담은 확정되지 않았고, 전 한미연합사령관들 만찬 또한 참석 인원과 장소조차 불확실한 가운데 무작정 떠났다”며 “급조된 일정이어서 출장 자체가 ‘부실투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외유성 일정도 적지 않았다. 1일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미 AL 총회 참석 직후 조 회장은 지역 해안경비대, 맥헨리 요새, 고대 선박 등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에 나섰다. 멕시코 방문 일정은 그야말로 ‘관광’ 수준이었다. 대부분 문화탐방과 자유시간으로 때웠다. LA 방문 또한 지회 순시를 제외하면 닉슨기념관, 미 개척역사박물관 관광과 자유시간으로 채워졌다.

하와이에서도 편지봉 국립묘지 헌화와 지회 창설 관계자 오찬을 제외하면 문화탐방으로 짜여졌다. 이 같은 ‘외유’에 조 회장은 향군 예산 5600여만원을 지

출하고도 “비용이 부족하다”며 현지에서 추가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은 1등석을 이용했는데 산하 사업체인 중앙고속에서 3000여만원을 외상으로 지원받았다.

또 해외 출장에 수행원 1명만 데리고 가는 관례를 깨고 향군 국제협력실장과 감사실장, 국제협력부장 등 3명을 대동했다.』

〈11일자 6면, ‘시한폭탄’〉= 『“회원 800만명이 넘는 재향군인회가 계좌에 남은 돈이 수백만원뿐인 빈털터리가 됐다. 한 간부가 독단적으로 700억원대의 대출 보증을 선 게 화근이었는데 이 간부가 검찰에 구속될 때까지 향군에선 아무도 몰랐다.” “재향군인회가 허술한 지급보증과 산하 사업단장의 횡령 등에 휘말려 790억원을 투자사에 물어주게 됐다.” 2012년 6월 주요 언론을 이렇게 장식한 이른바 향군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이다.

◆ 결국 터질게 터진 BW사건

사건은 예견된 것이었다. 문어발식으로 아파트 건설 등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의 조사 결과, 향군은 코스닥 상장사인 G사 등 4개 중소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 줬으나 업체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대신 갚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군회장 직인을 도용해 4개 회사에서 발행되는 BW에 향군 명의의 지급보증을 해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주범은 향군 S&S사업본부 산하 U-케어사업단장인 최부용씨였다. S&S사업본부는 향군 직영사업체 중 하나로 특정한 사업을 정해 두지 않고 유망한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문제는 최 씨가 사업보다 잣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최 씨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4개 회사 대표들과 짜고 지급보증을 해줘 각각 130억~310억원 가량을 대출받게 주선했다. 그 대가로 상장회사와 물품매매계약을 맺고는 대출금 중 700억원 가량을 선급금으로 받았다. 최 씨는 이 중 400여억원은 4개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77억원은 향군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놓고는 수시로 빼내서 썼다. 향군의 인감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최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이전에 실패한 사업의 빚을 갚거나 강원랜드를 들락거리며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W사건은 현재진행형

잊혀져 가던 BW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조남풍(77·육사18기) 회장이 취임한 뒤, 조 회장이 선거 직전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당시 ‘1인 500만원’이라는 액수와 돈을 전달한 날짜, 시간, 장소 등 금품 살포 정황이 담긴 선거캠프 내부분서가 나돌았다. 재향군인회 시·도지부장들에게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돌렸다는 말도 들렸다. 이전 선거 때와 비교해 몇곱절 많은 액수였다.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 군인연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조 회장 처지로 미뤄 볼 때 주변의 적잖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정에서 BW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최 씨가 자금줄로 다시 등장했다. 지난 7월7일 직원 간담회에서 노조 관계자가 “선거자금이 (BW) 횡령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묻자, 조 회장은 “그 사람한테만 끝 것이 아니다. (내 자금) 고갈상태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지원을 받았고 공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사실상 최 씨 측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조 회장이 취임 이후 최 씨 수하인 조모 씨를 향군 경영본부장에 앉혔던 배경이기도 하다.

보훈처 감사로 ‘불발’에 그쳤지만 최 씨는 조 씨를 이용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 결국 최 씨는 지난달 21일 2심에서 횡령(149억원)과 사기(32억원)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때 32억원 횡령, 3년형에서 형량이 곱절 가량 늘었다. 향군 관계자는 “BW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조 회장의 막가파식 전횡의 이면에는 향군이 보유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사업체 또는 이권에 개입하려는 이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군 ‘곳간’ 노리는 업자 수도룩

현재 향군 산하에는 법인 7개와 직영사업체 3곳이 있는데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다. 5516억원에 달하는 빚은 2009년 리먼 사태 때 짚

어진 것으로 산하 사업체의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로 대물림된 향군회장은 향군의 각종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끌었다. 자연히 회장 선거 때마다 선거자금을 대주고 ‘눈먼 돈’을 빼먹으려는 인사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다. 최 씨 또한 선거자금을 빌려주고 조 회장을 주무르려 했을 개연성이 높다.

현재 향군이 정부로부터 20년간 무상지원받는 송파신도시 3만3000m²(1만평) 부지 개발은 이미 마스터플랜이 다 짜여진 상태다.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공모 준비 및 공모, 설계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 공사비만 4200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이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재향군인회 사옥인 30층짜리 잠실타워를 팔고 55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강남 노른자위 땅을 둘러싼 이권 다툼은 불보듯 뻔하다. 포스코와 현대조선, KT 등에서 배출되는 고철은 재향군인회 산하 향우실업이 관리한다. 이 또한 업자 선정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다. 조 회장은 최근 이러한 향군 산하 사업체 대표과 임원들을 대부분 물갈이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무산될 경우 과거부터 이어져 온 향군 비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재향군인회의 문제점을 다룬 「‘복마전’ 재향군인회 해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상, 중, 하로 나누어 연재했다. 위 기사들은 (상) ‘조남풍 회장의 전횡’과 (중) ‘끝나지 않은 BW사건’ 기획과 관련된 기사들로 1면에서 조 회장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고, 3면과 6면 전체를 할애해 의혹과 문제점을 짚고 있다.

‘10일자 1면 역대 상납’ 기사는 검찰이 조 회장을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다. 향군 사업체 3개사 대표가 자리 보전을 위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 금품을 조회장에게 상납했

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위 기사 관련기사인 ‘6면 막가파 회장님’ 기사 역시 돈 선거, 인사파행 등에 대해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11일자 1면 해외출장’ 기사는 조 회장의 해외 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관련 기사인 ‘6면 시한폭탄’ 기사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조 회장이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들 기사는 민감한 내용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조회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54 신문윤리강령 위반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주문

새전북신문 2016년 2월 17일자 1면 「대한관광 리무진버스 독점운행 폐해 심각」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새전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설 명절에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다녀온 양인식씨는 인천공항에서 전주행 대한관광 리무진 버스를 타면서 불쾌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 탓에 몸은 잔뜩 움츠려들었지만 짐칸에 짐을 싣는 일은 손님들 몫이었다.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운전기사들이 짐을 실어준 서비스를 경험한 까닭에 공항 리무진 버스의 불친절은 도드라졌다.

지난해 여름 독일 뮌헨을 다녀온 임효원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방행 버스를 타는 곳에서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던 임 씨는 다른 버스에 가려 전주행 리무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뒤늦게 대한관광 리무진 버스를 발견하고 승차를 요구했지만 운전기사는 출발 시간이 됐다며 거부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버스에 오르기는 했지만 임 씨는 울화를 감추기 어려웠다.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대한관광 리무진버스의 고질적인 독점 운행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관광 리무진 버스의 독점 운행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요금, 출발 기점 변경에 따른 배짱 영업, 불친절한 서비스를 거론하며 전북도를 상대로 독점적인 노선 운행에 제동을 걸고 공항버스 환승 편의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관광 리무진버스는 도내 유일한 한정 면허로 1996년 면허 발급 이후 그동안 한 차례만 갱신(1999년)했을 뿐 20년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최 의원은 “독점적 운행 행태로 인한 폐해는 만만치 않다”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운임을 꼽았다.

국토부 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한정 면허 특성상 km당 115.7원을 책정했으나 이는 부산(95.4원), 광주(95.3원)와 비교할 때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 의원은 “독점에 힘입어 대한관광은 최근 4년동안 3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복수 운송사업자가 있어 경쟁체제가 형성된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은 독점을 보장함으로써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 조건을 위반한 배짱 영업도 거론됐다.

면허 발급 당시 출발 기점은 전주 코아호텔이지만 대한관광은 2014년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변경한 뒤 배짱营业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고발과 6차례에 걸친 노선 운행 정상화 지시, 과징금 부과

(17건 4,050만원) 등 행정 처분을 했지만 대한관광은 이에 불응해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최초 면허 허가 조건인 출발 기점을 자신들 편의대로 해석해 불법 변경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도민들을 볼모로 자신들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일반 노선 사업자의 공항 노선 운행을 허가함으로써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독점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대해 전주~대야~인천공항, 전주~익산~군산~인천공항,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허가했지만 역시 대한관광의 소송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최 의원은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사업 기간을 무제한 보장하는 한 정 면허는 독점과 다름없어 일반인의 법 정서와 맞지 않다”며 경쟁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는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대한관광 리무진 버스가 20년간 독점운행을 하면서 폐해가 심각하다는 도의원(최은희)의 임시 회 발언 등을 소개한 것이다. 최 의원은 대한관광 리무진버스의 폐해로 △전국 최고의 운송요금 △출발기점을 변경하는 등 배짱영업 △불친절한 서비스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일반 노선 사업자에게도 공항 노선 운행을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이미 대한관광 리무진버스에 대해 여러 차례 출발지 변경 노선운행 정상화 지시를 내리고 다른 운수업체에 인천공항 노선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한관광 리무진버스도 전북도의 행정처분과 다른 운수업체에 대한 노선허가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의 주장은 대한관광 리무진버스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새전북신문은 대한관광 리무진측에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자료의 검증

2015-1132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 2015년 4월 6일자 16면 「“고령에 약해진 뼈 … 나사못 수술 대신 원리칩 택했죠”-장옥심씨/원리칩 문화 보급 캠페인-고령의 여성 환자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를 내보내면서 전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허리 디스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병이다. 하지만 고령일수록 치료가 힘들고 완치가 어려워 더욱 고통스럽다. 특히 여성 고령자의 경우 남성보다 수술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약해져 있는 뼈가 나사못을 지탱하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수술이 두려운 고령의 여성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소개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원리침 문화 보급 캠페인’이라며 위 전문 기사와 3건의 환자 사례를 1개면에 걸쳐 보도했다.

기사는 전문 아래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을 각각 ‘원리침’으로 치료해 증상이 크게 호전됐다는 여성 환자 사례 3건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이들 사례와 관련이 있을 법한 특정 인물의 도움말을 「오해 마세요!」 제목 아래 문답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답 아래쪽에는 ‘도움말= 이견목대한한의침도학회장·세계침도학회부회장’이라는 표현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다. 이 회장은 원리침을 시술하는 사람이며, 인터넷 주소는 이 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특정 병원의 인터넷 주소다.

위 기사는 특정 병원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선치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09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스포츠동아 2015년 3월 2일자 13면 「30분이면 80% 충전 … 파워도 중형세 단급/전기차 판매 1위 닛산 ‘리프’ 시승기」, 3월 16일자 13면 「Q세단의 진화 … 겉은 나쁜남자 속은 젠틀맨/인피니티 Q70 시승기」, 3월 24일자 21면 「“넓은 공간·역동적 주행성능” 다목적차량도 BMW/BMW ‘뉴 액티브 투어러」, 3월 25일자 13면 「아우디, 올해 7종의 신차가 쏟아진다」, 3월 26일자 16면 「QM3의 진화 … 실용성·디자인 급이 다르다/르노삼성 ‘QM3 RE 시그니처」 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3월 24일자 B8면 「7년 만에 한층 진화해 돌아온 메르세데스-AMG C63/다부진 성능에 연비까지 잡았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스포츠동아, 東亞日報의 위 기사들은 새로 시장에 나왔거나 화제가 되고 있는 승용차들을 시승기나 제품 소개 형식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그러나 차량의 문제점까지 꼼꼼히 살펴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광고 카피를 연상케 하는 제목에다 감성적인 수식어와 홍보성 짙은 문구,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들을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0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방 상 훈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朝鮮日報 2015년 6월 4일자 「분양 현장」, 6월 25일자 「Real Estate」 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5일자 「화제의 분양현장」, 6월 19일자 「Home & Dream」 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12일자 「부동산」, 6월 26일자 「부동산」 별지 섹션, 매일경제 6월 23일자 「여름 분양 아파트」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별지 섹션은 분양 아파트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를

결들여 분양 아파트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4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방 상 훈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朝鮮日報 2015년 8월 10일자 「Biz & People」 별지 섹션, 매일경제 8월 26일자 「Beauty & Life」 별지 섹션, 東亞日報 8월 26일자 「기업&CEO」, 8월 27일자 「CEO&」, 8월 31일자 「여행, 나를 찾아서」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朝鮮日報, 매일경제, 東亞日報는 특정 병원이나 기업, 제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별지 섹션을 제작했다.

섹션에 게재된 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해당 병원이나 기업, 제품 등을 홍보성 짙은 문구를 결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4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주문

매일경제 2016년 1월 11일자 B10면 「겨울 휴가지 못 정했니? ... 난 켄싱턴으로 간다」, 1월 18일자 B8면 「소중한 겨울 추억 켄싱턴과 함께」, 1월 25일자 B8면 「회원권 하나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 주말여행 떠나요」 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월 15일자 B1면 「수자원공사 'ICT<정보통신기술> 水관리' 수출 ... 물산업 韓流 일으킨다」 제목의 기사·B4~B5면 「Cover Story-한국수자원공사」 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매일경제는 '켄싱턴 호텔&리조트'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홍보성 기사를 여행 섹션(「TOUR WORLD」)에 3주 연속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 게재했다.

한국경제는 수자원공사를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와 사장 인터뷰를 사진과 그래픽을 곁들여 광고 없는 3개면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사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 (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의사실의 보도

2015-1229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5년 8월 4일자 12면 「화장품 ‘더페이스샵’ 신화 주인공인 정운호 대표/수십억 해외도박 혐의로 곧 소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성공 신화의 주인공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가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정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국내 기업인들이 동남아 일대 도박장에서 1회 최고 베팅액이 1억 원이 넘는 ‘바카라’ 도박을 벌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마카오와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 도박장을 차리고 수수료와 고리대금을 챙겨온 범서방과 등 국내 폭력조직을 수사하면서 “정 대표도 도박을 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정 대표의 도박 혐의 액수는 수십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현지에 있는 폭력조직원에게서 칩을 외상으로 빌려 사용한 뒤 국내에서 갚았는지, 도박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정 대표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시로 인출한 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해외에서 사용한 돈의 용처와 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 대표의 도박 혐의를 내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정 대표는 2003년 더페이스샵을 설립해 2년 만에 업계 1위로 올려놓으며 국내 화장품 업계의 성공 신화를 썼다. 2010년 대표로 합류한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 시장 진출로 지난해 매출 2552억 원을 올리며 ‘K뷰티’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달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 대표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성공 신화의 주인공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가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 보도가 나간 시점은 검찰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단지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는 때로 검찰이 정 대표를 피의자로 확정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위 내용은 검찰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기자가 취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자는 피의사실을 보도하면서 매우 신중해야 하며, 설령 정 대표가 피의자로 확정됐다고 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사는 그의 이름과 그가 대표로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채 혐의내용을 보도했다. 게다가 정 대표에게 답변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편집자도 「화장품 ‘더페이스샵’ 신화 주인공인 정운호 대표/수십억 해외도박 혐의로 곧 소환」으로 큰 제목을 뽑아 그의 해외도박 혐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⑥(피의사실의 보도), 제7조「범죄 보도와 인권존중」전문,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2015-1241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주문

中都日報 2015년 8월 26일자 15면 「보령 머드 범벅된 스페인 ‘Mejor(최고)」」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넘버원 축제 ‘보령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 ‘라 토마티나’(토마토 축제) 참가자들의 마음을 훔쳤다.

스페인 현지 시각 24일 낮 12시(한국시각 24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리틀 보령머드축제’에는 지난 달 막을 내린 보령머드축제장의 열기와 관심이 그대로 옮겨졌다.

뷰놀이에서는 26일(스페인 현지시각) 단 하루 개최되는 라 토마티나(토마토 축제) 연계행사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며, 리틀 보령머드축제는 라 토마티나 축제 이틀전인 24일에 뷰놀이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라 토마티나(토마토 축제)의 연계행사로 스페인 뷰놀이에서 개최된 리틀 보령머드축제장에는 ‘보령머드체험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형머드탕(4개)와 소형슬라이드(2개), 놀이형 에어바운스(4개)가 설치됐으며, 토마토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세계 각국의 관광객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한번 경험해 본 뷰놀이 시민들은 또 한번 축제 체험을 통해 머드의 열기에 빠졌으며, 올해 첫 경험해본 관광객들은 처음에는 토마토 축제장에 설치

된 체험시설을 보고 의아해 했으나, 유럽인 특유의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곧 체험시설을 통해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신나는 머드체험을 즐기고 'Mejor Festival!'(스페인어로 최고 축제란 뜻)을 연발했다.

이날 스페인 공영방송사와 Hoy bunol 등 지역 방송사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체험 장면을 촬영하는 등 '리틀 보령머드축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토마토축제 홍보 팸플릿과 현수막에도 보령머드축제에 대해 게재해 보령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증명했다.

시 관계자는 행사장에서 뷰놀이 관계자를 통해 '보령 머드'가 피부 노화방지, 노폐물제거, 미용효과 등이 있다고 안내방송을 통해 축제 참가자들에게 알려 지난해 다소 아쉬웠던 '머드의 효과' 부문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날 체험장에서 사용된 머드는 보령머드파우더로 머드축제장에서 사용되던 머드와 동일하며, 행사를 위해 지난 8일 스페인 뷰놀시로 보냈었다.

스페인 토마토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되며, 스페인 발렌시아지방의 작은 마을 뷰놀에서 1944년부터 시작됐다. 26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마토축제에 2만 2000명이상이 참가하며, 약 5만의 토마토가 뿌려진다. 2013년부터는 1인당 10유로의 입장료로 유료화 됐으며, '리틀 보령머드축제' 체험행사는 본행사가 열리는 2일전에 지난해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 스페인에서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의 연계행사로 '리틀 보령머드 축제'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스페인 현지에서 토마토 축제 이틀 전에 열린 리틀 보령머드 축제는 소형 머드탕과 소형슬라이드, 놀이형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기사는 『유럽인 특유의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곧 체험시설을 통해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신나는 머드체험을 즐기고 'Mejor Festival!'(스페인어로 최고 축제란 뜻)을 연발했다.』, 『이날 스페인의 공영방송사와 Hoy bunol 등 지역 방

송사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체험 장면을 촬영하는 등 ‘리틀 보령머드축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라고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바이라인 출처가 ‘보령’인 점을 볼 때 기자가 스페인 현장에 가지 않고 쓴 기사다. 그렇다면 기자는 이 기사내용을 어떻게 취재했는지, 취재원이 외신 기사인지, 보령시 관계자인지 등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

이처럼 기자가 뉴스 발생 현장에 가지도 않고 취재 및 보도를 하면서 아무런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행위는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법보도준칙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2015-1193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5년 6월 10일자 2면 「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여객선은 섬 주민에 유일한 교통수단”」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불도저. 전문경영인 출신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사진)의 별명이다. 그는 대한전선그룹에 입사해 계열분리 이후 대한제당 대표이사 사장과 부회장을 지냈다. 남 다른 추진력을 눈여겨 본 당시 대한제당 고 설원봉 회장의 신임을 받아 그룹분리 과정에서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해냈다.

박 의원의 ‘불도저 추진력’은 2000년 초반 인천 정무부시장 시절 빛이 난다. 송도국제신도시 개발구상에 참여해 밀어붙인 것. 주변의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인천의 내일도 열린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섬 주민 지원 법안 처리 주력= 박 의원이 최근 주력하는 법안이 2개가 있다. 모두 섬 주민 지원을 위한 것이다. 대표적 도서지역인 서해 5도가 지역구에 포함돼 있는 사정과는 무관치 않다. 6대째 강화도 토박이에 해군 장교 출신인 그의 ‘본능적 바다사랑’과도 관련이 있다.

하나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육지의 버스·

지하철 같이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준해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실제 전국의 30만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이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발의했다. 정부가 도서지역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객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야 기싸움에 발 묶인 법안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농림식품해양수산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년째 묶여 있다.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제주도와 연육교로 연결된 섬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할 예산이 크게 늘면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의 경우 주교통수단이 항공기이고, 연육교가 연결된 섬은 육상교통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수정안은 상임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제주시울) 등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박 의원은 “30만 도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소모적인 힘 겨루기에서 벗어나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비슷한 처지다. 이 법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박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줄다리기 끝에 ‘어구손실 보상’에 합의하면서 입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처리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두 법안은 서해 5도 어민들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법안”이라면서 “여야의 소모적인 힘겨루기와 지역이기주의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2심 재판서 명예회복”= 최근 그의 또 다른 관심사는 자신의 재판이다. 지난

해 ‘전 운전기사의 돈봉투 신고’ ‘아들 자택서 6억원 현금 발견’ 등의 기사로 떠들썩했던 사건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면서 형평성 구색을 맞추기 위해 친이계 여당 의원인 나를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몰렸던 박근혜정부는 7·30 채보선에서 압승하자 사정정국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 여야 의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실제 1심 재판에서 그는 유죄(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지만, 주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설원봉 전 회장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8억3000만원, 차명으로 설립한 강서개발을 통해 2억3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직 운전기사가 신고한 3000만원 돈봉투 역시 개인 돈으로 확인돼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해운조합이 제공했다는 후원금 300만원의 수수 여부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두 번의 총선에서 저를 선택한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2015년 1월부터 ‘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라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상임위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평가 된’ 국회의원이나 IT 등 이색 경력의 국회의원을 조명하는 코너다.

위 기사는 16번째 시리즈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의정활동과 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항소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박 의원의 의정활동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항소심에 대해선 그의 일방적 주장만을 신고 있다. 기사는 『박 의원은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면서 형평성 구색을 맞추기 위해 친이계 여당 의원인 나를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수사 대상 여야 의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라면서 『실제 1심 재판에서 유죄(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지만, 주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기술했다. 문장 맥락상 박 의원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어 1심에서 무죄 받은 혐의내용은 상세히 기술한 반면 유죄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또 10가지 비위 혐의 가운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등도 보도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에 임하는 검찰의 입장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3월 11일 첫 공판이후 보도시점까지 진행 중이었다. 위 기사가 보도되기 이를 전인 지난 6월 8일에도 공판이 속개됐다. 이때문에 위 기사는 재판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또한 특정 정치인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4조 「사법 보도준칙」 전문 및 ①(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주문

강원도민일보 2015년 3월 18일자 5면 「진술 번복·DNA 제출 … 법정은 뜨거웠다/장애 친딸 성폭행 임신시킨 혐의 재판/피고 일부 부인에 감정자료 제출 공방」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강원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법정은 순간 술렁거렸다.

17일 오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된 친부와 친딸의 첫 공판.

정신연령 5세 수준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준강간)로 구속기소돼 이날 공판에 출석한 50대 A씨는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에 “(성폭행 혐의는) 일부 부인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검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 의존적 성향이 강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상황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날은 진술을 바꿨다. A씨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심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성폭행 관련)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A씨와 피해자 B씨 태아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한 공무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춘천 지역 산골마을에서 변변한 벌이 없이 친딸과 단둘이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딸을 임신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A씨가 자녀 출생 보조금 수령 문의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 상담하던 중 장애인 딸의 부친이 누구인지에 대한 A씨의 답변에 수상함을 느낀 신고가 출발점이 됐다.

해당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후 딸 B씨는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A씨는 지난 2월 4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B씨는 오는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두 번째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는 사회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지적장애 상태인 20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 상황을 보도했다. 특히 법정 내부 모습을 그린 가로 3단 크기의 큼직한 칼라 삽화를 곁들여 기사가 더욱 돋보이도록 편집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춘천 지역 산골에서 정신 연령 5세 수준인 딸 B씨와 단둘이 살면서 성폭행을 해 지난 해 8월 임신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성폭행과 관련한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A씨와 피해자 B씨 태아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기사는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진술 번복·DNA 제출 … 법정은 뜨거웠다」라고 달았다. 하지만 DNA는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일찍이 제출한 것이고, 법정이 뜨거웠는지 여부는 기사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 일부 부인에 감정자료 제출 공방」이라는 작은 제목과 관련한 내용도 기사 본문에는 없다.

따라서 위 제목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자극적으로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기사는 또 피고인과 친딸인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재판 자체가 공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적어도 방청객들에게는 이들의 신분

이 거의 공개된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강원도민일보는 피해 지역이 『춘천 지역 산골 마을』이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친딸』이라고 전하면서 피해 경위와 상황, 피해자가 5월에 출산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2차 공판 기일이 4월 7일이라는 것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5월에 태어날 아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위 기사와 관련해 이중 삼중으로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강원도민일보는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와 제목은 신문의 품위와 공신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전문,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살보도의 신중

2015-1091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주문

대구일보 2015년 3월 2일자 5면 「자폐증 아이와 동반자살 시도/어머니 숨지고 아들은 중태」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달 27일 오전 5시30분께 대구시 동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이모(37·여) 씨가 자신의 아들 장모(3)군을 안고 1층으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자폐증을 앓던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남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장군은 목숨은 건졌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한달 전 아들의 자폐증 진단을 받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는 위 기사에서 30대 주부가 자폐증 환자인 3살짜리 아들을 안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자신은 숨지고 아들은 중태에 빠진 사건을 보도하면서 본문과 제목에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동반자살』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3살짜리 자폐아는 본인의 뜻에 상관없이 어머니에게 안겨 1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살’이 아닌 ‘타살’을 당할 뻔했던 것으로 봐야 옳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46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문

光州日報 2015년 5월 5일자 7면 「어느 젊은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광주 광산구 20대, “시한부 아내 차마 못 봐” 아파트 투신/급성패혈증 앓던 부인도 2시간 만에 숨져 주위 애절함 더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光州日報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일 밤 1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모(2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날 오전 전 씨는 자신의 아내(33)와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나란히 안치됐다. 부인의 갑작스런 시한부 판정을 비관한 20대 남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21층에서 투신을 했고, 급성폐혈증으로 투병을 하던 전 씨의 아내도 두 시간 뒤 숨을 거둔 것이다.

서울이 고향인 전 씨는 가족과 떨어져 광주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누나와 동생’사이로 지내던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지난 2013년 1년간의 열애 끝에 ‘백년 가약’을 맺었다.

외동 아들이었던 그에게 딱딱한 성격의 아내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각별한 애정과 믿음으로 아내를 대했던 그는 소문난 애처가였다. 어머니가 없는 아내를 위해 늘 처가를 먼저 챙겼고 이웃들이 “요즘 젊은 부부답지 않게 금슬이 좋았다”고 안타까워 할 정도로 흔한 말다툼 한번 없었다.

하지만 건강했던 아내가 지난달말 급성폐혈증으로 입원을 하면서 전 씨의 상심이 컸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병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지만 그는 투신 전날 밤 11시께 아내가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 의사에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아내의 마지막을 통보받은 전 씨는 장인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홀로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가 발길을 한 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였다. 3일 밤 11시40분께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신이 살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그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거실 벽지에는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던 흔적도 남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거실 한쪽 벽지가 손톱에 의해 뜯겨져 있던 것으로 미뤄 아내의 생명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집에 홀로 있던 30분간 괴로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씨가) 아내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홀로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남편의 안타까운 선택이었다. 같은 날 운명을 달리한 두 부부는 현재 같은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마치는 대로 광주의 한 공동묘지에 나란히 안치될 예정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급성패혈증을 앓던 아내(33)가 곧 운명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연하의 남편(29)이 아내가 숨지기 2시간 쯤 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다룬 사회면 머리기사다.

기사는 그런데 『그가 발길을 한 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였다』, 『거실 벽지에는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던 흔적도 남았다』 등 자살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하고도 감상적으로 소개하면서, 특히 『홀로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남편의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남편의 자살을 미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살의 부도덕성에 대한 인식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4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안 병 길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종 승

주문

부산일보 2015년 5월 14일자 3면 「몰락했지만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건 ‘자존심’」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5월 15일자 2면 「부산 일가족 동반자살/사회안전망 빈틈 컸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부산일보,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부산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 센텀시티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산층 가정은 왜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렀을까? 계속되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지고 마는 어느 서민층의 케이스와 달리 중산층이 가족 간의 불화도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이처럼 막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13일 아버지와 공모한 아들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운대 일가족 참극’은 우리 사회 몰락하는 중산층의 일단면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1억 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40대 가장이 가게 파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인과 딸을 목졸라 살해한 ‘서초 세 모녀 살인 사건’과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해 복지 사각에서 신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계 지점에 있다.

■남부럽지 않던 중산층의 이면

경찰 수사 결과 송모(37) 씨 일가족 동반자살의 동기는 일단 경제적 이유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 가족은 부산의 최고 부촌인 센텀시티 한복판에 145m²(44평 형) 크기의 중대형 아파트에서 살았다. 광안대교와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특급 조망을 갖춘 ‘로얄층’이다.

송 씨 일가족은 지난 2010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의 임대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구해 5명이 함께 생활해왔다.

해운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했던 아버지 송 씨는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재력을 쌓았다. 하지만 아버지 송 씨가 몇년 전 사고로 장애를 입어 일을 그만두면서 송 씨 가족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송 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형과 함

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운영난을 겪다 결국 3년 전 사업을 접고 말았다. 이 와중에 누나와 매형도 갈라서게 됐다.

송 씨 가족은 장성한 아들과 딸, 손자까지 3대가 함께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도 이후 변변한 수입원은 없었다.

근근히 버티오던 송 씨 가족은 지난해 2월부터는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처지까지 이르렀다.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추가로 625만 원을 밀리고 말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체납된 관리비도 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의 누나가 지난해 말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 강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집주인은 송 씨 가족에게 오는 15일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송 씨 부자는 예정된 퇴거 일을 사흘 앞둔 12일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 상대적 빈곤감이 극단의 선택으로 ...

송 씨 가족 사건은 지금까지 누려온 중산층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이 동반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송 씨의 누나(41)는 학비와 레슨비가 많이 들어 웬만한 가정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음대를 졸업했다. 송 씨 가족은 가세가 기운 이후에도 손자 교육이나 생활비 씬씀이를 줄이지 않는 등 ‘해운대 중산층’의 면모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 역시 최근까지 아버지 소유의 대형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송 씨의 또다른 친구는 “송 씨가 최근 몇년 간 생활고를 토로하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곤 했다”며 “보다 못한 지인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떨겠냐’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송 씨 일가족 사건은 취업 전선에서 낙오한 미혼 남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 이혼 후 자식 부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된 여성들의 자립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응축돼 있다.

이와 함께 중산층 삶을 더 이상 유지 못한다는데서 박탈감에 시달리는 ‘상대적 빈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등장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버지 송 씨는 유서에서 “자식의 허물은 아비의 허물”, “남한테 말도 못하고 괴로웠다”며 아들 송 씨에 대한 원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본인은 물론 자식들의 재력과 지위, 학벌로 개인을 평가하는 한국적 문화에서 한때 중산층이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송 씨 가족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짐작케 한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김종오 교수는 “일반적 상식 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거 여유 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상대적 빈곤감이 최악의 결정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아 …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기에 가족들과 함께 간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된 송모(38) 씨가 친구에게 남긴 유서의 첫 구절이다. 송 씨의 집 거실에선 아버지(67)와 어머니(64), 누나(41), 조카(8)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다. 어른 시신의 발 아래에는 커피와 과일, 성경책 등이 놓여 있고, 조카 시신 아래 쪽에는 빨대가 꽂힌 요구르트와 과자, 음료수가 놓여있었다. 송 씨가 투신 전 숨진 가족들을 위해 추모의식을 한 듯 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다.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살해 후 자살’은 주로 빈곤층에서 일어나지만 이 사건은 부산 최고의 부촌(富村)인 센텀시티 한 복판의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들이 살던 집은 44평으로 해운대 앞바다와 광안대교가 보이는 곳이다. 2010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인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에도 이들은 준중형 외제차를 비롯해 3대를 등록했다.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버지 송 씨는 한 해운회사의 중역을 지냈고, 누나는 성악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크루즈선의 요리사로 일하던 아들 송 씨는 이 아파트로 입주

하던 즈음 매형과 비철금속을 매입해 동남아에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2년도 안 돼 사업은 실패했고, 매형과 누나는 이혼했다. 아버지 송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 누나가 성악 강사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이 다섯 식구의 유일한 수입이었다. 송 씨가 친구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에게 피해를 주게 돼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적혔고, 아버지 송 씨 역시 유서에 “누님께 진 빚, 갚지 못하고 떠납니다”라고 한 것으로 미뤄 이들은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1년6개월간 아파트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 2,000만원을 제하고도 625만원이 밀려있었다. 결국 이달 15일 집을 비워주기로 했고, 이틀 전인 13일 온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 가정은 사업 실패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했지만 정작 사회적 시스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중산층 가정은 저소득 가정보다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가장의 사망이나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가정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재송1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 가족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청했어도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동을 하던 가족의 사망이나 가출 등 법에서 정한 위기 상황에 해당돼야 하는데, 월세가 밀렸다는 것만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해도, 이 가정은 평생 중산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복지 제도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복지 지원 대상에 속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추락한 중산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복지 공무원들의 재량을 인정하는 지원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실패 후 자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현제도의 공무원 재량권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를 제공해야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고, 급속하게 빈곤층으로 떨어진 데 대한 심리적 타격 또한 커 심리 상담도 병행해야 하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 한국일보의 위 기사들은 부산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두 기사 모두 해운대의 부촌에 살던 중산층 가정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몰락 과정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부재,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다각도로 보도했다.

부산일보 기사는 이 사건을 ‘동반자살’로 단정적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모(38) 씨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지만 나머지 가족 4명은 송 씨의 집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 내용과 저항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송 씨가 가족들 목숨을 끊은 뒤 투신자살한 것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본문에서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살해 후 자살’』로 기술하면서도 큰 제목에 ‘동반자살’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넣었다.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자칫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한겨레 2015년 9월 7일자 10면 「잘나갔던 최연소 임원/비극 부른 ‘사내 따돌림’」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겉으로는 더없이 ‘잘나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 그의 회사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끝없는 실적 압박과 회사 내 파벌싸움에서 오는 시기·질투에 괴로워했지만 그에게 손을 내미는 이는 없었다. 부인과 두 자녀를 둔 가장이자 회사 내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한, 성공했던 46살 가장은 결국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아무개씨는 1989년 카이스트 졸업과 동시에 엘지그룹 계열사에 입사했다. 계열사 몇 곳을 거쳐 엘지씨엔에스(LG CNS)에서 일하던 2004년 그는 또다른 계열사인 엘지파워콤 고위 임원의 제안을 받고 회사를 옮겼다. 2010년 1월 엘지텔레콤·엘지데이콤·엘지파워콤 3사가 합쳐져 엘지유플러스(LGU+)가 되면서, 그는 평균보다 4~5년 이른 44살의 나이에 회사 내 최연소 상무가 됐다.

통신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방송 분야인 인터넷텔레비전(IPTV) 사업부장을 맡게 되면서 시련을 맞게 됐다.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경쟁사인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에 밀리자 사업 부진의 화살은 그에게 돌아왔다. 합병된 3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파워콤 출신인 그는 입지가 좁았고, ‘회사 내 주류’인 텔레콤 출신이 직속 상사인 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런 현상은 더 강화됐다. 새 본부장은 이 씨를 배제한 채 부하 팀장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기도 했다.

견제에는 시기와 질투도 따랐다. 2012년 4월 그가 국내 인터넷텔레비전 가입자 500만명 달성의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게 되자, 새 본부장은 공개회의에서 회사 고위층의 말이라며 “상무 직급인 이 씨가 대표이사에 앞서 훈장을 받는 것이 불쾌하다. 훈장을 취소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 뒤로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든 그는 팀장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그동안 회사와 집만 다니고 취미나 다른 일이 20년간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자신을 파워콤으로 영입했던 전 파워콤 고위 임원에게는 ‘새 본부장 외에도 다른 상사 및 동료와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새 본부장 취임 뒤 등을 돌리는 것 같다며 주변에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평소와 달리 아내에게 ‘힘들다. 안아달라’고도 했던 그는 2012년 8월10일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른 아침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이 씨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4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회사 내 최연소 상무로 승진한 40대가 자살에 이르게 된 배경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 「잘나갔던 최연소 임원/비극 부른 ‘사내 따돌림’」으로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 「카이스트출신 엘지유플러스 상무/사내 시기질투·실적압박 시달리다/“군중 속 고독” 메일보낸뒤 목숨 끊어/법원 “업무상 재해” 유족 손 들어줘」로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최연소 임원인 엘지유플러스 상무가 ‘사내 따돌림’으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본문엔 ‘사내 따돌림’이라는 표현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 비록 기사는 새 본부장과의 불편한 관계, 다른 상사와 동료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임원인 그가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다.

또한 기사본문에 소개된 법원판결 내용도 ‘사내 따돌림’과는 거리가 있다. 기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 씨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위 제목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9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주문

세계일보 2015년 10월 9일자 9면 「삶에 짓눌린 가장 가족과 짐 나눠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단했는지 그는 끝내 아내와 딸을 먼저 살해하고”라고 기술하는 등 50대의 자살 원인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는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자살도구인 올가미를 이미지 컷으로 사용했다. 광고 없는 면에 올가미를 길게 늘어뜨려 독자들로 하여금 끔찍한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다.

올가미 자체만으로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외면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컷은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문

서울신문 2015년 12월 14일자 4면 「기저귀 차고 누워 지내다 … 종일 굶은 노인은 제초제를 마셨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주검1]

“안방에서 죽었어. 그라목손(㉓) 먹고, 여서 꼬꾸라졌는디 … 거긴 보기도 싫어.”

2개뿐인 앞니에 박유순(69·가명) 할머니의 발음은 켜지만 악몽 같았던 그날 하루의 기억은 방금 전 일처럼 생생하다. 시부모 봉양으로 시작해 남편과 50년 이상을 함께한 흙담집(㉑)에서 남편 김희준(81·가명) 씨는 지난 4월 중순 제초제(㉒)를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달이 난 건 7개월 전이다.

그날 아침 달라진 남편의 행동은 할머니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남의 농사 일을 돕다 갈비뼈 골절(㉓)로 한 달여간 누워만 있던 할아버지(㉔)는 작심한 듯 성질을 부렸다. 밭도 끝도 없었다. 머리맡에 놓인 과도를 들고는 “문 닫고 나가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우리 아저씨는 원래 나한테 군소리 안 하고 다정하디 그날은 이상했어. 과일 깎아 먹으려고 놔둔 과도를 들고 눈에 불을 쏘지르면서 갑자기 나한테 문 닫고 나가라고 하는 거여. 겁이 나 문 닫고 나와 마당서 나물 두 바가지를 씻고 문 열어 보니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있더라구.”

빗속을 뚫고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는 구급차가 마치 경운기처럼 더디게 느껴졌다. 청주 병원을 거쳐 다시 천안의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불행이 다가온 건 지난 4월이다. 할아버지가 집 뒤 대나무 밭에 갔다 넘어져 갈비뼈 2대가 나갔다. 병원에 갔지만 계속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다. 퇴원하고 며칠 후에 남의 삼발 일을 도와준다면 경운기를 몰고 언덕배기를 오르는데 경운기가 넘어졌다. 다시 갈비뼈 3대가 나갔다. 의사는 “뼈가 다 붙은 뒤 퇴원하라”고 권했지만 그럴 순 없었다. 보름치 입원비로 내야 하는 90만원도 이미 노 부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기 때문이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끼니는 물론 화장실 가는 일조차 혼자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할머니는 가끔 나오는 남의 밭일이나 공공근로를 하러갈 수밖에 없었다. 돈이 원수였다. 주변에서는 병간호하는 사람을 붙이든 당분간 요양원에 보내든 하라고 권했지만, 매달 40만원이 드는 게 문제였다. 그렇게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일을 나갔다.

“먹고살려면 계속 일을 나가야 하니까. 찌개 끓여놓고 조기새끼 가시 다 발라 놓고 남의 밭에 쑥 뜯으러 갔어. 그러고는 일 다하고 집에 갔더니 온종일 우리 아저씨가 밥(㉔)도 못 먹고 누워 있는 거여. 지 혼자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밥도 못 먹고 있더라구. 그렇게 밥 좋아하는 양반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할아버지 밥 떠먹여 주면서 그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리고 하루 있다가 그렇게 됐어.”

지긋지긋한 가난은 대물림을 받았다. 그나마 젊을 때는 몸뚱이가 재산이었다. 머슴 일부터 남의 농사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 다들 가난한 때라는 위안을 하며 평생 농사일을 했지만 살림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때는 희망도 있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쌀 7가마니 정도가 나오는 작은 땅도 생겼다. 하지만 그런 꿈도 잠시. 몇 년 전 아들의 빚을 갚느라 전답을 모두 날렸다. 할아버지는 몇 년간 ‘그 땅은 쳐다보기도 싫다’며 애먼 산을 돌아 빙 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그 고단한 삶 속에서 3남매를 키워 출가시킨 것만도 대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년의 삶은 더 곤궁했다. 몇십만원이 전부인 통장 잔고는 늘 한 달을 못 버텼다. 할아버지가 팔순이 넘으면서 바깥 일은 거의 할머니의 몫이었다. 남의 밭에 일을 나가거나 공공근로를 해서 버는 돈은 20만~30만원 정도, 노령연금 등을 합쳐도 손에 쥐는 돈은 늘 50만~60만원(㉕)을 넘지 않았다. 땅 빌리는 데 드는 돈에 전기요금, 난방비, 약값, 식비, 부조금 등을 내면 남는 돈 이라곤 몇만원 정도였다.

“한 2년 전에 아저씨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내가 아파서 드러누우면 스스로 죽어야지, 남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 치료비(㉖) 때문에 산 사람도 못 살게 할 순 없잖아’라고 …. 그때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타박했는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나 봐.”

어려서부터 가난한 삶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점잖고 다정한 남편이었다. 시골 투전판에 깐다든지 바람을 피우는 일도, 그 흔한 주사 한번 부리는 일이 없었다. 덕분에 살아생전 집안에서는 큰소리 한번 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유품을 확인하다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수십년을 써 다 낡고 녹록해진 남편의 지갑 속에 3만원이 찰싹 들러붙어 좀체 나올 줄을 몰랐다. 시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등에선 몇 년을 모았는지조차 종잡을 수 없는 꼬깃꼬깃한 지폐 109만원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뒤늦게 발견한 할아버지의 쌈짓돈은 농협에 빌린 200만원을 스스로 갚아 보려는 마음인 듯했다.

가난한 부모는 3남매(㉔) 중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못 배우고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 남들처럼 좋은 것 못 먹이고 부족하게 가르친 것이 항상 미안했다. “생활비 대주는 애들은 없지만, 명절 때는 와요. 자기들 애들 키우고 밥 먹고 살려면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있나. 자기 쓸 돈도 없을 거야.”

할머니는 못내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죽으려고 했나. 하도 이불을 건 어차서 3~4개월 전부터 이불을 따로따로 덮었거든. 근데 언젠가 ‘임자, 내 곁에 와서 자’(㉕) 이러는 거야. 그래서 ‘더운데 뭘 같이 자’라며 뺨 돌아서서 잤지. 그리고는 사흘 뒤에 그렇게 됐어. 그런데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3일장도 못 치렀어. 며칠 지나지도 않아 공공근로 시작했지. 눈물도 안 말랐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그래도 나가야지. 일 안 하면 돈 못 받잖우.”

[주검2]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한번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적은 없었죠.”

이명자(44·여·가명) 씨는 아버지 이영재(가명) 씨의 정확한 기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더 진실에 가깝다. 매번 외워 보려 하지만 좀처럼 기억에 남지 않는다. 부친의 죽음은 그만큼 잊고 싶은 사건이었다. 아버지는 일흔일곱 되던 2011년 3월(㉖) 고향인 전남 ××군 시골집에서 숨졌다. 사인은 병사(病死). 하지만 가족들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자살이라고 여긴다. 마흔살 때 한번 자살하려고 했던 전력이 있었고 사촌형(㉗)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가족사에 아픔도 겪었던 아버지였다. 딸 이 씨는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그렇게 돌아가

시면 남은 자식들이 평생 손가락질 당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병사로 위장하려고 굶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 씨가 남긴 전 재산은 현금 200만원. 갚지 못한 농협 대출금 수백만원을 생각하면 실제 유산은 빚밖에 없다. 가난은 촌로의 게으름 탓이었을까. 하지만 딸 이 씨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부지런한 소작농(⑧)’이었다. 거둬들인 농작물의 절반은 땅주인에게 주고 남은 것의 절반은 자녀 5명에게 골고루 나눠 줬다. 그리고 남은 곡식을 팔아 푼돈을 벌었고 알뜰히 모았다. 선천성 난치병을 앓던 막내아들(㉑)이 있었기에 ‘아이가 먹고살 돈은 남기고 가야 한다’는 부채 의식에 더 악착같이 일했고, 또 모았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전 재산 1800만원을 친척에게 사기당해 모두 잃고 막내는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면서 허사가 됐다.

아버지 이 씨의 황혼녘에 남은 것이라고는 ‘자식을 앞세웠다’는 허망함, 그리고 가난뿐이었다. 노인성 우울증(⑨)이 찾아왔고 76세 되던 해에는 후두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늙은 부정(父情)은 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아버지 기대기에는 딸들의 삶이 이미 썩썩했다. 빈곤의 대물림(⑩)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 사는 고향집에서 외롭게 앓았다. 뒤늦게 아버지의 투병 사실을 알아챈 딸은 지역 대학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어차피 돌아가실 분(㉒)인데 뭐하러 데려왔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음식과 물을 전혀 먹지 않았다. 어머니의 애타는 부탁과 만류에도 곡기를 끊었고 굶은 지 15일 만에 숨을 거뒀다.

빈곤한 노년은 늘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내색할 수 없다. 가족들은 늙은 부모의 자살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며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은 오히려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드물며, 모든 연령대 중 자살을 가장 치밀하게 준비하는 세대”라고 말한다. 심리부검에 응했던 딸 이 씨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멍멍하게 말했다. “유품 중 아버지 수첩이 있었는데 가족 생일과 제사만 적혀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을 걷이(㉓)를 해 보내주실 만큼 가족만 위하다가 즐기지도 못하고 사셨는데 도대체 왜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기획으로 심리부검을 통해 본 노인 자살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위 기사는 기획 ‘누가 김노인을 죽였는가’의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1개면을 할애해 보도됐다. 기사는 스스로 세상을 버린 두 노인에 대한 심리 부검을 통해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심리를 추적했다.

기사는 그러나 이들의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요량으로 자살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라목손 먹고 꼬꾸라졌는디 …”, “제초제를 마셔 쓰러져 있더라구” “한 2년 전에 아저씨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내가 아파서 드러누우면 스스로 죽어야지, 남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 치료비 (⑥) 때문에 산 사람도 못 살게 할 순 없잖아’라고 …”라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처럼 자살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자살 방법, 자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위 기사는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2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 1월 27일자 11면 「마포대교만 ‘자살명소’?/췌한강교량 투신 증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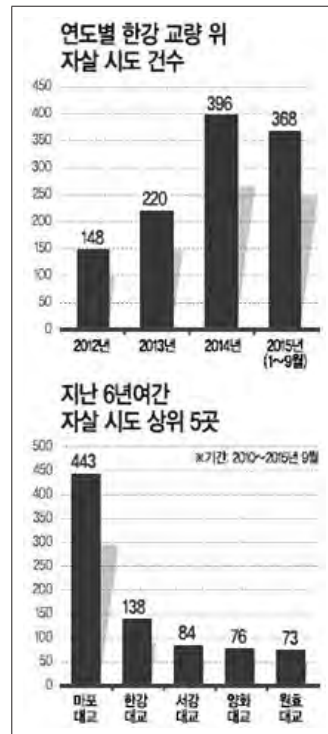
『해가 갈수록 한강 교량에 올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교량 위에서 발생하는 자살 시도 및 사망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입수한 ‘2010~2015년(9월말 기준) 한강 교량 위 자살 시도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자살 방지 대책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 횟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193명 196명이었던 한강 교량 위 자살시도자의 수는 2012년 148명으로 잠시 줄었지만, 2013년 220명, 2014년 39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까지 자살 시도자의 수는 한달 평균 40.9명 수준인 368명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4분기가 지난 연말 기준 통계치에서는 자살 시도자 수가 490여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자살 시도 및 구조는 여의도 부근 교량들에 집중해 발생했다.

지난 6년여간(2010년~2015년 9월) 자살 시도 상위 5곳은 마포대교(443건), 한강대교(138건), 서강대교(84건), 양화대교(76건), 원효대교(73건) 순이었다. 특히 이들 교량의 2010년 대비 2014년 자살 시도 증가율은 최근 ‘자살 명소화’ 논란이 일고 있는 마포대교가 800%로 높았다. 하지만, 한강대교(293.8%), 서강대교(104.5%), 양화대교(200%), 원효대교(123.1%)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자살자 구조 등에 효율성을 더함으로써 자살 시도자의 사망사고 비율을 크게 줄여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라며 “자살 시도자를 사전에 찾아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CCTV 등의 시설물을 더 강화해 나갈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자살 시도자의 사망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2010년 87명이던 사망자수는 2011년 95명, 2012년 65명, 2013년 11명, 2014년 11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한강 교량을 오르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구조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한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진표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제시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교량과 자살 시도자의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끊는 것이다.

홍 센터장은 “지난 2011년 제초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제초제를 사용한 자살 시도가 60% 이상 감소하는 등 자살 수단과 자살 기도자 간의 연결 고리를 끊어주려는 노력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뒀다”며 “현재 한강 교량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2~3배 높이는 것만으로도 자살 시도자 수를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방법 이외에도 한강 교량 전체를 각자 특성에 맞춰 테마화해 언제나 주목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교량을 자살 이미지와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한강 교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통계수치를 분석한 것이다. 기사는 자살 시도 상위 5곳의 교량과 자살 건수에 대해 순위를 매겨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또 “2014년 자살시도 증가율은 최근 ‘자살 명소화’ 논란이 있는 마포대교가 800%로 높았다”고 보도했고, 편집자도 ‘자살시도 상위 5곳’의 순위표를 게재하고 큰 제목을 「마포대교만 ‘자

살명소?’라고 달았다. 이같은 내용은 한강교량, 특히 마포대교를 자살 장소로 널리 알려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자살보도에서 자살 장소를 밝히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자살 보도에서 특정 장소를 명시하면 그 장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장소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살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기사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5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2.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주문

세계일보 2016년 2월 12일자 8면 「‘생명의 다리’ 위로가 독이 되다 … 마포대교의 눈물」 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2월 15일자 A10면 「세 살배기 한강물에 놔두고 …/동반자살 조선족 혼자 빠져나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일보와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밥은 먹었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저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런 식으로 정감 나는 문구를 던지시 내밀어주고는

했어요. 누구든 절대 무심히 대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캄캄한 밤에 찾아오는 분들에겐 특별히 불빛을 반짝이며 “속상해 하지마”, “많이 힘들었지”라고 속삭였어요. 오지랴도 넓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혹시나 ‘세상 참 살기 싫다’고 저를 찾아 온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참,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마포대교’인데 2012년 9월부터 양쪽 난간 위에 ‘따스한 글귀’들을 올려놨어요.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함께 기획한 것으로, 저는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서 선정된 문구를 보여드리기만 하면 됐어요. 이런 식의 자살예방 캠페인은 세계 최초라네요. 그래서인지 2013년 해외 우수 광고제에서 상을 37개나 받았어요. 시도 자체가 새로운 데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호평과 함께요.



11일 한 시민이 다리 양 난간에 ‘속상해 하지마’ 등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문구가 적힌 서울 마포대교 위를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마음 같지 않더군요.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던 2011년에는 한강으로 뛰어든 분이 11명(사망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5명(“ 6명)으로 늘더니 2013년 93명(“ 5명), 2014년 184명(“ 5명)으로 폭증했어요.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서울의 전체 한강 다리(27개)에서 2014년 한 해 투신(시도)한 사람이 396명(사망 11명)인데 절반(46.5%) 가까이가 투신장소로 저

를 택한 셈입니다.

이렇게 삶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유독 저를 찾아 오니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따뜻한 말과 글로 위로하려 애쓴 저의 노력도 공허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오죽하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 글판의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는 시구가 제게는 두렵더라고요. 이틀에 한 명꼴로 제 앞에서 한강으로 몸을 던지는데 왜 안 그랬겠어요. 경찰에 물어보니 ‘N포 세대’로 불리는 20대 투신율이 제일 높다고 해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원인을 놓고 ‘생명의 다리’라는 과도한 홍보가 역효과를 불렀다는 진단도 있었어요.

연세대 이수정 교수(심리학)는 “심리학에 특정 단어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되레 더 많이 떠올리는 백곰효과(White Bear Effect)라는 것이 있다”며 “자살을 하지 말라면서 다리를 꾸며 놓으니 사고를 부추긴 꼴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급기야 제가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자 서울시와 삼성생명도 손을 들어버리더라고요. 연간 1억5000만원 수준인 마포대교 자살 예방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거죠. 결국 지난해 12월부터는 응원 문구 조명도 꺼졌어요. 서울시는 자살 방지대책을 수정해 이르면 5월 이후 제 난간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애초 난간을 높이는 등의 물리적 조치를 병행했어야 하는데 감성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키운 감이 있다”(국립중앙의료원 김현정 전문의)는 겁니다. 물론 난간을 높인다고 끝난 게 아닐 테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든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을 상담 창구가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는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의 조언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홍진표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마포대교의 구조물을 긍정적인 전시물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제가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괜찮은 아이디어를 귀띔해줬습니다. 가령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다리’ 등으로 콘셉트를 다시 잡아 남녀, 애완동물,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다리와 결합해보라는 겁니다.

카~ ‘사랑대교’라. 마포대교에 가는 그 누구든 사랑이 싹트고 꽃을 피운다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네요. 그런 다리로 거듭나는 게 새해 소망입니다.』

(朝鮮日報)=『서울 광진경찰서는 세 살배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어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빠져나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여성 김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13일 오전 1시쯤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난 아들을 품에 안고 1m 정도 깊이 한강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뒤 김 씨는 아이를 물속에 두고 혼자만 물 밖으로 나와 올림픽대로 쪽으로 걸어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아이를 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행동이 어눌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종종 보여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추위를 느껴 밖으로 나왔다”며 “나는 올림픽대로 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가방에선 ‘남편에게 미안하다’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 중국어로 쓴 A4 2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다. 김 씨는 3년 전 조선족 남편과 함께 취업비자로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마포대교에서의 자살예방 캠페인이 오히려 마포대교를 자살 장소로 알리는 계기가 돼 투신자가 폭증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함께한 자살예방 공익광고가 독이 됐다는 사실, 이로 인해 캠페인이 중단됐다는 내용과 난간 보강 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기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마포대교를 비롯해 한강 주요 교량 6곳의 자살건수와 사망자수를 상세히 보도했다.

또 편집자는 교량별 투신사고 발생 현황표와 투신장소인 마포대교 사진을 실었다. 큰 제목을 「‘생명의 다리’ 위로가 독이 되다 … 마포대교의 눈물」로 뽑고 작은 제목을 「‘자살대교’ 오명/‘N포 세대’ 20대 자살시도 최다」 등으로 달았다.

이러한 보도 내용과 제목은 한강교량, 특히 마포대교를 자살 장소로 널리 알

려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자살보도에서 자살 장소를 밝히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자살 보도에서 특정 장소를 명시하면 그 장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장소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살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 있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2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아들을 안고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빠져나와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세 살배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어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라고 기술했고, 편집자는 「세 살배기 한강물에 놔두고 …/동반자살 조선족 혼자 빠져나와」로 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동반자살’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숨진 세 살배기 아들은 어머니에 의해 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두 신문의 위 기사들은 흥미 위주로 다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60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6년 2월 25일자 1면 「피로사회 … 노인들 ‘셀프 고려장’」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에서는 90대 노인이 난간 위를 올랐갔다 내려갔다는 반복한 끝에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93) 할아버지는 그동안 고혈압 등을 오래 앓으며 가족들에게 죽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고, 마음이 약해져 가족들에게 더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3면

2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10만명 당 120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10만명 당 18명)보다 6배나 높은 수준이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빈곤, 신체·정신적 장애와 질병, 소외와 고독”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다보니 타인과 비교를 통한 자괴감도 더 커지고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출이나 노숙 등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노년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노숙자 잡지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모(65) 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과 탑골공원을 배회하는 노숙자 신세였다. 황씨는 지난 2011년 아들 내외가 운영하던 고깃집이 폐업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짐이 되기 싫다며 가출을 선택했다.

황씨는 “일을 시작한 지 20여일만에 50만원 가량의 돈을 모은 지금도 아들에게 전화거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이제와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봤자 짐만 될 뿐이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식주나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지 않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스스로를 방치하는 ‘자기방임’ 학대 노인들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기방임 학대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주연 노인복지연구소 연구원은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적응이 빠르지 않아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보니 자기방임 등의 형태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며 “자기방임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노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며,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맞춰 보호해야 할 대상이란 인식을 심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은 전통적인 틀에 맞춰 그저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자살과 가출을 선택하는 노인문제를 다룬 1면 머리기사다. 그 요지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스스로 자신을 방치, 학대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자살을 시도한 90대 노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자살 수단과 장소를 알리고 있고, 자살 동기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편집자는 「피로사회 ... 노인들 ‘셀프 고려장’」으로 큰 제목을 뽑았다. 우리 사회를 파괴적 자학과 자책으로 이어지는 피로사회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에서 이어지는 노인들의 자살을 ‘셀프 고려장’이라는 신조어로 규정해 독자들에게 알렸다.

위 제목은 비록 노인들문제와 관련한 사회병리 현상을 설명하려 한 취지를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우리사회 통념과는 거리가 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다. 차칭 ‘셀프 고려장’이라는 신조어는 보기에 따라 노인들이 ‘자살’하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2015-1081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주문

대구일보 2015년 3월 24일자 26면 「봄철 야외활동대비 안전점검 철저히 해야」·「일 태도 변화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열쇠다」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2건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봄철 야외활동~〉= 『강화도 사설 캠프장에서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났다. 임대용 대형텐트 내부에서 불이나 순식간에 전소됐고, 날씨가 풀리는 봄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던 두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해당 캠프장은 미신고시설이어서 안전점검도 없었고,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익숙히 보아온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이나 유형, 문제점이 거의 같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관련 제도뿐 아니라 안전문화와 의식개선이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뜻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의 한 펜션 바비큐시설에서 불이나 대학 동아리회원 등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에 불이 순식간에 번져 희생자들이 대부분 미처 빠져나오지못한 채 질식사하는 등 피해가 컸다. 바비큐 시설 자체도 불법건축물이었다.

사고가 나자 전국 지자체는 일제히 펜션 및 민박 등 여가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는 등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관광진흥법 아래 관리되던 야영장이 전국에 1천800여개소로 추정되는 시설중 230곳에 불과해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시설에 등록기준을 정하고 시군구별로 신고토록 했으나 아직은 유예기간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캠프장도 아직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않은 채 영업행위를 해와 소방서의 점검도 받지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결국 제도의 허점과 시설 운영자의 허술한 안전의식이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공범인 셈이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게다가 잇단 캠프장 사고에서 보듯이 야외에 설치된 여가시설은 대부분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번에도 5M 높이의 대형천막이 불과 1분만에 재만 남고 흔적도 없이 소실됐다. 규정에 따르면 야영장에는 대피소와 관리요원을 두게 되어있는 등 등록기준이 있지만 경험상 점검과 관리가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고를 줄이려면 텐트를 불에 잘 안타는 소재로 만들어 비치토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엄격히 하고, 예고 없는 불시 안전점검을 상시화 하는 등 당국의 적극적 안전제고 의지가 여가업체에 각인되고, 안전우선 문화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제 겨우내 움츠러들어있던 몸과 마음에 새봄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너도나도 야외로 나가게 되는 봄이다. 사후 약방문격이라도 당국이 안전을 위해 매우 바빠져야 한다는 뜻이다.』

<일 태도 변화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돼 공동합의까지 도출하면서 역사·영토 문제로 파행을 빚어온 3국 관계에 일단 해빙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지난 3년간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과 한일간 과거사 갈등으로 인해 아예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그전 2년간은 3국간 의견 불일치로 공동 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을 낼 수가 없었다. 그동안 3

국은 개별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한 적이 있지만 이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올해 안에 정상회의가 성사될수 있다면 3국 관계 복원은 급진전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의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3국 외교장관 회담직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옆에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올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을 맞았지만 3국의 역사 문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이를 미래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 외교관이 상대국 외교수장과 함께한 공식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매우 강도높은 비판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3국 차원의 협력은 조기에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정상회담 실현은 어렵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떤식으로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셈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일본에게는 앞으로 수개월내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두 번의 기회가 열려있다.

내달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연설과 오는 8월로 예정된 아베 담화가 그것이다. 이 두 번의 기회에서 일본이 변화된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과거사 태도 변화가 연설과 담화에 담길 경우, 한중일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내일을 향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동북아의 갈등은 고조될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측을 적극 설득하고, 사드 도입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고차 방정식의 해법에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할 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의 위 적시 사실들은 연합뉴스가 3월 22일 16:24 송고한 「봄철 야외활동 대비 안전점검 철저히 해야」 제목의 '연합시론'과 같은 날 10:45 송고한 「日 태도 변화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열쇠다」 제목의 '연합시론'에서 각각 한 문장, 세 문장만을 삭제한 채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제목도 '연합시론' 제목과 같다.

그런데도 출처에 대한 표시나 설명은 없다.

신문의 사실이 해당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의 개진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 표절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라는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사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 「평론의 원칙」 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2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일보 발행인 김 용 석

주문

서울일보 2015년 4월 27일자 1면 「朴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30%대 중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서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 파문 영향으로 2주 연속 30%대 중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4월 넷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로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상승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57%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성완중 리스트 파문으로 큰 하락폭을 기록한 지난주에 이어 30%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그 격차는 3월 이후 최대치인 22%포인트로 확대됐다.

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45%, 30대 22%, 40대 21%, 20대 15%의 순이었다. 60대 이상과 30대에서 지난주에 비해 지지율이 각각 4%포인트, 10%포인트 오른 반면 50대와 40대는 2%포인트, 6%포인트 떨어졌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는 뉴시스가 지난 4월 24일 11:37 송고한 「박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30%대 중반에 머물러」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서울일보는 같은 사안으로 올 들어 신문윤리위원회 제883차, 제885차, 제886차 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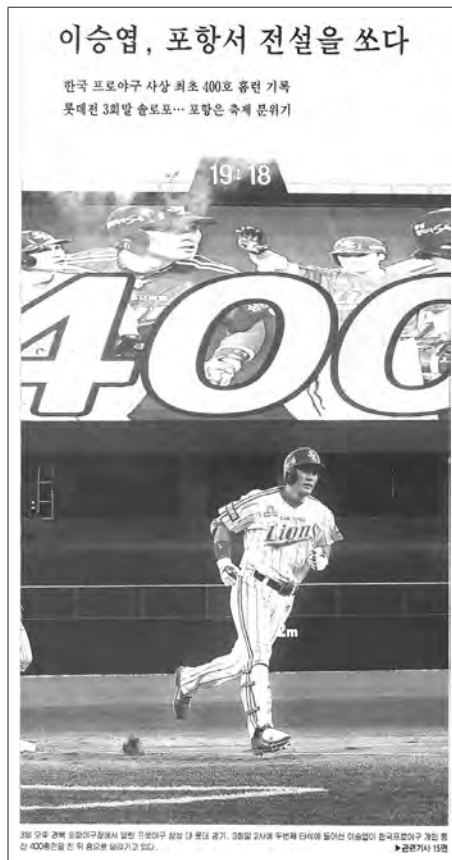
2015-119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2.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주문

경북도민일보 2015년 6월 4일자 1면 「이승엽, 포항서 전설을 쏜다」 제목의 사진, 경북일보 6월 4일자 1면 「드디어 터졌다」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경북도민일보 6월 4일자 1면



경북일보 6월 4일자 1면



연합뉴스 6월 3일 21:27 전송

경북도민일보와 경북일보는 프로야구 삼성의 이승엽이 지난 6월 3일 오후 경북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한국프로야구 개인 통산 400 홈런을 친 뒤 홈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담은 연합뉴스 21:27 전송 사진을 트리밍을 해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9 신문윤리강령 위반

慶南日報 발행인 이재근

주문

慶南日報 2015년 8월 27일자 12면 왼쪽 상단 「세계명문대학 조정 축제」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慶南日報의 위 사진은 26일 대구 낙동 조정 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세계명문대학 조정 축제’의 한 장면을 보도한 것이다. 이 대회에는 대한민국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영국 캠브리지대, 미국 MIT(매사추세츠공대), 호주 멜버른대 등 4개 대학 60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慶南日報는 이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사진은 이 날자 연합뉴스 헬로포토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다.

이런 보도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328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5년 11월 13일자 7면 「백악관행 대장정 개막전 카운트다운 들어」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내일신문 11월 13일자 7면 사진



연합뉴스 10월 28일 17:55 송고 사진

내일신문은 연합뉴스가 10월 28일 17:55에 송고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5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4.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주문

경향신문 2016년 2월 4일자 24면 「이대호의 독심에 …/응답했다, 시애틀」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중앙일보 2월 4일자 26면 「이젠 적이다, 미국서 다시 만난 부산 친구〈초등학교 동창〉」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東亞日報 2월 5일자 A26면 「스프링 캠프 ‘바늘 구멍’ 뚫어라」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스포츠서울 2월 5일자 3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 이대호 “주전 될 자신 있다”」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한국일보 2월 5일자 26면 「34세 이대호 자존심보다 꿈 택했다」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위 신문들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2월 4일자 24면 사진



중앙일보 2월 4일자 26면 사진



東亞日報 2월 5일자 A26면 사진



스포츠서울 2월 5일자 3면 사진



한국일보 2월 5일자 26면 사진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한국인 거포 이대호가 29일 일본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일본시리즈 5차전 4회초 1사 3루에서 좌월 투런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 교도=연합뉴스)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한국인 거포 이대호가 29일 일본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일본시리즈 5차전 4회초 1사 3루에서 좌월 투런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2015.10.29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 WBSC 프리미어12 대한민국과 일본의 준결승 경기, 9회초 무사 만루 한국 이대호가 좌전 안타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 (뉴스1)



(타오위안=뉴스1) 양동욱 기자 = 11일 오후 대만 타오위안 아레나에서 열린 2015 WBSC 프리미어12 B조 예선 2차전 대한민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기에서 7회초 1사 2루 한국 이대호가 역전 투런포를 친 뒤 환호하고 있다. 2015.11.11 (뉴스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스포츠서울은 연합뉴스가 2015년 10월 29일 송고한 일본시리즈 5차전 투런 홈런 사진을, 東亞日報는 뉴스1이 2015년 11월 11일 송고한 WBSC 프리미어12 도미니카전 투런홈런 사진을, 그리고 중앙일보는 뉴시스가 2015년 11월 19일 송고한 WBSC 프리미어12 일본전 준결승 사진을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81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문

국민일보(kmib.co.kr) 2015년 10월 7일자 「“선거구 확정위 또 결론못냈다”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허용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선거구 확정위 또 결론못냈다』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허용 논란

입력 2015.10.07 00:43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놓여준 지역구 의석수 감소 최소화를 위해 현행법상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6일 오후 8시부터 2시간20분간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 예외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은 안 났다”며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 방식 변경도 다뤄지긴 했지만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새정치연합 추천 위원들은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분할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추천 획정위원들이 대체로 여야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낸 것이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다음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획정위는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안은 여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선거구획정에 적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어촌 지역구 감소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획정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재소집해 지역선거구 수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최종 의결이 이뤄질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현행유지하면서도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한 방안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자 y***m@kmib.co.kr」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가 10월 7일 0시 43분에 출고한 위 적시 기사는 ‘김영석 기자’라는 바이라인이 달려있지만 사실은 연합뉴스 김연정 기자가 이보다 약 한 시간 전인 10월 6일 23시 57분에 출고한 「획정위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허용여부 결론 못내」 제목의 기사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표절 기사이다.

이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6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1월 18일자 「유엔, ‘北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 … 국제기구 핵실험 대응 이어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연합뉴스
유엔, ‘北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 … 국제기구 핵실험 대응 이어질 듯 입력 2016.01.18 15:16 수정 2016.01.18 15:16	[단독]유엔, ‘北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 … “핵실험 경고 메시지” 기사입력 2016.01.18 12:30 최종수정 2016.01.18 15:00 北외교관 상대 군축 교육 연례행사 무기연기 … “올해 지원 어렵다” 다보스포럼 ‘퇴짜’ 이은 조치 … 국제기구 ‘北거부’ 움직임 이어질 듯

유엔(UN)이 북한 외교관 초청프로그램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다보스포럼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제기구인 북한 거부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유엔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1월 말쯤 시행할 예정이었던 북한 외교관 초청 군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을 연기했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해오던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매년 1~2달 동안 북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유엔이나 제네바 유엔 군축연구소, 관련 회원국 등을 돌며 시행해오던 연수프로그램은 일단 무기한 연기됐으며, 올해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은 애초 군축이나 비확산과 관련한 국제규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북한을 긍정적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수 대상도 군부 인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깥 물질'을 좀 알고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이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긍정적 취지'에도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핵개발을 계속하면 '고립'만 있을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발신으로 보인다.

WEF 조직위원회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당초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다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청을 취소했다.

WEF 조직위의 초청 취소에 앞서 북한 측은 조직위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다보스포럼 '퇴짜'와 유엔의 북한 외교관 상대 연수 프로그램 연기에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기구나 양자 차원의 북한 '거부' 움직임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가 최근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다보스포럼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유엔에서도 북한 외교관 초청프로그램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유엔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1월 말쯤 시행 예정이던 북한 외교관 초청 군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을 연기했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해오던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매년 1~2달 동안 북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유엔이나 제네바 유엔 군축연구소, 관련 회원국 등을 돌며 시행해오던 연수프로그램은 일단 무기한 연기됐으며, 올해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은 애초 군축이나 비확산과 관련한 국제규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북한을 긍정적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수 대상도 군부 인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깥 물질'을 좀 알고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이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긍정적 취지'에도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핵개발을 계속하면 '고립'만 있을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발신으로 보인다.

WEF 조직위원회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당초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다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청을 취소했다.

WEF 조직위의 초청 취소에 앞서 북한 측은 조직위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다보스포럼 '퇴짜'와 유엔의 북한 외교관 상대 연수 프로그램 연기에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기구나 양자 차원의 북한 '거부' 움직임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85002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24997&isYeonhapFlash=Y>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18일 12시 30분에 송고한 「[단독]유엔, ‘北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 … “핵실험 경고 메시지”」 제목의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리드를 두 문장으로 바꾼 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통신 기사를 정보를 추가하지 않고 한 문장을 약간 바꿔 옮겨놓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편집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2015-1080 신문윤리강령 위반

무등일보 발행인 김명술

주문

무등일보 2015년 3월 25일자 19면 「야영장, 지자체에 등록해 안전사고 예방을」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무등일보는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리나라 야영장 숫자는 1천866개(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록된 야영장은 230개에 불과하다.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법이 없어 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2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은 오는 5월말까지 적합한 기준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등록 업체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늦게나마 관련법의 제정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으로 등록하려면 침수, 산사태, 고립, 유실, 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 소화기, 대피소, 대피로, 관리요원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일반야영장의 경우 천막 1개당 15m² 이상, 자동차야영장은 차량 1대당 50m²의 야영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야영장들이 이 기준에 맞춰 등록하기가 쉽지 않아 현재 전남지역 43곳의 야영장 중 지자체에 등록을 한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곳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정도의 규정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야영장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다. 소방방재청의 2012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야영장 안전사고 등 레저사고는 2010년 282건(인명피해 235명), 2011년 3004건(2296건), 2012년 4359건(39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레저사고 발생 때 인명피해의 비율은 76~89%에 이른다. 전남지역 각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모든 야영장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여부를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무등록 야영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무등일보의 위 적시 사실은 경상일보가 두 달 전인 1월 26일자 19면에 게재한 「안전사각지대 야영장, 재난 대비 위해 등록제는 필수」 제목의 사실에서 상당 부분을 문장 순서만 바꾼 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무등일보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대목은 두 번째 문단의 3개 문장과 세 번째 문단의 2개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전남지역 각 지자체들은』이라고 주어를 추가한 것뿐이다. 결론 대목인 『이번 기회에 모든 야영장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여부를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무등록 야영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도 경상일보 사실을 그대로 베꼈다.

그런데도 출처에 대한 표시나 설명은 없다.

신문의 사실이 해당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의 개진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 표절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라는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사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 「평론의 원칙」 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98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5년 6월 23일자 2면 「“잘못 인정하지만 절필은 없다” 표절 논란 입연 신경숙」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본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설가 신경숙(52)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소설가 이웅준이 지난 16일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신 씨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신 씨는 해당 작품을 작품집에서 빼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관련기사 11면

그럼에도 신 씨는 ‘우국’을 읽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6일 의혹이 제기됐을 때 창비를 통해 밝힌 대로 ‘우국’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15년 전, 평론가 정문순씨가 같은 사안으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읽지 않은 작품을 갖고 표절할 리가 있냐는 생각에 해당 평론을 읽지 않았다고 했다. 소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인사’, ‘엄마를 부탁해’ 등 여타 작품에 쏟아지는 표절 의혹과 제목 도용도 그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소설을 읽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싶은 대목이 나오고 심지어 에피소드도 똑같은 때가 있다”, “시에서 제목을 따오는 일은 당시 문단에서 종종 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모두 짊어지고 책상 앞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겼다. 문학은 목숨과 같은 것이어서 절필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경숙의 해명은 거짓이 있을 수 없다. 그가 애써 꾸며 말한 것도 아니다. 그가 문학을 살아온 방식, 문단의 생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번 ‘신경숙 표절 사건’의 핵심은 문단 내에서 조용히 묻힌 2000년과 다른 지점에 있다. ‘소설의 위기’라 불릴 정도로 이렇다할 소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단 현실과 문단의 폐쇄성이 권력의 분산과 파괴가 빠르게 일어나는 SNS 소통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다. 작가와 문단은 여전히 ‘그들만의 방’에 머물러 있는 인상이다. 출판사 창비와 신경숙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화가 나 있는 이유다. “원고를 써서 항아리에 묻더라도” 작

품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신경숙의 각오가 한편으론 공허하게 들리기도 한다. 신경숙의 표절 논란은 문학계의 반성과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는 23일 오후 ‘최근의 표절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라는 토론회를 연다. 작가의 잘못을 막아주고 재생산해온 출판사와 비평가 그룹의 ‘침묵의 카르텔’ 구조를 어느 정도 파헤칠지 주목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소설가 신경숙을 인터뷰한 경향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라고만 기술했다.

위 기사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문

경향신문 2015년 7월 28일자 4면 「방미 김무성, 연이틀 큰절 … “장군님 감사합니다”」, 7월 30일자 4면 「케리 미 국무장관 바빠서 … 차관보 만난 김무성」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방미 김무성, 연이틀 큰절 …〉= 『‘정당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가 이를 연속 ‘큰절’을 했다. 현지 방위산업체에 전투기구매 의사를 밝히는 등 차기 대선 주자급 이상의 ‘대선 후보’에 준하는 행보와 격에 맞지 않는 외교로 뒷말을 낳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다. 초대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월턴 위커 장군 묘를 찾아서는 “한국식으로 큰절을 하겠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번 절을 했다.

이어 묘비에 묻은 진흙과 새똥 등을 직접 꺼낸 손수건으로 닦으며 “아이고, 장군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위커 장군님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장본인으로 대한민국 최고 영웅이자 은인”이라며 “우리나라를 살려 주신 분들인데 절 백번 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방미 첫날인 전날에도 6·25 참전용사·가족 만찬에서 “한국의 오랜 관습에는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 큰절을 하는 관습이 있다”며 절을 올렸다.

잇따른 큰절은 ‘과공비례(過恭非禮·지나친 공손은 예의에 벗어남)’ 논란을 낳았다.

한국 제1당 대표로서 ‘정당 외교’의 격에 관해 고민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안보 이미지’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트위터에 “1883년 미국에서 큰절하는 민영익 일행과 그로부터 132년 뒤 미국에서 큰절하는 김무성 일행”이라며 두 사진을 함께 올린 뒤 “참고로 1883년 미국인들의 반응은 ‘별 희한한 것들 다 보겠네’ 정도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 사위’를 자처하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도 방문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록히드마틴사 관계자에게 “우리에게 F-22기를 팔겠다고 언론에 얘기를 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사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또 “불공정 계약이 됐다고 한국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해 발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정○○기자』

〈케리 미 국무장관 바빠서 …〉=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번 8·15(종전 70주년) 기념사에서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고 미국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일본의 역사 왜곡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면담에서 “한국에는 미국이라는 친구와 자유시장을 가진 일본이 있다”며 “한국의 지위는 ‘글로벌 이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예정돼 있던 김 대표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회동은 케리 장관의 의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킨널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도 면담하는 등 의회 지도자급과는 활발히 교류했다.

하지만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 당초 회동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부통령 등 행정부 최고위급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팔소(양꼬) 빠진 방미 외교’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무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 국무부에서 ‘케리 장관이 (이란 핵 협상 관련 보고·청문회 지체로) 의회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에 참석을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통지가 왔다”고 전했다.

정○○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방미 행적을 전하는 내용이

다. 김 대표의 방미 일정에는 다수 언론사의 기자들이 동행 취재해 현지에서 기사를 송고했으나, 경향신문 기사는 바이라인에 현지에서 송고했다는 표기가 없는 것으로 미뤄 미국 현지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사는 김 대표의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면담 등을 마치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서 작성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기사를 국내에서 취재했다면 간접 취재원을 밝혀야 하지만 기사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국내 통신사 등이 송고한 기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 출처도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타 매체의 기사를 일부라도 전재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5.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東亞日報 2015년 8월 1일자 1면 「진흙탕 싸움 치닫는 롯데 후계분쟁」, 8월 3일자 1면 「“동빈<차남> 용서못해” … 이번엔 신격호 동영상」 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8월 1일자 1면 「“신격호, 후계자는 신동주라고 생각”」 제목의 기사, 매

일경제 8월 3일자 1면 「신격호-신동빈 오늘 ‘운명의 회동’」 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8월 3일자 1면 「신동빈 회장 오늘 귀국/辛총괄 “차남 용서 못해”」 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8월 3일자 1면 「“신동빈 권한·명분 없어/이해도 용서도 못한다”」 기사와 사진, 파이낸셜뉴스 8월 3일자 1면 「롯데가父子<신격호-신동빈> 오늘 만나/경영권 분쟁 담판 짓나」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8월 3일자 1면 「롯데 ‘막장 드라마’ 비판여론 비등」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 세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 진흙탕 싸움)=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육성과 아버지의 직인이 찍힌 ‘한국 롯데그룹 회장 임명장’을 잇달아 공개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에서 일본말로 나눈 대화 내용을 31일 방송에 공개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신동빈도) 그 만두게 했잖아”라고 했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히려 신 회장이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를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내용을 알려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을 한국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하며 차남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17일자 문서도 공개했다. 15일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만들어진 문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글씨를 쓰지는 않았지만 서명을 하고 도장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경영권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에 의해 차단된 가운데 만들어진 녹취라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후략)』

(東亞日報 … ‘동빈 용서못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영상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에 의해 2일 공개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친이 신동빈 회장을 교도소에 넣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함과 동시에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장남의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라고 폭로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영상에서 한국말로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왔다. 오늘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둘째 아들 신동빈을 한국롯데 회장과 한국롯데홀딩스(일본 롯데홀딩스를 잘못 말한 듯)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저를 배제하려는 점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상은 이날 오후 신격호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롯데호텔 34층에서 신동주 부회장 측에 의해 촬영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중국 사업에서 조 단위의 손실을 낸 동생에 대해 ‘배상을 받아라, 교도소에 넣어라’라고 했다”며 “동생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인 롯데그룹의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고령의 총괄회장을 이용해 전례 없는 동영상 을 통해 왜곡되고 법적 효력도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후략)』

(세계일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밀려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전방위 반격에 나섰다. 방송을 통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발언과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공개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동생인 신신호 일본 산사스 사장도 신 전 부회장을 그룹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거들고 나섰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 육성 파일에는 차남 신동빈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했다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음성이 담겨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롯데홀딩스 임원들을 모

아놓고 신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비롯한 이사 6명을 해임했다.

녹음에서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다카유키 사장)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고 신 전 부회장에게 물었고,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사장을 맡고 있다”고 답하자 다시 “그만두게 했잖아”라고 되물었다.(후략)』

(매일경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부자, 형제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일본에서 귀국할 예정이어서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신회장은 귀국하자마자 신격호 총괄회장을 알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친은 차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부자 간 만남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지는 미수지수라는 전망이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2일 오후 롯데호텔 34층 소재 본인 집무실에서 녹화한 것이라며 방송사에 영상을 보냈다. 이 영상에서 신 총괄회장은 “둘째 하들 신동빈을 한국 롯데회장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며 신 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후략)』

(머니투데이)= 『3일 귀국할 예정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갈등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의 입장이 담긴 동영상이 이날 공개됐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통해 제공된 동영상에서 “국민여러분에게 롯데그룹과 관련,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아들 신동빈을 한국롯데 회장,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며 “신동빈에게는 어떠한 권한이나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온 아버지인 자신을 배제하려는 신동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후략)』

(서울경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을 통해 공개한 대국민 사과문 영상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영상 /방송화면 캡처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롯데그룹을 키워온 아버지를 배제하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후략)』

(파이낸셜뉴스)= 『3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중략)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는 광운사, 그 다음이 우리 사주로 두 개를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며 “우리사주 찬성이 있으면 지금의 이사진을 모두 바꿀 수 있다”며 자신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3일 일본으로 출국한 후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광운사 등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후략)』

(헤럴드경제)= 『“외형상은 국내 5위의 재벌이지만, 실상은 동네시장이나 슈퍼경영 수준이다.” “임직원 23만명인 롯데가 대기업 오너의 소유물인가.”(중략)

폭로전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은 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재계서열 5위 회장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형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은 “교도소에 넣어라”고 해 롯데의 막장드라마는 최고 절정을 보여줬다. 신 총괄회장이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신 전 부회장을 선임했다는 내용의 임명장과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및 한국롯데 회장과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육성 녹음도 신 전 부회장이 폭로했다.

신동빈 회장 측도 즉각 폭로전에 동참(?)했다.

신 회장측은 신영자 롯데삼당복지재단 이사장과 5촌 조카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에 대해 “신동주 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한 뭇 때 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신 회장 측은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대목을 강조해 부자간의 씩씩한 재산싸움으로 내비치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KBS와 SBS가 신동주 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을 인터뷰하거나 그에게 제공받은 동영상을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롯데 후계 분쟁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위 기사들은 방송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방송에 공개했다’ ‘방송사 인터뷰에서’ ‘방송사에 영상을 보내’ ‘동영상 공개’ 등으로만 표기했다. 또 서울경제는 특정 방송사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영상을 캡처해 보도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10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6월 2일자 「朴 대통령의 낙타고기와 메르스」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의 낙타고기와 메르스』

by 영송맘 on 2015.06.02 in 시사코믹 잡다구리

“박대통령은 지난 중동 순방 중 낙타고기를 두 번 대접받았다”(조선일보)

중동에서 낙타고기를 대접받는 의미는 최고의 환대.

그리고서 얻어온 게 메르스는 아니겠지만...



메르스와 탄저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지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모자라 정부와 국회가 휴일까지 모두 쉼 다음
무려 10여일이 지난 6월1일 월요일에야 긴급대책회의 소집.
그나마 얼굴을 비친 대통령은
2차 확진자가 15명인지 18명인지 모르는 보고체계도 엉망
메르스 대응책은커녕 괴담 유포자 처벌 엄포요
결의에 찬 표정으로 강제성과 제제조항이 없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만 행사
하겠다고 한다.

초기대응 실패,
골든타임 놓쳐
메르스 3차감염자 2명 발생 !!!!!

[관련 기사]

【단독】 중국 간 메르스 환자 “출국 전 검진 요청 묵살”

질병관리본부,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요청한 확진검사 2번이나 거부했다
메르스 네 번째 환자 발생, 격리시설 요청 거부당해

3차 감염 ‘공포가 현실로’...정부 메르스 방역 실패(종합2)

메르스 격리관찰자 1천명 초과하면 통제불능 우려

도대체 뭐 하는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

※참고 1: 저널로그 목차



(충격)일본 공포 트윗 [0]

열습민님 | 15.06.02 09:20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화제의 일본 공포 트위터, 최근...



박대통령의 낙타고기와 메르스 [0]

열습민님 | 15.06.02 08:19

“박 대통령은 지난 중동순방 중 낙타고기를...



메르스 팬더믹 공포, 새삼 떠오르는 ‘박근혜의 분노’ [0]

열습민님 | 15.06.02 08:57

메르스 3차 감염 팬더믹 우려와 공포 속에 다시금 ...

〈캡처시각 06.02 11:49〉

※참고 2: 경향신문 6월 2일자 「김용민의 그림마당」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동아닷컴의 블로그인 저널로그의 〈Old girl Diary〉에 실린 것이다. 이 글은 영송맘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올렸는데, 삽입한 그림은 경향신문 6월 2일자 2면에 실린 「김용민의 그림마당」을 그대로 옮긴 것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다른 신문의 만평을 가져오면서 아무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위 게시물은 저널로그의 초기 화면에 다른 게시

물과 함께 버젓이 소개돼 있다. 비록 외부 기고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66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6년 1월 26일자 「도도맘,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경찰에 고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	머니투데이
도도맘,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경찰에 고소 이동휘 기자 입력 2016.01.26 14:54 수정 2016.01.26 15:00	[단독]‘도도맘’ 김미나씨, 40대男 ‘강제추행·폭행’ 혐의 고소 윤준호 기자, 김민중 기자 입력 2016.01.26 13:00
‘도도맘’ 김미나(여·34) 씨가 최근 한 남성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달 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직원 A씨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명 ‘도도맘’으로 불리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34·여)가 최근 한 남성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달 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대표 A씨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초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폭행한 데 이어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와 A씨를 상대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했다. 김 씨는 현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A씨가 어떤 관계인지, 김 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용석 변호사와 사이에서 불거진 불륜설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네티즌 60여명을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고소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초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수차례 본인을 폭행한 데 이어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와 A씨를 상대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가졌다. 김 씨는 현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A씨가 어떤 관계인지, 김 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용석 변호사와 사이에서 불거진 불륜설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누리꾼 69명을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고소한 바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6/2016012602172.html>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012517530321805&cast=1&STAND>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머니투데이가 1월 26일 13시에 송고한 「[단독] ‘도도맘’ 김미나씨, 40대男 ‘강제추행·폭행’ 혐의 고소」 제목의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토씨 등만 바꾼 뒤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단어 몇 개만 바꿔 옮겨놓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편집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2015-309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주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5년 6월 3일자 「[사진] 모델 미란다 커, 해변서 화보 촬영 중 민망 노출」 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3일자 「[포토] 미란다커, 시스루 드레스 입고 '19금 덤블링」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앙일보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앙일보)=『[사진] 모델 미란다 커, 해변서 화보 촬영 중 민망 노출

입력 2015.06.03 오전 12:02:00 수정 2015.06.03 오전 12:02:00





톱 모델 미란다 커의 해변 노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란다 커 19금 덤블링’ 제목으로 한 개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시드니 팜 비치에서 진행된 한 화장품 화보 촬영 컷으로 해외 연예 전문매체 ‘Just Jared’가 공개한 파파라치 사진이다. 이날 미란다 커는

속옷이 고스란히 비치는 전신 시스루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해 함께 촬영한 소녀들과 함께 해변가를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촬영 도중 갑자기 옆으로 재주넘기(카트휠)를 선보였고 드레스 절개 부위가 열리며 민망한 노출 장면을 연출했다.

한편, 미란다 커는 2013년 할리우드 배우 올랜도 블룸과 이혼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근에는 올 누드에 청재킷만 걸친 아찔천만한 화보로 눈길을 모았다. 또한 그녀는 호주 ‘바자’ 매거진 3월호의 표지 모델로 나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미란다 커SNS,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포토] 미란다커, 시스루 드레스 입고 ‘19금 텀블링’

최종수정 2015.06.03 08:28 기사입력 2015.06.03 07:57



미란다커,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란다커의 패기 옆 덤블링’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공개 됐다.

사진 속 미란다커는 속옷이 고스란히 비치는 화이트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덤블링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 2013년 한 화장품 화보 촬영 컷으로 해외 연예 전문매체 ‘Just Jared’가 공개한 파파라치 사진이다.』

※참고 : 저스트자레드 원본사진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모델 미란다 커가 2년전 시드니 해변에서 속옷이 비치는 흰색 드

레스를 입고 화장품 화보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랐다고 소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랐다”는 설명만 한 줄 붙인 채 워터마크가 삭제된 사진을 대량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은 2013년 2월 11일 해외연예 전문매체 저스트 자레드(Just Jared)가 보도한 것이다. 당시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 미디어인 AKM-GSI가 보유한 것으로, 해당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스트 자레드는 AKM-GSI에게서 사진을 구입, 출처를 표기하고 보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는 워터마크를 지우고 무단으로 게재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해당 사진을 퍼 담아 올린 것이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출처를 밝혔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출처는 해당 출판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게재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게재한 사진도 가랑이를 벌린 상태에서 팬티가 훤히 드러난 모습이어서,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선정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만 설명하고 해당 사진 2장만을 게재했으나, 아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2015-116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2.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주문

경북일보 2015년 5월 13일자 6면 「영일만항 환동해권 물류거점화/이강덕 시장, 중·러 순방길」 제목의 기사의 관련사진, 경북매일 5월 27일자 5면 「대구 지하철객차 낙서 범인은 외국인」 제목의 기사의 관련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경북일보 5월 13일자 6면



경북매일 5월 27일자 5면

경북일보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5월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국제여객터미널을 둘러보는 장면을 촬영한 포항시 제공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경북매일은 5월 10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에서 전동차에 스프레이로 대형낙서를 하고 달아난 범인이 외국인 남성 2명으로 드러났다는 사건 기사와 관련해 대구 수성경찰서가 제공한 문제의 전동차와 낙서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7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5년 8월 10일자 25면 「국내 첫 승은 다음 기회에」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9일 제주 오라CC에서 막을 내린 K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공동 8위에 그쳐 국내 대회 생애 첫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 박인비가 2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갤러리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국내 첫승은 다음 기회에」 제목으로 갤러리 환호에 답하는 박인비 선수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위 사진은 KPGA가 제공한 것인데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통신사인 뉴스1은 위 사진을 싣고 “(KPGA 제공)”이라고 출처를 밝혔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8 신문윤리강령 위반

忠淸日報 발행인 조 승 남

주문

忠淸日報 2015년 8월 20일자 14면 「단양 소백산 연화봉에 핀 ‘마타리’ 가을의 전령사된 ‘무한사랑’」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忠淸日報은 충북 단양 소백산 연화봉 정상 부근 야생화 군락지에 핀 마타리꽃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위 사진은 단양군청이 제공한 것이다. 같은 사진을 게재한 울산매일은 인터넷 판에서 〈단양군청 제공〉이란 출처를 밝혔다.

忠淸日報의 위 사진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주문

朝鮮日報 2016년 1월 16일자 A22면 「9년 만에 … 세계 최강과 붙게 된 한국 테니스」 제목의 사진, 한국일보 1월 16일자 16면 「“정현, 조코비치를 시험에 들게 할 것”」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朝鮮日報,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



(한국일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과 한국일보는 뉴시스가 1월 4일 23:52 송고한 「정현, 시즌 첫 경기 승리 … 16강 칠리치와 격돌」 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이 사진은 정현이 4일 호주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브리즈번인터내셔널단식 본선 1회전에서 샘 그로스(호주·60위)와 경기를 벌이는 장면이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9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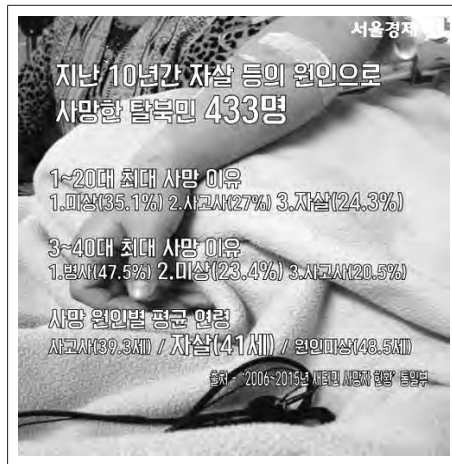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2016년 2월 8일자 「[그래픽뉴스] 소수자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탈북민」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사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픽뉴스] 소수자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탈북민

이○○ 기자 p***lies@sed.co.kr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제3의 국민'

정부 용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불리는 탈북민들은 자신들을 '제3의 국민'이라 규정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해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입국과 동시에 하나원에서 125, 225가 표시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 자체에 낙인효과가 있다. 표면적으론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탈북민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로 첫손가락으로 꼽는 것은 경제력이다. 하나원 퇴소 후 400만원의 정착금 이외에 기초생활비가 지급이 되지만 이것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착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기술로 직장을 얻으려 시도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신분을 숨기기도 쉽지 않다. 정착 과정을 낱알이 감시하는 보안과 형사들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 탓에 탈북민들은 어렵사리 잡은 직장에서 쫓겨나기 일쑤다.

그래서 그들은 공사장의 잡부 같은 단순노무종사자나 식당 서빙 같은 서비스 종사자로 일하는 비중(55.7%)이 상당히 높다. 자연히 보수가 적은 직업군에 몰려 있다 보니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안창일 세계북한전략센터 이사장은 "북한에서는 일부 당 관료를 제외하고는 다들

더 큰 문제는 경제력 격차로 인한 패배 의식 때문에 탈북민들의 자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2015년 통일부에서 탈북민 사망자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10~40대 사망원인 순위 중 5위 안에 항상 자살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10~20대 사망원인 중 24.3%가 자살로 조사돼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줬다. 탈북민 A(35·여) 씨의 남편은 지난 2014년 10월에 안타깝게도 죽음을 선택했다. 북한 사회에서 장마당 거래로 상당한 부를 쌓았던 그는 탈북을 결심하면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되겠다는 꿈을 켰다. 그러나 북한에서 쌓은 부는 남한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적은 규모의 정착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삶을 비관하다 끝내 죽음을 택한 것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 놓인 탈북민들이 자신의 남편 뿐 아니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탈북민이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고민하다 상당한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다. 그러나 탈북민을 관리하고 정착을 도와줘야 할 정부 당국은 이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난과 소외 속의 탈북민을 노리는 나쁜 그림자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탈북자 조사자료

■ 탈북민 범죄 피해를

탈북민 (24.3%)

남한주민 (4.3%)

5배 이상

■ 탈북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유	비율
교육의 부족	47%
사회적 자본의 부족	27%
돈의 부족	12%
정보의 부족	14%

■ 탈북민 사기 피해를

탈북민 **5명 중 1명** 골
난한 주민들에 비해
무려 **43배**나 높은 수치

■ 재교육이 가능한 나이가 넘어버린 30~49세 탈북민이 전체의 **47%**를 차지

→ 정작 **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자인의 삶만 알고
사기를 당하기 일쑤

■ 제대로 된 정착 교육이 필요하다

"탈북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선배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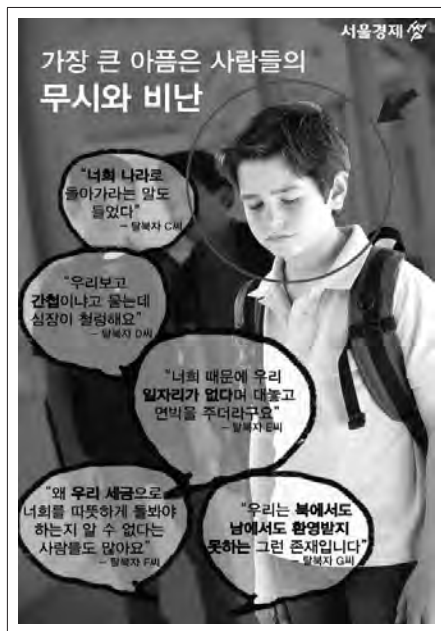
- 안창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497

를 종용했다. 교육 기회의 불균등으로 남한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의 입장에서서는 귀가 솔깃할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들의 희망을 짓밟고 중국으로 도피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은 탈북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기 파주지역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연 매출 400억원을 올리는 성공한 탈북민 사업가로 신망을 쌓았던 그는 자신의 범행 대상을 다름 아닌 자신의 입장을 잘 알아주고 쉽게 설득당할 수 있는 탈북민들로 골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탈북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탈북민들은 남한 주민에 비해 5배 이상 범죄에 노출돼 있었고, 특히 사기 피해 건수는 무려 4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민들의 주요 성비가 여성인데(북한에서는 여성 교육 정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 주로 탈북하는 연령대가 재교육이 힘든 30~49세(47%)인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어려운 상태다. 안 이사장은 “탈북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시급하다”며 “선배 탈북민들이 스스로 정착하는 데 어려웠던 점을 가르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 7년차 B(30·여) 씨는 요새 밖을 다니기 두렵다. 동네에 탈북민이란 사실이 알려진 후로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자신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부터 앞선다.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사신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 ….”라며 말꼬리를 흐리지만 인터뷰 내내 연신 눈물은 뺨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은 그저 비판받아야 할 잠재적인 ‘간첩’으



배타적 태도 또한 탈북민 박탈감의 큰 이유

로 치부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적으로 갈등이 빈번해지면 자연히 그 화살은 탈북민에게로 향한다.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였다. 말투를 듣고 뉴스 속 북한정권에 대한 반감을 탈북민에게 고스란히 표현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못한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 상당한 배타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북한의 삼엄한 감시와 중국에서의 핍박, 제3국을 경유 해야만 하는 만만치 않은 입국 일정을 버텨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들에 대한 대접이 이와 같아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탈북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정부 지원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며 “탈북민과 남한주민의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인 기회가 잦아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조국이라고 생각한 곳에서의 핍박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입력시간 2016.02.08 10:01:11

〈캡처시각 16.2.17 1:1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한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해 소수자로 전락하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픽 뉴스 말미에 엉뚱하게도 외국 어린이 사진이 등장한다. 이 사진은 이슬람 백과사전에 실린 것이다. 한눈에 봐도 외국인으로 탈북민 어린이와는 무관하다. 언론은 부득이할 경우 기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래픽뉴스가 사진이나 도표 위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진선택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편집지침

주문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2015년 12월 22일자 「“전셋값 20% 떨어지면 ...” 무서운 경고」 제목의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2.22. 17:39〉

『전셋값 20% 떨어지면 38만 가구가 ‘깡통주택’』

김○○ 기자 k***5th@sed.co.kr

전세 가격이 20% 급락할 경우 38만 가구가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9만 가구도 집주인이 빚을 내야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의 하나인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

고 있는 데다, 2018년부터는 고령화 충격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깡통주택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월세보증금이 20% 급락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체 임대가구(746만가구)의 11.9%(88만7,000가구)가 은행에서 빚을 내야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한은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및 주택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월세 보증금 규모는 530조원 가량이다.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가계간 사금융 규모가 1,200조원에 다다른 금융권 가계부채의 절반에 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전체 임대가구의 43.6%(325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세보증금이 보유 금융자산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도 전체의 11.9%다. 이렇다 보니 전세가격이 20% 떨어질 경우 빚을 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 10가구 중 1가구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38만 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의 돈을 줄을 죄고, 공급과잉이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빚을 내야하는 집주인으로선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더 어려워진다”며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분석, 전세 가격이 20% 급락하면 38만 가구가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위

협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 기사에는 제목과 첫 문장에서 그 대상 주택 수를 38만 가구라 했는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 기사 소개에서는 “전세가격이 20% 급락할 경우 91만 가구가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91만 가구라면 38만 가구의 2.4배나 되는 규모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주는 불안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본문 기사와 뉴스스탠드 소개 기사가 차이나는 까닭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의혹도 받게 된다. 제목과 본문 일부를 게시하는 편집기법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볼 수 있으나, 이처럼 독자를 기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언론사는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2월 17일자 「‘과격 노출’로 제재까지 ... 알고보니 ‘마귀 탕’」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격 노출”로 제재까지 … 알고보니 ‘마귀 탕’

기사입력 2016.02.17 14:34

[해럴드경제= 이슈섹션] 목욕을 하는 여성의 팔꿈치가 마치 여성의 나체처럼 보이는 “역대급 음란마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페이스북이 삭제 조치한 사진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음란마귀가 낀 페이스북’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이 목욕하는 여성의 사진을 삭제 조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은 “해당 사진은 페이스북의 권리와 책임 조항을 위반하여 삭제하였습니다”라며 한 여성이 목욕하는 사진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사진은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는 여성의 팔꿈치가 착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과연 페이스북 측이 이 사진을 제재한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란마귀가 단단히 켜다” “나도 모르게 등 뒤를 살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캡처시각 02.19. 14:3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과격 노출'로 제재까지 ... 알고보니 '마귀 탕'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사진을 게재했다. 한 단체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사진을 일부러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 측이 규정 위반으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11월 페이스북이 모유수유 사진을 가슴노출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자 위 단체가 반발심리로 실험에 나섰다'는 것이다. 가슴이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실제 팔꿈치를 교묘하게 촬영한 것이다. 3년 전 보도한 내용을 추가 정보 없이, 그것도 뚜렷한 계기도 없이 재탕한 것은 바람직한 제작태도가 아닐 것이다.

게다가 SNS 게시물을 인용했다지만 단순한 착시현상을 놓고 국어사전에 없는 '음란마귀' 운운하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목에 '마귀 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독자의 눈에 잘 띄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에 사진과 함께 비중있게

게재하였다. 이는 선정성을 노린 과장된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제의 원칙

2015-3056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5년 3월 29일자(캡처시각) 「女 연예인 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충격'」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네이버뉴스스탠드



스포츠동아 홈페이지 초기화면



〈이상 캡처시각 03.29. 13:47〉

『홍콩 연예인 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충격'』

입력 2015.03.28 09:17:00



홍콩 여성 연예인들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 다공바오는 27일 홍콩 여성 연예인 4명은 성매매사이트에서 사진과 함께 가격을 제시한 사실이 제보돼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한 명은 2012년 영화 '쾌락지구2'에 출연한 천징이(陳靜議·Mia)다. 사이트에서 그는 1시간 30분에 홍콩달러 1만 2000달러라고 나와 있다.

나머지 3명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뜨고 있는 판위시(范語希), 홍콩 케이블방송에서 여성 앵커로 활동하는 황쯔통(黃紫桐·Ruby), ‘쾌락지구3’에 출연했던 여배우 허위안통 등으로 1만4000 홍콩달러~3만 홍콩달러로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사이트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이들의 사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출처:홍콩 다공바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15년 3월 29일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스포츠동아에는 「女 연예인 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충격’」 제목의 기사가 톱으로 올랐다. 스포츠동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도 「女 연예인 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충격’」 제목의 기사가 똑같이 톱으로 올랐다. 제목 그대로라면 한국의 여성 연예인 4명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이라고 읽혀진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를 보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기사를 열면 제목이 「홍콩 연예인 4명이 해외 성매매 충격」으로 바뀐다. 제목 앞에 ‘홍콩’이라고 국적을 표기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를 편집자가 모를 리 없을 것이므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기사에서 “성매매사이트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이들의 사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 해당연예인이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비록 외신을 전제한 것이지만 사진을 포함해 신원을 밝힌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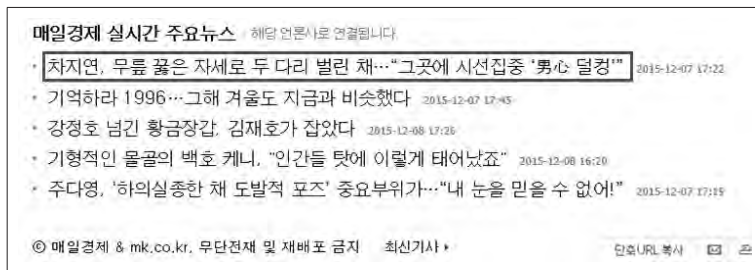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12월 8일자(캡처시각) 『차지연, 무릎 꿇은 자세로 두 다리 벌린 채 ... “그곳에 시선 집중 ‘男心’ 덜렁”』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2. 08. 18:29〉

『차지연, 빛나는 시스루 의상에 드러난 육감적인 몸매

기사입력 2015.12.07 07:22:08 최종수정 2015.12.07 14:12: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 인턴기자]

‘복면가왕’ 캐츠걸의 유력후보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차지연이 출연한 뮤지컬 ‘카르멘’의 프로필 컷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은빛의 반짝이는 시스루 의상을 입은 차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6일 방송된 MBC 예능 ‘복면가왕’에서는 ‘여전사 캣츠걸’이 18대 가왕의 자리에 올랐다.

차지연은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 마이크 습관 등을 근거로 캣츠걸로 추정되고 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복면가왕’에서 인기를 끈 출연자 ‘캣츠 걸’이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라는 예상과 함께 그가 출연한 뮤지컬 ‘카르멘’의 프로필 컷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차지연, 빛나는 시스루 의상에 드러난 육감적인 몸매」라는 원 제목과는 달리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실린 기사 말미에 덧붙인 〈매일경제 실시간 주요뉴스〉에는 「차지연, 무릎 꿇은 자세로 두 다리 벌린 채 … “그곳에 시선 집중 ‘男心’ 탈경”」라는 제목을 실었다. 이 사진에서 차지연이 두 다리를 약간 벌린 채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 건 사실이나, ‘다음’에 실은 제목에서처럼 성기를

암시하는 ‘그곳’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사진의 성격, 구도에 상관없이 선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같은 제목은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6년 1월 3일자 「“내 방으로 와” 부하직원 불러 성추행한 판사...”라는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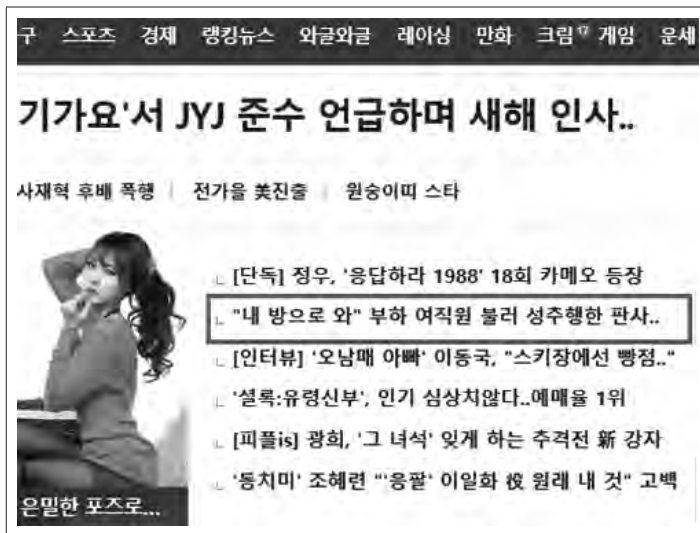
이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시각 01.03. 7:18〉

『“내 방으로 와” 부하 여직원 불러 성추행한 4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16.01.03 10:03

[수원= 뉴시스]김○○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 씨에게 징역 5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장소와 시각,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추행의 횟수가 1차례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기업 차장직에 있던 정 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같은 팀 여사원에게 “업무상 전달 사항이 있으니, 내 숙소로 오라”고 한 뒤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d***nkim@newsis.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자신의 숙소로 부하 여직원 부른 뒤 그 여직원을 성추행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의 제목은 「“내 방으로 와” 부하여직원 불러 성추행한 판사...」로 돼 있다. 판사가 자신의 방으로 부하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제목을 본래의 제목을 바꾼 것으로 보이거나 이는 사실을 오도한 것일 뿐 아니라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일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08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5년 3월 10일자 8면 「재·보선 비용 350억 ... 의원 1명 또 뽑는데 혈세 15억 ‘헛돈’」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9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350억 원(4·29 재·보궐선거 예상 비용 추가)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29 재·보선까지 총 23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되는 만큼 국회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평균 15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지만 대상자 10명 중 납부를 완료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공개한 ‘제19대 국회 재·보궐선거 실시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3회의 재·보선(2013년 4월 24일, 같은 해 10월 30일, 2014년 7월 30일)에서 중앙선관위가 지출한 선거관리 비용은 247억 8000만여 원(의원 20명)이었다.

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쓴 경비를 보전해주는 선거비용 보전 금액은 총 61억 원이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후보자는 법정선거비용의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절반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19대 국회에서 47명의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100% 돌려받았고, 3명은 50%를 반환받았다. 중앙선관위가 19대 국회 들어 재·보선에 사용한 비용(선거관리비용+선거비용 보전)은 총 309억 원이다. 여기에 오는 4·29 재·보선의 비용은 36억~40억 원(중앙선관위 추산)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하면 19대 국회 재·보선 관련 비용은 총 350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재·보선에 사용된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4·29 재·보선은 구 통합진보당으로 인해 치러지게 됐지만 통진당은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19대 국회 선거비용 반환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반환 대상자는 10명(14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납부 완료를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 징수불가는 1명(1억3200만 원), 징수 중은 5명(6억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순

위 득표자 승계방안과 원인제공자 선거비용부과 방안은 시급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19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23명을 새로 뽑는데 350억 원이 소요돼 국회의원 1명당 15억 원의 혈세가 지출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재·보선 비용 350억 … 의원 1명 또 뽑는데 혈세 15억 ‘헛돈’」으로 달았다. 재·보궐선거비용을 ‘헛돈’으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불공정한 선거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거나 당선인의 공석상태가 되는 경우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다.

비록 편집자는 비용 측면에서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의미로 ‘헛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표현은 자칫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1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東亞日報 2015년 4월 8일자 A6면 「권노갑 “선거 뒤흔치지만 文대표에 서운한 건 사실”」 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4월 11일자 15면 「문재인 대표에게 앙금 있지만 … 정권교체 위해 분당 만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동교동계가 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4·29 재·보궐 선거 지원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재·보선 지원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동교동계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동교동계의 좌장 격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당후사(先黨後私·개인보다 당을 앞세운다)’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4·29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 이어 정권 교체까지 힘을 합쳐 나아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참배 후 권 고문은 박지원 의원과 만났다. 박 의원은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선거 운동을 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내일이라도 당이 필요로 하면 나부터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 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표는 “감사하다. 모두 단합해 선거 승리의 길로 가자”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다만 권 고문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문 대표에 대한 호남의 서운한 감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고 인정해

야 한다”며 “그동안 정당 정치의 관행은 주류 60%, 비주류 40%의 배합에 있었는데 그런 정신을 문 대표가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문 대표에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후략)』

(중앙일보)= 『4·29 재·보궐선거를 돕지 않겠다는 동교동계의 ‘정치 파업’은 수습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최고위원이 동교동계의 행태를 ‘지분을 챙기려는 정치’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술밥을 먹던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된 균열이 친노무현계와 비노무현계, 동교동계와 비동교동계 간 신경전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추 최고위원이 한때 정·천 전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정풍(整風)운동’을 주도했던 ‘옛 동지’란 점이 극적 효과를 더한다.

파란의 한가운데 있는 동교동계의 좌장 권노갑(86) 고문. 그를 지난 9일 만났다. 오전 9시50분 용산역에서 새로 개통된 호남선 KTX로 광주광역시를 방문, 오후 9시25분 서울로 돌아오는 12시간에 걸친 동행 취재다. 권 고문은 차기 여야 대선 후보 중 문재인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의 명령은 정권교체인데, 이런 호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놓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당내 일부에서 친노계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앙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문 대표가 (불신을 가져온) 여러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분당하자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러나당을 깨고 새로 만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영원히 없어진다고 타이르고 있다”고 말해 당내 갈등이 완전히 잠재워진 게 아니라는 걸 내비쳤다.

권노갑 고문은 “친노계가 지난 총선 때 한광옥 전 대표 등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친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에서의 결의(3월 31일)는 권 고문의 뜻이었다.

“관악을 후보 경선에서 김희철 후보가 0.6%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심이나 당원 조사에서 앞섰는데 이번에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친노계인) 정태호 후보에게 떨어지자 여론 조작 논란이 일었다. 친노들의 경선 방식이 늘 그랬기 때문에 관악구 당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당원들을 커버하고 있는 이훈평 전 의원이 묘역에 와서 ‘권노갑 고문이 문 대표를 지원하는 움직임에 대해 여기서 찬반을 하자’고 하니깐 일제히 거수투표를 해 ‘도우면 안 된다’고 했다. 많은 당원의 반대에 따라 나도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지켜보라며 보류했다.”

- 광주를 시작으로 후보 지원을 시작한 건 여론조작 논란이 해소됐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보가 결정된 이상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반발하고 뛰쳐나가면 안 되고 일단은 수습하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안 쓰도록 고쳐 나가야 한다.”

- 그런 뜻을 동교동계가 따르기로 했다.

“8일 거구장에서 동교동계 전직 의원 등 60여 명이 모여 모든 결정을 나한테 맡기자는 의견을 도출했다. 일부 불만 세력은 문 대표 측, 소위 ‘노빠’(노무현 지지 세력)를 왜 도와주느냐는 불만이 여전히 있지만 문 대표를 도와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 내명년 대선에서 정권교체해야 하다는 의견은 같았다.”

- 문 대표와 박지원 의원 간 합의 내용은 뭔가.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풀었다. 문 대표가 대북 송금 특검 문제라든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 사건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중략)

- 지난해 11월 5일 문 대표와 만났을 때 6대 4 논의가 있었다는데.

“당 대표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많은 표를 받고도 안 됐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 줘라, 김대중 대통령처럼 준비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자문단·교수단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만약 당 대표가 되더라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을 포용하라고 했다.

과거 유진산·유진오·윤보선씨 같은 당수들도 주류가 60% 차지하고 나머지는 40% 비주류에게 할애했다. 지난 19대 때 공천을 보면 완전히 친노 독점이었는데 배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걸 얘기했다.”

- 문 대표의 출마를 반대한 건 박지원 의원 때문인가.

“대표가 되면 그만큼 상처를 입고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가 소홀해진다.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안보·경제·사회·통일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다.”

- 문 대표의 문제인가, 친노의 문제인가.

“친노다. 당직이나 공천을 전부 독점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22명을 독점했고 지역구도 일방적으로 해버린 폐단 때문에 양금이 생긴 거다.”

- 불신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보나.

“과거에 대북 송금 특검, 현대 비자금 문제, 도청 안 했는데도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도청했다고 해서 구속됐다. 나도 현대에서 200억원 받았다고 해서 구속돼 3년간 죄 없이 옥살이를 했다. 또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분당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들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차별성을 두려고 한 거다. 또 노 대통령이 ‘광주 시민이 나를 이빠서 찍어줬느냐,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찍어줬지’라고 말한 것, 문제인 대표가 민정수석 할 때 탕평인사를 하라는 정찬용 인사수석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 많은 호남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걸 빨리 불식하기 위해선 문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중략)

이날 오후 권 고문은 광주 서구 조영택 후보 선거사무실에 들러 당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뤘던 과업을 우리 새 대통령, 문제인 후보가 당선돼 과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 단결해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문 대표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 대선 후보로 문 대표를 지지하나.

“문 대표의 자질이나 자격·능력 문제는 현재 내가 말할 수 없다.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탄 후보들하고 정견 발표할 때 얼마나 앞설지 그건 알 수 없다. 다

만 여론상 앞서고 있는 게 하나의 기준은 된다. 문 대표가 25.3%, 당 지지도가 27%다. 야당 후보가 여야 합쳐서 1위를 가고 있는 이런 일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없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도 앞서고 있다. 국민의 지지도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 대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집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4·29 재·보궐선거 지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동교동계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원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동교동계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선거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기사는 『동교동계의 좌장 격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당후사(先黨後私·개인보다 당을 앞세운다)’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4·29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 이어 정권 교체까지 힘을 합쳐 나아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 「권노갑 “선거 돕겠지만 文대표에 서운한건 사실”」이라고 뽑았다. 권 고문이 문 대표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권 고문이 ‘문 대표에 대한 호남의 서운한 감정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사실이고 인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당 정치의 관행은 주류 60%, 비주류 40%의 배합에 있었는데 그런 정신을 문 대표가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문 대표에게) 말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호남지역이 문 대표에게 갖는 서운한 감정을 전한 권 고문의 발언을 마치 권 고문 본인이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한 셈이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고문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위 기사의 큰 제목은 「문재인 대표에게 앙금 있지만 … 정권교체 위해 분당

만류」다. 또 문패제목은 「이정민이 만난 사람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고문」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권 고문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양금 있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분당을 만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권 고문 발언 내용이 없다. 『권 고문은 차기 여야 대선 후보 중 문재인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의 명령은 정권교체인데, 이런 호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놓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진제한 뒤 “당내 일부에서 친노계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양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는 기술이 있을 뿐이다. 문 대표와 친노계에 대한 당내 일부의 감정을 전한 것인데 편집자는 이를 문대표에 대한 권 고문의 양금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제목들은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사안을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8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문

경향신문 2015년 6월 12일자 11면 「‘일베 홍대 교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최근 시험문제를 내면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영어지문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홍익대 법과대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대학에서 치러진 영미법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중 ‘미국계약법’ 관련 문항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영어지문이 제시됐다. 해당 지문에는 김 전 대통령을 ‘Dae Jung Deadbeat(게으름뱅이, 사회낙오자)’로, 노 전 대통령을 저능아로 표현한 문장이 포함돼 있다.

총 45문항 중 23번 문항 지문에는 ‘Dae Jung Dedbeat’가 ‘Hong-o(홍어)’를 팔기로 한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인삼을 판다는 기술이 등장한다. ‘홍어’는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다. 29번 문항엔 ‘Roh(노무현 대통령의 성의 영어식 표기)’가 ‘Owl Rock(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아이큐 69의 저능아라는 대목도 나온다. 이런 사실은 지난 10일 홍익대학교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홍익인닷컴’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려졌다. 홍익대 총학생회 등 학내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교수가 사과 조치를 취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교수는 “문제시되고 있는 문항들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 풍자의 의미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Deadbeat라는 단어는 계약법상 ‘상환 기일을 넘기는 사람’이란 의미로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홍익대 그 교수가 최근 시험문제를 내면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영어지문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일베 홍대 교수’」로 뽑았다. 일베는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다. 제목만 놓고 보면 문제의 교수는 일베 회원이거나 일베를 추종하는 사람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ㄱ교수가 출제한 문제 중 23번 문항 지문에 『‘Dae Jung Dedbeat’가 ‘Hong-o(홍어)’를 팔기로 한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인삼을 판다는 기술이 등장한다』 『‘홍어’는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다』라는 기술만 있을 뿐, ㄱ교수가 일베라는 표현이나 ㄱ교수를 일베로 추정해 불만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ㄱ교수가 영어 지문에 ‘Hong-o(홍어)’ 표기를 넣었다는 점을 확대 해석해 제목을 「‘일베 홍대 교수」로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하는 것으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90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정 영 무

주문

한겨레 2015년 10월 8일자 3면 「극우세력 집요한 ‘11년 투쟁」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발표 ‘초읽기’에 들어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배경엔 보수세력의 끈질기고 집요한 역사투쟁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교과서 이념 투쟁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검인정 제도에서 만들어진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를 두고 “친북·반미·반재벌 교과서”라며 집중적으로 색깔론을 제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분단 극복과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불만이 들끓던 때였다.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에 맞춰 보수성향 일간지들은 금성교과서를 ‘민중사관 교과서’라 부르며 “북한을 긍정 서술하고 남한은 독재·친일을 부각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식달 뒤인 2005년 1월 출범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은 기존 한국사 교과서를 ‘자학사관’ 기반이라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우파 논리를 정립해나갔다. 식민지 근대화론 인정, 제주 4·3사건을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 이승만·박정희 반공 독재체제 긍정 등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들은 역사학계로부터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교과서포럼은 2008년 5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하며 또다시 역사 논쟁에 불을 지폈다.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출판기념회 축하에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역사학계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빚발쳤고 대중적으로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꼭 10년 만인 2013년 보수세력의 오랜 노력은 빛을 보는 듯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논란 끝에 교육부의 최종 검정에 합격한 것이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0%대에 그쳤다. 교학사 교과서의 ‘실패’는 보수세력이 검인정 제도 아래에서 ‘입맛에 맞는 교과서’ 출간 시도를 포기하고, ‘국정교과서’ 도입이란 퇴행적 무리수를 꺼내드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오랜 시간 학계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은 교과서 국정화의 일등공신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꼽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친이 친일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김 대표는 ‘교학사 파동’ 당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며 직접 당내 ‘근현대사역사교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100명이 넘는 소속 의원들을 참석시키기도 했다.

당·정 조율 파트너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

연'으로 국정화 흐름을 뒷받침했다. 교육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강은희·서용교 의원이 검정제도의 오류와 집필진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배경에는 지난 11년 동안 보수 세력의 끈질기고 집요한 역사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그러면서 국정화의 일등공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지목하고,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연' 역할을 했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 「극우세력 집요한 '11년 투쟁」으로 단정적으로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 「김무성·황우여·원유철 총대 메」로 달았다. 사실상 기사에서 거론된 인물들을 극우세력으로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극우'라는 표현이 없다.

일반적으로 '극우'는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폭력성과 반민주적 색채가 강한 부류를 일컫는 부정적인 용어다.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없이 특정인을 '극우'로 지목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위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선입관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매일경제 2015년 12월 24일자 A2면 「아이들 볼모로 떼쓰는 서울시교육청 ... 한술 더 뜯 시의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16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실력 행사'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상 기본 예산 편성 원칙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6328억원)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국고 뭉이라며 반발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3807억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시의회가 형평성을 들어 그마저도 삭감해 버린 것이다. 결국 내년 서울 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시 의회는 다만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 내부 유보금 항목으로 편성해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겼다.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 역점사업인 청년수당 예산(90억원)과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예산(232억원)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 관점에서 볼 때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보육 예산은 내팽개쳐버리고 불

요불급한 사업은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국가재정법상 기본 원칙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재정 전문가는 “지자체, 기업, 일반 가정 할 것 없이 새해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꼭 지출해야 하는 것부터 예산을 아껴가며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 버린 채 다른 예산을 심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여기에도 서울시가 편성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 예산으로 15억원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작년에도 삭감됐다 복구된 전례가 있고, 한국노총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체(105석)에서 7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박 시장 역점 사업과 민주노총 예산을 모두 의결해준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보육 현장은 내년 초부터 당장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은 각각 9만3775명, 10만9398명이다.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원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약 4조2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 할당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약 2조1274억원, 유치원에 할당되는 예산은 약 1조89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충분한 지원을 한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 등 지자체들 단체 행동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2011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중 관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매년 10월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육교부금을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 말에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4조250억원에 대해 지자체별 누리과정 아동 수를 고려해 배분을 마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말만 지자체 예산이지 사실상 전액 국고 부담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육교부금이 목적성 경비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누리과정을 위해 내려보낸 교부금을 지자체가 선심성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는 게 중앙정부 시각”이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실력 행사’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상 기본 예산 편성 원칙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기술하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각계 의견과 향후 파장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아이들 볼모로 떼쓰는 서울시교육청’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일을 억지로 요구하고 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기술은 시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6328억원)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국고 뚫이라며 반발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3807억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시의회가 형평성을 들어 그마저도 삭감해 버렸다는 것 외에는 없다. 큰 제목에 표현된 시교육청이 아이들을 볼모로 떼쓴다는 내용은 기사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과도 다르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27일자 1면 「식물국회도 모자라서 ... ‘범죄’로 250억 날린 19대 국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24곳에서 치러져 그 비용으로 25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의 의원을 다시 뽑는데 평균 10억원 정도가 들어간 셈이다.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로는 지방선거 출마 등을 위한 퇴직이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정법을 어기면서 선거를 치르거나, 마음이 콩밭(자치단체장)에 가 있는 후보를 뽑았다가 안들어가도 될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을 앞두고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18대와 19대 재보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 국고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대에서는 의원들의 당선무효, 퇴직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총 24개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가장 최근자료(2014년 7·30 재보궐선거까지)를 보면, 20곳에서 선거비용으로 총 214억4214만원의 국고(선거경비집행비)가 지원됐다. 1곳 당 평균 10억원여다. 이를 2015년 4·29 재보궐선거(4곳)에 추산·적용하면 19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250억원을 썼다. 이 비용에는 투표독려 현수막, 투·개표 인건비, 선거비 보전비용 등이 포함된다. 국고지원은 지역구의 면적·인구수 등과 비례한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진 지역구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130억원의 국고 낭비 원인이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4곳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역구 3곳을 포함해 총 4곳을 기록했다. 무소속은 2곳, 진보정의당은 1곳이었다.

재보궐 선거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퇴직’으로 인한 사례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스스로 물러난 경우로 서울 동작구를 정몽준 전 의원(서울시장 출마)과 대전 대덕 박성효 전 의원(대전시장 출마) 등 새누리당이 총 7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수원정의 김진표 전 의원,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전남 담양의 이낙연 전 의원 등 2명이었다.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당선무효’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은 총 8곳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명령(통합진보당)에 따라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3곳이었다. 이 밖에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 곡선군과 삼성X파일 공개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도 선거를 다시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는 총 21곳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져 199억6611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19대에는 이보다 3곳의 지역구와 50억원여의 국고낭비가 늘어났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19대 국회에서 치러진 24곳의 재보궐 선거에 250억여원의 세금이 비용으로 투입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기사는 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2014년까지 치러진 20곳의 선거비용 214억원을 근거로 2015년의 재보궐 선거 4곳도 같은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해 『19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250억원을 썼다』고 기술했다.

기사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사유는 지자체장 선거 출마 등을 위한 ‘퇴직’이 10곳,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당선무효’가 8곳이다. 이밖에 국회 폭력(최루탄 투척)과 삼성X파일 공개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각각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선동,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선거를 다시 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식물국회도 모자라서 … ‘범죄’로 250억 날린 19대 국회」로 달았다. 19대 국회 들어 실시한 24곳의 재보궐선거로 치른 비용 250억원의 원인을 모두 ‘범죄’로 간주해 세금을 ‘날렸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의 기획 취지가 「안들어가도 될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때, 제목에서 언급한 ‘범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실정법을 어기면서 선거를 치러’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8곳으로 한정해서 봐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퇴직은 설사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이를 겨냥해 국회에 진출한 후 중도에 사퇴했다 해도 ‘범죄’는 아니다. 또 김선동 전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그 의도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것이 본인 주장이었고, 노회찬 전 의원의 행위는 비록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긴 했지만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명령(통합진보당)에 따라 치러진 3곳의 재보궐 선거도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혈세 낭비’도 24곳 선거에 사용된 250억원이 아닌 8곳에 사용된 80억원으로 추산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위 기사 제목은 정치권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2월 5일자 「[단독]유승옥, 바람둥이에 사기 당해 몸도 …」라는 제목, 「北 김정은 화장품공장 시찰 동행한 여자가 … 맵소사」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이 보도한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2015.02.06. 12:42>

『[단독]제대로 땀다! 유승옥, 생애 첫 주연 꺾차』

기사입력 2015.02.05 13:41:36 최종수정 2015.02.05 14:33:47



유승옥(사진= 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 제공)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 기자] ‘신이 빛은 몸매’라는 찬사의 모델 겸 배우 유승옥(24)이 생애 처음으로 주연 자리를 꺾었다. 요즘 가장 ‘핫’한 스타인 그가 배우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유승옥은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50부작 웹드라마 ‘소녀연애사(가제)’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촬영을 앞두고 있다. ‘소녀연애사’는 바람둥이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몸도 돈도 다 바친 연애 초보 세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폰은 ‘롤러코스터-남녀탐구생활’, ‘세친구’, ‘남자셋여자셋’ 등을 연출했던 김성덕 감독이 잡았다. 다음카카오 창립 기념으로 기획된 작품이어서 웹드라마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승옥은 동양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라스베이거스 세계대회’에서 입상해 주목받았다. 머슬마니아 대회는 각국의 모델·휘트니스 부문 예선에 통과한 선수들이 본선을 치러 경쟁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행사다. 이후 그는 SBS ‘스타킹’에 출연, ‘SNS 핫 보디 몸매 종결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수일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유승옥 측 관계자는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CF 촬영과 중국 활동

등 짝 채워진 일정으로 눈 코 뜰 새가 없다. 양해 부탁 드린다”고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정도.

일각에서는 유승옥을 두고, ‘몸매로 뜯’ 클라라의 대체 주자로 평가하는 이도 있다. 유승옥 역시 단순히 모델로서뿐 아닌, SBS플러스 드라마 ‘도도하라’ 등 여러 작품에 배우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왔으나 최근 몸매로 이슈가 되기 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터다.

그의 팬이기도 하다는 한 방송 관계자는 “유승옥은 클라라와 다르다. 엄청난 노력파다. 이번에 제대로 뜯 유승옥이 자신에게 쏠린 스포트라이트를 잘 흡수해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에서 그를 계속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f**t@mk.co.kr」

『북한 김정은, 평양화장품공장 시찰 ... 김여정 수행

기사입력 2015.02.05 08:35:35 최종수정 2015.02.05 08:36:32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내외의 수행을 받으며 평양화장품공장을 시찰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평양화장품공장에 방문,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 화장품의 질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인민들이 외국산보다 은하수 화장품을 먼저 찾게 하고 나아가서는 은하수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도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하수’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상표로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봄향기’와 함께 북한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제1위원장은 또 화장품 생산의 과학화·현대화 등을 강조하며 올해를 ‘화장품공업 발전의 분수령’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김여정·신만균 부부장 외에도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또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에 과학교육에 필요한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를 보내줬다며 선물 전달식이 4일 열렸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새해 들어 버섯공장, 신발·구두공장, 식품공장 등 경공업 부문을 시찰하며 ‘주민생활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의 주목도가 높은 곳에는 「[단독]유승옥, 바람둥이에 사기 당해 몸도 …」라는 제목이 게재돼 있다. [단독]을 강조한 이 기사의 제목만 읽으면 모델 겸 배우로 알려진 유승옥이 바람둥이에 사기 당해 몸도 돈도 다 잃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기사를 열면 내용은 전혀 다르다. 유승옥이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50부작 웹드라마 ‘소녀연애사(가제)’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촬영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바람둥이에 사기당해 몸도 돈도 다 바친 것은 웹드라마 ‘소녀 연애사’의 여주인공 이야기다. 웹드라마의 여주인공 이야기를 마치 주연으로 등장하는 배우가 실제로 당한 것처럼 거짓 포장하는 것은 사실과 어긋날 뿐 아니라 명예훼손의 소지마저 있다.

「北 김정은 화장품공장 시찰 동행한 여자가 … 뱃소사」라는 제목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기사를 클릭하면 북한 김정은이 화장품 공장을 시찰했고, 이를 여동생 김여정이 수행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현지지도에 동행한 것은 이미 3년이 넘었음에도, 김정은이 화장품 공장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 화장품의 질을 높일 것을 주문한 기사에 “시찰 동행한 여자가 … 뱃소사”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에게 혼동을 주는 동시에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강령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 2015년 6월 2일자 「사춘기 최진실 자녀들 이런 짓을? 깜짝!」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아이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진실 떠난 지 8년 ... 사춘기 접어든 그녀의 자녀

MBC ‘진실이 엄마 Ⅱ’, 할머니 정옥숙씨 사랑 ‘화제’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6.02 12:45:58 수정시간 2015.06.02 12:45:58

“내가 진실이, 진영이에게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싶어요. 내가 떠나는 날까지 정말 환희, 준희에게는 잘해주고 싶어요.”

배우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그 딸을 가슴에 묻은 채 혼자 손주를 지극 정성으로 길러온 ‘진실이 엄마’ 정옥숙 씨의 고백이 다시금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1일 밤 방송된 MBC TV ‘휴먼다큐 사랑-진실이 엄마 Ⅱ’에서는 곳곳하게 손주를 돌보는 정 씨의 사랑과 사춘기에 접어든 환희, 준희의 성장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다큐는 2011년 방송돼 화제를 뿌린 ‘휴먼다큐 사랑-진실이 엄마’의 후속작이다.

4년이 지난 뒤 최진실의 아들 환희는 15살 과묵한 중학생이 됐고, 딸 준희는 재기 발랄한 13살 소녀로 방송에 등장했다.

환희는 “할머니가 엉덩이가 험도록 공부시킨 덕에” 제주도 국제학교에 진학

했지만, 노는 것이 마냥 좋은 준희는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정 씨의 애물단지다.

아빠인 고(故) 조성민을 꼭 빼닮은 환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할머니의 반대에도 연예인을 꿈꾼다.

가수가 되고 싶다 말하던 준희는 이제 그 꿈은 접었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남자 친구의 반응에 일희일비한다.

아이들은 오로지 공부만 강조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요즘 청춘을 모른다”거나 “할머니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한다.

제작년 최진실과 함께 살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집으로 돌아온 정옥숙 씨와 준희는 그러다 보니 날마다 전쟁이다.

방송은 자신을 위해서는 만 원도 쓸 생각도 없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만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정 씨와 쾌활한 것 같으면서도 온기 없는 집에서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준희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준희는 악성 댓글 공격을 받은 일들을 언급하면서 “엄마도 그 댓글들을 참기 어려워서 그런(세상을 떠난)건데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고 말하거나, “왜 이렇게 다들 한 명씩 떠나가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쓸쓸함을 자아냈다.

정 씨는 준희가 한국에서 더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국 유학까지 고려하지만 간단치 않은 일임을 깨닫고, 결국 준희 의사를 존중해 김천의 고모네로 보낸다.

이날 최진실, 최진영 남매를 차례로 떠나보낸 정 씨의 가슴 절절한 고백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게 했다.

정 씨는 “사랑하는 딸을 보내놓고서는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 “진영이까지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천벌을 내리나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휴먼다큐 사랑-진실이 엄마 Ⅱ’는 6.4%(닐슨코리아·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방영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는 5.1%, SBS TV 예능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는 3.4%를 기록했다. 』

홈페이지 기사목차



사진출처=한해진 인스타그램

주간 BEST 기사

연예 스포츠 라이프

- 1 '올라라 생리날'까지... 얼마나 당했길래
- 2 '모태솔로' 최유람 첫결혼 남자가... 깜짝
- 3 중견 여성커 애정발각 드러나자... 깜짝
- 4 **사춘기 최진실 자녀들 이런 짓을? 깜짝!**
- 5 코끼리다라 男 파사 읊는 안타까운 자면
- 6 송승강구 '복면가왕' 고민 깊어지는 까닭

투데이 Hot 이슈

- 말기암투병 48세 "男" 죽기적적한 한말미
- <화제> 발기부전 이거 쓰면 바로 관계가능?
- 보험료가 오르지않는 비경신형 알보형 문의
- 커피깅으로 "하루 1kg씩" 뽐수 있다면?
- 자기전에 o o 한잔! 삶이 확확~ 바뀌어?
- 은쟁이자보다 4배다... 원금 보장형 상품이...
- 여성 불감증 요실금 동시해결?

무로만화




꽃등눈에는눈 2002소림사

<캡처시각 15.06.02. 12:45:58>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아이닷컴은 배우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지만 친정어머니 정옥숙 씨가 혼자서 손자 환희(14)와 손녀 준희(12)를 지극 정성으로 기르고 있다는 내용음 담은 MBC TV '휴먼다큐 사랑-진실이 엄마 II'를 소개하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하였다.

딸 최진실과 아들 최진영, 사위 조성민이 모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했고 이후 친정어머니 정 씨가 사랑을 다해 외손자와 외손녀를 양육하는 내용은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과연 이 같은 내용을 언론이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친정어머니 정 씨와 손자손녀가 TV 취재보도를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신변이 노출되고, 남들은 한 번 겪기도 어려울 트라우마를 2~3년 꼴로 세 번을 겪은 아이들의 아픔을 되살리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춘기 최진실 자녀들 이런 짓을? 깜짝!」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아빠인 고(故) 조성민을 속 빼닮은 환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

지만 할머니의 반대에도 연예인을 꿈꾸고, 가수가 되고 싶다 말하던 준희는 이제 그 꿈은 접었지만 공부엔 관심이 없고 남자 친구의 반응에 일희일비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제목은 최진실 자녀들이 마치 ‘못된 일’을 한 것처럼 독자들에 오인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① (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3136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5년 8월 26일자 「“김영란法 때문에 망할 수도...” 백화점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

※ 구독해지 이동지 원버디 08-26 17:22 편집

해피빈 참여의 힘이 자라나다, 해피에너지

1억 넘는 '에쿠스' 파격 할인? 이유 뵈더니

· "서울 시내 내 집만 277채" 주인 누군가 뵈더니
· 애플 팀 쿡, '새벽편지'로 추가 폭락 연해...무슨 일이
[김정호 칼럼] 노동개혁,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외국인 15일째 '별 그리
아'...중시 반등에도 불안
불안

국회의원 절반 '김영란법
위헌성여 공판'...한경 김
급 설문

'산정아 사태' 이후 돌아온 변양군 회장, 연봉이...
40대에 군복 벗는 직업군인 절반이...'충격 실상'
"김영란法 때문에 망할 수도..." 백화점에 무슨 일이
SK 회장, 전역 연기한 장병 명단 달라디디...깜짝
현대자동차, 아우디·벤츠보다 잘나가더니 이제는...
추석 선물 '침치켄 세트' 위협하는 게...'인기 폭발'
엘리트 男, 삼성 관두고 막걸리 만들다가 '대박'

오늘의 주요뉴스
"어닝쇼크 17개사, 회계법인 바뀐다" 금강원, 기업 압박
"이재용 스타일" 삼성...투자·마케팅·인사까지 폭 달라진다
정부 "북한, 전안협 사과 있어야 5.24 조치 해제"...기존 입장 유지
'뉴 롯데' 속도내는 신동빈...지배구조 개선 첫발

이시종 장관계 후배
국회의원과 관련 있다
다...

이동원 사임 말해 아
내 박미선이 2년 동
안...충격

강윤성 재산 탈진 눈
란 후 부모 언급하
자...이들 들은

강윤석 통론스캔들
남편 소울 중에 갑자
기...

〈캡처시각 15.08.26. 23:50〉

『‘시한폭탄’ 안고 가는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수입 소고기 장려법 … 한우농가 줄도산 부를 것”

입력 2015.08.26 18:23:12 수정 2015.08.26 20:48:16

지면정보 2015.08.27 A5면

‘선물 3만원 제한’으로 망가진 꽃농가 전철 났나

한우 4000억·굴비 1900억원대 피해 예상

농가 “농축산물 고급화 권하더니 …” 분통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국내산 프리미엄 제품 시장이 무너지고 저가 수입산 시장만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농협유통이 올해 추석을 맞아 선보이는 농산물 선물세트. 농협유통 제공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에 한우, 과일세트 등 선물용 농축산물 상품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연간 한우 소비량의 50%, 사과·배의 40~60%가 명절 선물용으로 나간다. 부정부패를 막으려다 1차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농민들 “희망이 없다”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 37마리를 키우는 축산농 박일진 씨(48)는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김영란법에서 뇌물로 간주하는 선물 금액 상한이 5만~10만원 선이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

판매량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 일반적인 한우 선물세트 가격은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박 씨는 “17년 전 처음 축산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소를 키우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제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김영란법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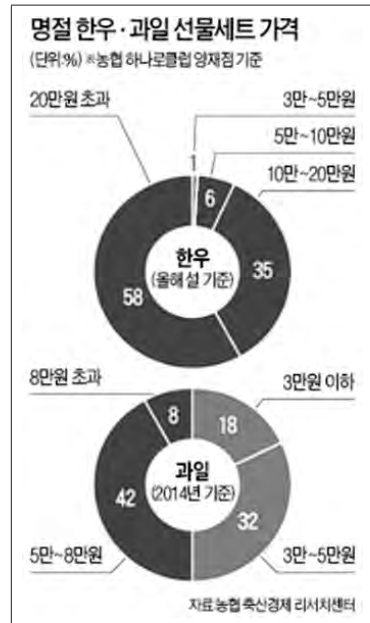
전체 한우농가 9만9000호 중 9만호가 박 씨처럼 100마리 미만을 기르는 중소농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고가 한우세트 선물이 금지되면 한우산업 전체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초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팔린 한우 선물세트 가격은 10만~20만원이 35%, 20만원 이상 50%, 10만원 이하는 7%밖에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기는 과일농가도 마찬가지다. 충남에서 배농사를 짓는 김주환 씨(59)는 2대째 운영하고 있는 과수원을 아예 처분할까 고민 중이다. 김 씨는 “배는 명절 선물 수요가 거의 절대적인데 배 선물을 막겠다고 하면 당장 올해 물량부터 사갈 곳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과일 선물세트는 절반(50%)이 5만원 이상이다.

◆ “고급화하라더니 ...”

정부의 기존 농축산업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값싼 수입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축산물 고급화 정책을 펴왔다. 농민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시설과 사료 투자를 늘려 농축산물 품질을 높였다. 국산 농축산물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은 뛰어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한우 1인 식단가는 7만7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고가 농축산물 선물을 막으면 결국 국내 프리미엄 시장



은 무너지고 저가 외국산 시장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우를 비롯해 인삼, 굴비 등 한국 고유의 토종식품도 설 자리를 잃는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결국 김영란법은 수입 고기를 애용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김영란법이 아니라 ‘수입고기 장려법’”이라고 꼬집었다.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는 “장기적으로 축산농가는 한우, 한돈을 포기할 테고 결국 국민은 수입육 외에 다른 선택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만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정 분야를 예외로 인정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 꽃 산업 전철 밟을까

선물 금지 정책으로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다. 화훼산업이다. 공무원 선물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2009년) 이후 1조원에 달하던 연간 화훼 생산액은 7400억원 규모로 급감했다. 줄어든 자리는 중국산 저가 꽃이 채웠다. 화훼농가는 5300여곳에서 3600여곳으로 줄었다. 화훼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2010년 1억달러에 달하던 화훼 수출 규모는 2014년 4000만달러로 곤두박질쳤다.

산업 특성이나 국산 및 수입품의 가격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부터 시행한 게 문제였다. 장만형 한국화훼협회 사무총장은 “보통 축하난이 10만원, 예식장 3단 화환이 15만원 선인데 실거래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3만원으로 규제해버리니 화훼산업이 아예 망할 판”이라며 “한국 문화에서 꽃은 뇌물이라기보다 축하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요즘엔 이런 미풍양속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는 4154억원, 굴비는 1950억원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화훼

산업처럼 줄도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김홍길 회장은 “비리 공무원 한두 명 잡자고 1차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고○○/임○○ 기자 k**o@hankyung.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까지도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영란法’이 농축산물에게까지 적용되면 명절 수요가 대폭 줄어들어 농축산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원제목 「‘시한폭탄’ 안고 가는 김영란법’/김영란법은 수입 소고기 장려법 … 한우농가 줄도산 부를 것」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 엉뚱하게도 「… 백화점이 망할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이는 명백하게 선정주의적인 제목달기라 할 수 있다.

김영란법에서 뇌물로 간주하는 선물 금액 상한이 5만~10만원 선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명절때 주로 소비되는 10만원 이상의 한우선물세트가 85%에 이르는 현실에 미뤄볼 때 매출급락으로 축산농가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이 망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혹여 편집자가 백화점이 아니라 농축산가가 망할 것이라는 취지로 제목을 달았다 해도 과장되기는 마찬가지다.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기사내용을 지나치게 과장, 왜곡하는 선정주의적 제목은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6년 1월 27일자 「잔머리 놀랍다,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왕’」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조선비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1.27. 17:23〉

『[단독] ‘갑질논란’ 롯데마트 상품기획자, 상품권깡 통해 금품받아 ... 롯데 “해당 직원 면직”』

박○○ 기자 입력 2016.01.27 15:11 수정 2016.01.27 17:03

삼겹살 갑질 논란에 휘말린 롯데마트의 축산물 담당 MD(상품 기획자)가 이른바 ‘상품권깡(할인환매)’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게한 뒤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려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통장으로 건네도록 했다.



☞ 관련기사

[단독] 공정거래조정원 “삼겹살 물류비 32억 협력업체 전가 등 롯데마트 ‘갑질’로 48억원 떠넘겨”〈2016.01.17.〉

해당 MD가 납품업체 직원을 매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뒤 건네받을 때 입막음용으로 일부를 떼어준 것이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MD들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문규 롯데마트 홍보팀장은 “2015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직원을 면직했다. 개인 윤리 강령·서약서 작성, 자체 감사 강화 등 개인 비리를 방지하고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롯데백화점 상품권깡으로 2000여만원 받아 … “다른 업체에서도 용돈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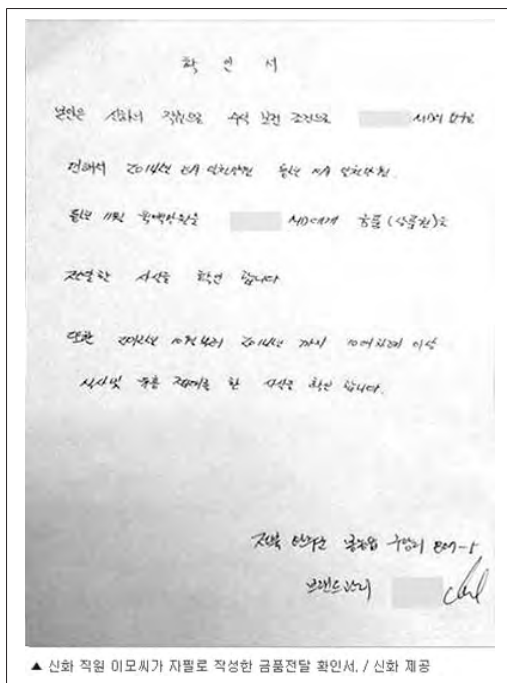
납품업체(신화) 직원 이모 씨는 27일 조선비즈가 단독 입수한 자필 확인서를 통해 “롯데마트 축산물 담당 MD의 요구로 2014년 8월,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금품(상품권) 26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롯데마트 MD A씨가 상품권깡을 요구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면 수수료로 6% 정도를 떼는데, 환전한 뒤 전달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MD가 롯데백화점 상품권깡을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통상 납품업체들은 직원 격려, 상여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비해두는데, 이를 뒷돈 요구에 이용한 것이다. 상품권은 고

액권 발급이 가능하고, 수표와 달리 거래시 의무적으로 서명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

롯데마트와 주로 거래해 온 신화는 롯데마트의 계열사인 롯데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을 구비해 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 납품업체 직원은 “금품 요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상품권을 환전해 송금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절대 갑인 MD의 요구를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 롯데마트 납품업체 신화가 법인카드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 신화는 2015년 9월 17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0만원치를 추가 구매했다. / 신화 제공

롯데마트 납품업체 신화가 법인카드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 신화는 2015년 9월 17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0만원치를 추가 구매했다./신화 제공 ▲롯데마트 납품업체 신화가 법인카드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 신화는 2015년 9월 17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0만원치를 추가 구매했다./신화 제공 이 씨는 MD A씨가 납품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신화는 2012년부터 롯데마트와 ‘직매입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돼지고기를 납품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본 상태였다. 신화는 롯데마트의 납품 단가 인하 압박, 물류비 전가 등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납품업체 직원 매수 의혹 … 롯데마트 “해당 MD 작년 말 징계위 회부, 면직돼”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MD A씨가 이 씨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품권깡을 거친 것도 모자라 입막음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줬다는 것이다. 이 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한 셈이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롯데마트 MD A씨에게 이 씨가 돈을 건넬 때 MD가 이 씨에게 일부를 떼어줬다. 이 씨는 자필 확인서에서 26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중 A씨가 2100만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이 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실제 이 씨의 녹취를 확인한 결과 이 씨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MD A씨) 본인이 혼자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얘기했다. 제가 (처음엔) 사양을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회사를 퇴직했다.

윤형철 신화 대표와 직원 이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신화 제공 ▲윤형철 신화 대표와 직원 이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신화 제공 더 큰 문제는 국내 대형 유통 채널 MD들이 갑의 지위를 활용해 납품·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홈쇼핑업체 생활부문장이 이혼한 전처(前妻)의 생활비 9억원을 협력업체에서 받아내거나, MD가 “아버지 도박 빚을 해결해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챙겨 적발되기도 했다.

번 문 장 소	숙기사 이재경 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7-3
번 문 자	숙기사 이재경 원
번 문 일 자	2015. 01. 11.
이 기록은 錄音된 内容과 相違 없음을 證明함.	
註	녹음장소, 일자, 대화자의 성명은 의뢰인의 진술에 의한 것임. "(.....)"은 정취 불능부분임 녹음형식의 미비등으로 명사, 고유명사는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 본 녹취록의 테이프 등은 당사자가 보관하며, 이를 분실할 경우 본 녹취록은 무효임니다.
숙기사 이재경 사무소	
이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혼자 이렇 게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시는게 어떻겠냐. 이러 면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에요. 제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왜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일이 뭐 이렇게 불거진다는 것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 윤형철 신화 대표와 직원 이씨가 나는 대화 녹취록, / 신화 제공

』

[단독] 공정거래원 “롯데마트 갑질로 48억 전가”

박○○기자

입력 2016.01.17 14:20

공정위,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조사 착수

이○○기자

입력 2016.01.12 10:46 수정 2016.01.12 15:0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롯데마트의 축산물 담당 MD(상품기획자)가 이른바 상품권깡(할인환매)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발각돼 면직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톱으로 올린 제목은 「잔머리 놀랍다,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왕」이다. 기사의 원 제목 「[단독] ‘갑질논란’ 롯데마트 상품기획자, 상품권깡 통해 금품받아 … 롯데 “해당 직원 면직”」이나,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제목 「상품권깡으로 돈 뜯어 … 롯데마트 “그 직원 면직”」과는 확연히 차

롯데마트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를 롯데마트 기업 전체의 문제점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그 표현도 자극적이어서 해당 기업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관련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이신문과는 달리 온라인 신문은 기사를 하나씩 눌러보는 매체의 특성상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원칙)은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은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보도준칙」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hosunBiz

2016. 1. 27 (수)

신용회개 제도
사건자 부부 단체 공개

ECONOMY
Chosun 주간지 재창간

새로운

뉴스

증권

부동산

정책·금융

기업

Weekly Biz

오피니언

상품권강으로 돈 뜯어...롯데마트 "그 직원 면직"



2016 기자열전



사람 냄새
박지환 유

조선비즈 뉴스

매일 MD 역시 금융수수 사찰을 경험했다. 그는 은행권 신와 대표와의 통화에서 "2000년 법률을 초창기로 봤어요. 아까가 중요도도 보니까"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법률 개정에서도 한 번이 있어 용돈을 받았다고 할하기도 된다. 롯데마트 MD가 롯데백화점 상품권일을 통해 금융을 수수했다는 것은 선택해 드러난 사실이다. 통상 납품업체들은 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의 중개로 계약한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이를 통해 요구에 이응한 것이다. 상품권은 고액권 발급이 가능하고, 수표와 달리 거래시 의무적으로

4 [단독] 공정거래원 "롯데마트 간질로 48억 전가"

[속보] 현대모비스, 자사 보통주 10만주 차분...총 248억1654만원 규모

전체보기

Weekly Biz

사람 열전

사람 열전

주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6년 1월 20일자 「英 ‘아내 속옷 사이즈, 색상 알아야 입국 허용’」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英 ‘아내 속옷 사이즈, 색상 알아야 입국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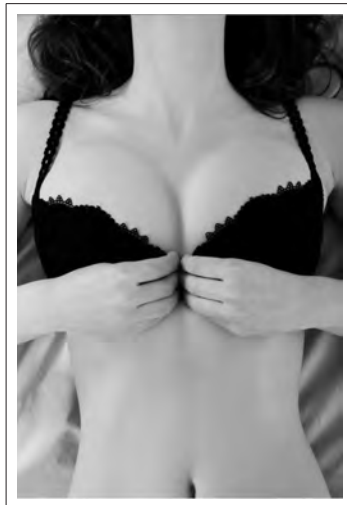
Published 2016.01.20 09:29 Updated 2016.01.20 09:34

영국의 출입국사무소가 위장결혼으로 의심되는 입국자들을 추려내려고 아내의 속옷사이즈와 색깔을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구금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고서 (Review into the welfare in detention of vulnerable persons)’에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위장결혼 부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남편에게 사생활이 침해될만한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에서 올린 이 파일에는 이어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당위성과 적절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앨리스테어 카마이클 스코틀랜드 장관은 “모욕적”이라고 설명하며 “28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해 나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123rf.com)

해당 보고서는 전 교도소 및 보호관찰관인 스테판 쇼(Stephan Shaw)가 출입국 및 복지 문제로 구금됐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khnews@heraldcorp.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영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가려내고자 남편에게 부인의 속옷사이즈와 색깔을 묻는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질의 대상은 ‘가정방문을 통해 남편에게 사생활이 침해될만한 질문을 했다’는 기사의 한 대목처럼 이미 입국해서 함께 사는 부부 가운데 남편이다.

그런데도 제목을 ‘아내 속옷 사이즈, 색상 알아야 입국 허용’이라고 달아 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독자의 관심을 끌어 클릭 수를 누리려는 의도라 하겠다. ‘국제결혼을 한 남자’라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누구나 대상이 되는 듯이 표현해 매우 황당한 짓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사와 무관한 반라 차림의 여성이 자신의 브래지어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성적(性的)인 함의를 풍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에서 벗어나 제목을 뽑으면 결국 독자를 속이는 일이 되고, 언론으로서 신뢰를 잃는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2015-3121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5년 8월 12일자 「방송서 '노숙옷' 인증한 女 배우, 민망 의상」 기사의 제목 및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08.12. 15:21 캡처>

『[화보] 속옷 안 입고 TV에 출연한 크리스틴 스투어트 ‘천조국의 위엄’』

[일간스포츠] 입력 2015.08.12 오전 11:16:03



배우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11일(현지시간) 지미 펄론 쇼에 출연했다. 가슴이 다 드러나보이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자세를 바꿀 때 마다 속살이 은근하게 보여 섹시함을 더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게티이미지 코리아]

<[http://isplus.joins.com/article/754/18434754.html?cloc= ispluslentisplus_art_mustclick](http://isplus.joins.com/article/754/18434754.html?cloc=ispluslentisplus_art_mustclick)>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진의 캡션 원문은 “배우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8월 11일 뉴욕시 록펠러 센터에서 진행된 ‘투나잇쇼 스타링 지미 펄론’을 찾았다”는 내용이다.(Actress Kristen Stewart visits ‘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 at Rockefeller

Center on August 11, 2015 in New York City.)

그러나 기자는 이를 번역하면서 “가슴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자세를 바꿀 때 마다 속살이 은근하게 보여 섹시함을 더했다”고 원문에도 없는 내용을 가필하였고, 제목은 한 술 더 떠「[화보] 속옷 안 입고 TV에 출연한 크리스틴 스투어트 ‘천조국의 위엄’」이라고 달았다. 게다가 편집자는 이를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 제목을「방송서 ‘노속옷’ 인증한 女배우, 민망 의상」이라고 붙였다.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사진의 주인공인 배우 크리스틴 스투어트는 유명 사회자 지미 펠론이 진행하는 美 NBC 인기 심야 토크쇼인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론(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8월 21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아메리칸 울트라(American Ultra)」 홍보를 위해 출연, 시청자에게 재치와 웃음을 선사하였다. 스투어트는 펠론과의 대담에서 자신은 많이 웃는 편이라면서 시종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펠론과 일종의 단어연상게임인 ‘워드 블러트’(Word Blur)를 하며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스투어트가 방송서 ‘노속옷’을 인증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제목을 달았다. 스투어트의 의상이 가슴 쪽이 다소 깊게 파였고, 치마길이가 극히 짧은 것은 사실이나 방송 중에 속살이 보인 적도 없거니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증거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패션업계에서는 통상 내의를 용도에 따라 언더웨어·파운데이션·란제리 등으로 구분하므로, 제목에서 언급한 속옷이란 결국 팬티와 브래지어를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제목에 ‘천조국의 위엄’이란 표현까지 덧붙여 스투어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미국을 모독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 수도 있다. 천조국은 연간 국방비로 1000조원을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을 지칭하는 네티즌 속어이다. 아울러 8월 12일자 일간스포츠 뉴스스탠드에는 온통 여성의 벗은 모습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자나 편집자의 주관적 가치 및 판단에 따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

(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 주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84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영만

주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5년 11월 12일자(캡처시각) 「미녀 테니스 선수, 경기 도중 '속옷' 벗더니...」 제목의 기사와 사진 외 3건 및 네이버 뉴스 스탠드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1.19. 14:16>

1) 「미녀 테니스 선수, 경기 도중 ‘속옷’ 벗더니...」

Published 2015.11.18 13:57 Updated 2015.11.18 13:57

『



(유튜브)

최근 유튜브에는 ‘테니스 경기 중 팬티 갈아입는 여자선수’ 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 2006년 열린 프렌치 오픈 여자 싱글 2라운드 쉬는 시간에 엘레나 얀코비치 선수가 자리에 앉아 수건으로 하반신을 가린 채 속바지를 갈아입고 있다. 수건이 벗겨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옷을 갈아입는 데 성공한다.

이날 그녀는 세트점수 2승1패로 바르톨리를 누르고 3라운드에 진출했다.

(khnews@heraldcorp.com)』

2) 「커플, 아침부터 기차역에서 누가 있든 말든」

Published 2015.11.17 14:23 Updated 2015.11.17 14:24

『독일의 한 커플이 이른 아침에 베를린의 기차역의 플랫폼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이 찍혀 기차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한 승객이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공개되자마자 일파만파로 퍼졌다.



(유튜브)

비디오에 따르면 남성은 택시도를 입고 있고, 여성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채 벽에 기대어 성관계했다.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나서도 계속 성관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

3) 「그곳이 젖은 여배우 도대체 뭘 했길래..」

Published 2015.11.14 15:34 Updated 2015.11.14 16:23

『



스파이스 걸스 가수출신이자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최근 단정 치 못한 옷매무새로 화제가 되고 있다.

빅토리아 베컴은 지난 9월 그녀가 차린 런던의 한 부티크 샵에서 나오는 길에 바지 지퍼 부분이 눈에 떨 정도로 젖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중략)

한편, 그녀는 최근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1위에 뽑혔다. 영국 오렌지 뉴스는 빅토리아 베컴이 2014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2014 톱 기업인(Britain's Most Successful Entrepreneur of 2014)'에 선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Mirror)

(khnews@heraldcorp.com)』

4) 「미녀 파이터 경기중 알몸 공개」

Published 2015.11.09 13:38 Updated 2015.11.09 15:21

『미국의 프로 레슬링 단체 (World Wrestling Entertainment)의 여자 프로 레슬러들이 경기하던 중 한 레슬러의 경기복이 벗겨지는 헤프닝이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두 레슬러가 가까이 붙어서 경기를 벌이던 중 한 선수의 옷이 다 벗겨져 완전히 나체가 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때 갑자기 한 남성이 공격을 가하는 여성을 발로 찼고, 그녀가 쓰러지자 나머지 선수는 황급히 자리를 뜨는 장면이 나온다.

(khnews@heraldcorp.co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코리아헤럴드 2015년 11월 23일자 뉴스스탠드에는 선정적인 기사와 사진들이 다수 배치돼 있다.

위 1)「미녀 테니스 선수, 경기 도중 ‘속옷’ 벗더니...」 제목의 기사는 테니스 선수 엘레나 얀코비치가 지난 2006년 프랑스오픈대회에서 경기 도중 쉬는 시간에 수건으로 하반신을 가린 뒤 속옷을 갈아입었다는 내용인데, 마치 의도적인 노출이 있었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을 달았다.

2)「커플, 아침부터 기차역에서 누가 있든 말든」 제목의 기사는 2014년 9월 여러차례 국내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3)「그곳이 젖은 여배우 도대체 뭘 했길

래..」 제목의 기사는 역시 2015년 9월에, 4)「미녀 파이터 경기중 알몸 공개」 제목의 기사는 5월에 각각 보도된 내용이다. 특히 4)기사는 해당 동영상도 함께 게재했는데, 영상이 끝난 뒤 각종 폭력 및 여성의 노출 영상으로 연결된다. 위 기사들의 상당수는 나흘 후에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눈에 띄게 편집돼 있다.

(※참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시각 11.23. 16:20〉

다른 언론사가 이미 보도했다 하더라도 몇 달, 또는 심지어 8년 여가 지난 기사를 뒤늦게 보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극히 선정적인데다 시의성마저 떨어지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한데 모아 장시간 주목도 높은 곳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한국아이닷컴(sports.hankooki.com) 2015년 3월 11일자(캡처시각) 「서양女와 차속에서 ‘첫 경험’ 스타 결국」 제목 등 <주간BEST기사>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아이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주간 BEST기사 연예 코너〉



〈주간 BEST기사 라이프 코너〉

- 수서, SNS에 번지노 산악 장전 "부은 사이"
- 경상권, 대학 시절 서울에 집 15채의 진실은?
- '화장' 김규리, "촬영장에서 미모 전시 때문에 달"
- 앤디, 카탈레 신인왕 무결 배서 "모름 후미로"
- '화장' 안경기, "백 잔 병행같은 내면, 연기하느라"
- 서강준, 광역 운동자의 유혹... "눈빛 광배" 중국

걱정 끝!

불만만 전제품

- TV 돌보지
- 방송가 기양도
- 물맛까지
- 사치각각
- Imm을 잊어라
- 이 병의 불려달라

주간 BEST 기사

연예 스포츠 라이프

- 장소와 있는 스포츠복 공방전 반박까지
- 성공적 수업을 후르노 상점이 더... 갑작
- 유적지 복고 통일성 속 넘나들... 불적
- 한국에 사립을 할때에도... 거역 불견다
- 환근복과 즐기는 음반도... 활적인 연니를
- 차게 억는 한국인 위대한 근자 미유?
- 30-34세 집사가 남은 아지는... 활적
- 소년 남자들과... 여의사의 총격 불꽃을
- 종목부터 '나체소' 이전 한국에서도 활적
- 공무원 근무시간 도박에 상한계까지

라이프 스포츠

차 바꾸고 싶은데... 내 차 "알면" 열마!

미투와 의사도 불만... "주말 카미" 같은 이

"하" 이렇게하면 전기를 30% 줄 수 있겠...

CHAMPIONS LEAGUE

[ACL] 냉권화 최강의 감독
감독 "워터러 권가면 하나만"

[ACL] '왕배' 번즈열 감독
"저쪽의 전도력이 중요하다"

[ACL] 전쪽의 닥공, 번즈열
로 진여 선택다

〈<http://sports.hankooki.com>〉

〈주간 BEST - 연예〉

『이효리 화보 공개, 보디페인팅으로 상반신 완전 노출에 ... '파격적'』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입력시간 2015.03.10 11:40:05 수정시간 2015.03.10 17:18:42



파격적인 이효리 화보가 공개돼 화제다.

패션잡지 W 코리아는 지난 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타투리스트 노보(NOVO)와 이효리가 함께 한 보디페인팅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효리 화보에서 이효리는 특유의 강렬한 눈빛과 타투리스트 노보

가 연출한 섹시한 보디페인팅과 어우러져 고풍적인 매력을 뽐냈다. 이어 이효리 화보에서 이효리는 군살 없는 몸매를 뽐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화보 몸매 대박”, “이효리 화보 타투 매력적이다”, “이효리 화보 정말 섹시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효리와 타투리스트 노보가 함께 한 화보는 W 코리아 3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민 “美 사막서 서양여성과 첫 베드신 … 나체로 책읽는 모습에 깜짝”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03.09 16:31:02 수정시간 2015.03.09 17:46:59

배우 박정민이 서양 여배우와 첫 베드신을 촬영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박정민은 9일 오전 서울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된 영화 ‘태양을 향해 쏴라’(제작 필름라인 배급 조이앤씨네마)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영화 관련 에피소드를 밝혔다.

극 중 서양 여배우와 베드신을 찍은 박정민은 “베드신이 처음이었다. 원래는 장소가 방안이었는데 황량한 사막 버려진 트럭 위에서 하게 됐다. 그쪽으로 끌고 가 당황했다”라며 “외국인 여성분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했기 때문에 많이 의지했다. 나체로 차 안에서 책을 보시던 그 모습이 이국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민은 “전에 없던 예민함이 나와 스태프들에게 조금은 예민하게 굴었던 것도 같고, 처음으로 최소 인원만 남아 찍어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 다 보고 계시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태양을 쏴라’는 세상의 끝까지 떠밀려 LA까지 찾아 든 세 남녀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감성 느와르 영화로, 강지환의 3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극 중 강지환은 사랑이라는 꿈마저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남자 존, 윤진서는 존과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재즈 보컬리스트 사라, 박정민은 존의 둘도 없는 친구 첸, 안석환은 조직 보스 역을 맡았다. 오는 19일 개봉한다.』

『[스타인터뷰] 강한나, 알수록 더 호기심이 들게 하는 ‘천생 여배우’』

‘순수의 시대’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으로 주목받아

기대 이하의 반응, 모든걸 쏟아부었기에 후회 없어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스포츠한국미디어 최○○ 기자 j***6@hankooki.com

이○○ 기자 f**@hankooki.com

입력시간 2015.03.15 08:00:53 수정시간 2015.03.15 08:54:10

[스포츠한국미디어 최재욱기자] 단순히 노출로만 포장할 수 없는 여배우였다. 영화 ‘순수의 시대’(감독 안상훈, 제작 화인웍스) 개봉일인 지난 5일 서울 충무로 스포츠한국 편집국에서 만난 배우 강한나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상대방을 빠져들게 만드는 블랙홀 같은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수수한 듯한 외모와 달리 내면은 용암처럼 열정이 펄펄 끓었고 연기 자체 대한 근본적인 사랑은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기까지 했다. 영화 속에서 자신이 연기한 껍질을 벗길수록 새로운 얼굴이 드러나는 가희와 은근히 닮은꼴이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외유내강’이란 단어가 딱 들어맞았다.

‘순수의 시대’는 언론 시사 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얻고 있다. 강한나는 영화 속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혼신의 열연을 펼쳤지만 언론이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기대 이하다. 강한나의 연기에 대한 칭찬은 나오지만 영화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이 아쉬울 법하지만 강한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후회없이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여전했다.

“리뷰들을 계속 읽었어요. 언론의 반응은 아쉽지만 다행히도 일반 관객들에게서는 호의적 반응도 많아요. 영화를 보고 울었다면서 감동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저같은 20대 여배우가 이처럼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볼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가희 역을 꼭 맡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가희가 느끼는 희로애락, 복수심 등 드라마틱한 감정들을 정말 잘 표현해내고 싶었어요. 캐릭터에 올인해서 정말 나

의 모든 것을 후회없이 다 쏟아 붓자는 마음이었어요. 이 영화를 발판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기에 결과는 관객에게 맡기고 싶어요.”

영화 ‘순수의 시대’는 조선 개국 7년, 왕좌의 주인을 둘러싼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아름답지만 가시를 품은 사연 많은 기녀 가희(강한나)를 둘러싸고 강직한 장군 김민재(신하균), 색에 빠져든 김민재의 아들 진(강하늘), 왕좌에서 밀려난 이방원(장혁)의 얽히고설킨 관계와 독한 사랑을 그린 치정사극.

강한나는 복수의 일념하에 세 남자 사이에 뛰어드는 독을 품은 팜므파탈 가희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폭 넓은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섬세한 멜로가이민재, 욕정에 충실한 진, 대의가 우선인 이방원. 강한나는 어떤 남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을까?

“누가 좋다고보다 세 캐릭터가 각자의 성격이 뚜렷하고, 내면에 모두 상처가 있는 인물들이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걸 갖고 있는 듯하지만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 냄새가 더욱 나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 캐릭터랑 연기할 때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 인물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의 목적이 뭐고, 감정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3가지 이상을 나눠서 생각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인물을 잘 표현해 낼 수 있을 거 같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한나는 연기에 대한 칭찬을 건네자 모두 함께 연기한 세 남주인공 신하균, 장혁, 강하늘 덕분이라며 겸손해했다. 사실 세 남자 배우와 모두 다 베드신을 촬영해야 했기에 여배우로서 몸과 마음이 힘든 촬영장이었다. 신하균, 장혁뿐만 아니라 나이는 어리지만 연기경력은 더 많은 강하늘은 이런 점을 알고 촬영장에서 모두 강한나를 극진히 배려했다.

“신하균 선배님은 마치 자기 친여동생 대하듯 잘 챙겨주셨어요. 촬영할 때는 가희로서 사랑받고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후배 연기자로서 사랑받은 것 같아요. 내가 베드신 이외 다른 장면에서 감정연기를 못 해버리면 베드신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도와 달라 말하니 그 점을 좋게 보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마지막 물속에서 내 얼굴 클로즈업 장면을 찍을 때도 화면에 안 나오는데도 일

일이 감정 연기를 해줘 감동했어요. 장혁 선배님도 붙는 신이 많지 않아 자주 뵙지 못했지만 볼 때마다 따뜻하게 조언해주시고 힘을 북돋워주셨어요.”

강한나가 연기한 가희는 복수심으로 톨툴 뭉친 팜프파탈이었다가 영화 후반 민재의 순수한 사랑에 감복해 자신도 불같은 사랑에 빠져들어 파국을 맞는다. 어찌 보면 말 그대로 남자를 유혹해 파멸시킨 ‘나쁜X’이고 요즘 말하는 ‘민폐녀’일 수도 있다. 27세 여성 강한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고 죽음도 불사하는 ‘순정파’ 민재 같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요즘 어디서 찾아보기 힘든,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순정파’ 남자가 좋아요. 이해타산 따지고 조건 따지며 ‘밀당’을 하는 요즘 연애 추세는 저와 맞지 않아요. 저의 감성은 옛날 사람인 듯해요.(웃음) 나는 가희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불쌍한 여자죠.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그 아픔을 처음으로 알아주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민재예요. 겉은 강하고 속은 약한데, 강하려고 애쓰는 여자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희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쁜 여자로만 비쳐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가희의 인간적인 모습과 여린 모습까지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공감 이 잘 됐나 궁금해요. 어떠셨어요?(웃음)”

‘순수의 시대’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낸 배우 강한나. 신인답지 않게 인터뷰 내내 막힘 없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인간 강한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다른 배우들처럼 자기의 색이 뚜렷하기보다 여백의 미가 느껴졌다. 다양한 캐릭터를 그려 넣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순백의 도화지 같다고나 할까. 알수록 호기심이 더 들게 하는 ‘천생여배우’였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웃음)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여리고 소심할 것 같으면서도 대범한 면이 나와 저 자신도 놀랄 때가 있죠. 가희가 가진 극단적인 모습이나 복잡한 모습이 내 안에 이미 많은 것 같아요. 이름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한나만 보면 여성적인데 성이 붙으면 “강한 나”잖아요.(웃음) 차기작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순수의 시대’ 모든 일정이 끝나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여배우가 되고 싶은지는 한줄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건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애정 어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캐릭터의 트라우마나 결핍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폭력·마약·이혼 … 연예계로 보는 씁쓸한 단면

연예계만의 일 아냐 …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모습 반면교사로 삼아야”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3.16 13:08:24 수정시간 2015.03.16 13:08:24

연초부터 각종 스캔들로 시끌시끌하던 연예계가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추문들로 바람 잘 날이 없다.

20여 년 연예계 대표적인 잉꼬부부인 줄 알았던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 충격을 주는가 하면, 마약사건, 욕설 파문, 이혼 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연예계의 이면에 놓인 어두운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대중의 관심은 집중되고, 인터넷 세상은 요동을 친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일의 대부분은 연예계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연예계라서 뉴스가 되는 것일 뿐, 사실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중문화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연예인들은 일거수일투족이 조명을 받는 만큼 평소 더욱 철저하게 자신과 주변을 관리해야 할 것이고, 대중은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정폭력·이혼·자살

지난 10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11일에는 드라마 제작자 송병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을 모았다.

김동성이 결혼 11년 만에 이혼 조정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그가 과거 SBS TV 유명인들의 부부토크쇼 ‘자기야’에 출연했던 사실과 연계되며 또 다른 화제를 낳았다. 2009년부터 방송되고 있는 ‘자기야’에 출연한 부부 중 8쌍이 잇달아 방송 이후 이혼을 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김동성 부부가 그 9번째 사례로 거론된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개그맨 서세원의 부인 서정희가 32년의 결혼생활이 ‘포로 생활’ 같았다고 폭로하며,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의 재판에서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라고 말했다.

서세원-서정희 부부는 지난해 서세원의 서정희 폭행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20여 년 연예계 잉꼬부부를 대표해왔다. 공개적으로 화목하고 예쁜 가정의 모습을 노출해오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서정희는 사실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불화, 이혼은 결코 연예계만의 일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내놓은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자살 등 한국의 가족·공동체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다.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는 1970년 0.4에서 2003년 3.4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2.3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1.9)보다 높았다.

자살률(10만 명당 자살건수)은 1983년 8.7에서 2000년 13.6, 2011년 31.7까

지 높아졌다가 2013년 28.5로 감소했지만, OECD 회원국(평균 12.1)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24일 한류그룹 카라의 멤버를 뽑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가수 지망생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연예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 또다시 마약을 ... “스트레스에 돌발 행동”도

지난 13일 탤런트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구속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예인들이라고 특별히 마약을 쉽게 구하는 것일까.

지난달 관세청은 2014년 총 308건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해 1천500억원 상당의 마약류 71.7kg를 압수했다며,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50.8kg(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kg(167건), 대마가 2.7kg(66건) 순이었다.

갈수록 마약 밀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근 욕설 파문으로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배우 이태임의 스캔들은 개인적으로 처신을 잘못된 사례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태임의 소속사는 “이태임이 그간 특정 신체부위가 화제가 되면서 수많은 악성 댓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고, 출연 중이던 드라마의 조기 종영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와중에 컨디션 난조로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태임도 욕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평소 촬영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대해온 것을 참다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섹시스타’라 불리며 몸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여배우가 악성 댓글과 모욕적인 시선 등에 시달리면서 받았을 스트레스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집트 피라미드서도 포르노 촬영』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3.09 13:54:39 수정시간 2015.03.09 13:54:39



이집트 유명 피라미드에서도 포르노 동영상 촬영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아우리타라는 여성이 기자 피라미드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는 모습이 담겼다.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남성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기 전 유적지에 대한 불평을 쏟아낸다.

맘두 알다마티 이집트 유물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불법으로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이집트 당국은 애초 배경이 덧붙여진 것이라며 동영상이 유적지에서 촬영됐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영상이 널리 알려지며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일간 알마스리 알음은 지난해 온라인에 공개된 10분짜리 이 동영상
지역 보안 책임자의 목인 아래 촬영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카이로 인근 기자 지역에 있는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인근에는 유명한
스핑크스가 있다.

앞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에서도 아시아 여성의 포르
노 사진을 촬영하던 프랑스 남성 3명과 누드 사진을 찍은 미국인 자매가 벌금
을 내고 추방된 바 있다.』

『젊은男과 즐기는 중년女 ... 발칙한 언니들

뮤지컬 ‘쿠거’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3.09 15:44:51 수정시간 2015.03.09 15:44:51

미국 오프브로드웨이에서 40~50대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뮤지컬
‘쿠거’가 내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오른다.

‘쿠거’(Cougar)는 북미지역에서 ‘퓨마’를 가리키는 말로, 먹이를 찾아 어슬렁
거리는 쿠거의 습성에 빗대 속어로 젊은 남자를 찾아다니는 나이 든 여성을 의
미한다.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연하남과 교제하는 여
성을 일컫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기도 한다.

뮤지컬은 중년의 싱글 여성 ‘릴리’, ‘클래리티’, ‘메리-마리’가 젊은 남자들과
의 사랑과 연애를 통해 각자의 행복을 찾아나가고, 나이듦과 우정, 사랑, 욕망
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그린다.

이 작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프브로드웨이에서 300회 이상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작가 도나 무어가 8년간 대본과 음악을 만들
고 연출가 겸 안무가 린 테일러 코벳이 연출과 안무를 맡았다.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뮤지컬에 관심이 적은 40~50대 여성들을 극장으로 끌
어들이며 다양한 연령층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 공연에서는 뮤지컬과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배우 박해미·김선경(릴리 역)과 최혁주(클래리티), 김희원(메리-마리)이 세 명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이들과 만나는 ‘멀티맨’으로는 뮤지컬 배우 이주광, 조태일이 나선다.

뮤지컬 ‘셜록홈즈’의 연출가 노우성이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공연은 4월 10일~7월 26일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 관람료는 6만원. 문의 ☎ 1544-1555.』

『어느 콜걸의 비밀일기』 작가 “나는 콜걸이었다”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3.17 09:27:24 수정시간 2015.03.17 09:27:24

영국 런던의 매춘부의 일기를 원작으로 한 영국의 인기 드라마 ‘어느 콜걸의 비밀 일기’의 실제 주인공이 자신은 콜걸 출신이 맞다며 옛 남자 친구를 상대

로 명예훼손에 따른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브룩 매그난티(39)는 법의학자로 2003년부터 ‘벨드 주르’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콜걸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은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두 권의 책으로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배우 겸 가수인 필리 파이퍼 주연의 TV 드라마 ‘어느 콜걸의 비밀 일기’로도 제작됐다.

블로그가 인기를 끌면서 블로그 작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 일으켰지만 매그난티는 지난 2009년에야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다.

매그난티는 당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콜걸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매그난티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자 책에서 ‘청년’이라고만 언급됐던 그녀의 옛 남자 친구 오언 모리스는 2013년 매그난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다.

모리스는 자신과 사귀던 당시 매그난티는 콜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국 공군 장교 출신인 자신의 군복무 경력과 명예가 손상되고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에든버러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매그난티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모리스의 주장은 “작가로서의 나의 정직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이번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내가 콜걸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녀는 이와 함께 과거 콜걸로 일할 당시의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도 공개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아이닷컴(스포츠한국)은 초기화면 〈주간BEST기사〉 목차 난에 선정적인 제목을 다수 노출하였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제목과는 사뭇 다르다.

〈주간 베스트〉 연예 코너의 「효리, 외간남자 앞 훌쩍 벗은 채 … 아뽕싸」는

가수 이효리가 화보를 촬영하기 위해 보디페인팅으로 상반신을 노출한 것일 뿐 완전 나체는 아니다. 「서양女와 차속에서 ‘첫 경험’ 스타 결국」은 배우 박정민이 영화 ‘태양을 향해 쏴라’에서 서양 여배우와 첫 베드신을 촬영한 에피소드를 밝힌 내용일 뿐이다.

「세남자와 성행위 노출스타 놀라운 실체?」는 조선 초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한 영화 ‘순수의 시대’에 기녀 가희로 출연한 강한나가 강직한 장군 김민재(신하균), 색에 빠져든 김민재의 아들 진(강하늘), 왕좌에서 밀려난 이방원(장혁)의 얽히고설킨 관계에서 팜프파탈 역을 맡았다는 영화이야기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데도 연예인이 현실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한 것처럼 독자를 오인케 하고 있다.

〈주간베스트〉 라이프 코너의 「젊은男과 즐기는 중년女 … 발칙한 언니들」은 뮤지컬 ‘쿠거’에서 중년의 싱글 여성 ‘릴리’, ‘클래리티’, ‘메리-마리’가 젊은 남자들과의 사랑과 연애를 통해 각자의 행복을 찾아나간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일 뿐이다. 「낮선 남자들과 … 여의사의 충격 성생활」은 영국의 법의학자가 박사과정을 밟기 위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콜걸로 활동한 경험담을 소개한 내용이다. 제목만 보아서는 여의사가 현재 문란한 남자관계의 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으며, 여의사들의 직업윤리와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청소년층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뉴스의 흥미요소를 도외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언론의 대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4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5년 3월 22일자 「만취 아우디 5중 추돌 ... 스피카 양지 ...」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시각 03.22 10:40〉

『강남서 아우디 5중 추돌 사고 ... 스피카 양지원 “사고난 걸그룹 멤버, 저 아닙니다”』

온라인뉴스팀

입력 2015.03.22 14:11:42

걸그룹 스피카의 양지원이 21일 발생한 강남 5중 추돌 교통사고에 대해 “저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다.

22일 양지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21일 자전거 타고 잠시 뭘 먹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5중 추돌 사고가 났고 동승자가 저인 것 같아 기사를 낸다고 했다”며 “팬 분들이 걱정하고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니까 오해와 걱정하지 말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채널A는 21일 <종합뉴스>를 통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를 내며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사고를 낸 아우디 차량의 동승자가 유명 걸그룹 멤버”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채널A는 모자이크 처리한 양지원의 사진을 사용했으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인터뷰를 통해 “조수석 여성의 이름에 알파벳 J가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에 양지원은 “확신할 수 없는 동영상으로 저라고 기사를 내겠다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나중에 기사를 확인해보니 음주운전 동승자에 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름까지 정확히 거론되면 회사에서 대응한다고 했다”며 자신이 사고에 연루된 사람이 아님을 밝혔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 3월 22일자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만취 아우디 5중 추돌 … 스피카 양지 …」라는 제목이 걸그룹 스피카 양지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다.

걸그룹 스피카의 양지원을 아는 이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제목과 사진만 보면 양지원이 만취 아우디 5중 추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 방송 매체가 이 같은 내용으로 단독 보도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이 기사를 열면 제목은 「강남서 아우디 5중 추돌 사고 … 스피카 양지원 “사고난 걸그룹 멤버, 저 아닙니다”」로 돼 있다. 걸그룹 스피카의 양지원이 강남 아우디 5중 추돌 교통사고에 대해 “저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뉴스스탠드의 제목과 정반대에 가까운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제목을 쓰는 것은 스피카 양지원의 명예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를 의식했음인지 「만취 아우디 5중 추돌 … 스피카 양지 …」라고 양지원의 이름을 끝까지 쓰지 않았다. 글자수가 많아 한 자 생략했다고 해명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용을 왜곡시키면서 당사자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는 제목을 다는 것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과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60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5년 4월 8일자(캡처시각) 2015년 4월 8일자 「“감히 내 남편을 넘봐?” … 불륜女, 길에서 속옷 벗기고 집단폭행」 기사
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히 내 남편을 넘봐?” … 불륜女, 길에서 속옷 벗기고 집단폭행

기사입력 2015.04.08 07:40

[헤럴드경제] 남편의 내연녀를 친구들과 함께 집단폭행하는 여성이 포착돼 충격을 줬다.

6일(현지시간) 영국 미러는 중국 산시성(山西省) 다통(大同)의 쇼핑몰 앞에서 한 여성이 속옷까지 벗겨진 채 대여섯명의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이 여성은 머리채가 뜯기고 얼굴과 몸에 주먹과 발길질로 공격을 받는 살벌한 장면이 연출됐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도 말리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구경할 뿐이었다.

심지어 경찰조차도 이들의 폭행을 묵인하는 분위기다.

바람피운 남편의 아내 친구들은 내연녀의 머리까지 바닥에 찍고 폭행한다. 이들은 쓰러진 여성이 남편을 유혹해 바람을 피웠다면 공공의 정의를 위해 폭행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결혼한 주부 주 평(35)은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주고 때리는 것은 그 여성들의 권리”라며 “정부가 남편을 유혹하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정부나 내연녀를 직접 자기 손으로 폭행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 수 개월 전에는 중국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溫州)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져 한 여성이 일련의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을 뜯기고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캡쳐시각 2015.04.09 02:3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4월 8일자에 외신을 인용해 「“감히 내 남편을 넘봐?” ... 불륜女, 길에서 속옷 벗기고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불륜녀에 대한 집단폭행 기사와 사진을 실었다. 대로인 쇼핑몰 앞에서 린치 당하는 모습의 이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주고 때리는 것은 그 여성들의 권리”라는 구경꾼의 소감이 곁들여져 마치 집단폭행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또한 이 기사를 네이버의 뉴스스탠드에 톱뉴스로 올리고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까지 곁들였을 뿐 아니라 「女 집단폭행, 길에서 팬티까지 벗긴채...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의심을 사는 등 선정주의적 편집양태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③(편집변경 및 선정주의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4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5년 9월 17일자 「남편의 성관계 동영상 발견 ‘대학 선배와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시각 09.17. 19:03〉

『“이혼연습2” 남편의 성관계 동영상 발견 ‘대학 선배와 ... 경악’

입력 2015.09.17 14:42:00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혼으로 인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될 아이를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일 방송되는 ‘SBS 스페셜-이혼연습 2’에서는 이혼이라는 삶의 선택에 놓여있는 부부들이 자녀들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며 이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

연극배우 전수아, 아이에게 상처주지 않는 “이혼”을 연습하다. 전수아 씨는 한 광고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이 소개되었다. 8년이 흐른 지금, 엄마이자 아내인 그녀는 아이를 위한 이혼연습을 시작한다.

아이 때문에 살고, 아이 때문에 싸운다는 부부.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그녀는 자녀의 양육문제로 전쟁 중인 부부, 그리고 부모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며, 아이에게 상처주지 않는 이혼의 기술을 찾아 나선다. 실제로 이혼을 겪은 이들은 어떤 해법을 알려줄까.

어느 어머니의 절규 … “납치해간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평범한 주부 최인해씨(가명, 30세)는 우연히 남편의 컴퓨터에서 성관계 동영상 발견한다. 주인공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과 그녀가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였다.

충격적인 장면에 최 씨는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 씨에게 닥친 시련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남편과 별거 하며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아이가 납치를 당한 것이다. 복면을 쓰고 아이를 데려간 범인은 다름 아닌 최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아이를 놓고 벌어진 부모의 살벌한 전쟁! 그 안에서 아이의 심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는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천사 같던 아들의 두 얼굴

이혼 후 홀로 어린 남매를 키워온 한명철 씨(가명, 35세).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게 쉽진 않았지만 남매가 잘 따라주는 것을 위안 삼았다. 그런데, 재혼한 엄마의 출산소식을 접한 후, 아들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천사 같던 아들의 얼굴은 변하고 말았다. 시종일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여동생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아이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분노는 아빠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혼,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20살에 결혼해 사춘기 남매를 둔 젊은 엄마 박수진 씨(가명, 35세).

그녀는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다. 사춘기인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박 씨는 이혼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엄마의 거짓말을 믿고 그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를 아이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혼을 알리지 않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하는 길일까? 과연, 아이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며 이혼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편 결혼이 끝나도, 부모의 삶은 끝이 아니다. 20일 방송되는 ‘SBS 스페셜-이혼연습2’ “이혼을 마주한 아이들” 편을 통해 아이들의 시각으로 이혼의 민낯을 파헤쳐본다.

동아닷컴 이○○ 기자 m***y82@donga.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SBS 스페셜-이혼연습 2’을 다룬 것으로, 이혼이라는 삶의 선택에 놓여있는 부부들이 자녀들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며 이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의 성관계 동영상 발견 ‘대학 선배와 충격」으로 되어있는 제목은 이 기사의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 이 제목대로라면 대학 선배와 성관계를 한 남편의 불륜을 다룬 기사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기사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는 기사의 줄거리와 거리가 멀다. 전형적인 낚시성 제목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왜곡하는 낚시성 제목은 정보를 잘못 전할 뿐 아니라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2015-1194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주문

全北日報 2015년 6월 15일자 4면 「극단적 선택 부른 ‘노-노 갈등’/익산 사회적 기업 행복나눔미 근무 60대 직원 한노총-민노총 대립 속 자살 기도 끝내 숨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노조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게 된 직원이 극단적 선택에 나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의 재활용품 선별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눔미에서 근무하던 조모 씨(61)가 지난 12일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일 끝내 숨을 거뒀다.

평생 버스운전을 하다가 퇴직 후 이곳으로 직장을 옮겨 운전원으로 일해온 조 씨는 회사에선 만형으로 불리며 직원들 모두가 잘 따르던 선임이었다.

그렇게 가족 같던 분위기속에서 일해온 직원들이 2년전 노조를 결성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뉘었다.전체 80여명 중 50여명이 한국노총, 20여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지난해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에 한국노총 직원들은 동참하지 않았고, 올해에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만 시청 앞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장소를 시청 앞에서 회사 앞으로 옮긴 민주노총 가입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감시해 왔다고 한국노총 소속 직원들은 말한다.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조 씨는 만형으로서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였다. 지난 달에는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회사내에서 후배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접촉사고는 경찰 사고접수로 이어졌고, 조 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조 씨는 자신을 따르던 후배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만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따른 자책에 힘들어했고, 갈등의 연장선에서 자신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큰 상처를 받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조 씨의 부인은 “음독을 하는 날까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힘든 모습을 보였었다”며 “이렇게 만든 직원들이 정말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오열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사와의 문제를 직원들로 확산시키고 결국 후배들이 잘 따르던 형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면서 “우선 유족들과 함께 민주노총 직원들의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회사차원에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말을 아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奎北日報의 위 기사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행복나누미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조 모 씨(61)가 지난 6월 12일 음독을 시도해 하루 만에 숨진 사건을 다룬 사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조 씨는 2년 전 회사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각각 결성돼 직원 80여 명이 양쪽으로 갈려 갈등을 일으키자 ‘만형’으로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후배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후배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만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에 따른 자책에 힘들어했고, 갈등의 연장선에서 자신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큰 상처를 받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자살 경위를 정리했다. 하지만 조 씨의 자살 이유가 후배 노조원들의 갈등이라거나,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징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사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조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것도 『피해』를 본 것으로 표현했지만,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사에는 없다.

조 씨가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도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극단적 선택 부른 ‘노-노 갈등’이라는 큰 제목 밑에 「익산 사회적 기업 행복나눔미 근무 60대 직원 한노총-민노총 대립 속 자살 기도 끝내 숨져」라고 작은 제목을 달았다. 조 씨가 ‘노-노’ 갈등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자살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 씨의 자살 역시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에 대한 인식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00 신문윤리강령 위반

慶南日報 발행인 이재근

주문

慶南日報 2015년 6월 4일자 1면 「치사율 40% 메르스 … 경남에도 서서히 엄습/빛장 풀리면 끝, 긴장감 고조」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慶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고삐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언제 엄습해 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3일 도내 일부 지역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도민들을 혼란케 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현재 격리 대상자는 1312명이다. 전날 791명에서 한꺼번에 573명이 늘고, 52명은 격리가 해제된 결과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3차 감염자 1명을 포함해 5명이 늘어나 총 30명이 됐다.

정부 당국의 대처가 손발이 맞지 않고 이미 실행 중인 대책마저도 곳곳에서 구멍이 노출돼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예방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복지보건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거점병원 7곳, 175병상(음압병상 13, 일반 격리병상 162)을 메르스 격리병상으로 확보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경남의사협회는 4일 메르스증후군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도청에서 연다.

한편 사천지역 한 회사원이 중동 출장 후 고열증세를 호소해 메르스 의심환자로 의심됐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경남도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접촉자 2명이 발생했으나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慶南日報의 위 기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경상남도의 대책과 대응체계를 다룬 스트레이트 기사다.

기사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접촉자 2명이 발생했으나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

정받았고, 『사천지역 한 회사원이 중동 출장 후 고열증세를 호소해 메르스 의심환자로 의심됐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에서는 위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는 확진 환자가 1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치사율 40% 메르스 … 경남에도 서서히 엄습」이라는 어깨 제목 밑에 「빚장 풀리면 끝, 긴장감 고조」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메르스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갖게 하는 표현이다. 「경남에도 서서히 엄습」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조짐이 이미 나타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경남에도 서서히 엄습, 「빚장 풀리면 끝」이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위 제목이 40%로 적시한 메르스 치사율 역시 우리보다 의료 수준이 크게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일 뿐 실제 치사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일찍부터 소개됐던 터다.

급성감염병인 메르스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이 규정한 ‘질병 재난’의 범주에 포함된다. 준칙은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제13조-유언비어의 방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일보는 정확성이 강조되는 재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제목을 통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사안을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스포츠조선 2015년 8월 11일자 19면 「신격호 총괄회장 알츠하이머 투병 ... 롯데가 분쟁 변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롯데가(家)가 골육상잔의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건강 상태가 이번 분쟁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3~4년전 신격호 총괄회장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진단 직후부터 매일 알츠하이머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의 창업자로서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주요 지주사에 꽤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지분 행사와 우호 지분 설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롯데 경영권 분쟁의 변수령이 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일 귀국 전까지 일본에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12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일단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 한 발 앞서 나가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지분과 종업원지주회 등의 도움을 받아, 신 회장과 그의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 전 부회장 편에 서서 신동빈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만약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다면, 신 전 부회장이 우호지분 설득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신 총괄회장 명의의 ‘신동빈 회장 해임서’가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명분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실질적인 지분 싸움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의 명분 싸움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결국 롯데그룹 경영권의 향배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로 모아지는 가운데, 건강 이상설에 휩싸여 있는 신 총괄회장의 영향력이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가 앞으로 최대 관심사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이달 안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해 온다면 이를 수락할 것”이라며 “주주총회 개최 요청이 없더라도 정관변경을 위해 이달 안에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개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사태로 한·일 양국에서 반(反) 롯데 정서가 높아지자 주총을 앞당겨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내 우호 지분 확보가 이미 끝난 만큼 표 대결을 펼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 상정을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형제 간 주총 장 표 대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롯데가(家)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분쟁의 변수로 작용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건강 상태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재계 등에 따르면 3~4년전 신격호 총괄회장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진단 직후부터 매일 알츠하이머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비록 기사는 ‘알츠하이머병 진단’, ‘매일 치료약 복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를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미확인 전언형 술어를 사용해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취재원도 ‘재계 등’으로 표현된 익명이다.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 「신격호 총괄회장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때문에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9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5년 6월 12일자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줘서 면역력 약화됐다” 주장」 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뇌사로 장례 준비 중.. 가족들 “박원순이 스트레스 줘 악화”..」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가족들 “용태 악화, 박원순 스트레스 때문” 강력 비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조선닷컴, 아주경제,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줘서 면역력 약화됐다” 주장

입력 2015.06.12 00:13

‘메르스 의사’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의 가족들이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 35번째 환자 ‘메르스 의사’ A씨는 지난달 27일 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35) 옆 병상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던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도 건강했던 A씨가 최근 상태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11일 한 매체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의사 A씨의 확진 판정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지난달 29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30일 서울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르스 의사 A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한 매체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A씨가 뇌사 상태이다. 이미 가족들이 장례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12일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현재 A씨는 호흡 곤란 등이 있었지만,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메르스 의사, 얼른 나오세요” “메르스 의사, 그냥 얼른 나오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주경제)=『메르스 의사, 뇌사로 장례 준비 중..가족들 “박원순이 스트레스 줘 악화”..건강한 사람도 메르스 바이러스로 사망?

등록 2015.06.11 20:26 수정 2015.06.11 20:26

아주경제 이○○ 기자=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A(35번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 38)씨가 뇌사 상태에 빠져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의사 A씨는 현재 30대 건강한 청년인데다 가벼운 알레르기성 비염 정도만 앓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망한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는 평균 70대이고 모두 천식, 폐렴, 심장질환 등 원래 중병을 앓고 있었다. 메르스 바이러스 사망자 중 의료진도 없다.

메르스 의사 A씨는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여러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도 쉽게 회복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건강한 30대 청년도 메르스 바이러스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메르스 바이러스 공포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한 관계자는 11일 “A씨는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일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젊은 친구인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 의사 A씨의 가족들은 메르스 의사 A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에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메르스 의사 A씨의 가족들은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이 약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메르스 의사 A씨에 대해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

습니다. 35번 환자의 경우에는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과 직결되어 있는 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며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메르스 의사 A씨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31일 오전이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했는데 메르스를 전파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박 시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 l***hyo@ajunews.com.』

(스포츠조선)=『메르스 의사 가족들 “용태 악화, 박원순 스트레스 때문” 강력 비판

기사입력 2015.06.11 19:37:35 최종수정 2015.06.11 22:35:22

메르스 의사 위독, 가족들 “박원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 약화” 주장 메르스 의사

‘메르스 의사’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 씨가 위독한 가운데, 가족들이 그 원인으로 박원순 시장을 꼽았다. 35번째 환자 ‘메르스 의사’ A씨는 삼성서울병원 의사로, 지난달 27일 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35) 옆 병상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던 중 감염됐다. 하지만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도 건강했던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11일 한 매체를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메르스 의사 A씨의 확진 판정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지난달 29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30일 서울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르스 의사 A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메르스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평균 나이는 71.1세다. 폐렴과 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메르스 환자는 총 122명이다. 퇴원한 메르스 환자도 7명으로 늘었다.

〈스포츠조선닷컴〉』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가족들이 최근 해당 의사의 병세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11일 한 매체(또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뿐이다. 실제 한국일보는 11일 “박 씨 가족들은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이 약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한국일보도 해당 의사 가족을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들은 내용만을 전했다는 따름이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8일 해당 의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어제 정말 억울해서 더 아팠고, 밤새 잠을 못 자 괴로웠다”고 전해 박원순 시장 심야회견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스트레스로 인해 병세가 악화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메르스 의사’가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 때문에 병세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소문에 지나지 않은데, 위 기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여 보도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2조 「취재준칙」 ②(재난 등 취재),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사의 정정

2015 - 307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2. 쿠키뉴스 발행인 변 재 운
3.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4.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5.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7.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8.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주문

연합뉴스(yomhapnews.co.kr) 2015년 5월 25일자 「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 이혼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26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5월 25일자 「법원 “10년간 성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5월 25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 이혼사유 안된다”」 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5월 25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는 이혼사유 될까」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5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 이혼사유 안되는 이유가?»」 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5일자 「법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 … 이혼 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 세계닷컴(segye.com) 5월 25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 돼”」 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5일자 「法 “아내가 수년간 부부관계 거부, 남편이 관계 회복 노력 없다면 이혼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연합뉴스 쿠키뉴스 경향신문 국민일보 스포츠경향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세계닷컴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 이혼사유 안돼”』

송고시간 2015.05.25 12:50

“관계 회복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남편도 잘못”

(서울= 연합뉴스) 임○○ 기자=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2002년 아이(현재 중학교 1학년)를 낳았다.

그러나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동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렇게 3년을 지내다 2012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5.25 12:50 송고

<쿠키뉴스>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 사유 안돼"

입력 2015.05.26 02:00  트위터  싸이월드  페이스북

 좋아요

0

+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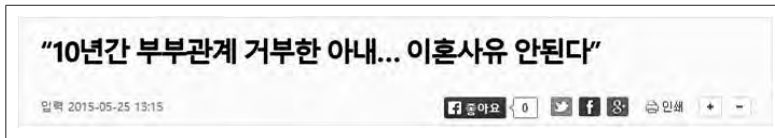
- 축소

표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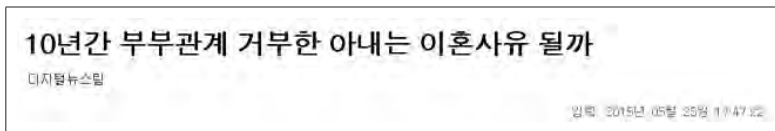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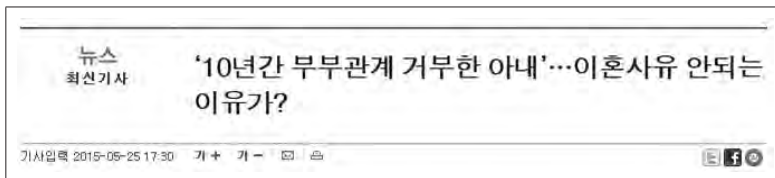
〈국민일보〉



〈스포츠경향〉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세계닷컴〉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 돼”

〈파이낸셜뉴스〉

法 "아내가 수년간 부부관계 거부, 남편이 관계 회복 노력 없다면 이혼사유 안돼"

출처: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5.06.25 13:43 | 수정: 2015.06.25 13:43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고등법원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 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르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로 보았지만 그것이 피고(부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때문인지는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연합뉴스 등은 ‘피고가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단정했으며, 이 부분을 강조해 위와 같이 보도한 것이다.

실제 판결문에서는 남편이 십여년간 외도를 했고 외도 상대와 재혼하기 위해 부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다, 아이들 잘 안 돌본다, 집 안일 방치한다’ 등등 이유를 제시하였고 그 중에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한 줄 들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유책주의 때문에 잠자리 거부가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잠자리 거부한다’ 한 줄에만 근거, 마치 이혼사유가 안 된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선닷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는 연합뉴스와 같은 뉘앙스로 보도했지만,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부연하여 판

결 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 관련 보도가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는 것을 부각해 기사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메일을 26일 하오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에 송부한 바 있다.

결국 위 기사는 판결문의 핵심에서 벗어난데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패소 이유로 단정하고, 기사의 정정 노력에도 게을리 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⑤(기사의 정정)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서울고법 메일 내용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르2761 사건(부부관계 10년 부재)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담당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두 사람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었던 것만 사실로 인정될 뿐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원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왔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을 기초로 하여 이혼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여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사진 게재

2015 - 3137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영만

주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5년 9월 20일자 「무려 27명에게 강간당한 女...왜?」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려 27명에게 강간당한 女...왜?』

Published 2015.09.20 11:12 Updated 2015.09.20 11:12

지난달 30일, 인도에서 17살짜리 소녀가 무려 27명의 남자들로부터 24시간 넘게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외신이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빗더미에 쌓인 집을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소녀는 호텔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 제안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자 27명 중에 호텔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6명만 붙잡히고 나머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CCTV분석을 통해 범 죄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 2: 해당 기사 교체된 사진



〈캡처시각 09.30. 09:47〉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인도에서 17살짜리 소녀가 무려 27명의 남자들로부터 24시간 넘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무려 27명에게 강간당한 女...왜?」란 제목을 톱으로 올리고 맨 다리를 드러낸 여성이 누워있는 장면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제목을 눌러보면 기사와 함께 네이버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올린 사진이 보다 확대돼 있다. 젊은 여성이 반나체로 누워 있는 이 사진엔 “(유튜브/해당기사와 무관)”이란 설명만 간략하게 달려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해 평생 상처를 안고 가야 할 17세 소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건과 관계도 없는 이런 선정적인 사진을 써야 할 이유는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에는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제적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고 돼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 보도를 하면서 공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고려해야하는 언론의 책임은 외면한 채 오직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헤럴드는 보도후 사진을 교체했으나 이미 상당 기간 이용자에게 노출돼 신속한 수정이 요구되는 온라인신문의 특성 상 책임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제목에 ‘강간(強姦)’이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된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단어이나 근자에 대다수 신문에서는 ‘강간’이라는 용어는 법률의 죄명으로 쓸 때만 사용하고 본문과 제목에서는 ‘성폭행’으로 완화해 사용하는 추세다.

원래 형법상의 ‘강간’은 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한다는 것과, 성기삽입의 의미를 갖고 있어, 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에게 치욕적이고 그 범위가 좁으므로 외연을 넓혀 순화하는 뜻으로 ‘성폭력’으로 사용해 왔다. 2013년 6월 형법 개정 이후 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여성도 강간죄 처벌대상이 됐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강간’이란 어감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41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1월 21일자(캡처시각) 「정신나간
女직원 “사장과 불륜, SNS생중계...”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6.01.22. 01:15〉

『女직원, “사장과 불륜현장, SNS에 생중계” ... 첩면피

기사입력 2016.01.21 19:03

[헤럴드경제]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과의 불륜현장을 SNS에 자랑하듯 올린 20대 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상하이스트가 보도에 따르면 SNS상에서 몰리라는 이름을 쓰는 이 여성은 사장과 불륜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생중계한다. 아슬아슬한 의상을 입고 호텔 침대나 화장실 등에서 셀카를 찍으며 SNS에 공개했다.

또한, 이 여성은 ‘보너스를 두둑이 챙겼다.’ 등의 글들도 뻔뻔스럽게 게재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뉴스스탠드 1월 21일자에 「정신나간 女직원 “사장과 불륜, SNS생중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상하이스트 보도를 전제한 이 기사는 몰리라는 닉네임의 중국 여성이 자신의 회사 사장과의 불륜 장면을 SNS에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는 자사 사이트 기사에 게재한 사진과는 달리 엉뚱한 사진이 올라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 본 결과 이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배우 배소은이 영화 ‘닥터’에서 과격적인 베드신 장면을 연출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구글 검색을 살펴보면 헤럴드경제가 과거에도 ‘아우디女’ 노출 기사 등에서 이 사진을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선정적인 기사에 아무 관련도 없는 국내 배우 사진을 얼굴을 노출시키며 사용하는 것은 배우 본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뿐 아니라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 제11조

『“취업시켜주면 늙은 사장님과 잠자리도 가능해”』

입력시간 2015.10.27 17:39

한 중국 여대생이 이력서에 ‘처녀성’을 준다고 적어 중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살 여대생은 최근 중국 취업 사이트에 ‘처녀 신입’이란 제목의 이력서를 게재했다.

여성의 이력서 상단 부분은 ‘쓰촨성 대학 재학, 희망근무처 청두, 희망직종 IT 프로그래머’라고 되어있어 다른 이력서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은 이력서 기타 항목에 ‘처녀 신입사원, 이성과 교제 경험 없음, 누구도 내 몸을 만지지 않았음, 좋은 자리(직종)를 주면 늙은 사장님이라도 성관계 가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했다.

여성의 이력서는 여성이 지원한 회사가 언론에 제보해 세상에 알려졌고 그 후 웨이보 등 소셜 미디어에 급속히 전파되며 논란이 됐다. 몇몇 누리꾼들은 “여성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사회도 책임이 있다”라고 반응했다.

다른 이들은 “그래도 최소한 인사담당자의 시선은 잡았다”라며 “구직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Student offers virginity for job

范雪霞 (女, 20岁) 处女应届毕业生

马 求职简历

国内求职情况

求职意向: 求职软件工程师

联系电话: 13888888888

求职地址: 四川省成都市

基本情况: 本科 应届毕业生 20岁 四川人 求职意向: 求职软件工程师 希望找到一份稳定的工作

求职意向: 求职软件工程师

联系电话: 13888888888

求职地址: 四川省成都市

A Chinese university student has offered her virginity in exchange for a job.

With joblessness becoming a big social issue in China, the student has expressed her willingness to spend the night with a boss as long as he offers her a job.

Her resume seems like others, introducing her as "studying at the Sichuan University, looking for an IT programmer position in Chengdu city."

But she mentions "virgin employee, no experience of dating, no one has touched my body," at the bottom of the resume.

"I can have sex with a boss who offers me a good position, though he is quite old," she says.

The company she applied to released the resume.

It has attracted a mixed reaction from online viewers.

One said "her way to seek a job has a problem, but society is partly to blame for the situation as it causes an unemployment crisis."

Another said: "She at least attracts an employer's eyes. Everyone has a different way to express themselves."

daheestardust71@gmail.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중국 여대생이 이력서에 ‘처녀성을 준다’고 적어 중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0살 여대생은 최근 중국 취업 사이트에 ‘처녀 신입’이란 제목의 이력서를 게재하면서 이력서 기타 항목에 ‘처녀 신입사원, 이성과 교제 경험 없음, 누구도 내 몸을 만지지 않았음, 좋은 자리(직종)를 주면 늙은 사장님이라도 성관계 가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비록 중국의 취업난 속에 한 여대생이 보인 일탈된 성윤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 내용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남성이 만지는 사진은 당시 면접 장소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선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9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5년 10월 29일자 「여성 승객 104명 몰카 촬영한 택시 기사」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시각 10.29. 17:09〉



『여성 승객 104명 몰카 촬영한 택시기사 징역 1년』

기사입력 2015.10.29 14:49:18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택시 안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여성 승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부모(4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2013년 4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씨는 2013년 2월 21일께 비슷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bjc@yna.co.kr <연합뉴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여성 승객 104명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택시기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를 전제한 이 기사에서 문제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덧붙인 사진이다. 여성의 허벅지가 고스란히 보이는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이 사진은 몰카를 촬영하다 징역을 선고받은 이 기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기사와 관계없는 선정적인 사진은 지하철 몰래 카메라와 그 처벌에 대한 언론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독자의 흥미를 부추기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편 집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명예와 신용존중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2015-304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3.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4.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5. 경기일보 발행인 신 선 철

주문

경향신문(khan.co.kr) 2015년 3월 18일자 「서세원·서정희 부부 딸 서동주 “엄마 주장 사실 … 빨리 이혼 했으면”」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3월 18일자 「서세원 딸 서동주 “엄마 말 사실 … 필요하다면 증인 될 것”」 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3월 18일자 「서동주 “엄마 말이 사실 …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3월 20일자 「서세원·서정희 집사 ‘32년간 폭행 발언..희한하다」」 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3월 18일자 「서세원-서정희 딸 서정주 … “엄마 말이 사실, 증언하겠다”」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경향신문, 국민일보, 조선닷컴, 일간스포츠,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서세원·서정희 부부 딸 서동주 “엄마 주장 사실 … 빨리 이혼 했으면”

입력 2015.03.18 14:18:26 수정 2015.03.18 14:18:26

방송인 서세원씨(59)와 서정희씨(53) 부부의 딸 서동주씨(사진)가 이혼 소송중인 엄마를 위해 증인으로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동주씨는 지난 17일 Y-STAR와의 인터뷰에서 법정 공방 중인 부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엄마 아빠가 소송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크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닫은 게 있다. 같은 여자다 보니 엄마에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주씨는 엄마 서정희씨 주장이 사실이라며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동주씨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서정희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처럼 생활했다”면서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10일 주거지인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서세원 딸 서동주 “엄마 말 사실 … 필요하다면 증인 될 것”

입력 2015.03.18 13:10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딸 서동주가 엄마를 위해 증인으로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동주는 17일 Y-STAR와의 인터뷰에서 법정 공방 중인 부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엄마 아빠가 소송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크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다. 같은 여자다 보니 엄마에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주는 엄마 서정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정희는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해 결혼했고, 포로생활과

다름없는 결혼생활을 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서동주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박○○기자 p***212@kmib.co.kr』

(조선닷컴)=『서동주 “엄마 말이 사실 …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기사입력 2015.03.18 10:08:57



서세원 서정희 서동주 “엄마 말이 사실”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딸 서동주가 심경을 밝혔다.

18일 Y-STAR는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딸 서동주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서동주는 “엄마·아빠가 소송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그때 어려서 잘 몰랐는데 크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점이 있다. 같은 여자다 보니 엄마에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동주는 지난 12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빠 서세원의 네 번째 공판에서 엄마 서정희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밝힌 충격 발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서동주는 “엄마가 하는 말들은 사실이다”라며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만약 필요한 부분

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하겠다”며 부모님의 법정 공방에 직접 나설 의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딸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일간스포츠)=『서세원·서정희 집사 ‘32년간 폭행 발언..희한하다’

입력 2015.03.20 19:39



이혼 소송 중인 서세원과 서정희의 집사 일을 12년간 했다고 알려진 최모 씨의 발언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최모 씨는 20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동주엄마(서정희)의 발언이 희한하다”며 “동주아빠(서세원)가 폭행다고 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발언했다.

최모 씨는 “동주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동주엄마를 타이른 적은 있었고, 목소리가 커서 말로 혼냈기는 하지만 내가 십몇 년 같이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며 “폭행당했으면 병원도 갔을 텐데”라고 말했다.

최모 씨는 스스로 “누구의 편이 아니다.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발언이 서세원이 위한 것이 아님을 서정희와 친분을 통해 강조했다.

최모 씨는 “(서정희와) 교회에서 만나면 포옹도 한다”며 “그럴 사람이 아닌데 32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깐 조금 이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말다툼 도중 서세원이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며 또 소를 제기했다. 서정희는 지난 12일 열린 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 서세원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서정희는 18일 극비리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기자 b***larmin@mtstarnews.com』

(경기일보)=『서세원-서정희 딸 서정주 ... “엄마 말이 사실, 증언하겠다”

승인 2015.03.18



엄마 말이 사실, 증언하겠다

서세원의 딸 서동주가 “엄마 말이 맞다”며 “필요하다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세원의 딸 서동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세원과 서정희의 소송에 말문을 열었다.

서동주는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엄마(서정희)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라며 “가족 이야기가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강남구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12일 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하지만 목을 조른 점과 사건의 전후 사정과 배경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예인 서세원과 서정희 씨 부부의 가정폭력과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정희 씨는 2014년 7월 서세원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말다툼 도중 서세원 씨가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며 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 씨 부부의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딸 서동주 씨는 3월 17일 연예 유선채널인 Y-STAR와의 인터뷰에서 “엄마 말이 맞다”며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주 씨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딸 서동주 씨의 발언이 있고 난 바로 다음날 서정희 씨는 18일 “딸과 상의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문제는 서 씨 부부의 이혼 소송에 딸인 서동주 씨까지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 ‘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진실 규명’이라는 미명 하에 보호받아야 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가 있어선 안 된다. 서동주 씨도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동주 씨는 미국 명문 웨슬리여대, MIT를 거쳐 박사과정시험(GRI)에서

1600점 만점에 1590점을 받아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 박사과정에 장학생으로 입학,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실명이나 사진이 공개된 상태이므로, 공인의 범주에 들 수 있는 만큼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인의 범주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도 공익을 위한 보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는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아닷컴, 세계닷컴, 매경닷컴, 중부일보는 서동주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하였다.

사실 보도라 하더라도, 이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6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문

서울신문 2016년 2월 2일자 8면 「뺑 뚫린 軍 … 불륜남녀 ‘독신 숙소’ 들락날락」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들이 버젓이 동거하며 8개월 이상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불륜 과정에서 남자가 여자의 해군 독신자 숙소를 제 집처럼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총체적인 군기 문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육군 A(37)상사와 해군 B(29·여)대위는 지난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미 결혼해 부인과 자녀가 있는 A상사와 미혼인 B대위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이상 수차례 휴가와 당직 근무, 출장 일정을 똑같이 맞춰가며 불륜을 일삼았다. 특히 A상사는 B대위가 거주하던 서울 대방동 해군 독신자 숙소에 수시로 출입하며 사실상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동료 등의 증언을 토대로 뒤늦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사이버사령부 측은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함구할 것을 당부하고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각각 정직 2개월,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B대위는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로 전출된 상태다.

해군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A상사가 숙소를 무단출입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숙소 측은 뒤늦게 제보를 받고 지난달 3개월 동안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B대위와 A상사가 수십 차례 이상 건물로 함께 들어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남녀 독신 간부 200여명이 거주하는 이 숙소는 내규상 입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거주할 수 없고, 풍기문란과 관련된 활동이 적발되면 즉각 퇴거 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입주자의 출입카드와 CCTV 이외에는 사실상 출입 관리 시스템이 없다.

특히 A상사는 숙소에 자신의 승용차를 입주자 B대위 명의로 등록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다. 숙소 측은 차량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 서류

확인도 없이 등록을 허용해 성 군기 위반을 묵인한 꼴이 됐다.

해군은 지난달 8일 B대위를 규정 위반으로 숙소에서 퇴거 조치했다.

해군 관계자는 “편제상 숙소를 관리하는 인원이 병사 2명뿐이고 이들이 24시간 일일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야 할 인력까지 거주하는 군 숙소 출입 관리 자체가 허술해 유사시 이들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군의 보안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육군 상사와 해군 대위가 8개월 이상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자녀와 부인이 있는 A상사와 미혼인 B대위는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휴가와 당직 근무, 출장 일정을 똑같이 맞춰가며 불륜을 일삼았다. A상사는 B대위가 거주하던 해군 독신자 숙소를 수시로 출입하며 사실상 동거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두 사람을 A와 B 영문 이니셜로 익명처리하면서도 이들의 근무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각각 육군 상사와 해군 대위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이고, 지난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고, 남녀 독신 간부 200명이 거주하는 대방동 해군 독신자 숙소에서 사실상 동거생활을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각각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B 대위는 지난달 독신자 숙소해서 퇴거조치 당한 뒤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로 전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기술은 관련자들의 주변 사람이라면 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보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5년 4월 16일자(캡처시각) 「정소녀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고, 사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4.16 18:57〉

『1대100』 정소녀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는 루머 황당”

입력 2015.04.15 08:14:00

배우 정소녀가 과거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방송된 KBS 2TV ‘1대100’에 1인으로 출연한 정소녀는 100인과 경쟁하며 5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했다. 정소녀는 이날 방송에서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의 아기를 낳았다는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정소녀는 “내가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가 있었다. 난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한 기자가 가봉에 가서 취재를 했고, 그의 아이가 100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루머가 풀어졌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정소녀가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를 해명한 내용이다. 정소녀는 기사에서 “내가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가 있었다. 난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문을 연 것으로 돼 있다. 이 기사의 제목도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는 루머 황당”이다. 하지만 이 기사를 알리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제목은 정반대다. 「정소녀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고, 사실...”을 보면 마치 정소녀가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은 것처럼 보인다. 왜곡된 제목, 잘못된 제목이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제목을 다는 것은 신문 윤리실천요강의 편집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사에 등장하는 정소녀의 명예도 훼손할 수 있다. 가봉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5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2.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3.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4. 쿠키뉴스 발행인 변 재 운
5.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6.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5년 10월 18일자 「신세계백화점 점원, 고객 앞에 무릎 꿇은 영상 논란」 기사의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10월 18일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서 또 갑질 논란...점원들 무릎 꿇고 사과」 기사의 사진, 국민일

보(kmib.co.kr) 10월 18일자 「이번엔 인천에서 백화점 고객 갑질 논란, 점원 2명 무릎 꿇고 사죄」 기사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10월 18일자 「‘갑질민국’ 또 터졌다 … 백화점 점원 ‘무릎 사죄’ 영상 파장」 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18일자 「고객 갑질 논란, 인천 백화점서 서비스 문제로 훈계 … 점원 무릎 꿇어」 기사의 사진,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10월 18일자 「무상수리 거부에 고객의 갑질..점원 ‘무릎사죄」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 국제신문,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경닷컴, 코리아타임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 『인천 백화점 점원 고객 앞에서 무릎 꿇은 영상 화제..고객 갑(甲)질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2015.10.18 13:47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서 점원 2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하는 영상이 공개돼 ‘고객 갑(甲)질’ 논란이 재점화됐다.

16일 처음 공개돼 SNS를 통해 퍼진 1분 27초짜리 영상에는 한 여성 고객이 의자에 앉아 무릎을 꿇은 백화점 점원 2명을 나무라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고객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서비스 문제를 언급하며 점원들에게 “너네 둘 다 똑바로 해. 지나가다 마주치면 죄송하다고 해”라고 다그쳤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점원들은 “그게 아니구요 고객님”이라고 답하며 고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 고객은 16일 오후 3시쯤 백화점 1층 고가 귀금속을 판매하는 S 매장에서 제품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직원들이 규정상 수리비가 청구된다고 하자 점원들의 고객 응대법을 문제 삼아 1시간가량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객의 항의가 심해져 지나가는 고객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도 당시 근처에 있던 다른 고객이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영상 촬영자에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촬영자가 이를 거부하고 영상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갑질’ 고객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화제가 됐다.

백화점 측은 “점원들이 상황을 원만히 끝내고 싶어 잠시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뿐”이라며 “고객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거나 폭언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점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17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회에서 백화점 고객의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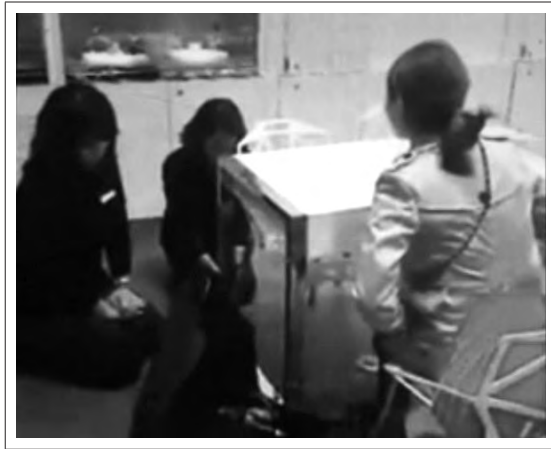
지난해 12월에는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폭언을 하고 뺨을 때려 논란이 됐다. 당시 화를 당한 요원은 모녀가 처벌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모녀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도 여성고객이 의류 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산대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에 내던지고 남성 직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됐다.』

(국제신문)=『신세계백화점 인천점서 또 갑질 논란...점원들 무릎꿇고 사과

기사입력 2015.10.18 12:03:01



(국민일보)=『이번엔 인천에서 백화점 고객 갑질 논란, 점원 2명 무릎 꿇고 사죄』(이하 본문 생략)

(쿠키뉴스)=『‘갑질민국’ 또 터졌다 ... 백화점 점원 ‘무릎 사죄’ 영상 파장』

(한경닷컴)=『고객 갑질 논란, 인천 백화점서 서비스 문제로 혼계 ... 점원 무릎 꿇어』

(코리아타임스)=『무상수리 거부에 고객의 갑질..점원 ‘무릎사죄’』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서 점원 2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하는 영상이 공개돼 소위 ‘고객 갑질’ 논란이 재점화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고객이 점원을 나무랐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한 뒤 해당 점원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문제는 조선닷컴 등이 백화점 점원과 고객의 얼굴을 공개해 ‘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에서 밝혔듯이 게재한 사진은 근처에 있던 다른 고객이 촬영해 SNS에 올린 것을 캡처한 것이다. 어느 정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인지 점원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이고, 고객은 뒷모습만 나와 신원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특정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름을 성만 표기한다거나 뒷모습을 촬영하는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 내용과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 주변 상황을 종합 판단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영상 촬영자에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영상공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더욱 유의했어야 한다.

‘알 권리’만을 앞세워 보호받아야 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인격권(초상권)과 명예훼손 침해 소지가 있는 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은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세계닷컴, 경인일보, 인천일보, 매일일보, 동양일보, 스포츠경향, 한라일보는 점원과 고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했고, 경향신문과 매경닷컴은 사진 없이 기사만 내보냈다.

사실 보도라 하더라도, 이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4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3.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4.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5.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6.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7.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9.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발행인 조 상 현
10.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1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1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백 석 기
1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14.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세계닷컴(segye.com) 2016년 1월 4일자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4일자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진행 중」 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월 4일자 「MBC측 “강민경, 부친 구설수에도 정상 촬영 중”[공식 입장]」 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월 4일

자 「강민경, 부친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받는 중...세금 낼 돈 회사 자금으로 소비」 제목의 기사 외 1건, 중앙일보(joins.com) 1월 4일자 「다비치 강민경 부친,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중...4억 이상 유용?」 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4일자 「A 종교재단 측 “강민경 父, 역대 사기·횡령 혐의 검찰 조사”」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4일자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 소속사 측 “입장 밝히기 곤란”」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월 4일자 「건축회사 사장 다비치 강민경 부친, ‘횡령 혐의 검찰 조사 받아’」 제목의 기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hankooki.com) 1월 4일자 「부친 사기 혐의 피소 강민경, 부친 수억대 사기 횡령 혐의 … ‘무슨 일?’」 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4일자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피소(전문 포함)」 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4일자 「[전문]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 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월 5일자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소속사 입장은?(전문 포함)」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4일자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중? … 무슨 일이?」 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월 4일자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세계닷컴 등 14개 언론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닷컴)=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2016.01.04 23:58:48 수정 2016.01.04 23:58:48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사진= 세계일보DB]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걸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이 수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경의 부친 강씨는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익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 재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금성의 유현주 변호사는 “강씨가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는데, 2009년경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약 4억44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다”며 “A 재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A 재단은 뒤늦게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이기에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

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단은 2014년경 강씨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위 고소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민경의 소속사 CJ E&M측은 4일 한 매체를 통해 “가족 개인의 일이라 소속사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팩트에 대해서도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강민경의 아버지 강씨가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강민경은 MBC 일일드라마 ‘최고의 연인’에 출연해 열연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팀 조○○ 기자 j**@segye.com」

(이하 기사 본문 생략)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이자 연기자인 강민경의 부친이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위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했다 하더라도 강민경이 연루되지 않은 이상 이는 부친에 국한된 문제일 뿐 본인과는 하등 관련 없는 일이다. 게다가 기사에는 고소를 당한 강민경의 부친이 검찰의 1차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재조사를 받는다고 밝혀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사에 보도 가치가 있는지 그 판단은 해당 매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관련되지 않은 가족의 피소 건을, 그것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을 공개해 보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 보

호'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 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2015-3155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재활

주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5년 10월 12일자 「[잇! 스낵] “박기량 다 돌려 먹었다” 충격 루머에 ‘사실무근’ 입장 밝혀」 제목의 기사와 사진, 와우한국경제TV(wowtv.co.kr) 10월 13일자 「‘야구 여신’ 박기량, “다 돌려 먹는다” 충격 루머 내용이.. 누가?» 제목의 기사와 사진, 10월 13일자 「박기량 루머 사실무근, 내용이 뭐길래? ... “취도 안먹고 박기량도”」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한경닷컴과 와우한국경제TV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경닷컴)= 『[잇! 스낵] “박기량 다 돌려 먹었다” 충격 루머에 ‘사실무근’ 입장 밝혀

작성일 Oct 12th, 2015 by 한○○

박기량, 사실무근 입장 밝혀



박기량 사실무근 / 사진 = 맥심 화보

치어리더 박기량이 루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야구선수 A씨의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SNS에 A씨 관련 글을 게재하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취도 안먹고 박기량 또한 다 돌려 먹어서 난 안 그래요”

해당 글에서 이 네티즌은 A씨가 ‘박기량’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냈고, 양다리에 폭언 및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기량의 소속사 RS컴퍼니는 1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간 입장표명과 해명을 위해 SNS에 폭로성 글을 올린 이의 신원과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정황을 파악했다”며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법적 조치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며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기량은 수년 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응

원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기량 측은 “걱정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박기량 팀장과 치어리더들에게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한 아나운서가 야구선수와의 루머에 휩싸였다가 충격적인 결말로 이를 잠재웠다.

이 아나운서는 스캔들 루머에 시달리다가 자택인 오피스텔 19층에서 투신자살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책상 위에는 자살을 앞둔 심경이 담긴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피해자가 자살까지 한 사건을 보면 박기량의 사건 역시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다. 루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루 빨리 진위가 밝혀져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한경닷컴 기자 g***e@hankyung.com』

※한경닷컴 <snacker> 초기화면



<캡처시각 10.12. 17:19>

(한경와우TV 1)= 『야구 여신' 박기량, “다 돌려 먹는다” 충격 루머 내용
이..누가?

입력 2015.10.13 01:30



박기량 사실무근, 사생활 문란 루머 왜?

야구 여신 박기량, “다 돌려 먹는다” 충격 루머 내용이.. 누가?

박기량 사실무근

치어리더 박기량이 루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야구선수 A씨의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SNS에 A씨 관련 글을 게재하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취도 안먹고 박기량 또한 다 돌려 먹어서 난 안 그래요”

해당 글에서 이 네티즌은 A씨가 ‘박기량’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냈고, 양다리에 폭언 및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기량의 소속사 RS컴퍼니는 1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간 입장표명과 해명을 위해 SNS에 폭로성 글을 올린 이의 신원과 사실 여부

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정황을 파악했다”며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법적 조치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며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기량은 수년 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기량 측은 “걱정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박기량 팀장과 치어리더들에게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한 아나운서가 야구선수와의 루머에 휩싸였다가 충격적인 결말로 이를 잠재웠다.

이 아나운서는 스캔들 루머에 시달리다가 자택인 오피스텔 19층에서 투신자살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책상 위에는 자살을 앞둔 심경이 담긴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피해자가 자살까지 한 사건을 보면 박기량의 사건 역시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다. 루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루 빨리 진위가 밝혀져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경와우TV 2)=『박기량 루머 사실무근, 내용이 뭐길래? ... “취도 안먹고 박기량도”

채○○ 기자 c***n833@wowtv.co.kr

입력 2015.10.13 00:01



치어리더 박기랑이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사실무근’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야구선수 A씨의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A씨 관련 글을 게재하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 이 네티즌은 “취도 안먹고 박기랑 또한 다 돌려 먹어서 난 안 그래요”라며 A씨가 ‘박기랑’을 언급하며 보낸 메시지와 함께 A씨가 양다리에 폭언 및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기랑 소속사 측은 지난 11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 네티즌이 온라인에 폭로한 A선수 관련 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속사 측은 “지난 10월8일 목요일 SNS상에 올라온 A 선수 관련 폭로성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걱정 하셨을 거라 생각된다.

먼저 늦은 해명에 사과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명이 늦은 이유에 대해 “A 선수 관련 폭로성 글에 다수의 피해자분들이 계셨고 저희의 발언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일간 입장표명과 해명을 위해 SNS에 폭로성 글을 올린 이의 신원과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올린 이의 신원과 이 일의 정황을 파악했다”며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리고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실무근의 낭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법적 조치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적극 해명 할 것이고,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RS컴퍼니 측은 “박기량은 수년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다.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하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만큼 더 노력하여 발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다. 걱정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이 야구선수 A씨의 전 여자친구가 A씨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당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는 박기량의 소속사의 반박을 함께 싣고 있다.

보도와 관련,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A씨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이 네티즌은 A씨가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자신과 5개월간 사귀었다고 분개하며 야구팀 감독, 특정 야구선수와 A씨 팬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동안 나눴던 대화내용을 폭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야구 좋아하는 년들은 다 망가졌다. 냄새나게 생겼다. … 쥐도 안먹고 박기량 또한 다 돌려먹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돌려먹었다’의 사전적 정의는 “원래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바꾸다”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사용하는 저속한 표현으로, 여성을 마치 먹는 것에 비유한 성차별적이고 패륜적인 단어이다. 결국 한 여성

을 상대로 한 남성들의 집단성행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다수의 남성에게 성관계에 흔쾌히 응할 여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윤간(輪姦)’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윤간은 통상 징역 6년~9년에 이를 정도로 형량이 높다. 이렇듯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을 SNS에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감 없이 보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본문에 이를 적시함은 물론 제목에도 반영했다. 한 여성에게 치명적인 모욕을 안겨 줄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둘러먹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한 곳은 국내 언론사 가운데 한경닷컴 외에는 단 한군데도 없으며, 해당 보도자료에도 이같은 표현은 없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해당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분쟁시 언론사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통상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면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확인작업 등 ‘얼마나 제대로 충실하게 보도하려고 하였는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기사는 그러한 노력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다. 한경닷컴은 나아가 박기량과 관련된 루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루 빨리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위 기사를 제목만 바꾸고 크레디트를 삭제한 채 자회사인 한경와우TV에 그대로 올려놓아 루머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였다. 한경와우TV는 이와 별개로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둘러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위 기사에 첨부된 사진도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해당 사진이 본인의 동의하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촬영 당시 피촬영자가 합의했던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한 경우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피촬영자인 박기량은 자신의 명예가 침해당했다고 A씨 및 A씨의 여자친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비춰, 같은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도

후 A씨와 A씨의 여자친구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사과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음란한 표현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한 동시에 신문의 품위를 훼손하였고, 미확인사실을 과대편집하였으며, 저속한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며,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8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정영무

주문

한겨레 2015년 6월 22일자 29면 「‘분서’ 권하는 사회」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한겨레의 위 적시 칼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장에 바람 잘 날 없는 한 주다. 표절 혐의에 휩싸인 신경숙과 창비 출판사의 책들을 내다버리겠다는 아우성이 들끓는다. 해당 작가와 출판사의 다른 책들에 대한 지지까지 철회하는 게 정당한가 고민되지만, 결연한 다짐에 함축된 실망의 크기는 충분히 짐작된다.

오랫동안 내 문학수업의 한 축이었던 작가가 ‘표절’이라니 놀라웠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에 대한 지식인들의 광범위한 ‘분노’다. 신경숙의 표절은 “긴급 대토론회”를 요하는 것이었으며, 순식간에 ‘순수문학의 오염’이자 ‘1990년대 문학의 타락’, 나아가 ‘한국문학의 몰락’으로 의미화됐다. 이 점층법의 논리를 목도하면서, 소설가 한 명이 이렇게나 많은 걸 상징하고 있었나 싶어 아찔해졌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오히려 그를 희생자로 묘사하는 ‘마녀사냥’ 프레임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곧이어 발표된 신경숙과 창비의 무책임한 변명, 악명 높은 ‘국익론’을 기어이 시전(?)한 한국소설가협회의 압도적인 뻔뻔함은 그런 걱정을 무색하게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나는 사건을 제보한 이용준 작가의 글을 거듭 읽었는데 일단 내 독해력을 의심하며 묻노니, 그 글에 쓰인 “한국문단”과 “한국문학”, “한국문인”은 도대체 누군가. 그 글에서 저 세 주체는 신경숙과 동일시되거나, 침묵으로써 그녀와 공모한 대상이며, 신경숙을 단죄하여 “진정한 문학”에 대한 “순정”과 “고결함”을 수호할 “나”와 “미래의 문우들”이기도 하다. ‘신경숙’ 혹은 “나”와 “미래의 문우들”은 어떻게 ‘한국문학’과 ‘한국문학의 타자’를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걸까.

신경숙의 표절을 성토하는 이들은 곧장 조경란, 천운영, 전여옥으로 소급되는 표절의 계보를 소환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비근한 예인 황석영의 <강남몽> 표절 사건은 가벼운 에피소드로만 치부됐으며, 내 기억으로도 당시 분노의 밀도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 황석영이 아니라 신경숙에 이르러서야 한국 문학계를 파탄낸 장본인으로서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명한 ‘못된 년(bitch)’인 박근혜, 조현아와의 커플링이 가능했다는 점은 무엇을 뜻할까. “한국문학”은 모처럼 분명히 떨치고 일어난 김에, 이 ‘비난의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성별화’에 깃든 욕망도 성찰해볼 일이다.

분서 욕망을 일으키는 사건이 또 있다. ‘진보논객’ 한윤형과 박가분(박원익)의 데이트폭력 혐의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보된 것이다. 그런 사례들은 술하게 많아져서, 현재 에스엔에스(SNS)에는 데이트폭력을 겪은 여성들의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제2의 ‘100인위’ 사건이 생긴다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놀

라운 것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질문들이다. ‘오래전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나’, ‘사적 보복의 목적이 있지 않냐’는 물음들. 신경숙의 고발자에게는 물어진 적 없는 질문들이다.

한윤형과 박가분은 ‘짱돌을 들지 않는’ 88만원 세대에 대한 486세대의 소망이 고스란히 투영된 차세대 이데올로그들이다. 이들은 여성영화제 패널로 참여할 만큼 페미니즘도 아주 ‘잘 배웠다’. 그렇다면 이 ‘진보 키드’들의 현재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바라건대, 신경숙의 경우가 그러했듯 작금의 사태도 ‘진보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무겁게 사유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유력한 글쓰기 양식이 된 ‘사과문’ 작성의 ABC에 대해 “긴급” “대토론회”를 여시기를.』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분서’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위 한겨레 칼럼은 근현대문화 연구자인 오혜진 씨가 작성한 것으로 표절 논란에 휩싸인 작가 신경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난이 과도하다는 내용이다.

오 씨는 칼럼에서 『신경숙의 표절을 성토하는 이들은 곧장 조정란, 천운영, 전여옥으로 소급되는 표절의 계보를 소환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비근한 예인 황석영의 〈강남몽〉 표절 사건은 가벼운 에피소드로만 치부됐으며, 내 기억으로도 당시 분노의 밀도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면서 『황석영이 아니라 신경숙에 이르러서야 한국 문학계를 파탄낸 장본인으로서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명한 ‘못된 년(bitch)’인 박근혜, 조현아와의 커플링이 가능했다는 점은 무엇을 뜻할까. “한국문학”은 모처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김에, 이 ‘비난의 대상에 대한(무)의식적 성별화’에 갇든 욕망도 성찰해볼 일이다.』고 기술했다. 작가 신경숙의 처지를 비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명한 ‘못된 년(bitch)’』으로 묘사, 사실상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못된 년’은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한 여자를 낮잡아 이르

는 말'로 일종의 욕설이다. 칼럼에서 '못된 년'을 영문으로 표현한 bitch 역시 '암캐' '(개 같은) 년'이라는 의미의 욕설이다. 게다가 오 씨는 칼럼에서 두 사람을 비방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한 위 칼럼의 비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인신공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위 칼럼은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고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평론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신문윤리강령은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언론인에게 주문하고 있다. 또 실천요강에서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칼럼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 「평론의 원칙」 전문,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전문, 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생활 보호

주문

경향신문 2015년 3월 20일자 29면 「1956년 스무 살 청년의 일기」 제목의 ‘강명관의 심심한 책 읽기’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의 위 적시 칼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한두 번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드나든다 하니, 무어 대단한 책이라도 잔뜩 사들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냥 산보 삼아 들르는 것이다. 쉬는 날 이따금 아내와 버스를 타고 남포동에서 내려 광복동 거리를 걷다가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국제시장 강통골목 부평시장으로 돌아다니며 구경을 한다. 강통시장에는 최근 야시장도 생겨서 밤에 볼 것이 더 많다.

어떤 날은 둘이 강통골목을 거쳐 대청동까지 올라간다. 나는 길을 건너 보수동 책방골목으로 가고 아내는 강통골목을 더 뒤지고 다닌다. 한 두어 시간 지난 뒤 다시 만난다. 나는 배낭을 지고 서점을 훑고 지나가는데 무슨 좋은 책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책방골목은 그냥 헌책을 파는 곳일 뿐이지 일본 도쿄의 ‘간다(神田)거리’처럼 고서점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 책도 사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고, 이따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책을 두어권 사거나, 아주 드물게 앞으로 공부에 참고가 될만한 책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사는 책은 대부분 신간을 살 필요가 없는 소설 같은 것이다. 한번은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구하려 하니, 1974년에 나온 정음사판 전집이 있다. 시렁 높이 있는 것을 내려 달라 해서 보니, 워낙 오래되어 낫설기 짝이 없다. 포기하고 말았다. 뭐, 이런 식이다. 그냥 걷느니 책방골목으로 다닐 뿐인 것이다.

수십년 전 봄날 역시 아내와 헤어져 책방골목을 배회하다가 골목 중간쯤에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책방에 들렀다. 자주 들리기는 하지만 별로 책을 산 기억은 없는 곳이다. 훑어보니 한쪽에 정리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책이 잔뜩 꽂혀 있다. 그중 책등이 벗겨진 볼품없는 책이 있었다. 뽀아 보니 어라? 책케이스까지 갖춘 책이다. 책케이스 앞면에는 찢레꽃이 그려져 있고 ‘文藝日記 1961’ (문예일기 1961)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책을 꺼내보니 하드커버다. 그 표지에는 ‘學園日記 4269 學園社’(학원일기 4269 학원사)라고 써 놓았다. 단기 4269년은 1956년이니 책케이스의 1961년과는 맞지 않다. ‘학원일기’를 ‘문예일기’ 케이스에 넣어둔 것이 틀림없었다. ‘학원일기’는 청소년을 독자층으로 삼았던 잡지 ‘학원’의 부록이었다. 당시 잡지사에서는 잡지를 더 팔 의도로 종종 부록을 끼워 팔곤 했는데, 일기장 역시 그런 것이었다. 일기장이 탐나서 잡지를 사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학원’은 고등학생들이 읽기 꼭 좋은 잡지였다. 학원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상 시문 대회를 했는데, 그것을 거친 전국의 청소년 문사들이 뒤에 정식 문인이 되곤 하였다.

일기를 훑어보니 푸른 만년필로 단정하게 쓴 글씨다. 갑자기 구미가 당겼다. 주인을 불러 짐짓 아무것도 아닌 채하면서 이거 얼마요? 하고 물었더니, 주인은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책을 한 번 보고 망설망설하다가 2만원이라고 하였다. 자기로서는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아니, 무슨 이런 낡은 공책이 2만원이란 말이오? 하지만 얼굴에서 비상한 관심의 자취를 읽어낸 주인의 말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책 아닙니까? 하는 수 없이 지갑을 열고, 2만원을 건넸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일기책 안쪽에 ‘張大成 專用’(장대성 전용)이라고 써 놓았다. 아마도 이 일기는 장대성이란 사람이 쓴 것일 터이다. 일기는 1956년 1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의 것이다. 나이는 스무 살 정도다. 집은 경상남도 진주 근처의 시골이다. 일기가 시작될 때 장대성은 진주에서 하숙을 하면서 진주농림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1, 2월 대입 시험을 앞두고 마음을 줄이며 공부를 하는 등 마는 등 하며, 진주 하숙집에 있다가 시골집으로 갔다가 하더니, 결국 3월4일 낙방 통보를 받는다. 다시 동아 대학교에 응시했지만, 또 낙방이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안에서 하는 제재소의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입대(入隊)를 기다리다가 5월8일 동아대학교 야간부 편입시험에 합격한다. 당연히 5월19일 징집 연기를 하고 계속 제재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학교를 다닌다. 따지고 보면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일기다. 하지만 6·25전쟁 뒤 불안한 시대의 20대 초반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의 일상과 속내를 엿보기에 족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친밀한 관계, 젊은 여성에 대한 치기 어린 애정, 일과 휴식 등을 그야말로 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장대성의 주 활동무대는 미화당백화점이고, 취미는 영화보기다. 하루치를 보자.

‘7월1일. 금일이 일요일인 동시에 7월의 첫날이어서 시민들은 오랜 장마에 시달렸던 몸을 비가 그치자 각 곳으로 산보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오전에는 남포(南浦)에서 ‘벼락감투’를 구경하고 오후에는 책상에 앉아 NOTE 정리에 골몰. 저녁에 DS에 있는 S miss와 약속을 포기하고 본점의 y와 같이 시민관에서 〈안다루샤〉를 관람하고 돌아와 DS에서 S에게 변명을 하고 11시경 SY와 같이 중국요리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DS에서 경음악으로 1시가 넘도록 감상에 잠긴다.’

하루의 일과가 복잡하기도 하다. 7월 일기가 시작하기 전 ‘이달의 메모’에서 7월에 본 영화를 정리해 두고 있는데, 모두 16편이다. 엄청난 영화광이 아닐 수 없다. 일기를 통독하고 나서 대단한 자료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치른 2만원의 값은 하는 것 같았다. 또 영화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1950년대 젊은이의 영화보기도 시각에 따라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일기를 사들인 뒤로 혹 서점이나 고물 파는 곳을 들르면 일기가 있는가 하고 살피게 되었다. 어느 날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의 고물 파는 곳에서 살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쉽기 짝이 없다.』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칼럼은 헌책방 골목을 자주 찾는 필자가 한 청년의 일기책을 우연히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일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일기책 안쪽에 ‘張大成 專用’(장대성 전용)이라고 써 놓았다』고 기술하고, 이를 근거로 일기를 쓴 사람이 장대성이고 나이는 스무 살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일기는 1956년 1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의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필자는 이 일기에 대해 『따지고 보면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일기』라면서도 『6·25전쟁 뒤 불안한 시대의 20대 초반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의 일상과 속내를 엿보기에 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친밀한 관계, 젊은 여성에 대한 치기 어린 애정, 일과 휴식 등을 그야말로 낱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대성의 집이 경상남도 진주 근처의 시골이며, 진주농림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대입 시험에서 낙방 통보를 받고, 다시 동아대학교에 응시했다 또 낙방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입대를 기다리다 동아대학교 야간부 편입시험에 합격했으며, 주 활동무대는 미화당백화점이고, 취미는 영화 보기라는 등의 일기를 통해 얻은 장대성에 관한 정보를 세세하게 전하고 있다. 또한 7월 1일자 일기는 전문을 전재하고 있다.

칼럼에 소개된 장대성의 ‘일상과 속내’ 중에는 개인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따라서 장대성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할 자신의 일기 내용을 신문지면을 통해 공개하는 데 동의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칼럼에도 장대성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공개한다는 설명이 없다.

그렇다고 시간적으로나 내용으로 볼 때 일기 내용이 역사적 기록으로서 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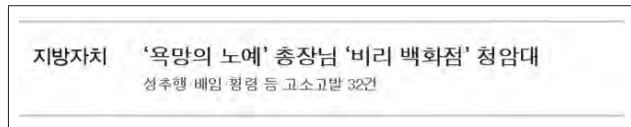
경향신문은 위 칼럼에서 일기를 쓴 사람의 실명을 적시하고, 그의 이력을 자세히 서술하고, 일기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특정일의 일기 내용을 전문 그대로 전재했는데, 이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2015년 4월 21일자 「‘욕망의 노예’ 총장님 ‘비리 백화점’ 청암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각 2015.04.21 14:37〉

『전남 순천 청암대가 최근 10개월 새 32건의 고소 고발로 얼룩졌다.

문제의 발단은 강모(68) 총장이 여교수 한명을 마음에 두면서 시작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 대학 설립자의 장남이다. 일본에서 살던 강 총장은 2011년 부친이 별세한 후 총장이 됐다.

강 총장은 2013년 7월쯤 향장피부미용과 A(45) 교수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의했다. 강 총장은 A 교수를 회식이 끝난 뒤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A 교수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자 강 총장은 “앞으로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겠다”고 협박한 뒤 보복성 징계를 했다. 대학은 지난해 11월 A 교수와 친한 학과 교수 2명 등 3명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했다.

이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취소 처분을 받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교수들이 재임용 탈락 취소 처분을 받은 지난 2월 25일에는 아무런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교수들의 재임용권을 가지고 철저히 ‘갑

질'을 했다. 강 총장은 B(43·여) 교수로부터 성추행 고소도 당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봐주기식 조사가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순천지청은 A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강 총장이 내연 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광주고검이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 강 총장은 재판을 받게 됐다. B 교수 성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이 증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지청은 다음달 초순까지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해 기소할 방침이다.

또 강 총장은 교비 14억원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조모(56·여) 교수는 수년 동안 교육비를 부풀려 상습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 대학은 조 교수를 2년 동안 기획처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지원실장 등 4번이나 돌려 가며 직책을 맡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최정원 의원은 “대학이 학생들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총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등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총장을 포함해 모든 간부 교수들은 보직을 사임하고 학원 내외 인사를 포함한 거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 최○○기자 c***jp@seoul.co.kr

2015.04.21 11면』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순천 청암대학교 총장이 여교수 성추행 사건 관련, 광주고검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위 기사는 그러나 청암대학교 총장 강 모 씨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강 씨를 고소한 교수의 이름은 영문 이니셜 처리했지만, 나이와 소속 학과(향장피부미용과)는 명시해 최소한 지역 사회에는 그가 누구인지 신원을 짐작할 수 있게 보도하였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을 추적해온 다른 매체들은 이니셜로 처리

한 이름만 보도한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또 청암대 홈페이지에서 향장피부미용과 교수명단을 검색하면 여교수 3명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서울신문의 이 보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교수들이 피해자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태도는 성추행 피해자일 수 있는 교수는 물론 다른 교수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더구나 교수 소개 페이지의 〈상세보기〉 난을 눌러보면 해당 교수의 학력과 이력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동안 보도된 내용과 대조하면 성추행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2015-129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문

경향신문 2015년 10월 22일자 1면 「‘국정화 반대’ 담임과 ‘교육부 관료’ 학부 모 면담 … 그 뒤/거리에 선 선생님, 잠 못드는 아버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세종시의 한 고교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역사담당 교사 윤정하씨(왼쪽사진)와, 교육부 고위 관료 ㄱ씨가 윤씨와 자신의 아이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페이스북에 소개한 내용

『교육부 고위 관료 ㄱ씨는 2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다. 요즘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인 자신과 역사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아이의 고등학교 담임선생, 아이 사이에 빚어진 상황을 담담한 어조로 적었다. 교육부는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주무 부처이고, ㄱ씨는 교과서 국정화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가 맡고 있는 업무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ㄱ씨는 먼저 국정화 문제를 놓고 아이의 담임선생과 얹힌 찝찝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작년 큰애가 세종시 고교로 전학한 후 담임선생님과 의 면담에서 역사교사인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면서 대화 내용을 적었다.

“국정화 하실 건가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버님, 국정화 하게 되면 제가 혹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 .. 괜히 힘만 드실 겁니다.”

ㄱ씨는 이어 “우리 아들이 오늘 카톡으로 그 선생님이 길가에 조용히 서서 1인 시위 하시는 사진을 보내왔다”고 했다.

“아빠 땀에 니 선생님이 고생하신다는 거구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빠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 ..”

ㄱ씨는 “오늘은 피곤한데도 잠이 잘 안 온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라고 글을 맺었다.

ㄱ씨는 이날 오후 경향신문과 만나 “새벽 1시30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선생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1인 시위 하고 있다고 알려주더라”며 “철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빠 입장도 헤아릴 줄 알고, 선생님 생각도 할 줄 아는 게 기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경향신문과 만난 이후 페이스북에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

ㄱ씨의 글에 언급된 세종시 ㄴ고 역사교사 윤정하씨(31)는 “지난해 아이가 전학 온 이후 학부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화를 하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아이들이 국정화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일 교육부가 아닌 학교 앞에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윤씨는 “혹시라도 이 일로 아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 관료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위 관료 ㄱ씨는 세종시내 한 고교에 다니는 아들로부터 학교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담임선생의 사진을 카톡으로 받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에 대한 소회를 올렸다. 그 담임 선생은 ㄱ씨가 지난해 아들이 세종시 고교로 전학

한 후 면담을 했던 역사교사였다. ㄱ씨는 당시 면담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로 대화를 나눴던 내용과 선생님에 대한 아들의 마음씀씀이를 대화 형태로 썼다.

경향신문은 ㄱ씨의 이 글을 이미지 사진으로 옮기고, 그 옆에 1인 시위를 하는 담임교사 사진을 실었다. 또 그 교사가 역사담당 윤정하 씨임을 밝혔다.

이처럼 기사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아들을 익명처리 했지만 전학 온 시기와 아버지의 직업, 담임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밝혀 주변 사람이라면 해당 학생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 학생과 고위 관리가 ‘신상 털기’ 등의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실제 기사에서 담임교사는 “혹시라도 이 일로 아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걱정했다.

게다가 페이스북 페이지는 비록 타인과의 소통의 공간이면서도 사적인 공간이다. ㄱ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사적인 내용이다. 그는 국정화 담당도 아니고, 자신의 입장을 공표한 것도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경향신문 기사를 만난 후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공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는 보호되어야 할 아이와 그 아버지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②(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2015-1154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5년 5월 13일자 20면 「검찰, 홍준표 최측근 압수수색」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내일신문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사진을 위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게재된 사진은 연합뉴스가 송고한 사진으로, 내일신문은 연합뉴스 크레딧을 달고 사진을 전제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공인도 아니다. 따라서 굳이 사진까지 게재하여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인의 사생활 보도

2015-110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이종승

주문

한국일보 2015년 4월 21일자 3면 「성 전 회장, 자살 직전 김기춘 자택 인근서 배회한 흔적」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실세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은 마지막까지도 몇몇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성 전 회장 측근에 따르면 그는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성 전 회장은 김 전 실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멀지 않은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갖은 의혹을 남겼다.

특히 본보가 20일 확인한 경찰의 무선 교신 기록상에는 성 전 회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김 전 실장의 자택 인근에서 배회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김 전 실장의 자택과 걸어서 10~15분 정도, 직선거리로 300m와 400m 떨어진 지점 등 두 곳에서 포착된 것이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전의 자취를 추정할 구

체적 근거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성 전 회장이 막판까지도 김 전 실장에게 구명을 요청하려 애썼다는 진술이 나오는 가운데, 자살 당일 김 전 실장과 통화나 만남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성완중 전화, 김기춘 자택 10분 거리서 신호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 무선 교신 녹취록’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9일 오전 평창동 K빌리지와 평창동 정토사 인근을 맴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K빌리지와 정토사는 김 전 실장의 자택(평창동 507-4)과 각기 400m와 300m씩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당일 성 전 회장의 아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으면서 끝자리가 각기 64**, 30**인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2대의 번호를 확보했다. 이어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추적팀과 교신에 나서는데 64**전화의 신호는 오전 9시 즈음 평창동 K빌리지 쪽에 머물렀다. 당시 종로서는 오전 9시 1분쯤 “64**전화의 신호는 K빌리지 근처로 고정값이고 30**전화는 평창동 260-17, 평창동 1872, 평창동 172-15(K빌리지)를 오간다”고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휴대전화 신호가 겹쳐 잡힌 곳은 K빌리지로 김 전 실장의 자택과는 차로 2~3분, 걸어서 10~15분 거리에 불과하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 9일 목숨을 끊기 직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인근에서 배회한 흔적이 경찰의 무선 교신 기록상 나타나 있다고 보도하며 김 전 실장의 자택 주소와 사진을 공개했다.

기사는 『K빌리지와 정토사는 김 전 실장의 자택(평창동 507-4)과 각기 400m와 300m씩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자택 주소와 위치를 자세히 기술하고, 자택 전경과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사진 2컷 등 모두 3컷의 사진을 게재해 누구라도 김 전 실장의 자택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비록 김 전 실장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는 해도 자택의 지번을 공개하고 사진까지 게재하는 것은 김 전 실장은 물론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53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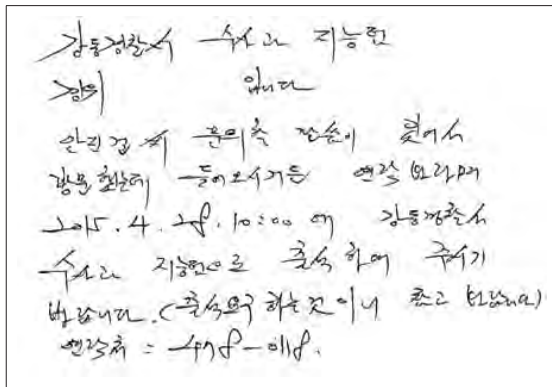
내일신문 2015년 5월 12일자 20면 「경찰, 옆집에 쪽지붙여 출석요구」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이 세월호추모 집회 참가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면서 정식 출석요구서가 아닌 쪽지로, 그것도 옆집 출입문에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4월 22일 서울 강동경찰서 모 경위가 작성한 ‘쪽지 출석요구’를 옆집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경찰이 세월호추모 집회 참가자의 집을 방문해 옆집 출입문에 붙이고 간 ‘쪽지’ 출석요구서

쪽지(사진)에는 “강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000입니다. 문의할 말씀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들어오시거든 연락바라며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강동서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석요구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연락처: 000-000”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4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1주기 추모집회와 관련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으니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위 기사에서 경찰이 세월호추모 집회에 참가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정식 출석요구서가 아닌 쪽지를 옆집 출입문에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안 처장이 제공한 쪽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기사는 쪽지에 ‘강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000’ ‘연락처: 000-000’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담당 경찰관의 직위와 소속 부서를 공개했다. 사진에는 소속부서와 함께 ‘연락처: 478-0118’이라는 전화번호까지 드러나

있다. 기사와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 기사는 경찰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의 개인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0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 2015년 8월 6일자 2면 「“임태훈이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모든 일 잊겠다”/임신 그리고 낙태 … 연인서 고소인·피고소인으로 변한 두 사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임태훈(27)은 지난 6월 26일 임의 탈퇴선수가 됐다. 소속 구단이던 두산은 “선수 자신의 의사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며칠 뒤 임태훈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했다.

◇ 야구 커뮤니티에 낙태 관련 공개

여자친구 서 씨가 야구 커뮤니티에 임태훈과 얹힌 사연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2014년 9월께 깊은 사이가 됐다. 첫 동침에

서 아이까지 생겼다. 이후 임태훈의 요구로 낙태를 했다. 낙태 뒤 서 씨는 임태훈이 자신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태훈의 가족은 서 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6개월 여 교제는 결국 서 씨가 임태훈의 치부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다. 임태훈은 7월 초 서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서 씨는 7월 13일 송파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 씨의 변호인인 이정원 변호사는 “협박은 무혐의가 됐고, 명예훼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 씨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허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 씨는 임태훈이 화장실에서 촬영한 사진까지 SNS에 올렸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처벌을 각오했다고 했다. 그만큼 배신감이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선 “임태훈이 낙태 뒤 서 씨에게 200만원을 줬다. 서 씨는 나중에 이 돈을 돌려줬다. 결별 과정에서 서 씨는 ‘200만원이 나와 헤어지는 비용이었느냐, 수천만원도 아니고 …’라는 말을 헛김에 했다. 그 말 때문에 고발됐지만 무혐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열렬한 야구팬이었다. 두산 연간회원권을 갖고 있으며, 야구심판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임태훈과는 교제를 시작하기 전 6년 동안 팬과 선수로 친분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서 씨는 처음 관계를 가진 뒤부터 임태훈이 결별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생각도 있었다. 임태훈의 앞길을 가로막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린 선수의 갑작스런 구애에 쉽게 마음을 연 것도 처음부터 임태훈을 ‘스타 선수’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대화의 문을 열지 않은 가족들

임태훈은 과거 여성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다. 상대방의 죽음으로 끝난 스캔들 이후 임태훈은 한 번도 제 기량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20대 청년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이었다.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구단에선 기량과 관계없이 그를 1군으로 올리기를 주저했다. 그런 그에게 임신한 서 씨의 존재는 부담이

었을 것이다.

임태훈의 임의탈퇴 소식이 전해진 뒤 야구 기자들 사이에선 “사귀던 여성이 은퇴를 요구했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두산 구단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서 씨가 구단 사람들에게 임태훈을 1군으로 올려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임태훈이 ‘외국에서 뭘까 …’라고 꾸짖하자 대만 프로야구에 대한 자료를 모아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임태훈 입장에서 서 씨가 구단과 접촉한다는 자체가 두려웠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나도 두산 팬으로서 안타깝다. 내가 임태훈의 에이전트였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뒷일이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만남을 이어가다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는 있었다. 서 씨는 최근 임태훈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임태훈의 부모는 서 씨를 ‘아들 인생을 망치려는 나쁜 여자’로 알고 있었다. 서 씨는 ‘성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내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시시비비는 가리고 싶다’는 뜻을 전하려 했지만 가족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 대중들의 비난 그리고 대인 기피증

하룻밤의 일은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임태훈은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다. 지금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좋은 공을 던진 투수였고, 고교 시절부터 독서를 즐긴 똑똑한 선수였다.

서 씨는 이번 일이 정리되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생각이다. 좋아했던 야구는 아마 쓰린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 씨는 지금이라도 임태훈이 사과를 한다면 용서하고 모든 일을 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야구 선수들은 피끓는 청춘기를 합숙 등으로 사실상 격리된 채 지낸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범위와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다소 다르다. 좋은 추억이었을 수도 있었을 만남은 오해와 불신이 쌓인 끝에 비극으로 끝났다.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는 이대호(소프트뱅크)는 롯데 시절 후배들에게 “팬과의 만남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1면과 2면, 그리고 3면 등 3개면을 할애해 전 두산 투수 임태훈의 고소사건,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복귀 가능성 등을 대서특필했다. 3개면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임태훈은 지난 7월 여자 친구였던 서 모 씨를 경찰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서 씨가 인터넷 야구 관련 사이트에 글을 올려 임태훈을 비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서 씨의 변호사를 만나 (연인 사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신분이 된) 사정을 들었다”고 1면에 보도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위 기사는 서 씨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2면 전체를 할애해 보도된 위 기사는 ‘임신과 낙태’에 관한 임태훈의 사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사는 『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2014년 9월께 깊은 사이가 됐다. 첫 동침에서 아이까지 생겼다.』면서 『이후 임태훈의 요구로 낙태를 했다.』고 보도했다.

첫 동침과 임신, 그리고 낙태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이다. 내밀한 사생활은 아무리 임태훈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당사자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으며, 독자의 호기심에 편승한 선정정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위 기사는 서 씨의 일방적 주장만 신고 있다. 비록 기사는 1면에서 “임태훈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일단은 (서 씨 측의) ‘일방의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 대부분이 임태훈에겐 반론이 필요한 민감한 내용이다. 게다가 3개 면을 할애한 특집 기사이고, 고소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반론권 보장에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

(선정보도의 금지) ④(답변의 기회),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1 신문윤리강령 위반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백 석 기

주문

아시아투데이 2015년 8월 11일자 12면 「권오준<포스코 회장>, 20억원대 호화아파트 구입에 13억 근저당」 기사와 제목,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아시아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20억원대 호화 아파트를 구입하며 10억원이 넘는 은행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권 회장은 구매 당시 5억원이 넘는 49평 아파트와 8억원대의 상가점포를 이미 보유했다.

10일 포스코와 대법원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3년 3월 권 회장과 부인인 박충선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위치한 2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 아파트인 센트레빌아스테리움용산 A동(11층)을 구입했다. 센트레빌아스테리움용산은 36층 규모로 권 회장이 거주하는 로얄층인 11층의 분양가는 19억원 수준이다.

당시 포스코 기술부부장(사장)을 맡고 있던 권 회장은 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포스코의 주거재 은행인 우리은행의 용산시티파크 지점에서 당시 근저당비율의 최대치인 120%를 적용해 13억524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돈을 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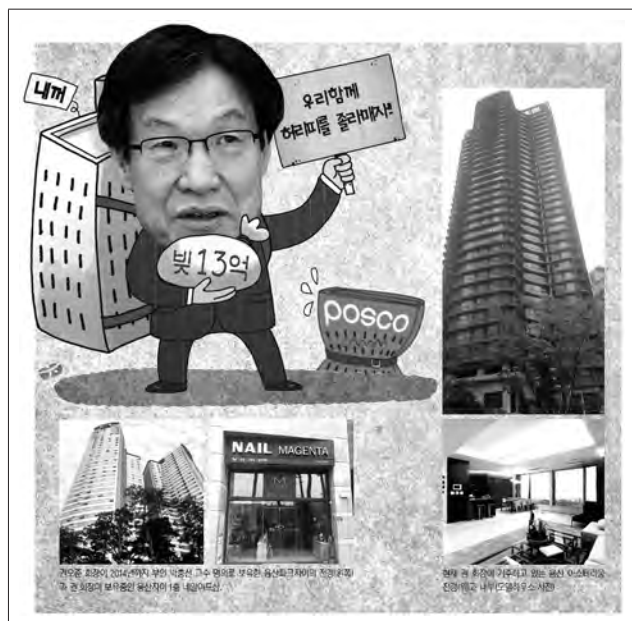
근저당이 13억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권 회장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권회장이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많게는 연간 수천 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 회장이 대출을 받을 당시 연 3%의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월평균 상환금은 1977만원 수준이다. 월평균 이자액은 143만원으로 총 이자는 8593만원이다.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했을 경우, 월평균 상환금은 1062만원, 월평균 이자액 146만원, 총이자 1억7460만원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에 대해 연 3.2%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권 회장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알 수 없다"며 "(센트레빌아스테리움용산은) 120% 정도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당시 대출비율안에 포함이 되니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1km 떨어진 한강로1가에 49평대 주상복합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권 회장의 부인인 박 교수는 2002년 한강로1가에 위치한 용산파크자이 주상복합아파트 B동 18층(162.04㎡·49평)을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았다.



박 교수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일인 2006년 3월 27일부터 한강로2가 아파트 구입 이후인 2014년 10월까지 8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12억1000만원에 매각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은 분양이 진행되던 2003년 기준으로 평당 1050만원 수준인 5억원대였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2009년 용산파크자이 B동 1층에 위치한 상가(50.37m²)를 자신의 명의로 7억8000만원에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상가는 지난해부터 네일숍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시세는 9억원 수준으로 권 회장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75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를 해준 상태다.

권 회장의 연봉은 회장직을 맡은 지난해 10억9400만원이었지만 회장취임 이전에는 5억4900만원(2014년 1분기 보고서 기준) 수준이었다.

권 회장이 한강로1가의 용산파크자이의 상가를 구입한 2009년은 포스코건설도 120억원을 출자했던 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로 이 지역은 현재도 용산공원개발과 면세점 입점 등 부동산 호재가 남아 있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곳이다.

한편 권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3월 이후 포스코는 지속적인 업황악화와 검찰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 대우인터내셔널 항명 사태 등 그룹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권 회장은 투자사업의 부실화와 구조조정 지연,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그룹 쇄신을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철강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등을 통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한창이다.

특히 지난달 15일에 열린 2분기 기업설명회에서는 그룹 경영쇄신을 위한 ‘혁신포스코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14개 부장급 조직을 포함한 88개 조직을 폐지하고 본사 및 제철소 스태프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축소와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고·회의문화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도 신경 쓰는 등 실질적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는 거의 전면을 할애한 위 기사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취득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기사 말미에는 검찰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 등으로 포스코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권 회장은 그룹 쇄신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한창이라고 기술했다.

편집자는 작은 제목에 “비윤리 쇄신 평소 생각과 판이” 표현을 넣었다. 포스코가 어려움에 처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는데도 권 회장은 평소 생각과 전혀 다르게 빚을 얻어가며 개인 자산을 늘렸는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는 권 회장이 부인인 박충선 대구대학교 교수와 공동명의로 20억원대 호화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이를 위해 1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돈을 빌렸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권 회장이 대출받은 은행이 『포스코의 주거래은행』임을 적시, 마치 대출 과정에서 모종의 역학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기사는 이어 『권 회장이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출기간을 5년으로 했을 경우와 10년으로 했을 경우를 나눠 권 회장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또는 이자까지 계산해 제시했다.

권 회장이 기사에서 ‘호화 아파트’로 문제 삼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포스코 기술부문장(사장) 시절인 2013년 3월이다. 당시 소유하고 있던 49평 아파트는 2014년 10월에 매각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한 뒤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는 또 권 회장 소유의 상가점포에 대해서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75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를 해준 상태』이며 이 지역은 현재도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권 회장의 상가 구입도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권 회장이 2009년 구입한 상가는 당시 살던 아파트 1층에 위치한 것으로, 취득 가격은 7억8000만원이고 현 시세는 9억원 수준이다. 구입 6년 만에 1억

2000만원, 15% 정도 오른 시세다. 기사에 권 회장의 상가 구입 의도가 기술돼 있지는 않지만, 결과만 두고 본다면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권 회장의 2013년 당시 연봉은 5억4900만원이다. 권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상류층 평균치보다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권 회장의 연봉 수준에 견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기업 경영실적과 경영인의 개인 재산 증식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사는 포스코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시점에 권 회장의 부동산 보유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시아투데이는 권 회장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아파트 및 상가 사진 4컷과 권 회장 사진에 기사 내용을 함축해 만든 그래픽을 만들어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권 회장은 대기업 경영자로 공인의 범주에 포함되긴 하지만 개인 재산을 공개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기사는 권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과 부채 현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보도했는데, 이는 권 회장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권 회장에 대한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어린이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2015 - 3050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문

국민일보(kmlb.co.kr) 2015년 4월 3일자 「새벽에 한 남자가 보내온 끔찍한 사진 한 장」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각 2015.04.09 11:32〉

『지난달 31일 새벽 밀양경찰서에 다급한 목소리의 112 신고와 함께 ‘끔찍한 사진’ 한 장이 전달된다. 팔뚝을 칼로 여러 차례 그은 듯 핏방울이 선연하다. 신

고자는 전 남자친구가 보내온 사진이라고 했다. 실연 때문일까? 남자에게 카톡을 보내봤지만 응답이 없었다.

경찰은 경험상 이 남자가 2차 자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즉시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최종발신 장소를 찾아낸다. 신속하게 야근 중인 형사, 112 타격대, 순찰차 6대 등 동원 가능한 경찰을 모두 현장으로 보낸다. 하지만 40분 가량 기지국 주변을 살살이 수색해도 남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중앙파출소 정진 경위와 부북파출소 손영수 경위가 도로를 걸어가 한 남자를 발견했다. 두 경찰관이 혹시나 싶어 그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니 와이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다. 경찰은 그가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새벽 시간대 경찰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한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훈훈하다.

김○○ 선임기자 t***m@kmib.co.kr」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실연 때문에 칼로 자신의 팔뚝을 그은 남자를 경찰관들이 한 밤중에 수색 끝에 찾아내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는 <포토갤러리>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남자의 팔뚝에 그어진 자상에서 선홍색 피가 흐르다 응고된 모습을 담은 사진은 잔혹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는 실제 사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층도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충격적이고 섬뜩함을 안겨주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51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南日報 발행인 이재욱

주문

全南日報(jnilbo.com) 2015년 4월 29일자(21시16분) 「아직도 섹스파트너가 없으신가요?svn56」 제목 등 다수의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全南日報의 홈페이지 커뮤니티 난에 오른 각종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

① 「Fun Fun Zone」

커뮤니티

COMBODI TV



FunFun Zone

HTTP://JUNILBO.COM

TOTAL: 68, PAGE: 2 / 3

발언대/독자투고

오늘의 보도자료

자유게시판

FunFun Zone

물고담하기

기사재보

테마 선택

전열로 본 세상

타키 여행

티베트 여행

논술 속속

포토/동영상 뉴스

포토 뉴스

우리고장 동영상

동영상 뉴스

오피니언

박상수 칼럼

서석대

전열발령

데스크 칼럼

취재수첩

사설

전열시론

NO

SUBJECT

NAME

DATE

HIT

38

→ ☆ 건국 1위 출장만남.애인대행 ≪ SVN56.COM ≫

로안스

03-04

6

37

→ ☆아찔한 로맨스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 SVN56.COM ≫

로안스

02-27

7

36

→ 하루에 한영색 섹파를 소개시켜드립니다! ≪ SVN56.COM ≫

로안스

02-21

9

35

→ 아직도 섹스파트너가 없으신가요? < svn56.com >

로안스

02-04

10

34

→ ★카지노게임 ★SBV56.COM★채팅대니 30만원 공짜로드립니다! ★대박나세요~~~

어른들이라

01-24

4

33

→ ★카지노게임 ★SBV56.COM★채팅대니 30만원 공짜로드립니다! ★대박나세요~~~

어른들이라

01-15

1

32

→ @온라인 카지노 추천! sbv56.com @어른들의 안전 놀이터입니다.

어른들이라

01-06

5

31

→ 말뚝론?만남사이트추천! vn53.COM ♀즉석 만남사이트?만남사이트

어우름

12-06

13

30

→ 조건만남.애인대행! VN53.COM v애인대행.조건만남

어우름

11-25

15

29

→ 마담독\조건만남 애인대행 \애인대행 조건만남\ Bus71.COM \책임지고 하루1영속@!

어우름

11-15

17

28

→ 초 스파드=섹파= BUS71.COM =회원들간의 섹파론 만남(성인만을위한 섹스파트너 매칭)

어우름

11-01

14

27

→ <환동열> nullo999.com <섹1시 누님 100명의 남자들을 차례로 핸드잡부터

추경민

10-22

28

26

→ 당신의 행복은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T V 7 8 7 8 . C O M

은진자

09-19

20

25

→ [re] [re] 고독살림, 책재채려 ...[3]

NPT월화

03-28

1505

24

미개봉,최신영화 100% 공짜다운로드!!

영호우로

02-26

1626

23

헉!! 9개월된 아기들~애 미배자가 미쳤나봐,,

류시씨

11-29

1755

22

노래방 켜시먼스,,쓰러짐 ㅋㅋ

류시씨

11-29

2058

21

마몬나.이미속.사론스톤! 나도 나우(now)족!

임신언이

09-27

3784

〈이하 캡처시각 2015.04.29. 21:15〉

② 「물고 답하기」

커뮤니티 Community		물고 답하기 http://www.ajunju.net/boards/	
발언대/특자특고		TOTAL : 176, PAGE : 1 / 9	
오늘의 보도자료			
자유게시판			
FunFun Zone			
물고답하기			
기사제보			
대대 특선			
관람료 본 세상			
타키 여행			
타버트 기행			
논술 속삭			
포토/동영상 뉴스			
포토 뉴스			
유리교장 동영상			
동영상 뉴스			
오피니언			
박상수 칼럼			
서석대			
전일칼럼			
데스크 칼럼			
취재수첩			
사설			
견원시론			

NO	SUBJECT	NAME	DATE	HIT
176	▶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	sdfsf	03-06	9
175	▶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	sdfsf	03-06	6
174	▶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	sdfsf	03-06	8
173	3월 주제 '허세'에 대하여 읽고서..	김영은	03-03	6
172	봉수산물상자,정보상자,종교파래트,미역상자,팔판	김영은	01-16	8
171	사원모집,마르바이트하실분(남,여무관/시간선택가능)	가을이	12-09	5
170	알차게기 알바정보	송송이	11-05	5
169	즐거움과풍요로움의 H O O T 9, C O M] 팀 추천	조인성	09-11	17
168	남편보다 월급 조금더벌어 미안해요ㅠㅠ방법공개	김희희	07-26	96
167	★카 지 노 ★→ LG300.COM ←	김희희	01-16	203
166	★카 지 노 ★→ PSY300.COM ←	김희희	12-28	225
165	★카 지 노 ★→ PSY300.COM ←	김희희	12-28	198
164	★카 지 노 ★→ PSY300.COM ←	김희희	12-28	207
163	최악적인 글들	신동현	11-22	210
162	→안전한놀이방 추천 ← WWW. Q P R 7, C O M	xxxxx	11-19	215
161	마카오베네시안호텔3, 65인치 마카오베네시안호텔 8' 마카오베네시안 호텔	dfff	11-19	219
160	마카오국내에 마카오 마카오	cccc	11-19	209
159	→하루에50만원 벌수있는곳 ← WWW. Q P R 7, C O M	xxxxx	11-19	221
158	홍콩마카오자유여행마카오 홍콩마카오자유여행 8' 홍콩마카오자유여행	ddddd	11-19	218
157	필리핀발문하디스플랜이 필리핀발문하 8' 필리핀발문하	cccc	11-19	225

<이하 캡처시각 2015.04.29 22:25>

③ 「오늘의 보도자료」

오늘의 보도자료 http://www.ajunju.net/boards/		TOTAL : 1327, PAGE : 1 / 133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서구청			
전남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NO	SUBJECT	NAME	DATE	HIT
1327	2015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안내	이창현구청	01-08	16
1326	리리코스, 전남 신안에서 '속속 감동 나눔 캠페인' 진행	리리코스	11-12	9
1325	귀뚜라미회장, 최진민회장 대한민국 100대 기술 주역 선정	귀뚜라미	09-30	15
1324	100배 빠른 영매공식	gmy	07-25	242
1323	내병은 내가고치고 내가족은 내가지키자	gmy	07-25	237
1322	[독자투고] 112 허위신고와 '양치기 소년'	최두희	06-21	246
1321	■온건면허증위조■0-7-0-7-9-5-1-3-4-5-6■온건면허증위조■	qst0505	06-13	243
1320	■머권위조■머권위조■qst0505글병이hotmail.com,■머권위조■	qst0505	06-09	277
1319	강,원현,드?월'드카,지노	상현일	06-04	245
1318	강,원현,드?월'드카,지노	상현일	06-04	257

<이하 캡처시각 2015.04.29 22:45>

2. 위 게시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南日報는 자사 사이트〈커뮤니티〉코너에 「Fun Fun Zone」, 「묻고 답하기」, 「오늘의 보도자료」 난을 마련하고 독자들이 다양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코너는 대부분 섹스파트너 소개, 성인놀이방, 불법 도박, 여권위조 등 청소년 층에 유해한 불법광고물로 채워져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게시물은 상당수가 차단되어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그대로 열려있다.

우선 「Fun Fun Zone」을 살펴보면 「아직 섹스 파트너가 없으신가요?」가 눈에 띈다. 이 게시물은 지난 2월 4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올라와있으며 클릭하면 바로 「시크릿 로맨스」라는 섹스파트너 소개 사이트로 연결된다. 또한 「〈핫동영상〉 nulbo999.com〈섹시 누님 100명의 남자들을 차례로 핸드잡부터〉라는 게시물을 살펴보면 선정적인 여성 사진과 함께 각국의 포르노 동영상 도메인을 게시해 놓고 있다.

「묻고 답하기」역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NO1 성인놀이방 누드딜러의 환상누드쇼~!!」를 눌러보면 「5년 운영 무사고」를 자랑하며 「바카라, 룰렛, 블랙잭, 식보」 등 각종 도박성 게임을 소개하고 있고 버젓이 온라인 접속주소도 게재해 놓았다. 접속주소는 「신천지 카지노」라는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다. 「실시간바카라 최상위사이트! www.Q P R 1000.com!! BIG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역시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가능한 라이브카지노임을 설명하면서 도박성 게임으로 유도하고 있다.

「오늘의 보도자료」 또한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여권위조나 운전면허증위조 등을 주선하는 사이트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독자가 온라인게시판에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52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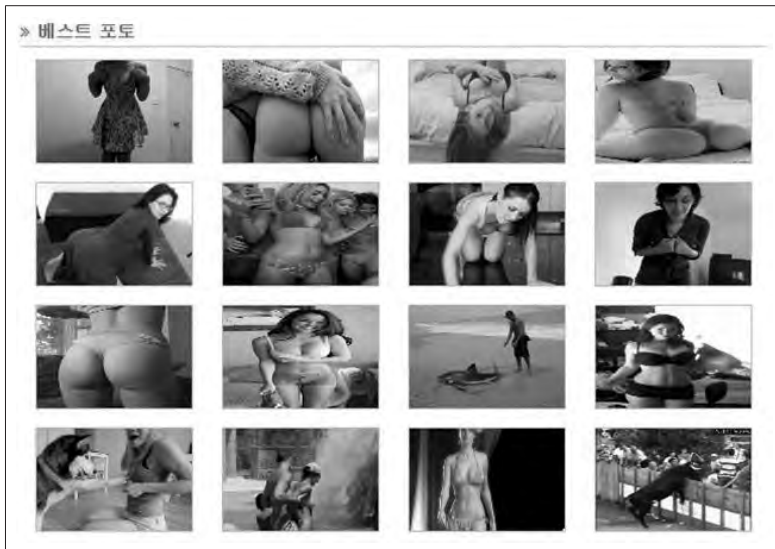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5년 4월 12일자 「언니는 지금 뭐 하는 중」
제목의 사진 등 다수의 네티즌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4.12. 18:45〉



〈캡처시각 04.12 18:47〉



〈캡처시각 04.12. 18:47〉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일간스포츠 홈페이지 〈크림17〉이란 제목의 메뉴에 게시된 것이다. 〈크림17〉를 클릭하면 다시 하부 메뉴와 ‘최신 콘텐츠’가 나오고, 최신 콘텐츠 아래에는 〈베스트 포토〉라는 컷 아래 선정적인 사진 10여장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풍만한 엉덩이를 가진 여성이 선정적인 자세로 앉아 엉덩이를 떠는 사진, 엉덩이를 드러낸 여성이 성행위하는 포즈로 상하 운동을 하는 사진, 반라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는 사진, 속옷을 입은 여성이 가슴을 어루만지며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 등으로 독자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월등한 체격의 여성이 가슴을 출렁거리며 뛰는 사진도 있고, 가슴골이 보이는 자세로 걸레질을 하는 사진도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움직이는 사진을 클릭하면 “언니 지금 뭐하는 중? 나랑 같이 할까나”는 설명이, 엉덩이를 쓰다듬는 사진에는 “막 만지고 싶고 그러지. 나도 그렇다”는 설명이,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에는 “그러다 침대에서 떨어지겠당. 밑에서 받아 줄까나” 등의 설명이 붙어있다.

신문이라기보다 성인 사이트의 초기 화면을 방불케 하는 사진이다. 접근에 제한이 없어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위의 <크림⑦>의 ⑦은 '17세 이상 이용 가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화·비디오·게임물 등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급에는 전체이용(관람)가, 12세 이상 이용(관람)가, 15세 이상 이용(관람)가, 청소년 이용(관람)불가 등이 있으나 17세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은 없다.

실령 미국의 'R(Restricted)등급'이나 '17세 미만 절대 관람 불가 등급(NC-17)', 일본의 BA-17 등급을 준용한 '17금' 분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보기에 부적절한 사진이나 내용을 연령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상이 짙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주문

국민일보(kmib.co.kr) 2015년 12월 5일자 「[영상] 2~3세 아기, 마리화나 피우는 동영상 확산 ... 美경찰 출처 수사」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 세계닷컴(segye.com) 12월 5일자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 ... 美 사회 '발칵」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국민일보, 세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영상] 2~3세 아기, 마리화나 피우는 동영상 확산 ... 美경찰
출처 수사

입력 2015.12.05 03:12 수정 2015.12.07 15:08



미국 소셜미디어 상에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이 만 2~3세가량의 아기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동영상의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동영상 속 아기는 기저귀를 차고 유아용 의자에 앉아 종이에 말아놓은 마리화나를 왼손에 쥐고 흡입한 뒤 짙은 연기를 연거푸 뿜어낸다.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한 성인 남성이 아기에게 흡입 방법을 가르치고, 행동을 고무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찰은 “특수사건 전담반이 화면에 보이는 상황이 실제인지,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전날 시카고 지역 사회운동가 앤드루 홈즈의 제보로 경찰에 알려졌다.

NBC방송은 “화면 캡처 당시 동영상에는 이미 500개 이상의 ‘좋아요’가 클릭됐고, 1200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전했다.

ABC방송은 일리노이 주 아동가정복지부와 주 검찰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홈즈는 “동영상이 실제 상황이라면, 아기에게 신속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아기 얼굴을 식별할 수 있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자 y***oi@kmib.co.kr』

(세계닷컴)=『입력 2015.12.05 15:00:38 수정 2015.12.05 18:27:00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 ... 美 사회 '발칵'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이 확산돼 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최근 만 2-3세가량의 아기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확보하고 출처 추적에 나섰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동영상 속 아기는 기저귀를 찬 채 유아용 의자에 앉아 종이에 말아놓은 마리화나를 왼손에 쥐고 흡입한 뒤 짙은 연기를 연거푸 뿜어댄다.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기에게 흡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가 하면, 옆에서 행동을 고무하는 목소리를 낸다.

시카고 경찰은 “특수사건 전담반이 화면에 보이는 상황이 실제인지,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 주 아동가정복지부와 주 검찰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와 세계닷컴은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美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동영상도 함께 게재하였다. 내용 자체도 온라인 신문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기사 상단

의 사진에서 아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과는 달리 동영상에서는 아기의 실제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신원을 공개하였고, 금지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보다 2시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고, 세계닷컴은 일부 문장을 잘라내고 단어 몇 개를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③(미성년피의자 신원 보호),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331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5년 11월 4일자 14면 「안전위협하는 ‘위험한 장난’ 동영상 심각」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교실 뒤편 사물함 앞에 모여 있다. 한 남학생이 사물함에 다가가더니 사물함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부탄가스를 주입했다. 곧 이어 가스가 가득 들어찬 사물함의 작은 구멍 쪽으로 불 붙은 종이를 던지자

순식간에 사물함이 불길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웃고 탄성을 쏟아낸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공개된 '위험한 장난-사물함 폭파시키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 학생이 사물함에 불을 붙이자(왼쪽 사진) 사물함이 불길에 휩싸이고 있다. 동영상 캡처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험한 장난-사물함 폭파시키기'라는 제목의 50초 분량 영상은 고등학생들이 교실 내 사물함을 폭파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장난이 도를 넘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급정거시키기, 라이터로 자신의 신체 일부 지지기 등 자극적이고 위험한 놀이가 아무 거리낌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촬영해 동영상 공유 사이트나 SNS 등에 올리면서 더 자극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경쟁까지 벌이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일 동영상 모음 사이트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내기에서 졌다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라이터로 지지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학생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촬영하던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한 초등학생이 달려오는 차로 뛰어들어 차가 급정거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동영상도 있었다. 이를 촬영하던 아이들은 놀라는 소리를 내는 동시에 깔깔대며 웃었다.

동영상을 올린 청소년 대부분은 아무런 위험 의식이 없어 보였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모(여·15) 양은 "SNS나 블로그를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게시글의 인기를 더 높이기 위해 재밌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

들이 있다”며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극적인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거나 장난의 수위를 더 높이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25) 씨는 “지난달 5학년 학생 세 명이 교정을 걷는 다른 학생들을 맞히겠다며 4층 창문에서 우유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이를 웃으며 촬영하는 것을 보고 혼낸 적이 있다”며 “우유에 고춧가루와 밀가루 등을 넣고 사람을 향해 던지는 동영상을 보고 따라 했다고 해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데도 위험한 놀이가 담긴 동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위험한 장난-사물함 폭파시키기’라는 청소년의 자극적이면서 위험한 놀이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그러나 그 놀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고,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까지 올렸다.

기사는 『한 남학생이 사물함에 다가가더니 사물함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부탄가스를 주입했다.』며 『곧이어 가스가 가득 들어찬 사물함의 작은 구멍 쪽으로 불 붙은 종이를 던지자 순식간에 사물함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위험한 장난’ 동영상 내용을 그대로 소개했다. 불장난의 도구인 부탄가스를 사물함에 주입하고 불을 붙이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 셈이다. 또 편집자는 이 동영상을 캡처해 사물함에 불을 붙이는 장면과 이후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내보냈다.

위 기사와 사진은 청소년들에게 유사한 놀이 충동을 자극할 수 있고, 어린이에게도 유해해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세계닷컴(segye.com) 2016년 1월 21일자 「어린 딸들에게 ‘보드카’를 ... 카자흐스탄 남성에 네티즌 분노」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1.21 11:39〉

〈<http://www.segye.com>〉

『어린 딸들에게 ‘보드카’를 ... 카자흐스탄 남성에 네티즌 분노』

입력 2016.01.21 11:11:38 수정 2016.01.21 11:26:02

어린 딸들에게 보드카를 따라주는 남성이 영상으로 공개돼 네티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가 정말 보드카를 따랐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이들에게 술자리 흥내를 내게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논란 여지가 충분하다.

영국 미러 등 외신들은 “딸들에게 보드카를 가르치는 한 남성 때문에 네티즌들이 화가 났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2분 분량 영상은 카자흐스탄의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시기는 불분명하다.

영상에서 남성은 작은 유리잔에 보드카를 채워 딸과 나눠마셨다. 이들은 ‘건배’ 자세를 취했으며, 보드카를 넘긴 아이는 맛이 쓴 듯 얼굴을 찡그렸다. 남성은 딸에게 안주를 건넸고, 아이는 날름 받아먹었다.

노란 옷차림의 아이는 5~6세로 추정된다. 옆에는 그보다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둘째 딸로 보인다. 네 살 정도로 생각되는 아이는 영상 마지막에 아빠가 건넨 보드카를 함께 마셔 더 큰 충격을 줬다.

남성이 정말 보드카를 따라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아이들과 술자리 흥내 영상을 찍은 것만으로도 남성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상에는 한 여성의 웃음소리도 등장하는데, 그는 남성의 아내로 전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드카가 아니라 다른 음식일 수도 있다”며 “물 혹은 물약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미러는 “카자흐스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정말로 남성이 딸들에게 보드카를 먹인 것으로 밝혀지면, 당국은 벌금형을 내리거나 아이들을 안전 시설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기자 k***harr@segye.com 사진= 영국 미러 캡처』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카자흐스탄의 한 남성이 4~6세로 추정되는 어린 두 딸들에게 보드카를 따라주고 마시게 하는 영상이 공개돼 전세계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실제 보드카를 따라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점으로 미뤄 단순한 장난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 층 및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동영상 내용을 중계방송하듯 자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사진을 3장이나 게재한 것은 보도의 목적이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고발기사라기 보다는 선정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9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2월 15일자 「중국어 또 ... 10대 여학생 옷 벗겨 집단 구타」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국어 또 ... 10대 여학생 옷 벗겨 집단 구타』

입력 2016.02.15 11:04 수정 2016.02.15 11:05



중국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 또다시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5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人民網)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에 공개돼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달 21일 허베이성 형수이 안핑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학생 세 명이 한 또래 여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모습이 2분 30초 분량으로 담겨 있다. 가해 여학생들은 또래 여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 뒤 옷까지 벗겨가며 비웃는 등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영상은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인 지난 3일 공개된 이후 급속도로 퍼져 나가며 중국 대륙을 뒤흔들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마스크를 쓴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의 옷을 벗겨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중국은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논란이 되자 가해 여학생들은 모두 경찰에 자수했으며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했다. 이들은 모두 10대였으며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해 여학생 중 1명은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2명은 형사 미성년자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 여학생 모두 적절히 처벌할 방침이라 밝혔다.

사진·영상= 중국 상하이 인터넷신문 평파이신원왕(澎湃新闻网)

영상팀 seoultv@seoul.co.kr」



〈캡처시각 02.15. 11:3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중국 여학생 3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면서 상의를 벗기는 모습의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2분 29초 분량의 동영상엔 여학생 한 명이 3명의 여학생들에게 뺨을 맞는 등 집단구타 당하다가 상의가 벗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에서 폭력성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집단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가감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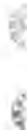


언론인의 품위

중앙일보 발행인 송필호

중앙일보 2015년 6월 20일 국방부 홍보대행사와 중앙일보가 체결한 약정계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1. 중앙일보는 국방부 홍보대행사인 인포마스터와 위 적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했다.



2. 위 약정서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국방부 주요 정책에 대해 국방부 홍보 대행사와 1억원의 종합기획홍보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따라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약정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 출입기자단도 이와 관련해 총회를 열어 해당 중앙일보 기사를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했다.

진 의원이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국방부 홍보대행사인 (주)인포마스터와 지난 6월 20일 2015년 국방부 주요 정책 종합기획홍보에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 중앙일보가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차례에 걸쳐 국방부 홍보 기사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세부 보도일정은 중앙일보 국방부출입기자와 인포마스터 국방부 담당이 협의하도록 돼있다. 또 정책홍보 기사가 반영된 날짜를 기준으로 1회차 3000만원, 2회차 3000만원, 3회차 4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돼있고, 청구일은 각각 6월 30일, 9월 30일, 12월 15일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 오늘은 “약정서 내용대로라면 중앙일보는 이미 국방부 홍보 기사로 6000만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진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 대표적인 기획기사는 중앙일보가 약정 체결 후 4일 후인 24일자 보도한 「끝나지 않은 6·25 전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라는 제목의 기획이다. 이 기획은 광고 없이 1개면 전체를 할애해 4건의 기사로 구성했다. 기획 머리기사는 「번호로 남은 9826명〈유해 찾은 한국전 전사자〉, 이름 찾아주는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기사는 워싱턴 미군용사단지를 현장취재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홍남 철수작전의 주역인 에드워드 포니의 증손자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메르스 환자 이송 군, 전시계획 따랐다’(8월 3일 10면) ‘지지율 15% 오른 박 대통령, 군복 대신 카키색 재킷’(8월 29일 3면), ‘저비용 고효율

문경 군인체육대회, 국제대회 본보기 됐다’(11월 5일 C01면) 등의 기사가 약정에 의해 보도됐다는 것이 진 의원 측의 주장이다.

진 의원의 이러한 주장과 약정서 공개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 외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국방출입기자단은 국회와 언론의 문제제기 후 23일 총회를 열어 해당 기자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모든 정황과 사실관계에 미뤄 중앙일보는 자사 국방부 출입 기자를 동원해 홍보대행사와 국방부 정책 홍보를 위한 1억 원의 약정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기사를 기획 보도해 약정금 일부를 그 대가로 수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같은 행위는 자사의 영리를 위해 국방부의 홍보를 대행한 것으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배하며, 언론의 독립,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 「언론의 독립」,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④(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